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배진수 우평균 이상숙
미우라 김의영 김성형 손혁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하대학교, 평화협력원

동북아 NGO 백서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NGO 백서 / 전봉근, 배진수...[등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5-09-01)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07-8

339-KDC4

369-DDC21

CIP2005002853

동북아 NGO 백서 ▶▶▶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본 백서에서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중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NGO 활동의 주요 분야로는 반전·평화, 환경, 인권, 역사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에서 분야별로 나타나는 NGO 활동의 현황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의 반전·평화 NGO 활동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반전·평화 NGO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화, 통일(한국의 경우), 반핵·비핵, 군축,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군대(기지) 이전 및 철수, 파병 반대, 전쟁피해자, 대인지뢰철폐, 평화헌법개정반대(일본의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는 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여 증가 및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통일' 분야 NGO 활동이 여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경우는 원폭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반핵·비핵' 분야에서 특히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헌법개정반대운동'은 일본만의 독특한 NGO 유형이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주요 핵심세력'의 성향인데, 한국은 진보 진영이 핵심인 반면 일본에서는 보수·우익 진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반전·평화 NGO는 주로 참전군인관련 단체 등 국방 관련 NGO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자 또는 사병들의 부모단체 활동 유형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의 유사점은 양심적병역거부, 참전군인, 퇴역군인단체 활동 분야에 있다.

중국의 반전·평화 NGO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여 '평화'보다는 '무력불사'의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 특성상 반전·평화운동이 미미하여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 각국 NGO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NGO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전문 환경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기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소비자 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 등이 가세하여 자신들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환경운동을 수용하여 이에 매진해왔다. 환경NGO가 중심이 된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은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환경정책의 획기

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운동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며, 환경 NGO의 활약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본의 환경 NGO는 고도 성장기 주민운동의 핵심이었던 반공해운동·자연보호운동이 1980년대 들어 포괄적인 환경운동으로 변모하면서 환경운동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일본에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많은 반면, 일본 내의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약하고, 환경 NGO 후발 주자이자 이웃 나라인 한국에 비해서도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동북아 각국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의 환경 NGO의 발달 양상 역시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에 주력하는 NGO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점차 확대되면서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관료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 조직의 힘에 의한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 NGO는 아직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적고 활동도 미미한 편이다. 다만 앞으로 환경단체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대형 환경사고, 개방화정책, 민주화에 기초하여 시민운동 영역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행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류가 분명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환경운동이 약화되고 침체기에 빠졌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환경 NGO들은 러시아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환경 NGO 조직상의 특징으로 단체의 해체 및 재조직이 빈번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환경NGO들은 글로벌 펀드(Global fund)나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ons)의 지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인권분야의 상황과 인권 NGO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 네트워크 활동이 제기 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내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을 가진 국가로 지목 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관심 증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북아지역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지구 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속속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서 1970년대부터 인권 NGO들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왔다. 초기에는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정신대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부각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대 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쟁 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 속에서 성장 하여왔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일본 인권운동은 주로 국제 NGO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 자생적인 NGO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 NGO가 아닌 일본의 자생적 인권 NGO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소규모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 인권 NGO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연대 활동에 중요하다. 개도국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및 지원활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 인권 NGO들은 공식적으로는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해외에 지부를 두거나

지하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티엔안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이 조직화하였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는 NGO들이 생겨났다. 티벳 및 신장지역에서도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거나 실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위한 조직들이 국제 NGO들과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인권 NGO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당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낙후지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역사분야의 NGO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수적인 면에서는 아직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공통적으로 그 활동의 질이나 내용의 측면에 있어 착실히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각국 내에서의 정부를 상대로 한 대중적인 시위 활동을 시작으로 역사문제의 제기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1980년대에 역사문제의 국제화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쟁 피해자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활동이 증대되어왔으며, 2000년대에는 풀뿌리 레벨의 국제 교류의 추진, 공동역사인식의 모색, 분쟁예방, 기념관 건설 사업, 사이버상의 커뮤니티의 제공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동북아 NGO 중에서 역사분야를 다루는 활동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각국 내에서의 NGO 활동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이나 활동목표가 부여되고, 궁극적으로 역사분야의 NGO 활동 전체를 한 단계 올리는 중요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적 활동은 각국의 NGO 및 시민 사이의 신뢰 형성을 촉진하여 동북아의 지역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에는 거의 모든 역사 관련 NGO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 연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자유로운 NGO 활동이 오히려 NGO 간의 대립관계를 촉진 하는 점이나, 많은 역사관련 NGO들 간의 조직적인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현재까지 나타난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에 대한 가능성 또한 향후의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나, 민간차원에서의 신뢰 관계 구축의 동향에서 특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에서의 NGO 활동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 다양하고 다루는 영역에 있어 광범위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적 수준에서 사회적 경각심 제기와 더불어 대안제시 기능도 점차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동북아의 NGO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짧은 NGO 발전의 연조를 갖고 있지만, 불과 지난 십수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그 인지도와 성취의 측면에서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NGO의 눈부신 성장은 외국의 NGO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는 존재로 부각되어 왔다. 다만 아시아 지역의 NGO 활동의 일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각국의 NGO 발전사는 독재와 저발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체제가 전환되고 동시에 경제적 질서가 자유화되면서 NGO 발전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공통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NGO 활동이 시작될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며, 그 결과 NGO 간의 국제적 연대의 결속력도 유럽이나 서구의 NGO들과 비교해 볼 때, 약한 편이다. 분야별로 볼 때 역사분야의 국제적인 NGO 활동이 다른 어떤 분야의 NGO 활동보다도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은 과거사의 공통 요소가 각국에 작용하는 속성상 자연스러운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NGO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 사업들도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조직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국제연대 활동이 향후에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다른 개발 도상 국가들에 동북아 국가들이 먼저 이룬 민주화와 발전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다루는 NGO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목 차

I. 서론: 동북아 NGO 개관	1
1. 연구목적 및 방법	3
2. 동북아에서의 NGO 개념	11
3. 동북아 NGO의 발전과 그 특성	17
II.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	23
1.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25
2.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의 가능성	29
3. 소결	38
III. 동북아 반전·평화 NGO	39
1. 개관	41
2. 한국의 반전·평화 NGO	48
3. 일본의 반전·평화 NGO	67
4. 중국의 반전·평화 NGO	82
5. 러시아의 반전·평화 NGO	91
6. 소결	97
IV. 동북아 환경 NGO	99
1. 개관	101
2. 한국의 환경 NGO	106
3. 일본의 환경 NGO	123
4. 중국의 환경 NGO	135
5. 러시아의 환경 NGO	147
6. 소결	161

V. 동북아 인권 NGO	165
1. 개관	167
2. 한국의 인권 NGO	176
3. 일본의 인권 NGO	193
4. 중국의 인권 NGO	202
5. 러시아의 인권 NGO	215
6. 소결	220
VI. 동북아 역사 NGO	223
1. 개관	225
2. 한국의 역사 NGO	238
3. 일본의 역사 NGO	248
4. 중국의 역사 NGO	260
5. 러시아의 역사 NGO	268
6. 소결	270
VII. 결론: 요약 및 향후 과제	275
참고문헌	285
부 록	297
최근발간자료 안내	361

표목차

<표 I-1> UN 등록 한·중·일 NGO	6
<표 I-2> 동북아 각국의 NGO 개념 (제도적·학술적 규정)	13
<표 II-1> 동아시아 NGO의 관련 지표	34
<표 II-2> 주요 동아시아 NGO 네트워크	36
<표 III-1> 아시아평화연합 참여 단체	87
<표 IV-1> 한국의 환경 NGO	104
<표 IV-2> 행정자치부 국고보조 환경 NGO 지원현황	104
<표 IV-3> 환경부 국고보조 환경 NGO 지원현황	104
<표 IV-4> 환경운동연합의 부설 기관	110
<표 IV-5> 녹색연합의 부설 기관	114
<표 IV-6> 1990년대 초반 시베리아·러시아 극동지역의 환경단체 결성 현황	151
<표 V-1> 한국의 주요 인권 NGO와 그 활동	178
<표 V-2> 티벳 관련 주요 NGO	211
<표 VI-1> 역사문제의 범위와 구체적 문제군	228
<표 VI-2> 역사관련 NGO의 성격, 기능, 및 활동형태의 예	229
<표 VI-3> 역사문제에 관한 NGO의 주요 국제회의	236
<표 VI-4> 한국 주요 역사관련 NGO	240
<표 VI-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민-관-정 네트워크 계획 (일부)	244
<표 VI-6> 일본의 주요 역사관련 NGO	249
<표 VI-7> 2000년 여성국제민간법정 구성 NGO	252
<표 VI-8> 중국의 주요 역사관련 NGO	260
<표 VI-9> 세계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회원단체 (일부)	265

I

서론: 동북아 NGO 개관

1. 연구목적 및 방법

탈냉전과 더불어 시작된 국제체제의 변화는 21세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통해서 그 변화가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화’(Globalization)로 일컬어지는 세계화의 조류는 기존의 민족 국가가 유지·강화되면서 국가간의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개인(individuals)과 더불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차지하는 영역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듯, 21세기는 NGO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표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NGO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각 국의 정치과정에서도 NGO의 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급속히 대두하기 시작한 ‘시민사회(civil society)’ 영역은 마치 NGO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존재로 부각되는 듯이 비추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NGO가 차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내의 제반 영역들은 서구의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활력을 띠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사회’와 ‘NGO’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시민사회’와 ‘NGO’를 새 천년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¹

NGO의 발전은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NGO가 ‘제1섹터’인 정치사회와 ‘제2섹터’인 시장과 별도로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활력소로서 기능하는 양상과 국가 정책과 정부

¹ 1990년대 말부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 즉 정당성(legitimacy)과 책무성(accountability)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NGO와 시민사회의 위상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 논쟁』(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pp. 9~10.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대변하듯이, 시민사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제기와 더불어 기존의 NGO와 관련한 연구가 폭넓은 주제와 더불어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NGO가 활동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 평화, 인권, 여성 등 주요한 몇몇 분야를 중심으로 NGO 활동을 다루거나, 분야별 NGO 활동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 혹은 NGO간 국제적 연대 상황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동북아의 NGO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개설적인 수준에서나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북아 NGO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NGO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인권, 환경, 반전·평화, 역사 NGO를 분류하여 각각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NGO 활동이 나타나는 주요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설정하여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북아 주요 국가에서의 NGO 발전 과정과 NGO의 결성 현황, 그리고 NGO 활동의 지속성과 해당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등은 각국의 환경과 시민사회 발달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동북아 지역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 중국과 같은 국가통제형 자본주의 체제,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형의 국가가 모두 혼재하는 곳으로 세계화의 영향과 더불어 급속하게 시민사회가 팽창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NGO의 시대라는 지적처럼 세계 경제에서 주목받는 동북아 지역의 NGO 발달 상황은 미래의 발전을 좌우할 관심사로서 주목을 받기에 족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의 NGO 현황과 그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백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서의 제2장에서는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제3장에서는 동북아의 반전·평화 NGO를, 제4장에서는 동북아의 환경 NGO를, 제5장에서는 동북아의 인권 NGO를, 제

6장에서는 동북아의 역사 NGO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함께 향후 동북아 NGO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한국의 NGO에 대한 조사는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조사 등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일본과 러시아의 NGO에 대한 조사는 홈페이지와 서적을 통한 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편 NGO에 대한 접근이 가장 어려운 중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한 관련 연구소 방문과 NGO 관계자와의 인터뷰로써 최대한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현지 조사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먼저 중국 본토의 경우 2005년 5월 29-31일 칭화대학에서 개최된 제4회 대북협력 국제 NGO회의에 참석한 중국 NGO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중국 NGO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같은 해 6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의 NGO 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료 조사 및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홍콩지역의 경우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5년 10월 3일~7일 4일간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10곳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홍콩의 대표적 NGO 활동가 2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별도로 실시하여 홍콩과 중국의 전반적인 NGO의 현황과 발전 및 인권 분야 NGO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층 인터뷰 대상은 허준런(何俊仁, Albert Ho: 민주당 의원, 변호사, 홍콩보조행동위원회 부대표)와 펑즈훤(馮智活, Fung Chi Wood: 목사, 전 민주당 의원, 전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공동대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북아 각국의 NGO 단체 목록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 내에서 발간된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 편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NGO 단체 목록은 <표 I-1>을 참조).

<표 I -1> UN 등록 한·중·일 NGO(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한국>

구 분	단체명 (국문)	단체명 (영문)	획득연도	DPI
*포괄적 협의지위	한국 이웃사랑회	Good Neighbours International	1996	
	세계평화 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of World Peace International	1997	
*특별 협의지위	세계대학 총장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1993	
	밝은사회 국제본부	Global Cooperation for a Brighter Society	1997	가입
	한국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1998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1998	
	한국여성정치문 화연구소	Korean Institute for Women and Politics	1998	
	경실련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999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2001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League	2002	
	한국국제봉사기구	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2002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명부상 협의지위	새마을운동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Saemaul Undong Movement	2002	가입

<중국>

구 분	단체명	단체명 (중문 및 영문)	연도	DPI
포괄적 협약지위	중국UN협회	中國聯合國協會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China	2000	가입
	아시아법률 자료센터	Asian Legal Resource Centre	1998	
특별 협약지위	중화전국 부녀연합회	中華全國婦女聯合會 All-China Women's Federation	1995	
	중국장애인 연합회	中國殘疾人聯合會 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	1998	
	중국인권 연구회	中國人權研究會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1998	
	중국광채 사업촉진회	中國光彩事業促進會 China Society for Promotion of the Guangcai Programme	2000	
	중국여성 기업가협회	中國女企業家協會 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2000	
	중국인민대외 우호협회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2001	가입
	중국인민평화 군축협회	中國人民爭取和平與裁軍協會 China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2002	가입
	중화직업 교육사	中華職業教育社 The National Associ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of China		가입
	중국국제교류협 회	中國國際交流協會 Chinese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03	
	중국지속가능 발전연구회	中國可持續發展研究會 Chinese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4	가입
	중국군축협회	中國軍控與裁軍協會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2005	
	중국과학기술 협회	中國科學技術協會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04	
	중국관애협회	中國關愛協會 China Care and Compassion Society	2004	

구 분	단체명	단체명 (중문 및 영문)	연도	DPI
특별 협인지위	중화환경보호 기금회	中華環境保護基金會 China Environmental Protection Foundation	2005	
	중국녹화 기금회	中國綠化基金會 China Green Foundation	2003	
	중국계획생육 협회	中國計劃生育協會 China Family Planning Association	2005	
	홍콩여성공상 직업인총회	香港女工商及專業人員聯會 Hong Kong Women Professionals and Entrepreneurs Association	2001	
	홍콩부녀 연합회	香港各界婦女聯合協進會 Hong Kong Federation of Women	2000	
명부상 협인지위	아태상공총회	亞太商工總會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1970	

<일본>

구 분	단체명	단체명 (일문 및 영문)	연도	DPI
포괄적 협인지위	아시아범 죄 방 지재단	アジア刑政財団 Asia Crime Prevention Foundation	2000	
	오이스카	オイスカ(OISCA) Organization for Industrial, Spiritual and Cultural Advancement	1995	가입
	유엔지원 교류재단	國連支援交流財団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1996	
특별 협인지위	아시아여성 자료센터	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Asia-Japan Women's Resource Centre	2000	
	후두적출자단 체아시아연맹	喉頭摘出者団体アジア連盟 Asian Federation of Laryngectomees Association	1997	
	아시아여성 회의네트워크	アジア女性會議ネットワーク Asian Women's Conference Network	1999	
	난민을 돕는모임	難民を助ける會 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1998	

구 분	단체명	단체명 (일문 및 영문)	연도	DPI
특별 협회의지위	아시아의사 연락협의회	アジア医師連絡協議會 Association of Medical Doctors of Asia	1995	
	지구환경행동 회의	地球環境行動會議 Global Environmental Action	2001	
	지 구 환 경 국 제 의원연맹	地球環境國際議員連盟 Globe Japan	1999	
	국제 항만협회	國際港灣協會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1966	가입
	신도국제학회	神道國際學會 International Shinto Foundation	2001	가입
	국제여성인 연락회	國際婦人年連絡會 International Women's Year Liaison Group	1998	
	자유인권협회	自由人權協會 Japan Civil Liberties Union	2003	
	국제여성의 지위협회	國際女性の地位協會 Japanes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Rights	1998	
	가족계획국제 협력재단	家族計畫國際協力財團 Japanes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mily Planning (JOICFP)	2000	
	일본변호사 연합회	日本弁護士連合會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	1999	
	일본우화회	日本友和會 Japa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1999	
	아시아여성 교류연구포럼	アジア女性交流・研究フォーラム Kitakyushu Forum on Asian Women	2002	
	평화시장회의	平和市長會議 Mayors for Peace	1991	가입
	묘츠카이기금	妙智會ありがとう基金 Myochikai Arigatou Foundation	2004	
	네트워크 「지구촌」	ネットワーク『地球村』 The Network "Earth Village"	2002	가입
일본국제민간 협력회	日本國際民間協力會 Nip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1996		

구 분	단체명	단체명 (일문 및 영문)	연도	DPI
명부상 협약지위	피스보트	ピースボート Peace Boat	2002	
	시민포럼 2001	市民フォーラム2001 People's Forum 2001, Japan	1999	
	아시아태평양 도시간협력 네트워크	アジア太平洋都市間協力ネットワーク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1995	
	시민외교센터	市民外交センター Citizens' Diplomatic Centr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999	
	세계피해자 학회	世界被害者學會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1987	가입
	국제인권활동 일본위원회	國際人權活動日本委員會 Japanese Work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2004	
	신일본부인회	新日本婦人の會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2003	
	일본구순 구개열협회	日本口唇口蓋裂協會 Japanese Cleft Palate Foundation	2003	
	아시아태평양 청년연합	アジア太平洋青年連合 Asian Pacific Youth Forum	1984	가입
	반차별 국제운동	反差別國際運動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1993	
	아시아유학생 협력회	アジア留學生協力會 Japan Solidarity Committee for Asian Alumni-International	1991	
	일본재단	日本財団 Nippon Foundation	2002	
	창가학회 인터내셔널	創価學會インターナショナル Soka Gakkai International	1983	가입
	지구환경과 대기오염을 생각하는 전국시민회의	地球環境と大氣汚染を考える全國民衆會議 Citizens Alliance for Saving the Atmosphere and the Earth	1996	
	국제홍수림 생태계협회	國際マングローブ生態系協會 International Society for Mangrove Ecosystems		
사사가와 평화재단	笹川平和財団 Sasagawa Peace Foundation	1996		

출처: UN DESA/NGO, <http://www.un.org/esa/coordination/ngo/>

- * 포괄적 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대규모의 국제 NGO로서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에 포괄적으로 관여
- * 특별 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이슈에만 관여
- * 명부상(등재된) 협의지위 (Roster Consultative Status):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사회이사회의 영역에 제한적으로만 관여
- * DPI: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UN 공보국)

2. 동북아에서의 NGO 개념

NGO라는 용어는 19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UN에서 사용한 NGO는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하였다. 즉, NGO는 비정부성·공익성·연대성·자원성·공식성·국제성의 특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의미하였다.² NGO 개념은 국제적인 의미에서 각국 내의 활동을 포괄하는 범주로 확장되었으며, 지방 수준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공공선을 증대시키려는 단체 활동으로 그 의미가 넓어졌다.

NGO는 우리말로 ‘비정부기구’ 혹은 ‘비정부조직’으로 해석되면서, 국내 학계 및 언론 등에서는 NGO 영문명칭을 외래어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NGO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이 국내외의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³ 특히 NGO와 NPO(Non-Profit Organization)간의 구분과 각각

² 박상필, “NGO 개념의 역사와 실체,”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 제25권 4호(2001), p. 88.

³ 김인춘, “비영리영역과 NGOs: 정의, 분류 및 연구방법,” 『동서연구』 9-2(1997), pp. 5~35; 김영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

에 포함되는 조직의 범위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 NPO는 NGO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서, ‘비영리기구’, ‘비영리조직’으로 불린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NPO적인 의미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NGO와 NPO를 사실상 똑같은 개념으로 구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NGO와 NPO를 동일시하는 근거로는 민간부문의 비영리적(non-profit), 자발적(voluntary), 자율적(self-governong) 조직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⁴ 구분하는 근거로는 NGO를 주로 ‘권익주창’(advocacy) 역할을 하는 조직, NPO를 주로 ‘서비스’(service)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국내외 학자들의 NGO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그 결과물로서의 개념의 혼란 현상은 NGO와 NPO에 대한 개념정의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 따라서 본서에서는 NGO에 대한 개념논쟁을 회피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GO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각국의 제도상 규정된 NPO 개념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NGO의 일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기한 속성을 띠고 있지만, 동북아 각국에서의 NGO 개념에 대한 이해는 나라에 따라 표현양식을 조

연구,” 『공공정책연구』 4호(1998), pp. 145~167;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비영리·비정부·시민사회·자원조직의 구조와 동학』 (서울: 아르케, 2000); Leon Gordenker and Thomas G. Weiss, “Pluralising Global Governance: Analytical Approaches and Dimensions,” *Third World Quarterly*, 8 (1995), pp. 223~243.

⁴ 정무권, “정부와 NGO의 관계: 개념화의 문제와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의, 『사회과학논평』 제21호(2001), p. 103.

⁵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논쟁』 (2001), p. 112.

⁶ Anna C. Vakil, “Confronting the Classification Problem: Toward a Taxonomy of NGOs,” *World Development*, 25 (1997), pp. 2057~2070; Leister M. Salamon and Helmut K. Anheier,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Leon Gordenker and Thomas G. Weiss(1995); 정수복, “한국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박재창 편, 『정부와 NGO』 (서울: 법문사, 2000), pp. 81~104.

금씩 달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용어에 있어서도 구분되는 특성이 드러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I-2>와 같다.

<표 I-2> 동북아 각국의 NGO 개념(제도적·학술적 규정)

국가	개념	개념이해
한국	NGO, 혹은 비정부 기구, 비정부 조직,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과 혼용	<p>❖제도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명확한 개념과 분류에 대한 규정이 없음.</p> <p>❖학술적: 대체로 NGO를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p>
일본	NGO, NPO	<p>❖제도적: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NPO법)’ 제정 이후, 그 때까지 임의 단체였던 많은 볼런티어(Volunteer) 단체나 NPO 및 NGO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었음. 이 법률에 따라 규정의 17분야⁷⁾에 관해서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 활동’(제1조)을 실시하는 NPO 법인이 최협의의(最狹義)로의 NPO로 불리게 됨</p> <p>❖학술적: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NPO라고 부르며, 국제협력에 관여하는 민간 단체를 NGO(특히 국제협력 NGO)라고 일반적으로 부름. 양자의 개념에는 활동 분야 이외에는 명확한 구분은 없으며, NGO/NPO로 병기하는 경우도 많음.</p>
중국	民間組織	<p>❖제도적: 1998년 6월 중국의 민정부(民政部)가 산하에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인 ‘사단관리사(社團管理司)’의 명칭을 ‘民間組織管理局’으로 개명함으로써 중국에서의 NGO의 공식적인 명칭은 ‘민간조직’으로 되었음.</p> <p>❖학술적: 1998년 10월 25일 중국 국무원령 제250호 ‘사회단체관리등기조례’(社會團體管理登記條例)와 동년 9월 25일 국무원령 제251호 ‘민간이 설립한 비기업 단위 등기관리 잠정조례’(民辦非企業單位登記管理暫行條例)에 규정된 ‘사회단체’와 ‘민간이 설립한 비기업단위’를 지칭⁸⁾</p>
러시아	NPO (НКО: 비영리기구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	<p>❖제도적·학술적: ‘비영리기구’라는 말은 러시아연방의 시민 조항에 규정된 활동 영역에 종사하는 조직으로서, 1996년 1월 12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 법률, ‘비영리조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단체들로서 3개의 거대 그룹인, 공적조직, 공적조직이 아닌 NPO, 별도의 법률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NPO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p>

⁷⁾ 17 분야란 (1)보건, 의료 또는 복지, (2)사회 교육, 3)마을 만들기, 4)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5)환경, (6)재해 구원, (7)지역 안전, (8)인권 및

가. 한국에서의 NGO 개념과 현황

한국에서의 NGO의 개념과 범위는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있으나, 대체로 ‘시민단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적으로는 1999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정치·비종교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NPO는 비영리적인 단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국의 NGO 분류에서 통상 포함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교회, 정당은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인이나 학술재단, 의료법인, 노동조합 같은 단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NGO와 상기한 범주의 NPO는 2003년 현재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약 2만 5천개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1만여 단체가 실제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한국은 빠른 정보통신의 발달양상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형성과 정보전달체계에 있어 역시 빠른 진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숫적 증가추세와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평화, (9)국제협력, (10)남녀공동 참획, (11)어린이, (12)정보화, (13)과학기술, (14)경제활동, (15)직업 능력의 개발 및 고용, (16) 소비자의 보호, (17)NPO지원 및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⁸ 사회단체란 중국의 공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회원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정(章程)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지칭한다. 민간이 설립한 비기업 단위란 기업의 사업단위·사회단체·기타 사회역량·공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비영리 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지칭한다. 등기 조례와 잠정 조례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단체’는 ‘비영리기구(NPO)’를 의미하고, ‘민간이 설립한 비 기업단위’는 비영리기구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영석, “중국 NGO의 발전과 행위양식에 대한 분석,” 정갑영 외,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서울: 오름, 2004), pp. 197~198.

⁹ 시민의 신문, 『2003 한국민간단체총람』(장·하 (서울: 시민의 신문사, 2003).

나. 일본의 NGO 현황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NPO법) 시행 이후 2005년 3월 현재 약 2만 1천여 개의 NPO가 존립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공공이익단체(public interest corporations)에 요구되는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절차를 통해, 많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등록할 수 있다.¹⁰ 또한 NPO는 단체등록에 필요한 공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단체가 소재한 지역 현(縣)의 지사 승인을 받거나, 사무실이 두 군데 이상의 현에 속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정 후 4년 동안 1 만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했으며, 현재도 전국적으로 매달 300 개 이상의 조직이 등록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NPO의 70 퍼센트 이상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새로 창립된 단체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한정된 자원과 실무진을 갖고 있으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¹¹ 일본의 시민사회는 중앙과 지방의 정부가 충분히 다루기 힘든 세계화, 낮은 출산율,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에서 연유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¹⁰ NPO 법인의 인증에 관해서는 재산적 제한은 거의 없으며,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¹¹ 한신 대지진 당시에 약 1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진 피해자 원조에 나섰으며, 재난 자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부의 개입보다 이들의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당시까지 만능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정부 행정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민간 자원봉사의 수나 원조액수가 정부를 능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반화되었고, 그 결과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시민사회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Satoko Itoh, “Japan,” APCC Conference-Govern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Nonprofit Sector*, September 5~7, 2003, pp. 158~159; 中村陽一, 『日本NPOセンター, 『日本のNPO 2000』(도쿄: 日本評論社, 1999), p. 95.

다. 중국에서의 NGO 개념과 현황

중국에서 NGO와 NPO 같은 말은 최근 등장한 외래어로서, 중국어에서는 각각 ‘비정부조직’, ‘민간비영리조직’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를 총괄하여 민간조직 혹은 민간단체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가 도입되기 이전에 중국에서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를 총칭하여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사회 단체의 주요 특징은 민간성, 비영리성, 조직화라는 3가지인데, 실제로는 관제 사회단체로부터 비공식적인 결사까지 그 조직형태는 다양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사회단체라는 과거의 개념과 NGO라는 새로운 개념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¹² 중국의 NGO 숫자와 관련하여 중국 칭화대학 NGO 연구소에 따르면, 약 220만개의 NGO(해외 NGO 약 3천개, 풀뿌리 NGO 약 20만개, 농촌 민간조직 약 150만개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중국 NGO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라. 러시아의 NGO 현황

러시아에서는 1995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모든 NGO, 자선단체, 종교조직,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결사체들은 법무부에 최초 등록(기존 등록단체 포함)을 해야 하며, 일정 기간 후에 재등록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1월 1일까지 274,284개의 단체들이 등록하였다. 이 중 25%가 시민운동단체로 추정되며, 재등록에 해당되는 전국 단체 중의 절반 이하만이 등록하였다. 따라서 모든 NGO가 등록된 것은 아니며, 등록을 모두

¹² 조한범·홍관희·황병덕·허문영·박형중·이우영,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통일연구원, 2004), p. 178.

¹³ 『타임』(Time)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NGO 활동을 하는 이가 전무했으나, 지금은 28만개나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Power to People,” Time, June 27, 2005; 俞可平等著, 『中國公民社會的興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pp. 228~230.

못하는 이유 중에는 등록비의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러시아 전체 NGO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는 없지만, ‘모스크바·헬싱키 그룹’의 대표인 류드밀라 알렉세예바(L. Alexseeva)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는 35만개의 시민단체, 약 100만 명의 시민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2,000만 명이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¹⁵

3. 동북아 NGO의 발전과정과 그 특성

가. 한국의 NGO 발전과정과 특성

한국의 NGO 발달의 계기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맞물려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NGO는 성장해왔다. 1990년대의 사회적 환경이 NGO에 호의적인 가운데 한국의 시민사회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고, NGO의 제도화도 가능했다. 덧붙여 한국 NGO의 헌신적인 노력은 시민사회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무엇보다도 시기에 따른 적절한 이슈 발굴, 여론 동원 그리고 공론화 과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했다.¹⁶ 한국의 NGO 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가들의 활동이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지식인 집단에 의해 NGO의 정책생산과 대안 제시가 가능했으며, 이런 형태의 움직임은 거의 대부분의 NGO들에 있어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한국의 NGO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방대하며, 정부 정책결정과 언

¹⁴ “Briefing Report: Russian Democracy Under Threat,” RFE/RL(October 24, 2000). <http://www.rferl.org/welcome/english/releases/2000/10/16-241000.html>(검색일: 2001. 11. 12).

¹⁵ <http://www.rferl.org/reports/2002/11/45-06102.asp>(검색일: 2003. 2. 25).

¹⁶ 차명제, “지구화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권혁태·박상필·박운철·박은홍·손현재·이남주·조경란·조효제·차명제,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서울: 아르케, 2003), pp. 169~171.

론 보도 등 NGO가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나. 일본의 NGO 발전과정과 특성

일본에서의 시민운동 맹아는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평화운동, 원·수폭 금지운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반대운동 등이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아직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정치투쟁의 양상을 띠었다. 뒤이은 1960년의 안보개정 반대운동, 1965~1974년에 진행된 배평련(べ平連)의 반전·평화운동은 시민운동의 차원을 발전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고도성장 말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생활의 근거지인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공해문제, 생활환경침해 등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까지의 주민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되고, 환경운동, 정보공개운동, 분권·자치운동, 반차별·인권 운동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운동들이 증대했다.

일본의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NGO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주민운동을 통해 운동의 리더십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계몽적인 지식인이 주도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풀뿌리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역 생활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매몰되어 국가적인 문제나 보편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이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으며, 보편적인 이념의 추구 혹은 국제연대 활동도 지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평화나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NGO의 활동도 참가자들이 이를 추상적인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인식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¹⁷

다. 중국의 NGO 발전과정과 특성

중국의 NGO 상황을 파악해보면 중국정부가 민간조직을 사회단체와 민간운영의 비기업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는 기금회, 학술성단체, 행업성단체, 전업성단체, 연합성단체로 분류되며, 후자는 교육류, 과기류, 문화류, 체육류, 사회복지류 등으로 나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의존해서는 중국 민간단체들의 속성과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민간단체를 분류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정부주도형 NGO (GONGO: Government Organized NGO)와 민간주도형 NGO (Grass-roots NGOs)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¹⁸

중국의 NGO는 무엇보다도 개혁·개방정책을 취한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기에 그 같은 추세는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유한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중국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첫째, 상당수의 중국 NGO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치적·법제도적 환경 때문에 불법적·반공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반공개적 영역 사이에는 끊임없이 사회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로 인해 중국 NGO는 자신의 존립을 보장받기 위해 탈정치화하면서도 막강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당-국가의 권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도로 정치화된 ‘이중 정치’의 행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 중국 NGO들은 능력있는 개인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NGO는 젊은 세대가 NGO 활동의

¹⁷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2004), pp. 114~115.

¹⁸ Yu Keping, The Rise of China Third Sector and Its Impact to Governance,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pril, 2002; 이남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 추세와 전망,” 권혁태·박상필·박윤철·박은홍·손혁재·이남주·조경란·조효제·차명제,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pp. 255~258.

맥을 잇고 있고, 과거에 고립·분산적으로 활동해오던 NGO들이 점차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자신들의 영향력 범위를 확대시켜 갈 것으로 보인다.

라. 러시아의 NGO 발전과정과 특성

러시아에서의 NGO 활동의 기원은 구소련 말에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가속화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의 확대와 더불어 개혁과 정보공개가 시민사회로 전파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시민단체로부터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 시대에도 반체제 비밀단체나 러시아 민족성과 가치를 복원하고자하는 문학, 미술, 평론 등의 분야에서 공개적인 시민단체 활동이 있어왔으나 소비에트 체제의 감시와 억압이 심했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 역시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와 1990년 러시아공화국의 주권선언 이후 러시아연방이 독립적으로 결성되면서 분출되기 시작한 시민단체는 주로 기존 공산당의 지배 이념에 반대하거나 공산당 지배하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인권 억압에 대한 항의 같은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인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1991년 말, 소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결성 이후 본격적인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통해 거듭나고 있는 러시아 국가를 소연방 시기의 과거와 결정적으로 구분해주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NGO의 결성과 활발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소연방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여전히 방대한 국가의 위용을 러시아

¹⁹ NGO활동가가 NGO 활동과 연관되는 기관의 전직 공무원인 경우도 많다. 즉 “큰 정부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 작은 정부”의 전환과정에서 생겨난 전직 공무원들이 결성한 경우를 말한다. Melissa G. Curley, “NGOs in China: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South Cooperation,” *Asian Perspective*, vol. 26, no. 4 (2002), pp. 173~175; 장영석, “중국 NGO의 발전과 행위양식에 대한 분석,” 정갑영 외,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서울: 오름, 2004), p. 211.

가 지니고 있듯이, NGO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급성장해 온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에 러시아의 NGO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은 시기적으로, 또한 그 내용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러시아 최초의 전국 규모 NGO 회의가 2001년 11월 21~22일에 크렘린궁에서 정부의 지원하에 400여개 시민단체에서 5,0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 형식으로 열린바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산주의 시대를 경험한 러시아인들에 대해 인권·시민운동의 불모지로 여겨왔던 통설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러시아에 많은 NGO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인권, 환경, 노동, 여성,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소연방의 후신이자 현 연방 내에 다민족을 거느리고 있는 러시아의 민족적 특성과 이행기 체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측면으로서, 러시아에 고유한 NGO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소련 말기부터 가열되었던 민족분규의 결과물로서의 난민(migrant NGO)과 역시 아프간전쟁과 체첸전쟁의 부수물로서의 난민, 참전군인 권익보호와 같은 문제들 뿐 아니라, 새로운 저항운동으로서 징집반대, 군대내 인권문제 등을 이슈로 삼는 NGO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방대하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러시아의 NGO들은 아직 그 규모와 현실적인 운영의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성숙도와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시작단계에 불과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빈곤, 알콜·약물 중독 방지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의 한계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패나 환경문제를 비롯한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오래된 사회적 이슈들을 퇴치하는데 있어서 그 노력을 정부와 함께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동북아 각국의 NGO 개념과 발달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았

으며, 제2장에서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써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부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각국 NGO들을 반전·평화, 환경, 인권, 역사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

1.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구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5년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의 보고서인 “Our Global Neighborhood”에서 지적되었다. 즉 점점 더 국가적 정체성을 떠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서 조직화된 방식으로 뭉치고 있으며,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고무해서 그들이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사 동반자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요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²⁰

2004년 6월에 발표된 “We the peoples: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Report of the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에서는 UN-시민사회 파트너십의 글로벌 컨텍스트(global context)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¹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영향이 약하다는 점이 세계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제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이웃공동체(communities of neighborhood) 즉 그들의 선거구에 따라 집약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들은 이익공동체(communities of

²⁰ “Our Global Neighborhood”(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5.

²¹ “We the People: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Report of the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2004).

interest)로 집약된다. 그리고 현대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덕분에 이러한 이익공동체들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으로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오늘날 시민사회운동과 여론의 점진(crescendo)으로 인하여 점점 새로운 이슈들이 전 지구적 주목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지자들(multi-constituency)에 의하여 수용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세계화로 인하여 주권재민(sovcreignty)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과 세계여론의 영향력이 증폭되면서 시민사회가 국가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축을 구성하는 새로운 다자주의의 틀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UN과 시민사회관계의 강화 방안에 대한 Panel of Eminent Persons의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어져 왔다. 가령 주권국가로부터 NGO를 위시한 시민사회로의 권력이동(Power Shift)이 일어나고 있고(Mathews, 1997), 인권,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국적 주창활동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으며,²² 이제 정부와 기업과 함께 제 3의 세력으로서 명실공히 다자주의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²² Keck, Margaret E. and Ka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임현진·공석기, “지구시민사회의 도전: 국가간 국제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역학관계,” 『제2회 한국NGO 학회·NPO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04).

²³ Florini, Ann M. ed., *The Third Force: The Rise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0).

세계화의 시대에 기존의 국민국가와 정부(government) 중심의 통치 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경을 넘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근대국가체제를 흔드는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충돌, 중앙정부를 우회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하위체계의 세계무대에로의 진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과 통제는 점점 약화되고 국경의 개념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승리를 부르며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등 국가의 경제영역으로부터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모델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통신혁명은 정보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통제를 허물고 있으며 반면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생산과 공급 및 유통 그리고 네트워킹에 드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이와 동시에 정보기술은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identity)에 변화를 갖고 오는데, 국경을 초월한 넷(Net) 상의 새로운 정체성의 대상 혹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국민국가에 대한 정체성 혹은 충성심(loyalty)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보화 기술은 국가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네트워크 상에 분산된 개인과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비국가 행위자들로의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통치능력-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to steer society)-은 줄어든 반면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국가, 사회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비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혹은 최소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의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²⁴

더 나아가 현실 국제정치의 국가주의적, 패권적, 무정부적 질서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가 시민사회 차원의 인식과 규범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NGO 혹은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활동이 국가와 사회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 및 선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담론(discursive positions)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절차(procedures), 정책, 그리고 행위 차원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켈과 시킨크(Keck and Sikkink)는 이러한 NGO의 역할을 “인식 틀의 구성(construction of cognitive fram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국제 NGO 활동의 초기 노예문제와 여성의 참정권 문제로 시작하여 현재의 인권과 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NGO 네트워크들이 새로운 인식 틀의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기존의 규범과 관습(practices)을 바꾸어 왔다고 주장한다.²⁵

비슷한 맥락에서 핀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는 NGO가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새로운 규범이 출현하여 확산되고 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²⁶ 가령 규범의 출현 단계에서 규범을 주창하는 행위자(norm entrepreneur)의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규범의 조직적 기반(organizational platforms)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규범의 확산단계에서도 국가와 정부간 기구와 함께 규범의 사회화, 제도화 및 선전(demonstration)의 역할을 담당

²⁴ 김의영, “인터넷과 거버넌스,”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정치학』(서울: 법문사, 2002).

²⁵ Keck and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²⁶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1998).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있어 NGO를 위시한 비국가 행위자들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가행위자들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파트너로 등장하였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지구시민사회의 근본적인 규범과 도덕적 원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와 동북아 거버넌스의 가능성

가. 기존 연구의 입장

그렇다면 과연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가? 기존 연구들의 대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듯 하다. 이점은 동북아 지역의 거버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잘 나타난다.

우선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지역 국가 간 협력을 논하고 있다. 가령 지역협력에 있어 패권국가의 역할과 국익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시각,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지역협력을 초래한다고 보는 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 시각, 국가 간 거래비용의 삭감을 위하여 지역차원의 제도를 통해 협력 증진한다고 보는 신제도주의적 시각, 지역통합의 선호도는 상호의존의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이해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국가들의 의도적인 선택과 협상의 결과라고 보는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나아가 지역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인식, 정체성, 규범, 개체와 구조간의 상호구성성, 공유된 지식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웬트(Alexander Wendt) 류의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중심적 시각이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²⁷

이러한 국가중심적 시각은 동아시아 지역의 거버넌스의 문제를 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역 강대국의 입장 및 역할과 APEC, ARF, ASEAN+3 등 정부간 기구 및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패인(Anthony Payne)은 국가와 국가하부(sub-state), 공·사(public and private), 초국적(transnational and supra-national) 등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다층적(multilevel) 거버넌스 구조로 특징지어지는 EU와 비교하여 아태 지역의 지역주의를 전 거버넌스(pre-governance) 구조로 성격지우고 있다.²⁸

같은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 중 특히 신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분야의 PAFTAD(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PBEC(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그리고 안보 분야의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와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 전문가 차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²⁹

²⁷ Moon, Chung-in and Dae-Won Ko, "Korea's Perspective o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Ravenhill, John. "The Growth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r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최영중,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2000); 유현석, "아시아 경제위기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변화 연구: APEC의 변화와 지역 정체성의 정치경제," 『국가전략』 제7권, 3호(2001년 가을).

²⁸ Payne, Anthony, "Globalization and Modes of Regionalist Governance,"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²⁹ Yamamoto, Tadashi,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0); Valencia, Mark J.,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이 조직들은 학계, 민간부문, 정부부문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track two’의 성격을 지닌 비공식적 외교 채널들로서 동북아, 나아가 아태지역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⁰ 특히 이들은 일종의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의의 아이디어와 담론, 나아가 지역적 정체성을 구성해 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위주의 인식공동체의 참여가 시민사회와 정부의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지역 거버넌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나마 기존 인식공동체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인식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인물들과 기관들이 각각의 정부들로부터 얼마나 자율적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있으며 이들이 국가와 기업의 지배적인 이익을 넘어 일반 아시아인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배타적 엘리트주의에 기초하여 지역협력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의 논의는 전통적인 군사적·전략적 안보의 틀을 넘어 경제, 환경, 인간 안보 차원의 개념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즈³¹는 지역 협력에 있어 엘리트 위주의 삼자 정책네트워크(tripartite policy network)로부터 인간중심적 초국적주의(people-centered transnationalism)와 포용적 접근법(inclusive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Jung, Ku-Hyun, "Nongovernmental Initiatives in Korea for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³⁰ Yamamoto, Tadashi,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Japan, pp. 22~25.

³¹ Woods, Lawrence. "Regional co-operation: the transnational dimension,"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r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approach)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³²

이러한 엘리트 혹은 전문가 차원을 넘어 일반 NGO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제한적이다. 우선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NGO의 역할과 관련하여 소수의 사례 연구들과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NGO의 역할을 간헐적으로 언급하는 문헌들은 있으나 보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³³ 기존 연구들의 입장도 동북아 거버넌스에 있어 NGO의 역할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동북아 각국 상황에 따라 NGO 부문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NGO들이 인적·조직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적 차원의 이슈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힘든 상황이며,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 또한 미발달되어 있고 협력 또한 미진한 상태라는 것이다.³⁴

나. 동북아 시민사회의 잠재성(potential): 수요와 공급의 측면

위에서 살펴 본 기존 연구들의 입장과는 달리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며 동아시아 거버넌스에 있어 NGO의 역할에 대한 잠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시민사회의 잠재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요의 측면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³² 그는 1차대전 이후 설립되었던 IPR(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의 전통을 되살릴 것을 제안한다. IPR은 CSCAP과 PECC와 같은 Track Two 채널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다 민간자율적이고 포용적인 접근(approach)과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의 개념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Woods, 1998).

³³ 아태지역 외교에 있어 NGO의 역할에 대한 책으로 Woods(1993) 참고.

³⁴ Tang, James,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NGO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 East Asia, and World Peace in the Age of Global Governance(Nov. 21~24. Bangkok, 2001)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 차원의 논의다. 반면 공급 측면은 동북아 시민사회가 과연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 차원의 논의다.

우선 수요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논의의 등장 자체가 세계화의 시대에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가중심적 접근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도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지역 및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가령 금융위기, 황사문제와 같은 환경문제, 사스 등의 질병, 테러의 위협 등-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 국가안보 및 기업이익의 틀을 넘어 지역 전체의 개개인에 파장을 미치는 각종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를 아젠다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및 정부간 기구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동북아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의 역할이 당위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동북아 시민사회의 주체가 없다면-공급되지 못한다면-동북아 지역의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는 한낱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공급의 측면은 동북아 시민사회의 현황 및 발전 추세를 봄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로리니는 전 지구적 정치(global politics)에 있어 초국적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의 성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초국적 시민사회의 응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및 협상의 증가, 초국적 시민사회 네트워크 간 학습효과 등을 들

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북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듯하다.

<표 II-1> 동아시아 NGO의 관련 지표

	INGO 수 1992/2002 (절대 증가율, %)	국제적 NGO* 사무국 수, 1992/2002 (절대 증가율, %)	국제적 NGO/IGO 회의** 수 2002	Internet 사용자 1,000명당 2001
한국	1,357/2,241 (65)	45/51 (13)	156	512
중국***	1,251/4,321 (245)	28/105 (275)	122	26
일본	2,548/3,751 (47)	173/263 (52)	259	440
몽고	148/429 (190)	2/3 (50)		17
싱가포르	1,163/1,844 (59)	45/81 (80)	182	366
말레이시아	1,316/1,965 (49)	54/75 (39)	69	273
태국	1,269/1,915 (51)	56/101 (80)	100	58
인도네시아	1,278/1,891 (48)	35/34 (-3)	49	19
베트남	337/878 (161)	1/4 (300)	15	13
필리핀	1,456/2,036 (40)	97/99 (2)	35	26
캄보디아	93/366 (294)	0/5 (500)	12	1
라오스	104/251 (141)	0/1 (100)	11	2
미얀마	276/405 (47)	0/1 (100)	8	0
세계	세계 평균증가율 (61) 선진국 평균증가율(48) cf. 벨기에: 4,008/5,740(43)	세계 평균증가율(43) 선진국 평균증가율(45) cf. 벨기에: 1,419/1,865 (31)	미국 (1,131) 벨기에 (299)	세계평균: 80 선진국 평균: 410

출처: 헬무트 안하이어 외,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서울: 아르케, 2002)와 Kaldor, Mary, Helmut Anheier, Marlies Glasius. eds. *Global Civi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에서 발췌 및 집계

* INGO와 국제적 정향의(internationally oriented) NGO

** INGO, 국제적 NGO, IGOs 의하여 조직된 국제적 회의

*** 중국자료의 경우 티벳(Tibet) 자료 포함

첫째, 각국 국내NGO 부문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초국적 네트워크의 국내적 마디(domestic node)의 역할을 함으로써 초국적 시민사회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의 시민사회의 성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한국에 있어 NGO의 등장은 가히 결사체적 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발 NGO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NPO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6,579법인단체 중 24%인 1,579단체가 국제협력활동을 주요활동 분야로 하고 있으며, 비록 글로벌한 지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NGO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³⁵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역내 NGO 네트워크 또한 잘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경우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NGO들이 제2의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³⁶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동북아 각국의 INGO 부문의 성장 추세이다. <표 II-1>에 나와 있는 1992년과 2002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비록 절대 수에 있어 서구선진국의 INGO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대부분 절대 성장률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 NGO 사무국 수의 절대 성장률 또한 상당수 국가가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 각국 NGO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 NGO들 간 네트워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 NGO 네트워크는 주로 일국 차원의 NGO네트워크와 타국의 유사한 네트워크와의 연대, 지역적 정향의 (regionally oriented) NGO의 국가 지부들 간의 네트워크,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도과 권고에 의하여 형성된 NGO 네트워크, 지역의 개별 NGO들 간의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띤다. 야마모토는 이러한 네트워크

³⁵ 정미애,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정미애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NGO들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국제협력보다는 친선차원의 국제교류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나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지향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³⁶ 『조선일보』, 2005년 6월 22일.

의 등장은 지역 NGO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한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의 이슈들-인권, 환경, 여성문제, 이주노동자, 난민, 에이즈의 확산, 인구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마모토가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NGO 네트워크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주요 동아시아 NGO 네트워크

CODE-NGO	필리핀 개발 NGO 네트워크
SEADHRRA	South East Asia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Rural Areas Forum 인도네시아의 INDRHRRA, 필리핀의 PHILDHRRA, 태국의 THAIDHRRA 외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지부들의 NGO 네트워크
ANGOC	Asian Coalition for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8개 국 33 NGO 혹은 NGO 네트워크들의 지역조직
APPROTECH ASIA	Asian Alliance of Appropriate Technology Practitioners, Inc. 기술 관련
SEACON	Southeast Asian NGO Consorti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YASANTI	인도네시아 여성 NGO 네트워크
ENGENDER	싱가포르 환경, 여성 NGO 네트워크
ACFOD	사회경제적 개혁, 문화, 종교에 기초한 발전을 추구하는 NGO 포럼
Regional Conferences of NGOs	ESCAP, JANIC 등이 조직한 지역 NGO 회의 등

출처: Yamamoto, Tadashi,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pp. 19~22.

둘째,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초국적 시민사회운동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³⁷ 동북

³⁷ Warkentin, Craig, *Reshaping World Politics: NGOs, the Internet, and Global Society*(Lanha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Clark, John and Nuno Themudo, "The Age of Protest: Internet-Based 'Dot Causes' and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아의 경우에도 비록 국가간 인터넷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고 서로 다른 언어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중요 국가들의 경우 빠른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부문의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I-1> 참고).

셋째,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및 협상은 초국적 NGO들의 활동의 초점(focal point)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응집력을 제고할 수 있다. 표 II-1에 나타난 국제 NGO/IGO 회의 수를 보면 물론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서 볼 때 절대 수에서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은 상당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NGO들만의 병행회의(parallel summit)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래로 NGO 병행회의의 추세를 관찰해 온 피안타와 실바³⁸는 이미 NGO 병행회의가 더 이상 선진국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의 WSF(World Social Forum)의 영향으로 주로 남미의 NGO 병행회의가 활성화 되어 왔지만 2003년 자료를 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전체 병행회의 장소의 9%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의 1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또한 <표 II-1>과 <표 II-2>에서 나타난 INGO와 지역 NGO 네트워크의 증가 추세도 지역 NGO들의 초국적 활동을 위한 초점(focal point)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플로리니가 지적한 초국적 학습효과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역내 상호의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

in John Clark ed., *Globalizing Civic Engagement: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Action*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2003).

³⁸ Pianta, Mario and Federico Silva, "Parallel Summits of Global Civil Society: An Update," in Mary Kaldor, Helmut Anheier, Marlies Glasius. eds. *Global Civil Societ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³⁹ 2004년 제 3차 WSF가 인디아의 뭄바이에서 열림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지 요인들-즉, INGO의 증가, 인터넷의 확산, 국제회의의 증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동북아 지역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소결

본 장에서 살펴본 공급 측면의 요인들은 어떤 뚜렷한 추세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상기한 지표들도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⁴⁰ 나아가 동북아 시민사회의 잠재성에 대한 장애요인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동북아 NGO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자원부족의 문제, 문화적·역사적 이질감, 역내의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등은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동북아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들은 초기적 단계이나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의 저변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시사하고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와 역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⁴⁰ 가령 중국의 INGO의 증가를 시민사회 저변의 확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가령 서베이 자료와 한류현상과 같은 문화적 차원의 지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II

동북아 반전·평화 NGO

1. 개관

환경, 인권, 여성 등 여타 NGO 분야의 경우에는 동북아 국가들 간 비교 연구가 다소 축적된 편이나, 반전평화 분야의 경우 동북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 연구 및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 내부의 반전평화 NGO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전평화 NGO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화, 통일(한국의 경우), 반핵·비핵, 군축,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군대(기지) 이전 및 철수, 파병 반대, 전쟁피해자, 대인지뢰철폐, 그리고 평화헌법개정반대(일본의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이한 분야의 NGO들 간에 서로 복합되는 양상의 새로운 NGO 활동도 시도되고 있다. 이를테면, 2005년 8월 12~28일 한국의 환경 NGO인 '환경재단'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인 '피스보트(Peace Boat)'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중·일 도시순회 프로그램인 '아시아 평화와 미래를 위한 바다여행'(Peace & Green Boat) 행사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2001년 6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분쟁 방지 관련 보고서(A/55/985-S/2001/574)를 통해 무력분쟁 방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관련 NGO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으며, 2005년 7월 19~21일 유엔본부에서는 “대응으로부터 방지까지: 폭력방지와 평화건설을 위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추구”라는 주제로 반전평화 관련 세계 NGO들의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2001년 6월 당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력분쟁 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고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4년 2월 일본 동경에서는 '갈등·분쟁예방 국제회의(GPPAC)' 동북아시아 창립대회를 거쳐 2005년 2월에도 일본 도쿄 유엔대학에서 '2005 GPPAC 동북아시아 대회'가 개최되어 한국 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10개 단체 활동가 15명 및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몽골 등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참가자 60여명 등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GPPAC에는 전 세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형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경험을 모으고 시민사회, 정부, 유엔기구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⁴¹

특별히, 북한의 조선반핵평화위원회도 GPPAC 동북아회의의 참석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는데, 일본측 NGO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시 북한의 불참 원인은 북한과 일본간 가짜 유골문제 갈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⁴²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평화운동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원래 'Paco'라는 이름 아래 1921년에 설립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에서도 매년 개최지를 돌아가면서 전 세계 반전평화 NGO들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WRI의 반전평화 NGO 국제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2003년에는 서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으며 또한 2005년 6월에도 한국의 '전쟁 없는 세상,'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 5개 단체들과 WRI 공동으로 서울에서 3박 4일 일정의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⁴³

도대체 세계의 분쟁과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기에 이처럼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초래되었을까? 반전평화운동은 어떤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그 역할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⁴¹ <http://www.peacewomen.or.kr/news> 참고.

⁴² 『통일뉴스』, 2005년 1월 27일 참고.

⁴³ 구체적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및 5개 국내 평화단체 공동주최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2005. 6. 26~29) 자료집 참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검토해 보고자 반전평화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동북아 각 국가별 반전평화운동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세계분쟁과 반전평화운동

인간의 역사 6천년간 대략 1만 5천회의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매년 2~3번의 전쟁이 발발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기간인 약 3,000주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주는 겨우 3주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나 미국의 전국방위위원회재단(NDCF) 등 세계 권위 있는 분쟁관련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탈냉전이후 대규모 전면전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은 더욱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의 대테러전쟁 등은 더욱 복잡한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전쟁이나 분쟁의 개념 정의에 따라 다소 현황 통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의 분쟁은 대략 100개 내외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전쟁은 20~30개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최근 수년 동안 발생하였던 전쟁 중 세계 매스컴의 주요 초점이 되었던 전쟁만 하더라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테러전쟁과 동티모르, 코소보, 보스니아, 르완다 등 인종·종족·민족전쟁 등 실타미 없이 계속되어 왔다.

2005년 7~8월 현재 시점에서 필리핀 내전, 네팔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수단 내전, 캐시미르 분쟁, 부룬디 내전, 알제리 내전, 콜롬비아 내전, 우즈베키스탄 내전, 예멘 내전, 소말리아 내전 등 수 많은 내전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일 정도이다.

한반도가 지금 현재는 이들 지역처럼 실제 교전 중이거나 내전 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적 분쟁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사실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자 핵능력 보유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모두 집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대치, 일-중 지역패권 경쟁, 미-중 세계패권 경쟁, 미-러 세계패권 경쟁 등 복잡한 대립구도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을 가상의 워게임 시뮬레이션들도 수차례 실시되어 왔는데 대체로 비관적인 결과들이 많은 편이었다.

1991년 미 국방부에 보고된 워게임에서는 발발 4주만에 부산이 함락될 것이라는 비관적 결과가 도출된 바 있고, 1992년 초 리스카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제시한 워게임에서는 미군 없는 상태에서 야간 기습을 받을 경우 한국군은 수도 서울을 잃은 뒤 오산까지 밀릴 수 있었으며, 1995년 5월 미국 캔서스주의 포트 레번워스 기지에서 실시된 모의전에서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시 한미 방어선은 서울 인접 지역까지 뚫릴 수 있다는 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북핵 문제 와중이던 2005년 3월에도 미국의 월간 저널인 Atlantic Monthly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정책 전략가 6명에게 각각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DNI) 국장, CIA 국장, 합참의장, 태평양지역군 사령관 등의 역할을 부여한 후, 북핵 위기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한 적이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 워게임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선제공격 옵션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북한의 도발징후 포착 시에는 북한의 화학무기와 미사일, 핵시설의 우선적 제거를 위해 미국은 하루 4천회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당시 하루 800회의 전투·폭격기가 출격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하루 4천회 출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전

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결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연구 결과, 비록 수 십 가지의 이론과 가설들이 도출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가설과 이론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게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 같은 지도자들의 호전성 때문이라는 주장, 상대국의 도발성과 군사력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주장, 대내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자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속죄양 가설’, 국내 군수산업의 무기 판매를 통한 이익 추구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군산복합체’ 주장, 국내경제의 성장과 팽창으로 인한 해외 시장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제국주의 전쟁론, 국가간 국력차이가 비슷할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세력균형론과 이와는 반대로 국가간 국력차이가 클수록 오히려 전쟁발발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세력우위론의 논쟁, 세계질서의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간 안정성에 관한 논쟁 등 전쟁발발에 관한 솔한 이론과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발발하였는지 간에 가장 심각한 사항은 전쟁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한 수천만 명의 난민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지뢰로 인한 민간 사상자 수만 해도 매달 2천 명 정도에 달하며 매 22분마다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한 사람씩 팔·다리가 지뢰로 인해 잘려 나가고 있다는 통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희생자의 75% 정도가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되고 있는 반핵·비핵, 양심적 병역거부, 군기지 철폐, 반전운동 등 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의 물결은 바로 이러한 시대흐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흐름

반전평화운동은 본질적으로 평화 시에는 그 중요성이 미미하였다가 전쟁을 계기로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반전평화운동 흐름 역시 1980년대 냉전시기에는 부각되었다가 1990년대 탈냉전시대에는 한 때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9.11 테러에 따른 대테러전쟁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세계 시민사회의 중심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비록 1990년대의 탈냉전기에 평화운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운동은 1997년의 대인지뢰금지협약 운동 및 1998년의 소형무기 이슈화 등을 통해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해 온 탓에 2000년 9.11 테러이후 부시 정부의 반테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이 또 다시 활발하게 점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⁴

오늘날 세계평화운동에서는 국제관계에서 민간인의 역할이 점점 두드러지는 가운데 평화운동단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깊어가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운동방식들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정보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국경을 넘어선 반전평화 서명운동도 눈부시게 약진하였다. 전반적으로 평화운동진영에서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⁴⁵

구체적으로,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to Committee: AFSC)는 'No More Victims Campaign'을 진행하여 반인도적 범죄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미행정부의 외교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활동을 펼쳤고, ANSWERS(Act Now

⁴⁴ 이성훈, “세계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쟁점,” 『시민과 세계』, 제4호(2003), pp. 370~371.

⁴⁵ 박성준, “평화, 평화학 그리고 평화운동,” 조효제 엮음,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서울: 아르케, 2003), p. 134.

to Stop War and Racism)는 2001년 9월 29일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반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 4월에는 10만여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에서 부시의 ‘끝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여파는 유럽에서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Peace and Human Rights) 발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2001년 10월 홍콩에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아시아평화네트워크(APA: Asian Peace Alliance)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⁴⁶

반전평화운동의 대표적 표출 유형으로서 비폭력 반군사주의가 있다. 몇몇 중요한 비폭력 반군사주의자들의 캠페인은 군사기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들은 군사주의 상징으로서의 군사기지 철폐뿐만 아니라 환경적 폐해 등을 고려한 군사기지 철폐, 외국군 주둔에 반대하는 군기지 철폐 등의 형태로 표준화되어 왔다.

군기지 반대운동은 더 나아가 ‘군대’라는 실체가 공공기관을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학교와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신병모집” 행사 등에 거부감을 가진 나머지 군대의 존재가 대학 등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군사주의 운동의 정점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징집거부의 형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징집제 및 군사문화가 팽배하였던 한국과 러시아 지역의 반전평화운동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징병제도 및 시민적 권리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는 국가와 개인간의 오랜 관계 설정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전 세계적

⁴⁶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음, 『세계분쟁과 평화운동』(서울: 아르케, 2004), pp. 197~198.

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운동은 이제 종교나 양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부터 전쟁과 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마지막으로 반전평화운동의 세계적 흐름 중 빠트릴 수 없는 특징은 반전평화운동 주체로서의 여성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안보와 평화문제 자체가 남성들의 독점물로 인식되어 온 기존의 주류를 과감히 거부하며, 안보를 젠더적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을 당연히 참가시킨 가운데 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안보를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군대의 존재는 젠더화 된 사회구조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풍토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표출된 것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여성이 주체로 된 반전평화운동 단체들의 출범이었으며 러시아 등에서도 ‘참전 병사들의 어머니회’ 등 여성들의 반전평화 운동은 그 나름대로 특유의 힘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2. 한국의 반전·평화 NGO

현재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 국방비를 감축시키고 불필요한 무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 동북아시아의 미군 문제나 미국의 군사전략에 맞서는 운동, 동북아시아의 무력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운동,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이 있으며, 군사주의와 여성의 관계, 군대내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⁴⁸

⁴⁷ 정용욱,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 주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2005. 6. 25~29), p. 79.

⁴⁸ 최민,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주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2005. 6. 25~29), p. 20 참고.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분단국의 특성상 ‘통일운동’이라는 독특한 유형의 반전·평화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간 공통점도 있지만 양립되는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운동 진영은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에 속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평화운동 진영은 반대로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두 운동은 최근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분야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NGO 관련 주요 매체인 『시민의 신문』⁴⁹에서는 한국 NGO의 분야별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을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두 축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분단된 한반도의 특성상 한국사회의 주요 운동은 모두 통일문제를 끼고 진행돼 왔으며 사회변화의 성장점들을 통일운동진영이 많이 제공해 온 게 사실이다. 1990년대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반미 문제와 연방제에 대한 통일방식의 문제가 주요 이슈이었던 한국 내 통일운동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화는 통일운동의 대중기반을 넓혔다.

통일운동은 크게 통일연대와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7대 중단 등 세 축으로 볼 수 있다. 통일연대는 2001년 만들어진 연대체(47개 단체)이고 민화협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민관협력 통일기구다. 통일연대는 1990년대 통일운동을 이끌어 온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이적단체로 탄압받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일연대와 민화협은 상호 입장 차이도 존재하는데, 민화협은 ‘교류협력’을 중시하면서 통일에 반대

⁴⁹ 조은성, “NGO 지형도: 평화운동, 통일운동,” 『시민의 신문』, 600호 (2005. 6. 6), p. 38 참고.

하는 세력과도 함께 하지만 통일연대는 100% 민간단체로 민족대단결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북과 함께 하는 공동행사 외에 남측 통일단체들 간의 자체행사를 하지만 민화협은 주로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등 행사중심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통일연대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나 한반도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비판하는 것과 달리 민화협은 통일의 걸림돌을 비판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일연대는 민족공조를 구호로 들지만 민화협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단체로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변통일위원회, 통일광장 등 통일연대 소속 47개 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평화운동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은 당초 통일운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된 나머지 시민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록 1997년부터 여성의 관점으로 평화와 통일 문제를 다뤘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있긴 했지만 평화운동단체로서 단독 분류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다. 1999년에 만들어진 평화네트워크를 비롯, 비폭력평화물결(2000),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2003), 전쟁없는 세상(2003), 아시아평화인권연대(2003), 평화유랑단 평화바람(200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corea평화연대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분단이란 현실 때문에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있어 왔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반전운동이 본격화되면서부터 한국의 평화운동은 비로소 독자적인 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군대문제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이라크전쟁은 평화단체뿐 아니라 기존단체들마저도 모두 ‘반전·평화’라는 깃발 하에 모이게 한 셈이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반전·평화운동은 처음에 ‘파병반대운동’에 치중되었다가 최근에는 세계분쟁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일상적 평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아시아평화학교’를 준비하기도 한다.

그 동안 평화는 주로 정치적 의제에서 다뤄진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주의 문화 등 사회구조적 폭력을 깨기 위한 운동도 병행되고 있다. 평화운동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문화적 콘텐츠 결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중에게 평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이나 그림, 음악 등의 요소가 대거 결합되고 있는데, 사이버 평화박물관을 개관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기존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내부의 평화 부문이 활성화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를테면 한국의 전쟁지원 반대, 한국군 파병반대, 매향리미군폭격장 폐쇄, 미군학살만행 특별조사, 불평등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등을 위한 수많은 민중/시민 연대체들이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⁵⁰

구체적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군기지 이전비용 백서를 제작한 바 있고, 참여연대와 민변 등 86개 351개 단체가 연대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반대 자료집을 제작하였고, 한편 평화인권연대와 민가협 등 30여개 단체의 ‘병역거부권연대회의’에서는 국회로 비단을 구성하고 대체복무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입법추진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여성들의 반전·평화활동 역시 그 역할이 자못 컸다고 할 수 있는데,

⁵⁰ 박성준, “평화, 평화학 그리고 평화운동,” 조효제 엮음,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서울: 아르케, 2003), p. 135.

‘평화인권연대’는 지난 4년동안의 활발한 활동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을 평화운동의 구체적인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하였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미군범죄 피해자들을 10년 넘게 지원하며 미군범죄근절운동을 정착시켰다. ‘두레방’ 또한 기지촌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평화운동의 여러 가지들을 이슈화 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⁵¹

운동의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평화운동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참신하고 선진적인 평화운동 방법들을 흡수하는 동시에 이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적극성과 개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테면 침묵시위, 1인 릴레이 시위, 평화의 쪽지 보내기, 온라인 반전 서명하기, 아프간여성 영상제, 반전·평화 콘서트, 반전 버튼 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반전·평화의 공감대를 넓혔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운동은 단기간 또는 일회성의 활동에 그칠 뿐, 일반 민중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⁵²

◆경실련 통일협회 (통일협회 CCEJKRS)

1994년 1월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단체로서 약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조사연구 등을 통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에 관한 현안대응, 정책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올바른 통일논의의 확산을 위한 시민통일교육 강좌, 북한 경제회생, 동포 돕기를 위한 캠페인 및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⁵¹ 김동심, “반군사주의 여성평화 운동의 현황과 과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주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2005. 6. 25~29), p. 87.

⁵² 박성준, “평화, 평화학 그리고 평화운동,” p. 136.

◆국제민주연대

2000년 2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회원은 215명이다(2005년 7월 말 기준). 다국적 기업의 반인권, 반노동, 반환경적인 행위들을 고발하여 기업의 태도를 바꿔나가며, 베트남전쟁 기간동안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감시활동, 특히 현재 대우가 진출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신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의무경찰에 대한 인권문제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군가협은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할 목적으로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주요 활동으로는 ‘군인의 전화’를 운영하여 군복무중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상담과 함께 구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온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문사와 군, 경찰 내 폭력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6월에 군경 의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다와 우리

김현아 베트남전진실위원회 운영위원과 노은희 치과의사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5월 20일에 설립하여 현재는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옹호되는 사회, 개인, 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버마 민주화 운동, 폭빈마을 피해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라진-선봉지역 적지분장 탁아소와 결연을 맺고 있다. 연대 단체로는 국외에는 버마민족민주동맹과 국내에는 한국 JTS가 있다.

◆ 남북어린이어깨동무(Okedongmu in Korea)

남북 어린이들이 친구로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실천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6월 20일에 설립되어, 한겨레신문 사장을 역임한 권근술 현 한양대 석좌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순회 평화교육, 어깨동무 대행진을 비롯한 어린이 문화사업, 북녘 어린이 영양, 보건의료 지원, 남녘 결식 어린이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부 기구로는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교육연구팀과 청년모임인 열음이가 있으며, 부설 기구로는 남북 어린이 성장발달 연구회와 영양증진센터 설립준비 위원회가 있다.

◆ 대항지구화행동(Counter Globalization Action)

무한한 소통과 자유의 열린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반·전평화운동, 생태환경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전평화활동으로는 피스몹, 널린노래방, 도보대행진 등 시민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범민중재판, 이라크 종전, 자이툰부대 철수를 위한 평화활동 전개를 벌이고 있다.

◆ 독도수호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통일과 자주권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 단체로서, 2000년 3월 1일에 설립하여 현재 김종대 문화시민연대 이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회원은 1,200명이며 사진, 자료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 국토대장정을 주최하고 있다.

◆ 태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 위원회

수십 년 동안 미 공군의 전투기 폭격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

은 피해를 보상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철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상임대표로는 권영길, 단병호, 문정현, 오종렬 등 진보 재야인사들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벌여나가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등 주요 반미, 주한미군 철수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 문화예술행동 ‘숨’

실천적, 행동주의적인 문화예술인들이 그들의 시대적 고민을 나누며, 고민의 결과로서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집회 참가와 한반도 군축실현을 위한 문예행동 등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다.

◆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Pan Korea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1998년 9월 28일에 설립한 단체로서, 615공동선언 실현, 지역간 화합, 남북간 화해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갈등 원인과 치유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몽활동, 지역감정 조장 세력과 인사의 공개 비판 및 고발, 동서 교류 화합을 위한 각종 사업, 민족화합을 위한 공청회 개최, 남북한 학술, 문화, 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2,250명이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204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현 대표자는 이돈명 상임의장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사업, 통

일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사업, 남북간 화해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991년 12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분단을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민족 자주권 확립과 민중 생존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중생존권 쟁취, 반미자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언론개혁,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의 민주인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 대표는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국가보안법으로 투옥 경력이 있는 오종렬 상임의장이 맡고 있다.

◆ 반미여성회

반미여성회는 한국사회의 억압과 모순이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며, 미군을 몰아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미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 생활 속 미국반대운동전개, 여성인권운동 등이 있다.

◆ 범민련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본노선 아래 6·15 공동선언의 관철과 주한미군철수투쟁 등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갈라진 혈맥을 잇는 전민족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6·15공동선언 고수, 이행을 위한 선전, 실천활동과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참여,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전민특위) 활동, 장기수송환대책활동 등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0일에 결성하였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한국에게 불리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1999년 10월 6일에 전국 127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아울러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패권주의 전략을 저지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이하 SOFA)의 부당성과 개정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 SOFA 개정 서명운동, 언론모니터링과 함께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연대단체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반도평화를위한 시민네트워크,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등이 있다. 공동대표로 문정현, 김현, 단병호, 이우정, 이장희, 장원, 장주영, 채수일, 홍근수 등의 진보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 비폭력 평화물결

한반도와 온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어내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비폭력 정신으로 전쟁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주요활동으로는 ‘연두빛 평화의 물결운동’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평화학교 운영과 평화너른마당 개최 등이 있으며, 비폭력 평화사상 연구, 평화감시활동, 평화행동, 유엔사재조정캠페인, 그리고 갈등/분쟁의 비폭력적 해결방법 워크숍 등이 있다.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2003년 4월 1일에 부산에서 설립한 단체로 이윤벽 신부와 정귀순(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사회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넓은 시야,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안고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전쟁피해자 인권보호 및 난민지원사업, 특히 원폭피해자 지원 사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프칸난민캠프 내 어린이학교 지원사업, 아시아 민주화, 인권운동 연대사업,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권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하였다. 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와 분석 및 사례수집을 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여론 환기를 하고 있다. 대표자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인 효림스님이 있으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석태, 한홍구, 최정민이다. 그리고 36개 시민단체가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2004년 2월 11일에 결성되어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자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모 이사장이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상임대표 아래 공동대표가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외 23명이 있으며, 함세웅, 최열 외 이사 6명, 강만길 전 상시대 총장 외 고문이 21명 있다. 설립 목적은 북녘의 어려운 동포들을 도와주어 북녘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통일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 부문과 단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남북협력사업 지원, 남북 영상교류, 교육교류, 지역교류 등 참신하고 규모 있는 남북공동 기획사업 전개, DMZ 통일기행 및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통일강좌, 주간지 발간 등이 있다.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차이를 넘어 뜻을 모아 자주적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1994년 7월 2일에 설립하였다. 현 대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인 배다지 의장이 맡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6.15, 8.15 기념 통일행사, 평화연대 활동, 민족사 바로알기 운동, 청소년, 시민 평화, 통일교육이 있다. 회원은 17만명이며, 연 예산은 2억원이다. 그리고 회원단체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외 22개 단체가 있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9.11 테러이후 진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에 때맞춰 이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막고,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알리며,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주요활동으로는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모금운동 전개,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중집회와 반전·평화 콘서트 개최,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파병 국회비준동의 반대운동 등이 있다.

▶ 전쟁 없는 세상

2003년 5월 15일에 결성된 단체로서, 평화의 신념을 알리고 다양한 평화의 신념을 이유로 징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결성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수감되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 지원, 다양한 행사, 집회, 캠페인 참여, 소식지 발행, 해외자료 번역, 민가협 목요집회 참여, 매달 평화인권열린마당 개최와 함께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회원 64명, 연 예산 100만원의 소규모 단체로서 2001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다. 여성단체,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 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반전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주변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운영과 집회, 서명운동, 학술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One Korea Buddhist Movement)

1992년 2월 12일에 설립하여 현재 회원 3000명, 연 예산 6억원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였다. 현 대표는 은혜사 주지이며,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법타 상임대표다. 북한동포돕기와 남북간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남북불교간 화합과 유대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북한동포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금강국수공장 지원, 금강산 문화유적지 복원 사업이 있으며, 남북불교간 정기법회 및 행사개최, 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그리고 통일불교학당 및 통일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이 있다. 회원단체로는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 후원회와 북한불교연구소가 있다.

◆ 좋은벗들 (Good Friends)

남북 민족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여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지원과 함께 탈북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그리고 재외동포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자 1996년 12월 12일에 설립된 단체이다. 유수 정토행당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통일운동으로서 통일대화마당, 통일민들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민중생존권 보호 및 인권개선운동, 조중국경지역 북한식량 난민지원 활동, 그리고 하나원생과 함께하는 경주문화탐방을 펼치고 있다. 평화운동의 일환으

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유수 정토법당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미본,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by US Troops in Korea)

1993년 10월 26일에 설립하여 현재 회원은 180명이며, 연 예산은 6천만원이다.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와 피해를 조사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간 제도를 개선하여 평화와 인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미군기지 실태조사, 여성인권 보호, 한미협정 개정운동, 기타 미군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원칙적이고 즉각적인 철수, 그리고 지난 60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을 청산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15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정책 지도위원 외 각 지역본부 운영위원 들은 외부에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활 속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이라는 대중중심, 대중참여의 운동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각종 집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예하 활동기구로서 2003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권력감시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전·평화, 군축운동의 지평을 열어가는데 그 목적을 두어,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이라크 전쟁 반대 및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전개, 국방정책 감시로 국방비 증액반대 및 국방정책 투명성 확보 등 주요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며, 국제평화연대 및 평화교육, 그리고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제언을 하고 있다.

◆ 종전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동 네트워크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침략의 주동자들을 민중재판에 기소하여 철군과 종전에 앞장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 국제전범재판운동 전개와 기타 각종 반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 초록정치연대

전국적이고 수평적인 초록정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 활동과 조직원리에서 참된 대안을 구현하는 초록정당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순번제 의결구조를 채택하고, 독립적이며 개방적인 회원모임을 통해 초록정치의 활동을 이끌며, 중앙기구를 최소화하고 권위적인 직제를 배제하는 새로운 정치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다. 주요활동으로는 풀뿌리 초록정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전국네트워크 형성, 신개발주의의 독선을 막고 생명이 숨쉬는 서울을 만들 <초록서울>정책 프로젝트 전개, 시민행동으로 펼쳐가는 ‘반전반핵 평화군축’ 운동, 비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활동과 사회연대, 20대 청년초록정치운동 추진 등이 있다. 국제 연대 단체로 유럽청년초록당, 미국대학초록당 등이 있다.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희생된 선조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시켜 나라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유족 상호간 친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1992년 9월 14일에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일본정부에 강제연행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사죄와 피해보상 소송제기, 선친유해송환 및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소송제기, 미불노임공탁금, 우편저금 송환 촉구 운동 등이 있다. 현 회원은 4만명이며, 연 예산은 7000만

원이다.

◆ 통일맞이

겨레의 자발적인 참여로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이후에 대두될 문화, 사상의 갈등을 융화시키며, 사회, 경제적 이해의 상충으로 돌출할 분쟁 요인을 해소하며, 통일을 민족공동체의 대화합으로 맞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6월 1일에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통일교재 마련 사업을 비롯한 각종 통일교육사업,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통일기행, 통일맞이 자료실 운영, 그리고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 사업이 있다.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중심투쟁과제로 삼아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 한시적, 협의적 연대투쟁기구로서 2005년 2월에 조직되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평택 팽성지역 토지측정 저지투쟁, 미군이전 서명반대운동, 평화축제 개최 등이 있다.

◆ 평화네트워크

탈냉전 시대에 걸맞는 평화, 통일교육의 부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고정화된 부정적 이미지, 무관심, 혐오감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는 문제에 기초하여 북한,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어 1999년 9월 10일에 설립하였다. 현재 운영위원 11명, 자원활동가 6명, 자문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에는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강정민 서울대 원자력센터 연구원,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등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한반

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군축문제 적극적인 이슈화, 북한인권문제 특별팀 운영, 월레포럼과 평화카페 운영 등이 있다.

▶ 평화로 만드는 여성회

국내회원 500명, 해외회원 80명, 이사 15명, 하위센터 4개로 구성된 단체로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전쟁위기 조성, 이산가족의 근본 원인인 남북 분단을 해소, 군사주의 문화의 평화주의 문화로의 전환, 통일, 외교, 국방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남북여성교류촉진 활동과 토론회 등을 비롯한 남북화해협력활동, 통일, 평화교육, 평화캠프, 평화기행 등의 평화문화 확산활동,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전문가 워크숍 등의 갈등해결과 중재훈련활동, 반전·평화여성행동 촉진 활동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연대하고 있다.

▶ 평화바람

고향땅을 지키는 평택 횡성 주민들과 연대하여 미군이전을 막고, 주한미군의 거점인 평택을 생명의 당으로 지켜내자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14일에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이라크 파병 저지’, ‘평택미군기지총집결저지’를 주제로 전국 60여개 도시 유랑, <평화의 땅, 평택 지킴이> 활동 전개, 평화축제 개최 등이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1994년 6월 2일에 설립하여 현재 회원 200명, 연 예산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가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통일의 다리를 놓고 동북아와 세계의 반전반핵 평화운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방위비 삭감,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저지 등 평화군축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산하에 평화분회, 통일분회, 여성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 평화인권연대(평화연대,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로서 대표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평화 문화 창출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 대안문화미디어 운동,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반전운동, 평화캠프 주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은 100명이며 연 예산은 720만원이다. 연대단체로는 국제민주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이 있다.

▶ 평화재향군인회

친일-군부독재세력에 의해 왜곡 형성된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자주적 안보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확산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설립하였다. 육군사관학교 18기 출신으로 육군 정훈감을 지낸 표명렬 예비역 준장이 임시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전역장병 취업보도 및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예비군 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에 반영하는 계획수립, 군대개혁 및 군대발전 연구사업의 추진이 있다.

▶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운동차원에서 민족화해, 평화통일 실천을 위한 민족화해주체역량 구축,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정책의 대안제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달성을 목

적으로 2000년 9월 21일에 설립하였다.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을 위한 시민강좌를 펼치고 있으며, 민족화해 시민캠페인,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 세미나 개최, 기타 워크숍 등을 열고 있으며, 북한 돕기 및 북한 바로알기 운동 전개, 냉전법령 개폐운동 및 시민입법청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 회원은 200명, 연 예산은 2,400만원이다.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 판매의 금지를 목적으로 1997년 11월 6일에 설립되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매설된 지뢰 상황, 후방 지뢰지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지뢰피해 상황을 국제회의의 의제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벽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은 2천명, 회원단체는 경실련 통일협회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있으며, 연간 예산은 1억원이다. 국외에는 일본대인지뢰대책회의(JCBL)등과 연대하고 있다.

▶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군사주의, 군사화, 군사문화의 해체, 그리고 군사주의적 폭력으로부터 여성, 아동,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군사주의로부터 생태계 보전, 미군기지 반환과 여성/지역주민을 위한 경제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 국제아동의 인권 보호 및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제반활동, 미군기지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 보전운동, 기지 전환과 지역자치경제 대책 활동, 불평등한 SOFA 개정 운동, 군비축소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비 확충 활동,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등이 이 단체의 주요활동이다.

▶ COREA 평화연대

2003년 5월 12일에 설립하였으며, 대표자는 김영만 (열린사회 희망연대 대표), 박창균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 위원장, 신부),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순일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의 모임 대표) 공동대표 4명이다. 반전, 이라크 전쟁반대,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해 설립되어, 인간방패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과 반전·평화를 위한 단식농성에 참여하였으며, 종교인들의 기도회와 이라크 파병동의안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였다.

3. 일본의 반전·평화 NGO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은 전쟁의 참화와 원폭 피해에 대한 직접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간절한 평화 열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북아 여타 국가들에 비해 그 발생 배경부터가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폭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는 ‘반전반핵’이 평화운동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이다.

일본내 평화운동의 한 분류에 따르면 평화헌법 옹호운동, 일미안보조약 반대운동, 반핵·평화 시민운동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⁵³

가. 평화운동의 전개와 NGO

戰後 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은 1949년부터이다. 194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 의한 반전운동이 고조되고, 1949년 4월에는 NGO인 ‘세계 평화평의회’에

⁵³ 간다 후미히토, “국민의식의 변화와 대중운동,” 후지와라 아키라 외 저·우철민 역, 『일본현대사』(동녘, 1986), pp. 187~189 참고.

의해서 파리와 프라하에서 ‘평화옹호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그에 맞춰서 같은 달에 일본에서도 ‘평화옹호일본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적인 조직인 ‘일본 평화를 지키는 모임(현재의 일본평화위원회)’이 발족했던 것이다.⁵⁴

평화를 지키는 모임은 1950년 유럽의 국제적인 반전 운동인 ‘스톡홀름 어필’에 호응하여, 반전 및 반핵을 목표로 한 서명활동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6.25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베를린 어필’에 호응하는 서명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약 600만명의 서명을 모으는데 성공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경험을 토대로 반전 및 반핵을 요구하는 일본의 평화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후 1952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회의’나 1955년에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제 국민회의’등에의 참가를 통해, ‘일본평화연락위원회’나 ‘일본 아시아 연대위원회’등 평화관련의 민간단체가 잇따라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평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54년 3월 1일의 미국에 의한 ‘비키니 환초 수폭실험’이후이다. 태평양의 마셜 제도 부근에서 실시된 수폭실험에 의해 일본의 어선인 ‘제5 복룡환(第5福龍丸)’이 피폭해, 승무원이 원폭증에 걸린 것은 물론 도쿄나 오사카 등의 시장에 보내진 참치로부터 방사능이 검출되어 전국에 공포가 퍼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전국의 시민단체, 학생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이 합류해서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

⁵⁴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東京: 社會評論社, 1995) pp. 100~109. 전쟁 전 및 전쟁 중에도, 조직화의 정도는 낮지만 반전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민간활동은 존재했다. 1889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퀘이커(Quaker)계의 평화단체가 일본에 ‘일본평화회’를 설립해, 출판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반전 활동을 전개했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자에 의한 반군활동이나 병역거부활동, 국제반제 동맹일본지부의 결성등이 있다. 日本平和委員會平和運動30年記念委員會, 『戦争と平和の日本近代史』(東京: 大月書店, 1979), pp. 42~49, 95~112.

다. 1955년 8월에는 서명이 약 3200만명에 도달해, ‘제1회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어 운동의 중심적 조직으로서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원수협)’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수협에는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총평)’나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전학련)’, ‘신일본 부인회’등, 당시 일본의 주요한 노동단체, 학생단체, 여성단체의 대부분이 참가해 원수폭금지운동은 1950년대를 상징하는 대중운동이 되었다. 이후 ‘핵전쟁저지’, ‘핵무기완전금지’, ‘피폭자원호’를 목표로 하는 세계대회가 원수폭금지운동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⁵⁵

또 1960년에는 원수폭금지 운동과 함께 일본에 있어서의 최대 규모의 대중운동이었던 ‘안보투쟁’이 전개되었다.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여, 일본의 재군비 반대 및 중립화를 요구하는 운동이지만, 이것도 또한 노동단체나 학생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안보개정저지 국민회의’라는 중심조직이 형성되어 일본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시위 활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 6월 4일에는 약 560만명이 참가한 전국 일제 총파업이나 6월 18일에는 국회를 약 30만명이 포위하는 등 대규모 항의시위가 전개되었다.⁵⁶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베트남 반전운동이 일본의 새로운 평화운동으로서 등장했다. 이것은 평화운동 자체로서도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NGO의 활동범위 확대나 활동방법의 다양화, 나아가

⁵⁵ 원수폭 홈 페이지 <http://www10.plala.or.jp/antiatom/>

1960년대부터는 원수폭 운동의 추진 세력이 정치적으로 분열하는 결과가 되었다. 1962년의 제8회 원수폭세계대회에서 동시기에 실행된 소련의 핵실험에 관해서 공산당계의 단체와 사회당계의 단체의 의견 대립이 생겨 ‘모든 나라의 핵실험을 금지한다’라는 주장을 유지한 사회당이나 일본최대의 노동단체인 총평, 일본 청년단협의회, 일본지역부인단체연락회등이 대회로부터 이탈했던 것이다.이것들 사회당계의 단체는 1965년에 ‘원수폭금지 일본국민회의(원수금)’를 결성해 독자적인 원수폭금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열을 위해 원수폭금지운동의 국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은 약해지고, 공산당계 대 사회당계라는 좌파 세력내부의 노선 대립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⁵⁶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 pp. 199~221.

서 ‘가해자로서의 일본’이 인식되는 결과가 되는 등, 일본의 평화운동에 큰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 때까지의 일본의 평화운동은 평화헌법을 지켜 왼쪽에 반대한다고 하는 체제의존적인 입장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부터는 일본이 미군기지를 제공했던 것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 평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시민적 불복종’이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하여, 가해자인 일본정부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저항한다는 보다 급진적인 관점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은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해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연구활동이나 주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NGO활동의 성격이나 활동범위도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⁷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평련)’이다.

베평련은 1965년 4월에 발족해, 1974년 1월에 해산된 베트남 전쟁 반대의 시민단체로서, 당시의 사회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시민운동이나 NGO의 조직형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그 특징을 몇 개 들면 (1) 작가 오다 미노루(小田實)를 비롯해 카이코우 다케시(開高健),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등 많은 문화인이나 저명인사가 참여한 것, (2) ‘뉴욕 타임즈’에의 반전 광고 게재, 미일시민회의의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으로서 반전 탈주병에 대한 원조, 미군기지 내에서의 지하 반전조직의 결성, 일본내 미군기지 주변의 수송 경로 봉쇄, ‘주간 안보’라는 정보지의 발행, 매월 1 회의 정례 반전 시위 등 독특한 활동을 차례차례 전개한 것, (3) 규약이나 회원제도를 가지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베평련으로 간주한다는 유연성 및 자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창출한 것, (4) 이러한 조직 운영에 의해 전성기에는 전국에 300개 이상의 베평련 그룹이

⁵⁷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 pp. 30~35.

小田實, ‘平和への具体的提案’;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 pp. 140~158;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學』(東京: 明石書店, 2000)

생기고 풀뿌리 레벨로 평화운동을 전개한 것 등이다.⁵⁸ 지원한 탈주병 중에는 미국병사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나 일본인도 포함되어 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은 후에 한일간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⁵⁹

베트남 전쟁이 일본에게 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전쟁에 의해서 발생한 인도차이나 난민에 대한 구조가 NGO활동으로서 크게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지 지원이나 구원 물자의 공급, 국내에서의 모금활동, 국제연대에 의한 의식 계발 활동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국제협력NGO’가 급증했다. ‘난민을 돕는 모임(1979)’ ‘일본국제자원봉사센터(1979)’ ‘일본국제기아대책기구(1982)’ 등이 그러하였고, 그 때까지 20여개 정도였던 국제협력NGO가 1980년대에는 약 200개까지 급증하는 결과가 되었다.⁶⁰

198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방식을 지향하는 평화 관련 NGO들이 등장함으로써 평화운동도 이전과 같은 대중동원적인 운동이 아니라, 각 NGO활동들의 개성과 특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83년에 결성된 ‘피스 보트 (Peace Boat)’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피스 보트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면서 출발했다. 대형 여객선을 빌려 수백명의 젊은이가 크루즈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시작해 세계의 젊은이와 직접 대화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의 하나이다. 정부간에서 할 수 없는 외교 현안을 NGO가 보

⁵⁸ 베평련 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www.jca.apc.org/beheiren/>

⁵⁹ 鶴見俊輔, 『國家の言うままにならぬ記憶 ; 反戦脱走兵援助運動の意義』;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 pp. 163~171. 베평련은 ‘JATEC(탈주병원조일본기술위원회)’을 결성해, 일본내 및 스웨덴등의 중립국으로의 탈출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지원 대상자중에는 미국계 한국인이나 한국병 및 미국 유학중에 징병에 지원해 베트남에 파견된 일본인등도 포함되었다.

⁶⁰ 國際協力NGOセンター, 『NGOディレクトリー2004』 (東京: 國際協力NGOセンター, 2004)

완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이 시점에 등장했다. 아시아 각국의 전쟁 지역 방문이나, 중국 NGO와의 교류, 북방4도의 민간인 방문 및 대화 촉진, 그리고 1991년에는 남북한동시 방문 등 피스 보트는 정부에서 추진이 곤란한 여러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피스보트는 종래의 원수폭금지운동에 더 하여 반전, 분쟁예방, 난민지원, 헌법유지, 일본의 전쟁책임 추궁,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평화 NGO로서 마침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 자격을 얻기까지 성장했다.⁶¹

일본의 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1991년의 이라크 전쟁이다. 전쟁 중에 재정 지원만을 했던 일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일본이 할 수 있는 국제 공헌이란 무엇인가’가 외교 현안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논의의 초점은 자위대의 강화에 의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인가 아니면 자위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한 국제 공헌인가이었다.⁶²

이것에 대응한 NGO활동은 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군대의 포기를 명기한 현행 헌법을 옹호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쟁예방이나 분쟁지역에서 현지 지원을 하는 활동 등이다. 전자는 국내에서의 NPO·NGO활동의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고, 후자는 국제협력 NGO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자위대나 헌법문제에 관한 전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탓으로, 보수 대 진보의 정당간 관계에 이용된 측면이 강하고, 한편으로 후자는 정부, NGO, 그리고 자금 원조를 하는 기업이나 재단이 서로 협동하는 새로운 국제공헌활동의 모델을 개발해 NGO로서의 독자적인 중요성이나 역할을 발견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 2000년에 발족한 ‘재팬·플랫폼(Japan Platform)’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분쟁이나 난민의 발생 또는 재해 발생시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NGO의 요청에 대해, 정부나 기업, 재단, 언론이 신속히 지

⁶¹ 자세한 것은 피스 보트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peaceboat.org>

⁶² 渡辺治, 『現代日本社會論』(東京: 労働旬報社, 1996), pp. 587~560.

원해 재해지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의 기관이다.

1990년대 이후는 일본 사회에서 소규모의 자원봉사단체나 NPO가 급증한 것을 배경으로, 평화관련 NGO도 작은 규모로 독특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한층 다양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군기지 문제에 관해서 활동하는 ‘피스 데포(Peace Depot, 1999)’나 지방 자치체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스·림(Rim Peace, 1996)’ 등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NPO이지만, 인터넷의 이용이나 독자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공표 등 대규모 단체와 같은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오키나와 평화시민연락회(1998)’도 지역주민에 의한 소규모의 단체이지만, 한국이나 푸에르토리코의 NGO 등과 연대해 반기지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99년의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에 대한 시위활동은 크게 주목받았다. 한편으로 유엔이나 정부를 은퇴한 인물들이 그 경험을 살려 ‘일본 분쟁예방센터(1999)’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적 NPO를 설립하는 예도 있다. 또 베평련의 활동가가 재집결하여 헌법유지를 위한 ‘9조의 모임(2004)’을 결성하거나 ‘재일코리안청년연합(1991)’이나 ‘코리아NGO센터(2004)’ 등 재일 동포에 의한 평화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평화운동의 대상이 다양화된 것은 물론 인적네트워크 역시 보다 중층화되어 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원수협이나 원수금, 일본평화위원회 등도 건재하며, 동북아비핵지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나 평화, 역사, 환경, 인권 등의 지역적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포럼 평화·환경·인권(1999)’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개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일본에는 약 22,400개의 NPO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NPO법으로 규정된 17의 활동분야 중 반전·평화 NGO에 해당되는 ‘인권옹호 및 평화의 옹호를 도모하는 활동’단체는 15.3%(중복선택)에 해당되는 총 3400개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전·평화단체는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51.7%), ‘사

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47.1%), '마을 창조를 도모하는 활동'(39.8%)에 비하면 적지만 이전보다 훨씬 증대한 것을 알 수 있다.⁶³

나. 개관

(1) GPPAC 동북아 위원회

GPPAC란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의 약자이며, 2001년에 유엔의 아난 사무총장이 '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연설한 것을 계기로 각국의 NGO에 의해서 결성된 분쟁예방에 관한 국제 민간 프로젝트이다. '유럽분쟁예방센터(ECCP)'가 국제사무국을 담당하고, 세계 각지에 지역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위원회에 관해서는 일본의 피스 보트가 지역 사무를 담당해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여성회'와 홍콩의 '아시아 평화 연대'가 공동 주최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GPPAC 동북아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NGO는 한국 15개, 일본 26개, 중국 18개, 대만 10개, 몽골 5개, 극동 러시아 2개 등이다.⁶⁴

2002년에 발족한 GPPAC는 2004년에 '지역 어젠더'를 결정해 동북아 지역의 분쟁예방을 위한 과제나 대응에 관한 원칙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2005년에는 뉴욕에서 세계 각 지역의 보고회가 거행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 NGO가 집결했다. GPPAC의 주요 활동 비전에는 지역의 비핵지대 설정이나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 대화의 촉진, 영토분쟁지역의 비무장지대화, 동북아 재해 구조 부대나 동북아 인권기구의 설치, 역사인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창출, 일본의 헌법 9조를 토대로 한 동북아 평화현장의 제정 등이 있다.

⁶³ 일본 내각부 NPO국 홈 페이지. <http://www.npo-homepage.go.jp/>

⁶⁴ GPPA 홈페이지 <http://www.gppac.net/>, 및 피스보트 홈페이지 <http://www.peaceboat.org> 참조

(2) 한일 시민사회 포럼

1995년에 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 포럼’이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의 약 20개국의 NGO가 참가해, 평화를 비롯한 시민사회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1997년에 제2회 회의가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되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때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가 중심이 되어 2002년에 더 작은 규모로 효율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제1회 한일 시민사회 포럼’이 개최되어 2003년의 제2회, 2005년의 제3회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입법기구’와 한국의 ‘아시아 시민사회 운동 연구원’이 각각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동북아 평화구축과 시민사회의 역할 같은 거시적인 것으로부터 교육이나 복지, 환경 등 구체적인 것까지 폭넓게 한일 각각의 경험을 서로 배우거나 협력 관계를 탐구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참가 NGO는 일본에서는 ‘포럼 평화·인권·환경’, ‘일본국제자원봉사센터’, ‘참가형사회시스템연구소’, ‘자유인권협회’, ‘피스보트’, ‘환경 지속사회연구센터’, ‘피스테포’ 등이며, 한국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YMCA’, ‘지구촌 나눔운동’, ‘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양국의 주요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⁶⁵

(3) 일본-한국-재일 동포의 네트워크

일본에는 약 60만명의 한국 혹은 북한 동포가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에 의한 NGO 활동은 일본의 NGO 활동의 한 분야로 평가될 정도로 활발하다. 이러한 활동중에서 최근에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재일 동포의 3자 사이의 교류 촉진이나 3자의 협력에 의한 북한인도지원 등 동북아 지역 문제와의 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⁶⁵ 2003년 제2회 한일시민사회 포럼 자료 및 2005년 제3회 한일시민사회 포럼 자료 참조.

NGO에는 ‘민단,’ ‘재일코리아청년연합,’ ‘코리아NGO센터’ 등이 있어, 국제교류행사나 해외연수 등을 빈번히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재일동포-한국 유스 포럼’이나 ‘피스나우·코리아·재팬(Peace Now Korea-Japan)’ 등 일본의 NGO와 한국의 NGO 그리고 재일 NGO의 3자가 일체가 되어 형성된 연합체도 존재하여, 일본과 한국에서의 동시에 평화 운동이나 반전운동, 문화교류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일본의 재일의 동포단체와 한국의 ‘겨레 공동체,’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나 ‘JTS(Join Together Society),’ ‘한국청년연합’ 등이 협력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의 재외 동포도 참가하는 동북아 코리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운동도 있다. 이들 재일 동포 단체가 중심이 된 NGO활동은 동북아의 평화 구축에의 공헌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해 넓게 주목을 받고 있다.

다. 주요 단체⁶⁶

◆일본평화위원회(日本平和會議)

1949년에 설립되었다. 전쟁을 반복하지 않는 것과 원폭의 피해를 재발시키지 않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해 활동을 개시했다. 활동 초기부터 유럽의 NGO나 노동단체에 의한 반전운동과 연대하여, 서명 활동이나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등을 전개해 왔다. 현재에도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평화관련 NGO과 폭넓은 교류하고 있다.

1950년대의 원수폭금지 운동, 1960년의 안보투쟁, 1965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베트남 반전운동 등, 일본의 평화 운동의 거의 모든 장면에 참가해 중심적 조직으로서 활동해 왔다. 1986년부터는 오키나와나 나가사키 등 미군 기지의 소재하는 일본 각지에서 매년 ‘일본평화대회’를 실시하여, 미일동맹반대, 미군기지 철퇴

⁶⁶ 단체 소개는 일본 NPO센터 홈페이지 (<http://www.jnpoc.ne.jp/>) 및 각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했다.

의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회는 원수협이나 신부인회,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의 NGO들이 일본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해외로부터의 참가도 많다. 한국에서는 ‘녹색연합’ 등이 1999년 이후 매년 참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반대나, 개헌반대에 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1954년 3월 1일의 미국에 의한 수폭실험을 계기로 설립되어 반핵, 원자력발전반대, 피폭자지원을 주된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 여성 단체, 청년단체, 시민단체 등 약 50개의 단체에 의한 연합 조직으로, 전국 47개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다. 반핵운동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최대의 NGO이다.

매년 3월에는 ‘3·1 비키나·데이’집회, 8월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대회에는 매년 NGO나 시민 약 1만명에서 2만명이 모이고 있다. 국제적 NGO인 ‘국제평화뷰로(International Peace Bureau)’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원수폭피해자협회’ 등 중국에서는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러시아에서는 ‘체라빈스크핵피해자 조직 『아이굴』’ 등 해외로부터의 참가도 많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는 주로 공산당계의 지지단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1965년에 분리, 설립)는 구 사회당계의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구 소련이나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 평화적 이용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평련) (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連合)

1965년부터 1974년에 걸쳐 활동한 반전 단체이다. 시민운동가나 주

민운동가, 학생 운동가, 좌익계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활동가가 베트남 반전을 공통 목표로 참가한 단체이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학생운동이나 안보반대운동, 공해에 관한 주민운동, 공항건설 반대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일본에서 전개되었지만, 그 중 베평련은 독특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서 크게 주목받아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활동 중에서도 양심적병역거부의 이념에 근거하는 탈주병 지원 활동이나 미군기지 주변의 수송경로의 봉쇄활동, 미일시민회의의 개최와 미일반전·평화시민조약의 체결, 언론을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은 그 때까지의 일본의 반전·평화운동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또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그룹의 자립성을 중시해, 같은 목표를 가지는 개인이나 그룹이라면 혼자라도 베평련의 지부로서 인정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었다.

해산 이후, 베평련의 활동은 많은 NGO의 모델이 되어, 1980년대에는 양심적군사비지출거부활동을 하는 NGO나, 정치범이나 탈주병에 대한 재판지원활동을 하는 NGO, 미군기지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는 NGO등이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베평련의 중심 멤버가 다시 모여 '9조의 모임'을 형성하여, 개헌반대운동의 중심적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피스 보트(Peace Boat)

1982년에 발생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대형 여객선을 빌려 수백명 규모의 학생이나 시민에게 직접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활동이다. 2005년까지 80개 이상의 나라나 지역을 방문했고, 북한이나 러시아의 북방4도도 포함되어 세계일주 크루즈도 몇 번이나 실시했다. 2005년에는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한 크루즈도 실현했다.

크루즈 외에도, 난민지원활동이나, 분쟁예방활동, 반핵운동, 문화·예술 활동,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제공하는 ‘피스 볼(Peace Ball)’,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개발원조,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운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에도 등록된 NGO이다.

▶ 평화시장회의(平和市長會議)

1982년에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2회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당시의 히로시마시장이 세계의 도시가 국경을 넘어 연대하여 함께 핵무기 절폐를 주장하는 ‘핵무기 절폐를 향한 도시 연대 추진 계획’을 제창했다. 평화시장회의는 이 계획에 찬동하는 세계 각국의 도시에 의해서 구성되어 1990년에 유엔 홍보국 NGO에, 1991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수협의자격 NGO에 등록되었다. 2005년 현재 세계 112개국·지역의 1080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

세계의 대학에 있어서의 ‘히로시마·나가사키 강좌’설치를 향한 협력 프로그램의 검토·실시나, 평화, 군축, 안전보장에 관한 연구나 집회 등에 관한 연대 도시간에서의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히로시마 시장이 대표 및 사무국장을 담당하여, 각국 각 도시의 시장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NGO이다.

▶ 오키나와 평화시민연락회(沖縄平和市民連絡會)

1999년에 설립된 연합체형의 NGO이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약 30개의 단체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면적의 약 15%가 미군 기지인 오키나와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적 단체의 하나로, 특히 1999년의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시의 시민에 의한 연쇄활동이 유명하다.

조직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같은 미군기지를 가지는 한국이나 푸에르토리코의 NGO과의 연대활동이나, 오키나와의 환경보호 운동 등, 참가단체를 통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1평반전지주운동’이다. 미군에 토지를 사용시키지 않게 그리고

사용중의 토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운동이며, 대규모의 토지를 운동에 참가하는 개인에게 1평씩 분산 소유시켜, 많은 지주가 단결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토지 매수를 저지하거나 재판 투쟁을 서로 돕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키나와로부터, 도쿄나 오사카 등의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분쟁예방센터(日本紛争予防センター)

전 유엔사무차장인 아카시 야스시(明石康)를 중심으로 1999년에 구성되었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소규모의 NPO과는 달라 사무국 스태프(유급 14명, 무급 4명), 회원 120명, 회원단체 54단체, 4개의 해외사무국, 연예산도 1억엔을 넘는 대규모 단체이다.

분쟁지역에 있어 활동경험이 있는 전외교관이나, 유엔관계자, 정부관계자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 분쟁예방, 지뢰철거, 개발 원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 내에 있어서는 분쟁 예방시민대학원의 운영, 또 인터넷에서는 세계의 분쟁 예방 NGO 네트워크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예방 NGO의 요람을 출판하고 있다. 2005년 현재는 약 450개의 NGO가 게재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4단체, 대만 3단체, 한국 8단체, 일본 89단체가 게재되고 있다.

◆코리아NGO센터(Korean NGO Center)

‘재일 한국민주인권협의회’, ‘민족 교육 문화센터’, ‘원 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의 3단체가 통합해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재일 한국민주인권 협의회는 재일동포의 인권문제나 한일 NGO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며, 민족교육문화센터는 일본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추진하는 단체이며, 원 코리아 페스티벌은 민족통일에 관

한 단체로 1990년대부터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20년을 넘는 활동 실적을 가지는 이들 3단체가 동북아 평화 실현을 공통의 비전으로서 통합했다.

다른 재일 동포 단체나 한국의 ‘동북아 평화연대’ 등과 제휴하여, 동북아 코리안 네트워크 회의의 개최, 남북한 및 일본의 NGO협력 사업의 전개,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 활동 등, 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 코리안 네트워크 회의는 2002년(도쿄 회의), 2003년(서울 회의) 2004년(오사카 회의), 2005년(북경·연변, 국제 심포지엄)으로 계속되어,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에서 약 150명이 참가해,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민족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의 ‘겨레 공동체’등이 주최하는 동북아 지역의 동포 모임 등에도 빈번히 참가하고 있다.

▶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在日コリアン青年連合)

약 400명의 재일동포에 의해서 운영되어 도쿄, 오사카, 효고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강좌나 역사 강좌 등의 교육 사업, 스포츠 대회 등의 이벤트, 한일 청년교류나 북한지원 등의 사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이후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무력행사에 반대하는 ‘Peace Now Korea-Japan’라는 행사나 비무장지대의 견학이나 북한지원 관련 의 NGO를 방문하는 ‘Peace Walk Korea-Japan’의 개최, 또 일본인-재일동포-한국인의 대화 촉진을 위한 ‘유스 포럼’ 등을 빈번히 개최 및 참가하고 있다. 이들 행사에는 주로 재일동포나 한국인이나 일본인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젊은이가 참가하고 있다. 유스 포럼에는 한국의 ‘한국청년연합회’나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경실련’ 등, 일본에서는 ‘피스보트,’ ‘부락개방동맹,’ ‘재일동포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재일한국학생동맹’ 등 많은 한일 NGO가 참가하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와는 2002년에 자매 협정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깊게 하고 있다.

4. 중국의 반전·평화 NGO

가. 중국 본토의 반전·평화 NGO

중국의 NGO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그 수가 확대되어 현재 중국 NGO는 약 200만 단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이 약 170만 단체, 중앙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약 30만 단체, 기업 법인으로서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약 10만 단체, 그리고 해외 NGO가 약 3,000단체로서 이를 합하면 전체 약 220만 단체가 현재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⁶⁷

중국의 민간단체 기원은 1949년 건국 이후부터이다. 당시 사회복지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의 시설이나 민간 조직의 설립이 인정되었고, 1965년에는 중앙정부에 약 100개 단체, 지방에서는 약 6,000개 단체가 등록되었다. 그 중에는 ‘중화 인민 구제 총회’나 ‘중국 적십자 총회’, ‘중화 전국 총공회(노동조합의 전국조직)’, ‘중화 전국 부녀 연합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등의 ‘인민단체(人民團體)’ 혹은 ‘군집 단체(群集團體)’로 불리는 전국 규모의 단체도 포함되어 사회 복지나 재해 구조 등의 공익 활동을 실시하였다.⁶⁸

1970년대 이후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민간 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⁶⁷ 왕명(王名), ‘중국 시민사회의 현상과 특징,’ (제3회 한일 시민사회포럼 발표문 2005. 8. 20).

⁶⁸ 중국 NGO의 발전에 관해서는 장영석, “중국 NGO의 발전과 행위양식에 대한 분석,” 정갑영 외,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오름, 2004), pp. 191~195; 大塚健司, ‘中國,’ 重富眞一, 『アジアの國家とNGO』(明石書店), 2005, pp. 273~277.

전체적으로 NGO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NGO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1995년의 '세계여성회의 북경포럼' 이후이며, 1998년에는 칭화대학에 'NGO 연구 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NGO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NGO의 사회적 역할이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NGO의 대부분은 전문 분야의 활동을 관이 아닌 민의 주도로 하고 있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사회 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이다. 이에 비해 반전이나 평화 문제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NGO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타이완 문제나 영토분쟁 등과 관련하여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중국 내 분위기 탓에 반전이나 평화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

중국의 반전 운동은 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행한 잔혹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체들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옹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인권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남경대학살이나 세균전 피해에 대한 진상을 알리기 위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 역시 단체의 주요 목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반전·평화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 대륙의 NGO로서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1954)'와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1988)'를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UN에 등록된 NGO이지만, 중앙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중국 전국에 약 100개의 단체를 가진 NGO의 연합체인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1992)'는 풀뿌리 수준의 지역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 평화운동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전개된 반전 운동은 1999년 5월 7일 미군에 의한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이 때에는 대학

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에서 반미나 반전의 시위 활동이 정부의 허가 아래 실시되었다. 2001년 이후는 반테러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주로 서명 운동이 중심이고 NGO에 의한 조직적인 반전 활동은 활발하게는 전개되지 않았는데, 경찰에 의한 규제 때문에 그나마도 위축되었다.⁶⁹ 2003년 이후에는 세계 각지의 반전 단체가 연대하여 세계 동시 반전 시위가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몇 번이나 실시되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소수의 외국인이 참가한 정도였다.

나. 홍콩의 반전·평화 NGO

홍콩에서 2001년 이후, ‘반전·평화위원회,’ ‘아시아평화 연합,’ ‘아시아행동그룹자료시스템’ 등의 NGO가 국제적인 반전 단체와 제휴하여, 반전 평화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8천명을 넘는 회원을 가진 홍콩의 직원조합도 운동에 합류하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천 명 규모의 시위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홍콩에서도 사회복지나 인권분야와 비교하면 평화분야의 NGO활동은 아직 미약하고, 중국 본토 NGO와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도 미약하다. 중국 본토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과 일반 시민들의 반전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반전·평화 관련 NGO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⁷⁰ 홍콩의 평화 NGO는 국제 우호 활동이나 국제 교류 및 정책 제시 활동 등이 중심이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급진적인 대규모 시위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관련 NGO로는 ‘ARENA(1982),’ ‘아시아평화연합(2002),’ ‘반전·평화위원회(2001),’ ‘아시아평화센터(2001)’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01년 이후의 반테러 전쟁에 반대하여 형성된 것이다.

⁶⁹ 2001년의 반전 시위에 관해서는 반전 단체 Peace Act의 홈페이지를 참조, <http://peaceact.jca.apc.org>.

⁷⁰ 반전·평화위원회 대표, 및 전 민주당 의원의 Fung Chi Wood씨와의 인터뷰, 2005년 10월 6일.

한편으로 홍콩의 NGO중에는 국제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반전·평화 NGO도 마찬가지이다. 홍콩에서는 1970년대부터 유럽의 국제 NGO에 의한 활동이나 현지의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 활동이 개시되어, 평화 문제나 국제 문제에 관해서 많은 국제NGO가 아태지역의 중심지로서 홍콩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한국, 중국 본토, 일본도 활동 범위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NGO의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NGO의 네트워크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대만에도 ‘세계공민총회대만 지부(2000)’나 ‘대만촉진화평문교기금회(台灣促進和平文教基金會, 2000)’, ‘평화논단(2002)’, ‘원경기금회(遠景基金會, 1997)’ 등의 평화 NGO가 있다.

다. 주요 단체 소개

(1) 홍콩의 주요 NGO

◆ 아시아 크리스찬 회의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아시아 태평양의 17개 국가 및 지역의 교회로부터 구성된 단체로 홍콩에 본부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까지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네트워크 조직이며, 195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 간 및 NGO간의 연대 활동이나 교육 활동, 인권 옹호 활동 등 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관한 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홍콩에서는 1980년대의 기독교 학생 운동(인권 평화 운동)을 발족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 YMCA 아시아 태평양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27개 국가와 지역의 YMCA의 연합체로서 194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이나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의 YMCA도 포함되어 있다. YMCA 유럽 연합이나 YMCA아프리카 연합

과 대등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본부이며, 평화나 인권, 개발, 난민 구조나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아시아의 각국 지역의 YMCA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총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YMCA간의 정보교환도 활발하다.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역 본부는 한국, 일본, 홍콩, 인도, 호주 등의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14의 지부를 통괄하는 기능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이나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홍콩에 설치한 것은 1997년이다.

▶ 아시아평화연합(Asia Peace Alliance, APA)

2002년에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의 NGO에 의한 연합체이다. 필리핀에서 결성식이 개최되었지만, 사무국은 홍콩에 설치되어 있다. 2001년 이후 세계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 구미의 반전 단체의 주도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평화 NGO간의 연대 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필리핀 및 홍콩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참가단체(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아시아평화연합 참여 단체

단 체 명	국가/지역
Hong Kong for Peace Not War Committee (반전·평화위원회)	홍콩
ARENA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지역교류)	홍콩
Pakistan-India People's Forum for Peace and Democracy (파키스탄-인도 민주평화포럼)	파키스탄, 인도

단 체 명	국가/지역
Movement in India for Nuclear Disarmament(인도핵군축운동)	인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한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
Asia Peace alliance/Japan(일본아시아평화연합)	일본
People's Plan Study Group (피프르즈·플랜 연구그룹)	일본
VAWW-Net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일본
Institute of Human Rights Communication(인권위원회)	네팔
Focus (세계의 남쪽으로 초점을)	태국
Centre for Women and Development (여성개발센터)	스리랑카
Action in Solidarity with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 연대행동)	호주
Gathering for Peace (평화를 요구하는 모임)	필리핀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국제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필리핀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핵철폐필리핀연합)	필리핀
Peace Camp (피스 캠프)	필리핀
PRD (인민 민주당)	인도네시아

자료: APA 홈페이지(<http://www.yonip.com/main/apa.html>) 참조.

◆ Asia Pacific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ARENA,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류)

아시아 태평양의 18개의 국가와 지역의 활동가나 지식인에 의해 홍콩에서 설립된 NGO이다. 198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반전 평화, 인권,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적 정책 제시나 어드버커시(advocacy), 아시아 지역의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 활동이나 워크숍의 개최 등 도 적극적이다.

아시아 지역의 NGO의 연합체인 '아시아평화연합'의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 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아시아민중진보센터)

1979년에 홍콩에 설립된 NGO로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1년부터는 ‘핫 라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 전 세계의 인권 단체에 향해 정보 발신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80년대의 한국의 인권문제나, SOFA개정 문제, 매항리 미군 폭격 문제 등, 한국에 관한 인권 평화 문제에도 강한 관심을 가져, 2003년에는 ‘지학순 정의평화기금’이 평화상을 수여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에서의 평화 인권문제에 중심으로 화동하고 있고, 홍콩에 있어 오랜 세월 활동하고 있는 평화NGO의 하나이다.

◆ The Center for Justpeace in Asia(아시아 평화 센터)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아시아행동그룹을 위한 자료시스템)’과 ‘Christian Conference of Asia(아시아 크리스트교 회의)’가 공동으로 2001년에 설립한 NGO이다. 인권문제나 평화 문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들 단체가 평화 구축이나 분쟁해결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NGO의 연대나 활동가의 양성, 대화 촉진, 정보 발신 등이 활동 내용이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군의 문제나 이라크전쟁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도 하고 있다.

(2) 중국 본토의 NGO

◆ 中國人民爭取和平裁軍協會(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중국의 민간단체와 각계의 저명인이 발기하여, 1988년에 설립된 민간 평화 단체이다. 외국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하여, 세계평화를 지켜, 군비 관리와 군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교류와 학술 교류를 폭넓게 전개하고, 지금까지 90개 이상의 국가나 민간 평화 단체, 연구기관, 국제NGO 등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UN협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UN에도 등록되어 있다.

일본의 피스 보트나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홍콩의 아시아 평화연합 등과 함께 GPPAC(세계분쟁예방파트너십)의 동북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1954년 5월에 10개의 전국적 사회단체에 의한 연합 단체로서 설립되었다. 중국의 각 성과 민족, 자치 지구, 직할시, 구와 현 등 하부조직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외교에 종사하는 전국적인 민간단체로서 각국과의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추진이나 평화 구축 등을 주제에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교 방침에 따라, 다양한 민간 외교를 전개하여, 130개국에 550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엔에도 등록된 NGO이다.

동북아에 관한 부설 조직으로서는 ‘중국 러시아 우호 협회(1949),’ ‘중국 일본 우호 협회(1963),’ ‘중국 한국 우호 협회(1993)’ 등이 있다. NGO간의 교류나 의원 교류, 그 외 문화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中國國際民間組織合作促進會(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

1992년에 설립된 단체로, 중국의 NGO간의 협력 촉진 및 외국의 NGO의 중국에서의 활동이나 중국NGO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된 분야는 중국 국내의 개발 문제나 빈곤 문제, 교육 문제나 사회 복지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중국내에서의 시민사회의 활성화, 평화 문제, 외교 문제 등에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내의 약 100개의 NGO를 회원으로 하여, 일본의 ‘국제협력NGO센터’나 미국에 본부를 가지는 ‘아시아 재단,’ 필리핀에 사무

소를 ‘The Asia Pacific Philanthropy Consortium’ 등의 NGO나, 아시아 은행이나 FAO 아시아 태평양 지부와 같은 국제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3) 타이완의 관련 NGO

▶ 台灣促進和平文教基金會(대만촉진평화문교기금회)

종교계나 문화계, 학술계, 경제계 등에서 모인 약 50명에 의해서 설립된 평화NGO이다. 특히 대만 해협 문제에 관한 활동을 중심으로, 군비의 증강에 의한 긴장 관계의 증대를 회피하여, 상호 교류나 민간 단체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화적 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NGO간의 연대의 강화나, 대만 해협 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의 개최, 평화 협정의 추진, 청년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遠景基金會(遠景基金會, Prospect Foundation)

1997년 설립된 단체로서 양안관계와 국제정세 연구 및 국가 장기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안문제의 전략 연구 및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국 본토와 교류를 증진하며 국제학술 교류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산-학-연의 상호 협력을 통한 관련 연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국 대륙 학자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 海峽交流基金會(海峽交流基金會)

1976년 11월 타이완 정부가 중국 본토와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시작하면서 양안 간 민간교류가 증대에 따라 양안 간 민간교류의 정보를 교류하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1979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양안 교류사업을 촉진하며 정부에 민간단체 교류활동의 의견과 건

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안범죄예방 및 불법 입국자의 귀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5. 러시아의 반전·평화 NGO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활동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가 근래에 겪었거나 치르고 있는 대내외적인 전쟁과 관련하여 생겨난 문제들을 다루는 집단들이 하나의 군(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초반에 종결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199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체첸 전쟁은 러시아 사회 내에 또 하나의 갈등과 그에 따른 상흔을 남기고 있는 전쟁으로서 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제대 후 사회 복귀 문제와 권익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전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쟁에 반대하거나 징집을 거부하는 반정부적인 활동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체첸전쟁 같은 경우 러시아 국가의 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반면에 사회적인 균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된다.⁷¹

◆ 급진반군대협회

체첸전의 종식과 체첸 지역의 탈식민화 등 체첸전 반대 캠페인 등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서의 군사주의를 반대하며 국가의 비군사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군대 감축과 징병제 폐지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 병사들의 어머니연맹(Union of the Committees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1989년에 입영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주요

⁷¹ 우평균, “러시아에서의 NGO 발달과 시민사회: 1990년대의 낙관론과 비관적 현실,” 한국슬라브학회 제3차 학술회의 자료집(2005. 9. 24), p. 15.

활동으로는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신고 접수, 입영 병사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대 개혁 캠페인 수행, 관련 현안에 대한 포럼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Obelisk

1996년 2월 2일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대표는 마리아 페도르브나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체첸 전쟁 등 러시아 국내의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의 부모와 아내 및 자식들에게 사회적 보호와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베리아 지역의 병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전쟁 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뱅크 구축, 정부 당국과의 대화, 전쟁 부상자 부모들의 지역협의체 설립, 법률적 지원, 부상자 상담과 자문, 미디어 홍보 등이 있다.

1989년에 입영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신고 접수, 입영 병사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대 개혁 캠페인 수행, 관련 현안에 대한 포럼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Антимилитаристская Радика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급진반군 대협회)

비공산계열 정치조직으로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군사주의를 반대하며, 국가의 비군사화, 경제발전, 법치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단체다. 아울러 이 단체는 개인의 신념에 입각한 징병거부 투쟁 지지, 군대 감축,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며, 체첸전 종식 캠페인, 체첸의 탈식민화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도부는 대회, 자문단, 서기, 고문 대회회장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대표는 안드레이 로디오노프(Andrei Rodionov) 서기가 맡고 있다.

◆ **Российский ский Союз 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아프가니스탄전쟁 참전군인 연합)**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하여, 타국에 참전했던 러시아 퇴역 군인들의 자활과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3월 13일에 설립하였다. 참전군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적응, 자활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기타 CIS 소속 국가에 6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 **Афганвет(아프간벤테)**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안지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군인의 친교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1989년에 창설하여 현재는 러시아 북서부 지역 최대의 참전군인 단체가 되었다. 총 회원은 3천여명이며, 잡지 “ко мандор” 발행, 클럽 “афганвет”와 스포츠 클럽 “Хан Ян”을 운영하고 있다.

◆ **Правозащита(Legal assistance, 법률 지원)**

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징병자들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하는 단체이며, 대안복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Ярослав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илиал-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 й адаптац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оссия-НАТО”(NAT_-Russia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Training Centre in Yaroslav, 러시아 정보, 자문, 교육 야로슬라브 센터)**

2002년 3월 21일에 설립하였고,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과 정보 제공, 지역의 고용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제대병들의 민간 생활 적응이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이다. 약 210명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모스크바 및 6개 지부에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6회의 세미나 개최, 18개월 동안 각지에서 재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 Союз комитетов солдатских матерей России(Union of the Committees of Solders' Mothers of Russia,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회 전국연합)

병사와 그 부모의 인권보호를 위해 1989년에 조직된 단체다. 주요활동으로는 군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응소병 및 부모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병사들의 어머니회를 비롯한 지역 NGO에 대한 자문활동, 민족갈등 및 체첸 분쟁에서의 평화활동, 징병제 폐지, 직업군인제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군대개혁 캠페인 수행, 포럼 개최 등이 있다.

◆ Обелиск(Obelisk)

이 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체첸 전쟁 등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보호와 물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6년 2월 2일에 설립하였으며, 대표자는 마리아 페도로브나(Юссьх Мария Федоровна)이다. 시베리아 지역의 병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전쟁 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 बैं크를 설립하였으며, 정부당국과의 대화 추진, 전쟁 부상자 부모들의 지역 회의체를 설립하며,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 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미디어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Ветерная последних вой н-вместе

(전쟁군인회- 쌍뜨 삐제르부르크 참전군인공공정보기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간 전쟁 참전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참전군인들의 퇴역 후 사회활동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 8월 31일에 창설된 단체다. 이 단체는 참전군인들에 대해 정신분석적, 심리학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부상참전군인들의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참전군인들의 자기표현과 주장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의 회고록을 출판하고 있으며, 스포츠 동호회 창설과 전쟁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 КРОО “Союз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Чеченско
й республике”(카렐리아공화국내 체첸전쟁 참전군인 연합회)

러시아 연방 카렐리아 공화국 출신의 체첸전 참전군인과 퇴역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전쟁 부상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자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군인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의 무료화, 기차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참전군인들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들에게는 군대 및 애국주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 Ассоциация “Отечество”(Fatherland, 조국)

1993년에 설립한 단체로서 노브고로드 주의 참전군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이들의 재대 후 사회적응, 그리고 군대, 애국주의적 교육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체첸전 참전군인 52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체첸전 참전 군인에 대한 정부의 특권부여 발의, 러시아 함대 창설 300주년 기념 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다.

◆ Фонд, “Право Матери”(Foundation of Mother’s Right, 어머니의 권리 재단)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181명의 변호사와 500명의 활동가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첸전쟁,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 사건 등을 포함해 평시에 군에서 사망한 자식을 둔 부모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다. 전사자 부모들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활동, 이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적발간(Dead Solder’s Memory Book Series), 법률정보 제공, 기타 사회학 연구 등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전역 및 CIS 국가 45개 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연대단체로는 러시아인권연구센터(Russian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국제인권보호협회(International Assembly of Human

Rights Protection)가 있다.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комитет помощи беженцам
(Civic Assistance-the Russian Committee for refugees, 러
시아 난민 시민원조 위원회)

러시아 내 난민 구조 및 지원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난민 구조를 위해 다기능 적인 난민 수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 어린이 교육, 난민 적응 교육, 강제수용된 이주자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활동으로는 연방이주국, 국가 두마, 대통령 인권위, 검찰 등의 관리들과의 상시적 접촉, 난민에 대한 의료, 주택, 고용, 법률 지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용난민그룹 (7명), 의료지원그룹 (3명), 법률지원그룹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구로 이주 어린이의 적응, 교육을 위한 Centre for Adaptation and Education for Migrant's Children (CAE)가 있다.

6. 소결

반전·평화 NGO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화, 통일(한국의 경우), 반핵·비핵, 군축,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군대(기지) 이전 및 철수, 파병반대, 전쟁피해자, 대인지뢰철폐, 평화헌법개정반대(일본의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는 상당히 활발하게 증가 및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통일’ 분야 NGO 활동이 여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경우는 원폭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반핵·비핵’ 분야에서 특히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헌법개정반대운동’은 일본만의 독특한 NGO 유형이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주요 핵심세력”의 성향인데, 한국은 진보 진영이 핵심인 반면 일본에

서는 보수·우익 진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반전·평화 NGO는 주로 참전군인관련 단체 등 국방 관련 NGO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자 또는 사병들의 부모단체 활동 유형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의 유사점은 양심적병역거부, 참전군인, 퇴역군인단체 활동 분야에 있다.

중국의 반전·평화 NGO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여 ‘평화’보다는 ‘무력불사’의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 특성상 반전·평화운동이 미미하여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IV

동북아 환경 NGO

1. 개관

환경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 NGO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1992년 유엔이 개최한 리우 지구 정상 회의와 그 이후의 인구, 환경회의 등을 통해 각국 정부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초국가적 정치의 영역은 현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들과 환경 NGO의 활동무대로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생태계와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국경없는 환경정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⁷²

환경문제는 그 속성상 기존의 이념체계를 초월하는 성격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각국의 국내적 수준에서 환경문제는 시민들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데 있어, 기존의 좌·우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이 변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정치환경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⁷³ 이념을 벗어난 인류 공영의 과제로서 환경문제는 성장제일주의를 지향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긴요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감소,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고형 폐기물 증가,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기상이변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만간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어설 환경파괴는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기존의 입장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와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로 대별된다. 과학기술의 응용에 의해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술중심주의에 대해, 생태중심주의는 과학기술의 기여에 회의하면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환경을 지

⁷² Timothy Doyle and Doug McFacherm, 이유진 역, 『환경정치학』(서울: 한울, 1998), p. 135.

⁷³ 우평균, “동북아시아의 환경운동과 환경 NGO: 평화운동의 가능성 모색,” 『평화학연구』 제2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4), p. 139.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⁷⁴ 따라서 이 같은 양극의 논리를 수렴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논리를 많은 국가와 NGO들이 받아들여서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국가들에 똑같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되지 못한다. 각 나라들은 발전의 수준이 다르고 단계별로 추구하는 발전의 목표 역시 상이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수준에서도 이 점은 그대로 드러나는 특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는 한국,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 러시아와 같은 체제 전환국, 그리고 중국처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개방 체제이면서 정치적으로 일당 지배의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환경문제의 탈 이데올로기성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동시에 각국마다 특이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황적 조건의 상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환경문제에 임하는 주체들-정부, NGO, 개인-간에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당사자들인 환경 NGO가 처한 상황은 다양하며,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구조적 여건이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NGO의 활동양상은 각국의 환경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 NGO의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 이외에, NGO 자체의 문제로 국한하여 살펴볼 때, NGO 평가의 주요 기준은 NGO가 가용할 수 있는 조직상의, 인적의, 그리고 재정적 차원의 자원

⁷⁴ Andrew Dobson,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p. 35~42; R. Eckersley,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Toward an Ecocentric approach* (London: UCI Press, 1992); Lamont C. Hampel, *Environmental Governance: the Global Challenge*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6); 문순홍, “생명운동의 논의구조와 전략,” 『환경과 생명』 제8호 (1995). 참조.

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NGO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NGO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NGO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가용자원의 측면에서 동북아의 환경 NGO는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종(species)의 다양성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며, 이것은 각각의 NGO 활동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동북아에는 범세계적 수준의 환경 NGO의 후원을 받거나 그 지부로서 설립되어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의 동호인 그룹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사무실만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현실이다. 특히 러시아처럼 광활한 영토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환경 NGO 자체가 많이 결성되었으나 단기적인 활동에 의존하다가 명맥이 끊기고 마는 단체도 많고, 정부에 정식 등록이 안 된 군소단체들도 다수인 경우도 있다. 반면 중국처럼 정부의 후견과 공식 지도 하에 조직화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NGO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 감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각국의 환경 NGO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일차적인 의미를 지니며, NGO 현황 파악에 따른 분류를 통해 NGO 활동의 진로와 향후의 네트워킹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동북아 각국의 환경 NGO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별 개관을 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등록·비등록 포함) 한국의 환경 NG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⁷⁵

⁷⁵ 환경부, 『환경백서』(2004), p. 130.

<표 IV-1> 한국의 환경 NGO

계	허가법인	비영리 등록단체	
		환경사회단체(등록)	환경사회단체(비등록)
321	230	59	32

한국의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사업을 국고보조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⁷⁶

<표 IV-2> 행정자치부 국고보조 환경 NGO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단체수	지원과제수	지원액	비고
34	35	920	

<표 IV-3> 환경부 국고보조 환경 NGO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단체수	지원과제수	지원액	비고
6	6	1,726	

일본의 경우, 일본환경협회가 199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악된 환경단체의 수는 4,227개이며 그 중 약 51%가 1980년대 이후, 약 80%가 1970년대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1998년 3월 19일 NPO(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환경 분야에서 시민운동조직들이 NPO라는 새로운 법인자격 부여를 통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NPO가 관변단체 혹은 실질적

⁷⁶ 환경부, 『환경백서』, p. 131.

⁷⁷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서울: 한울, 2004), p. 98.

인 관료기구로 인식되어 왔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NPO법에 따라 일본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열린 정치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영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⁷⁸

중국의 경우 국가 법률에 따라 모든 공식 민간조직들은 정부에 등록을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NGO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환경 NGO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많은 NGO들이 사무실과 책임자를 정부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국가재정에서 급여와 사회복지를 제공받는다. 이들은 정부 행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활동과 재정 면에서 독자성이 부족하다. 반면에 최근에 중국사회의 기층에서 새로운 성격의 NGO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들은 민간에서 형성되어 비정부적 속성을 지닌다. 이들은 민간의 지지에 의존하여 재정 및 인사 면에서 정부에 독립적이나, 법률상의 지위는 불명확하다. 어쨌든 중국의 경우, NGO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환경관련 정책 결정 및 법률 집행에 있어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련한 행위를 감독한다는 것이고, 둘째, NGO는 정부에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NGO는 정부의 대국민 환경 관련 교육 과정에 조력하여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환경 NGO는 반드시 정부와 우호적이고 평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발전가능하다는 견해가 중론을 이루고 있다.⁷⁹

러시아의 환경 NGO는 그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⁷⁸ 양중희·임현진·정수복·박길성·구도완·홍성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p. 310~311.

⁷⁹ 廖曉義, “中國環境非政府組織和北京地球村”, 陣光輝 編, 『中國民間組織』(北京: 社會科學出版社), pp. 178~179.

이 존재한다. 환경 NGO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NGO들은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1995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NGO들은 재등록을 해야 했다. 그 결과 2000년 1월 1일까지 274,284개의 공공단체들이 법무부에 등록하였다. 이중 대략 4분의 1정도가 시민운동단체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에서 러시아의 모든 환경 NGO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NGO 관련법의 개정으로 NGO들은 법무부에 등록할 때 상당한 금액의 등록비를 내야하며, 이것은 비영리단체인 NGO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⁸⁰ 따라서 러시아의 환경 NGO는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결성의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NGO 활동의 지속성과 재정적 독립성의 유지보다는 빈번하게 소멸하고 결성되고, 또한 재정적으로 독립성이 약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환경 NGO 결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환경 NGO의 발전과정과 주요 환경 NGO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한국의 환경 NGO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의 역사는 개발시대의 공해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고 환경 NGO의 모태도 이로부터 성립되었다. 1970년대 이후 공단지역 공해문제가 계속되자 1985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온산병’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환경 단체도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폐놀 사고 등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1993년을 전후해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전국 구

⁸⁰ 강윤희, “러시아 환경 NGO의 발전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 (2005), pp. 212~213.

모의 환경단체도 등장하고 언론에서도 환경 캠페인을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1990년대 중반 ‘환경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⁸¹

199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한국의 환경 NGO는 기존의 전문 환경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기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소비자 단체 및 각종 직능 단체 등이 가세하여 자신들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환경운동을 수용하여 이에 매진해왔다. 1990년대 이전에 주로 전국적 단위에서 공해추방운동을 벌이던 환경 NGO의 활동양상이 1990년대에는 전문화, 보편화되면서 더불어 지방화되기 시작한 점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예로 충남공해추방운동연합(1991), 배달환경연구소(1991),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1991),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1991),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1991), 공해추방 인천시민의 모임(1991), 환경보전대전시민연합(1991), 녹색연합의 각 지부들(1991), 환경운동연합의 각 지부들(1993), 수원환경운동센터(1994),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환투본)의 각 지부들(1996~),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네트워크(지속가능네트워크) 대구지부(2001), 군포환경자치시민회(1997)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환경 NGO들의 환경운동의 활동 사업은 ①쓰레기 감량, 재활용, 폐식용유로 무공해 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일회용 안쓰기 운동 등 지속적인 소비생활 개선 시민운동의 전개 ②과거 오염 피해에 대한 환경운동 ③환경피해와 관련된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및 연구활동 ④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의 억제를 위한 감시 및 고발 또는 공해발생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의 전개 ⑤환경정책의 수정이나 보완, 혹은 폐기를 요구하는 대안 제시적 활동 ⑥국내 다른 NGO간의 연계 및 국제적인 NGO와의 연계 경향 등으로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행동의 양식에 있어서도 적극화되고 있다.

환경 NGO가 중심이 된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은 정부정책에도 영향

⁸¹ “성큼 다가온 환경시대, 개발이냐 보전이냐,” 『중앙일보』, 창간 40주년 특별기획, 2005년 8월 11일.

을 미쳐서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에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제정은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왔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운동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며, 환경 NGO의 활약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 결과 환경운동단체는 국책사업과 같은 전국적 수준의 개발에 대한 비판은 물론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 반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전국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⁸² 더불어 환경 NGO들의 운동 방식도 단식투쟁, 삼보일배, 촛불시위처럼 그 치열함에 있어 과거보다 가열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새만금 사업 중단의 예처럼 국가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정부의 개발에 대한 환경 NGO들의 반대운동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사업과 핵기폐장 반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2001년부터 지속되어 2003년에 특히 삼보일배 운동과 행정소송의 승소 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 부안군의 핵폐기장 문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정부사업이 좌절되었으며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주도한 것은 환경 NGO들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온 주요한 환경 NGO들을 종합 환경 NGO와 특정지역 및 분야별 NGO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⁸²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pp. 87~103.

가. 종합 환경 NGO⁸³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기점으로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와 통합하여 창립된 한국 최대 환경단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이전의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재창립된 것으로서 단체의 성격도 기존의 공해추방에서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변모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현재 50개의 지역조직(준비위 포함)과 8만 5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지역 최대의 환경 NGO로 성장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요 활동으로는 1993년 12월,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에 대한 현장감시를 하는 ‘환경통신위원회’ 창립, 1993년 12월,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1994년 12월 (사시민환경정보센터 설립, 1995년 2월,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국환경단체·그린피스 워크숍’ 개최, 1995년 10월, 각계 인사 53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센터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1995년 12월, 가야산국립공원 해안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1996년 7월, ‘온천법’ 및 ‘먹는 물 관리법’ 개정 운동, 1996년 10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1997년 1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운동 시작, 1998년 2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정분야 협의자격 획득, 1998년 6월,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운동, 1998년 9월 총선시민연대 활동-낙천·낙선운동, 2000년 2월 환경연합 전국 회원대회, 2000년 7월, 2002년 환경연합 전국 회원대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요 사업으로는 강살리기, 갯벌과 철새 보전, 녹지 보전, 야생동식물보호, 반핵평화, 대안에너지, 생명안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제안, 환경문제 연구활동, 환경과 인권·환경과 평화를 위한

⁸³ 한국의 환경 NGO의 개별적인 소개는 시민의 신문, 『2003 한국민간단체 총람』장, pp. 1137~1320. 참조

연대활동, 지구의 날 국제캠페인(Earth Day), 사회개발정상회담(WSSD),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아태지역경제협력개발기구(APEC) 관련활동,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활동,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연간) 및 유엔 활동, 환경음악회, 환경마라톤, 유기농산물 먹거리 판매 등,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환경탐사, 환경캠프, 생태기행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부설기관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환경운동연합의 부설 기관

단체 (대표자, 전화)	목적	소개
공익환경법률센터 (최병모), T.(02)735-7034, F.(02)730-1240	날로 늘어나는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집단소송제도 등의 입법운동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추진	환경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내에 환경법률상담실을 시작으로 1993년 환경연합 시민법률상담실, 1997년 법률위원회를 거쳐 2000년 2월 21일 환경연합 부설기관으로 확대개편됐으며 소장 법률가들이 다양하게 참여, 환경단체 최초로 상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음
시민환경연구소 (최철), T.(02)735-7034, F.(02)730-1240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환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전국 6개 도시에 지역지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1백 50여 명의 전문가와 20여명의 상근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에너지대안센터 (손충렬), T.(02)735-7000, F.(02)730-1240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교육, 정책연구, 시범사업, 심포지엄, 국제회의를 통한 재생 에너지 이용 활동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폐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분산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이용을 지향
환경교육센터 (송상용), T.(02)730-8677, F.(02)730-1240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며,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중의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시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냄	환경운동연합의 교육담당부서로서 환경교육을 시작하여 2001년 1월 창립. 창립 이래 지도자 교육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200여명의 가족회원과 800여명의 정보회원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

단체 (대표자, 전화)	목적	소개
환경교육센터 (송상용), T.(02)730-8677, F.(02)730-1240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실 프로그램 개발, 초중고 환경 생태교사 양성과정, 생태문화 지도자 교재 개발, 전통문화를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성인·교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활동과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음.
시민환경정보센터	대표: 최열	T.(02)730-1325 F.(02)730-1240
함께사는길	대표: 최열	T.(02)730-1326 F.(02)733-7017

◀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

사단법인 환경정의시민연대(대표: 원경선 이사장)는 1992년 11월 14일 설립되었으며 회원 2,000명에 상근자 23명으로, 한 해 예산 3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든 부족하면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체제와 지구환경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책임은 전지구인의 몫으로 국가, 계층 그리고 세대간 공평한 이용과 편중되지 않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환경정의)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992년 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사)경제정의연구소 산하에 환경연구부가 설치되어 1992년 11월 14일(사)환경개발센터가 창립되면서 발족되었다. 창립 이후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주요 활동으로, 1993년 4월 21일 ‘음료포장용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1994년 3월 16일, ‘삼림보전 및 그린라운드 대책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환경운동가 워크숍’ 개최, 1995년 3월,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 고시 철회 촉구대회’ 공동주최, 1996년 1월 24일,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발대회의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1997년 11월 7일~9일, 내리천댐 건설예정지 공동 생

태조사, 1997년 11월 13일, ‘기후변화 협약의 협상동향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 공동 개최, 1998년 3월 11일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국토이용 방안에 관한 토론회’, 1998년 12월 15일, ‘그린벨트 살리기 1000인 선언’, 1999년 4월 18일,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1999년 8월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관련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2000년 1월 14일, 부천 상동택지지구 중수도시설 도입 정책간담회 개최, 2001년 2월 2일,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영향평가 왜곡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 고층아파트 건설반대운동, 용인시 난개발 대응 운동, 용인 대지산 나무위 시위, 경인운하 건설 반대운동, 회원확대 및 회원참여 활동 증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유해환경감시운동), 월드컵 개최도시 대기모니터링, 중랑천 살리기운동, BLUE SKY 2002 실시를 꿈꿀 수 있으며, 산하단체로 ‘자연에 깃들여가는 등산모임 ECO’, ‘그라운드에서 환경을 논한다 KEB’, ‘시민에서 환경전문가로 초록누리’, ‘도시가 삶을 이야기 할 때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지키는 다음세대 다음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미래를 보는 눈 교육분과’, ‘일탈을 꿈꾸는 작은 변호 생활환경분과’, ‘자연주의 삶을 찾아 대안먹거리분과’ 등이 있다.

◆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환투본)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대표: 서영수)는 국가·국토·국민의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국민환경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는 1996년 11월,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400인이 발기인으로 창립하여 발족되었으며, 1998년 5월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수도권지역 지도위원단을 발족시켰으며, 1998년 5월에는 서울 영등포지부회를 발족시켰으며, 1998년 10월에는 해양보호국민연대를 출범했다. 2001년 5월에는 민중항쟁정신계승 실천 및 일본 역사왜곡 저지투쟁 선포식을 가졌으며, 2001년 9월에는 해양보호국민연대 지도자대회를 개

최하였으며, 2001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방한반대 항의 집회, 2001년 12월 해양보호국민연대 및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전국지도자 결산보고대회를 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파괴 및 오염실태 감시고발, 환경관련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근절 사업, 환경감시원 및 시민 대상 교육사업, 학술발표회·공개토론회 개최, 연구사업,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와의 연대사업, 홍보사업(해양환경대전 개최 및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정기 간행물로 ‘민주국민환경’, ‘환경지킴이 격주간’을 펴내고 있다.

◆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

녹색연합(대표: 박영신)은 1991년 6월, 기존환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 문명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의 환경문제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촌의 NGO들과 연대하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신 위상의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2003년 현재 약 1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배달 녹색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6년 6월에 녹색연합으로 변경하였다. 녹색연합이 한국NGO 중에서 최대 규모인 환경운동연합과 차별화된 점은 녹색연합의 경우, 각 분과별(생태보전부, 정책부, 대안사회부, 조직부)등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보면 백두대간 보전활동, 야생동물보호운동, 갯벌 보존운동, 에너지 운동, 새로운 대안, 생태마을을 만든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 생태적 깨달음을 얻는 환경교육, 환경소송센터, 국제연대, 특별이벤트(종이없는 날(No Paper Day),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내복입기 캠페인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왔다. 녹색연합은 7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정기간행물로 ‘녹색희망’,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한국환경보고서’, ‘Green Korea Report’(영문) 등을 간행하

고 있으며, 부설기관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녹색연합의 부설기관

단체 (대표자, 전화)	목적	소개
작은것이아름 답다(작아) (대표: 박영신, T.02)744-9074)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느린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 속에서 편안한 행복이 찾아들기에 큰 것, 많은 것 보다 '작은 것'의 가치를 함께 찾기 위해 태어남	단순하고 소박하게, 느리게 사는 삶이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길이라 믿고서 일등이나 부자들 꿈꾸며 늘 불만에 찬 사람들과 녹색세상의 꿈,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생각과 마음을 달마다 나누고 있음
환경소송센터 (대표: 손광운, T.02)747-3753)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연구·조사·교육·변론활동	개발과 운영이 이름으로 자행되는 환경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사단법인녹색 사회연구소	대표: 김정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녹색연합 3층 T.(02)747-3339

◀ 환경재단

다른 환경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2002.10.1)에 결성된 환경재단(대표: 이세중)은 환경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보호와 행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국제 환경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와 환경활동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환경공익기금이다.

환경재단은 주요 사업으로 환경단체와 환경관련 연구기관 지원, 환경연구 프로젝트 지원, 제3세계 환경운동 지원을 위한 국제 학술교류 및 지원, 환경운동가의 재교육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장학사업, 환경관련 컨설팅 및 조정을 하고 있다.

나. 특정지역 및 분야별 NGO

▶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대표: 이광진, 2002.4.11설립)는 충청인의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 권역의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범국민적 기구를 결성해 각종 연구·조사활동·홍보·교육활동 등을 통한 대청호와 인근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청호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청호 유역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금강유역 환경청, 각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대전네트워크, 청주청원네트워크, 보은·옥천·영동네트워크, 천안·아산네트워크, 무주·금산네트워크 등 5곳의 지역별 조직과 분과모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 발굴, 급수권역 물 절약사업 발굴, 지역단위 환경보전 활동, 조사, 대청호 상류유역의 오염원 저감사업 발굴 제시, 수변친수공간 활용방안 연구 및 토론회, 교육, 상하류 주민교육과 홍보물 제작, 수환경홍보 및 체험학습실 운영, 생태탐사 사업을 하고 있다.

▶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엔티)

내셔널트러스트운동(대표: 김상원)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자 문화, 예술, 관광자원인 자연자원과 희귀한 생태계를 잘 보전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와 영원히 공유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2004년 현재 전국에 15개의 보전을 하려는 지역을 지정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유산 외에도 문화유산 지역을 지정·교육·관리운영, 홍보 관련 사업, 기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기본정의인 기부·기증 및 영구보전에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는 『엔티소식지』, 『정기총회집·정책자료집』이 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 가이드북』(2002) 등을 발행하였다.

▶ 바다가꾸기실천운동시민연합(바실련)

바다가꾸기실천운동시민연합(대표: 최진호)은 1999년 2월 경남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바다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연대해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으며, 전국에 6천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바다환경운동 NGO로서는 한국에서 최대이며 가장 실적이 많은 시민운동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바실련 학술포럼 및 바다청소 등 계몽 캠페인의 개최, 임해공단 해역의 환경호르몬 등 바다오염의 조사 및 평가, 전국 5대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오염원의 조사 및 평가, 전국 고등학생 바다문화상 현상공모 및 한국바다문화회 설립 운영, 전국 해수욕장 및 연안 오염방지 캠페인 버스투어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바살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대표: 임병석)는 오염된 바다의 정화사업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며, 적극적으로 풍요로운 어촌건설, 해양과 관련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1998년 9월 11일 창립되었다. 바살본은 2004년 현재 11개 지역본부에 산하 지부, 산하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각기 해양정화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해양 환경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연안보전네트워크

연안보전네트워크(대표: 백성기)는 연안개발에 따른 연안환경보전, 주민생활터전 보전과 생산문화 유지, 연안환경모니터링과 해양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목적으로 2000년 6월 27일 결성되었다. 연안보전네트워크는 연안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지도력과 해양환경 보전

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펼쳐 온 전문가들이 함께 해양환경 보전, 해양문화 고양, 지역사회 지도력의 계발 등 지속 가능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양 관련 민간활동을 진행하고자 인적, 조직적 지역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원 개발(해양환경 통합교육 및 현안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 전국 모니터링(전국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구축(웹서버 운영, 웹 호스팅, 연안환경 콘텐츠 개발), 해양환경정책 마련(전문가 풀 구성 및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파트너십 형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생명의숲)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표: 문국현, 최열)은 숲을 가꿈으로써 우리 국토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적 역량을 숲가꾸기에 결집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숲을 사랑하는 국민정신을 함양해 자연조화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만들고자 1998년 3월 18일 결성되었다. ‘생명의 숲’은 숲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효과에 대해 어린이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쾌적한 삶을 위해 아름다운 숲을 발굴하는 사업, 도심지의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산림과 관련된 기타 정책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숲을 느끼고 숲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사업, 국민계몽을 위한 문화 교육사업, 숲을 만들기 위한 기획사업으로 학교 숲 가꾸기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개최, 산림과 관련된 기타 정책 연구사업, 조직사업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대표: 김재옥)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쓰레기문제를 공동사안으로 연대하

고 각 회원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 환경의식 제고,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체계의 구축,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3월 10일 설립되었다. ‘쓰시협’은 쓰레기라는 단일 환경 사안에 대한 전국 276개 단체가 연대 틀을 마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쓰레기 관련 현안을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특히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1회용품 관련법 강화 및 시행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예산 절감효과와 쓰레기 감량 및 장바구니 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연대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지자체 쓰레기 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선, 지역조례 재·개정운동,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 운동, EPR 시행령, 시행규칙 제도제안, 표준화, 규격화 모델링 만들기, 생활계유해폐기물 재활용 정책 제도 제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연대’는 1970년대 이후 줄곧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그 동안의 정부주도 에너지 절약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00년 6월 26일 창립되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 에너지효율화 확산운동, 무동력 교통수단 확산운동, 수송에너지 절약운동, 에너지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기후변화 방지 활동, 지역에너지 조례제정운동,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운동, 냉·난방 에너지 수요 줄이기 캠페인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충남의제21)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대표: 이진)는 환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충남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나가기 위해 2001년 2월 민간단체로 창립하였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는 지역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참여해 충남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지역사회 운동체로서, ‘푸른충남21’ 의제안(실천지침) 수정보완 사업, 충남도 15개 시군의 지방의제 추진 지원사업, 의제21의 새로운 파트너십 확보사업, 각 분과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연구, 조사사업, 환경담당 교사 연수, 소식지 및 홈페이지 제작 운영,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전북의제21)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 7월 18일, 전라북도의 민·관·기업 대표자와 실무자 84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전북의제21’은 민·관·기업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제를 작성하여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경강 살리기 운동, 환경을 생각하는 삶, Eco-life 운동,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자랑스런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시·군의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 평화의숲(Forest for Peace)

‘평화의숲’(대표: 강영훈)은 북한의 훼손된 산림 및 환경의 복구 및 보존, 남북 간 평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1999년 3월에 임학자, 기업인, 시민운동 인사 등 200여 명의 발기인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설립 이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에 관한 사업협력 개시, 2002년까지 11차에 걸쳐 600만 그루 상당의 묘목, 종자 및 산림용 자재, 장비 지원, 남북 임업 전문가 교류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의 산림환경 복구 및 보존, 연료림 문제 등 에너지체제 개선 지원, 산림 환경 복구사업에 참여한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국제 연대 및 협력사업, 기타 관련사업,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꽃세상)

풀꽃세상을위한모임(대표: 정상명)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기 위해 그 실천으로서 ‘풀꽃상’을 제정하여 사람이 아닌 자연물에게 풀꽃상을 주면서, 그들과 인간이 생명의 뿌리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1999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새-돌-풀-골목길-조개-꽃-지렁이-자전거’에게 풀꽃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펼쳐왔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풀꽃세상은 21세기적 환경운동, 혹은 환경문제에 문화적으로 접근한 대표적 NGO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풀꽃세상은 2002년 8월 현재, 2,56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의성과 사회적·현실적인 설득력이 수반된 풀꽃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연1회 ‘풀꽃상’ 시상과 비매품 매체, <풀씨> 발행, ‘풀꽃상’이 갖는 상징적 가치를 현실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운동 전개(2002 새만금살리기 자전거전국잔치, 환경운동과 독서운동의 결합, 인터넷 고물상 운영, 유기농 먹을거리의 직거래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반핵운동연대(반핵연대)

‘반핵연대’(대표: 김성근)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산업을 추방하고, 환경과 생명을 보전하는 대안에너지체계를 수립해 인류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반핵운동에 적극적인 30여개의 환경·종교·주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반핵연대’는 신규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운동과 핵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한국생태연구소

‘한국생태연구소’(대표: 나기환)는 생물학, 환경공학, 해양환경, 조경,

원예, 토목공학 등의 생태, 환경, 복원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학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해 생태복원, 수달 서식 실태 및 생태 연구, 생태계, 환경오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2월 25일에 설립되었다. 한국생태연구소는 경남 거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남해안의 자연생태계 보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가·지방정부의 자연,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연구·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한동보)

‘한동보’(대표: 이창수)는 자연환경 보전운동 및 환경정책에 부응해 야생동물을 보호·육성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해 자연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69년 9월 24일 창립되었다. ‘한동보’는 1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자연생태를 보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보전을 위한 환경사업, 국민 의식개혁으로 산하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사업, 금수강산 보전을 위한 자연 생태 환경지킴이 파수꾼 양성을 하고 있다.

▶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재생재활용협)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대표: 김시약)는 폐자원의 발생 절감 노력과 폐자원의 철저한 분리수거, 재생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천적 문제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1996년 3월 26일 창설되어,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지부를 구성하고 지부 산하에 시·군·구별로 184개의 지회를 구성 조직해 지역조직의 근간을 삼고 서울에 중앙회와 재활용연구원을 두어 전국 조직관리 및 입법 활동을 통해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재활용촉진 입법 및 개폐활동, 세미나·공청회 개최, 전국 지부별 재활용법 교육 및 재활용 기술 교육, 연찬회, 전국 재생재활용 지도자 대회 및 총회 개최, 불우이웃돕기와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 대민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 한국조류보호협회(한조보협)

한국조류보호협회(대표: 김성만)는 국가의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정책에 입각해 천연기념물 조수류 등 소중한 자연과 문화재를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는 한편, 이의 보급 선양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애호, 생명사랑운동을 널리 펼치는 데 목적을 두고 1980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20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한조보협’은 주요 사업으로, 야생 조수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조난 야생 조수류 긴급구조 및 다친 새들의 쉼터 등 밀렵감시단 운영, 조류보호 문화생태학교 개설 운영과 생태 탐사 등을 해왔다. 정기간행물로는 1992년 창간된 <새와 사람>이 있다.

◆ 한국환경교육협회

‘한국환경교육협회’(대표: 이진중)는 모든 국민이 자연과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환경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미래의 환경을 지킬 청소년 육성, 환경교육 및 수련활동 교육장을 개설 운영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1981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환경보전실천교육, 환경교육을 위한 전국 단위 순회 강좌, 환경보전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역 어머니회원 에너지 절약 실천교육, 환경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환경체험학교 개설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 어머니교실 운영, 환경보전 논문 및 수기 우수사례 발표회, 환경체험학교 개설 운영, <오늘의 환경> 회보 발간, 월간 <오늘의 환경> 창간, 환경보호 교육교재 발간, 환경교육, 환경보호운동 실천 각종 캠페인 활동 전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교육사업관련 계몽사진 전시회 개최, 환경관련자료실 운영), 전국 초등학생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 전국 환경보호 생활수기 및 논문 공모, 전국 초등학생 에너지 절약 독후감 공모 등을 해오고 있다.

▶ 한국환경수도연구소(환경수도연구소)

‘환경수도연구소’(대표: 김정근)는 환경오염과 수질, 토양, 폐기물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및 홍보를 위해 환경개선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1986년 10월 8일 설립되었다. ‘환경수도연구소’는 분석장비와 전문 연구진을 갖추고 있어 수질을 비롯한 토양, 폐기물 등 환경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과 기술개발로 국내 환경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먹는물·지하수 수질 검사, 토양 오염도 검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오염토양 복원연구, 환경조사평가, 환경오염지역 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 수자원 관련 영향평가 및 조사연구, 환경관련제품의 성능평가 및 위해성 조사연구, 정수기 성능검사, 식품 의약품의 성분분석 및 유해물질 조사연구, 식품위해성 평가조사연구, 위생관련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사업, 수출 수산물 가공용수 수질 검사, 비료 출하전 품질검사, 산처리제 성분검사, 폐기물 성상분석 및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다.

3. 일본의 환경 NGO

일본에서 환경운동은 고도성장을 경험하던 1960년대에 활발하게 결성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일본에서는 지역개발 정책과 건축물·도로·철도 등의 건설이 급진전되었으며, 대규모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공업생산이 급격하게 확대되자 그로 인한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등의 산업공해가 각지에서 빈발했다. 일본에서 공해문제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수은중독과 옷카이치 천식, 이타이이타이병 등 대표적인 공해병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환경운동단체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안전한 식품과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위해 조직된

소비자협동조합과 소비자운동 단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주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조직들은 처음에는 작은 상호부조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조직이 커지면서 쓰레기 재활용운동, 원자력발전소 반대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협동조합원들의 수는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일본 전국에서 1/5에 이르는 가구가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다.⁸⁴

일본의 생협운동은 반공해운동처럼 정부나 기업과의 갈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건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협동조합의 수와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보기드물게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단지 유기농산물 등 건강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회복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대중소비사회로 이행하면서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협운동은 생활양식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반공해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⁸⁵

이처럼 고도성장 말기 주민운동의 핵심이었던 반공해운동·자연보호운동은 1980년대 들어 포괄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다. 반공해·자연보호운동은 대개 공해·자연파괴의 주범 격인 기업 및 이와 연계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 요구 등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환경문제의 발생원이 생산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영역, 생활영역에까지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일본의 경제구조, 사회구조,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 사회제도 및 문화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⁸⁴ Ryoichi Terada, "Changing Characteristics of Japan's Environmental Movements since the 1970s,"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eoul: Seoul Press, 1994), p. 226.

⁸⁵ 양중희·임현진·정수복·박길성·구도완·홍성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 319.

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 NGO의 활동내용이 자연보호나 삼림·물·대기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소비생활, 환경교육, 지역환경관리 등으로 다양화된 것을 볼 수 있다.⁸⁶

일본의 환경운동은 활동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힘을 보태는 운동방식이 이에 해당되며, 대표적인 사례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에서 널리 기부금을 모아 토지나 역사적 기념물을 구입·유지·관리하는 운동으로 난개발이나 파괴·손실 등으로부터 그것들을 지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본에서는 1964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시민 주도로 시작되어 지방자치체가 이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운동을 추진하는데 적극 관여하기도 하였다. 1983년에는 운동의 협력·연락조직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를 추진하는 전국모임’이 설립되었고, 1985년에는 자연환경보전법안(=‘트러스트 법안’)이 법제화되었다.

NGO 조직과 관련하여 일본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 이후로 과거보다 광역의 환경운동 조직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도 생겨났다. ‘지구의 친구들 재팬’(Friends of the Earth Japan), ‘그린피스 재팬’(Green Peace Japan) 등 국제환경운동 단체의 지부가 일본에 생기기 시작했고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많은 반면, 일본 내의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약하고, 환경 NGO 후발 주자이자 이웃 나라인 한국에 비해서도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⁸⁷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환경 NGO가 서구 선

⁸⁶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pp. 98~99.

⁸⁷ 우평균, “동북아시아의 환경운동과 환경NGO: 평화운동의 가능성 모색,” 『평화학연구』, 제2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4), p. 155.

진국에 비해 일본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과 오랜 지역 중심의 ‘풀뿌리 보수주의’와 같은 정치적·문화적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⁸⁸

1980년대 이후로 일본의 환경운동이 점차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생태학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연보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고학력의 중상위계층을 지지기반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를 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주요한 환경 NGO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국제청년환경 NGO(A SEED JAPAN: Action for Solidarity, Equal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apan)

‘국제청년환경 NGO’(대표: 宮腰 義仁, 미야코시 요시히토)는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문제와 그 속에 포함된 사회적 불공정에 주목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청년 스스로가 계몽, 제안 활동을 하여 사회적 영향력 향상, 젊은 리더 육성, 해외 청년과의 협력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 향한 캠페인 실시, 제3회 세계 물 포럼에서의 정책 제언, 음식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 실시, 경제와 환경 문제를 행각하는 합숙형식의 회의, 일본의 MDGs 대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해왔다.

◆일본환경회의(日本環境會議, Japan Environmental Council)

‘일본환경회의’(대표: 淡路 剛久, 아와지 타게히사)는 연구자, 변호사,

⁸⁸ 長谷川 公一, “環境問題と 社會運動,” 飯島伸子 編, 『環境社會學』(有文閣: ブックス, 1993), pp. 117~118.

⁸⁹ 개별적인 일본의 환경 NGO 소개는 Japan NGO Center의 홈페이지 <http://www.npo-hiroba.or.jp>와 <http://www.enviroasia.info/Japan:> NGO活動推進センター, 『國際協力NGOダイレクトリー: 國際協力に携わる日本の市民組織要覽』 참조.

의사, 저널리스트, 시민운동 및 주민운동의 리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실무가에 의한 종합적인 환경보전 운동을 목표로 1979년 창설되었다. 창립 이후 주요 활동으로는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공해 피해나 환경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제언, 출판 활동, 『일본환경회의』 등의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 태평양 NGO 환경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 환경 백서』의 편집 간행, 아시아 환경 정보 네트워크(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for Asia and Pacific, EINAP)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린피스재팬(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 Green Peace, Japan)

‘그린피스재팬’(사무국장: Steve Shalhorn)은 1989년 지구 규모의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나 그 외의 지부등과 제휴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비폭력 직접 행동, 정치적 중립, 재정적 독립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2004년 현재 사무국 직원 17명에, 회원을 약 5,500명 두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105,770,000엔에 달한다. ‘그린피스재팬’의 주요활동으로는 환경 파괴 현장에서의 직접 항의, 환경 파괴의 실태 조사·분석, 정책 제언,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 조약 교섭 과정의 감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재팬(世界自然保護基金ジャパン, WWF Japan)

‘세계자연보호기금재팬’(대표: 大内 照之, 오오우치 테루유키)은 생물의 다양성을 지구규모로 보호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과 자연,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인류가 자연과 조화하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1971년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사무국 상근 직원 63명에 회원 37,000명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WWF 인터내셔널을 통한 세계각지의 보호활동, 베트남 및 말레이 반도 호랑이 보호활동, 파키스탄 구와달망의 생태다양성

보전, 해외 WWF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금조달활동(아시아 중심), 황해 에코 리전 보전 프로그램(UNDP와 협력)을 수행해왔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비준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FoE재팬(FoE ジャパン, Friends of the Earth Japan)

‘FoE재팬’(岡崎 時春, 오카자키 토시하루)은 인간 활동이 일으킨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 설립되었다. ‘FoE재팬’은 산하에 9개의 단체와 회원 470명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지구 환경 일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삼림, 대기, 해양, 개발, 사막, 에너지 등), 시베리아에서의 삼림 보호 활동, 사할린 유전 개발의 감시 활동, 중국 사막 녹화 활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활동, 해외의 온난화방지회의에서의 정부 교섭 활동, 출판 활동,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등을 수행해왔다.

◆지구환경행동회의(地球環境行動會議, Global Environmental Action)

‘지구환경행동회의’(대표: 齋藤 十朗, 사이토 슈로)는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공헌하고자 전수상 다케시타 노보루가 ‘지구환경현인회의 사무국’으로 1991년 설립하였다. 주요 활동 상황으로는 ‘동북아 온난화 대책 회의’, ‘글로벌 코몬즈 세계 환경회의’, ‘지구 환경 경중 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에코 유스 회의’ 등, UN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환경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유엔 밀레니엄 포럼’, ‘UNEP·NGO시민사회 협의회’ 등의 국제 회의에서의 정책 제언, 환경NPO/NGO 지원 프로젝트(Virtual Globe <http://www.virtualglobe.org>)를 추진하고 있다.

◆ 네트워크 ‘지구촌’(ネットワーク『地球村』, Network Earth Village)

네트워크 ‘지구촌’(대표: 高木 善之, 다카기 요시유키)은 환경 조화 사회와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 일반시민, 기업, 정치가 및 행정으로의 계몽, 계발에 관한 사업과 환경을 보전하고, 인권 옹호 및 평화 추진과 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되었다. 2005년 현재 직원 12명에, 약 200개의 지역 조직에서 회원 13,000명을 산하에 포괄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으로 약 100,000,000엔을 책정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강연회 개최 등 계몽·계발사업, 지역의 교육연수 사업, 국내외 재해지역에서의 지원활동, 환경보전 및 평화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정보수집 및 제공, 환경강연회 및 환경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사업, 환경 기본계획 작성에 관한 자문 활동, 책자 및 회보 발행 등을 하고 있다.

◆ 원자력자료정보실(原子力資料情報室,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

‘원자력자료정보실’(대표: 山口 幸夫, 아마구치 유키오, 柴 邦生, 시바 구니오)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계와 독립한 원자력의 개발이용 동향 및 안전성 조사, 원자력에 대체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시민의 생명 및 건강 확보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5년에 설립되었다. 원자력의 개발이용 동향 및 안정성에 관한 조사 연구, 원자력에 대체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회나 국제회의 등 개최, 사회교육 및 제언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글로벌빌리지(グローバル・ビレッジ, Global Village, GV)

‘글로벌빌리지’(대표: サフィア ミニー, Safia Minney)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보호, 자연환경과 조화된 평화롭고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창조,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의

개선을 위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사무국 직원 34명과 회원 2,647명에 연간 579,607,000엔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공정한 기탁활동을 통한 20개국 70생산자 단체 지원, 짐바브웨나 방글라데시의 환경, 교육에 대한 자금 원조, 시민의 국제협력참가의 기회제공, 현상의 경제활동과 국제무역의 문제점 연구, 환경문제, 남북문제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 수 있다.

◆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環境持續社會研究センター,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대표: 古澤 廣祐, 후루사와 코우유)는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협력을 하여,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환경 문제에 관한 조사, 정책 연구, 정보 보급을 실시하는 NGO 씽크탱크를 목표로 하여 1993년 설립되었다. 동센터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분야(지구 환경, 물, 개발과 원조, 세계와 재정,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정책 제언, 조사 및 출판 등의 활동과 정부·국제기관(세계은행, 아시아 은행)등의 환경개발 정책의 감시 및 환경세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제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오이스카(オイスカ, OISCA International)

‘오이스카’(대표: 中野 良子, 나카노 요시코)는 종교나 민족을 초월한 인류 대가족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개도국의 환경보전, 산업개발,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국제교류에 의한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1년 설립되었다. 96명의 사무국 직원과 해외 지사에 257명의 직원, 자원봉사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27,459,000엔의 예산(2002년)을 책정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개발협력, 환경협력, 조사 연구 (32개국), 식림프로젝트 추진, ‘어리니 숲’ 계획 추진, 해외연수센터에서 기술지도 및 인

재육성, ‘아시아 태평양 청년포럼’ 등 국제회의의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 전국청년환경연맹(エコリーグ, 에코 리그, Eco-League)

‘전국청년환경연맹’(대표: 木戸 大介 로베르트, 기도 다이스케 로베르트)은 1994년 지역 및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 모여 환경 의식 및 정보를 공유 하고, 활동의욕을 서로 자극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환경 NGO를 각 대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의 네트워크로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 대한 교육, 대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회, 한국과 일본 학생의 교류 사업, 환경과 청년을 주제로 한 포탈사이트, ‘ECO2000’ 운영, 환경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매니지먼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어스워치재팬(アースウォッチ・ジャパン, Earth Watch, Japan)

‘어스워치재팬’(대표: 難波 菊次郎, 난바 기쿠지로)은 시민이 자원봉사로 환경에 관한 연구를 지탱하는 활동을 추진하며, 수집된 과학 데이터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知)의 기반’으로써 세계각지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환경기구인 ‘Earth Watch’의 일본지부로서 1993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돌고래, 고래, 코끼리, 코뿔소 등 세계에서 100곳 이상의 현장조사 연구 프로젝트에 시민이 자원봉사로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에 참가 희망자에 대한 워크숍, 국내의 현장조사연구자에 대한 강연회, 현장조사 자원봉사 활동의 보급, 계몽에 주력하고 있다.

◆ 기후네트워크(気候ネットワーク, Kiko Network)

‘기후네트워크’(대표: 浅岡 美恵, 아사오카 미에)는 실효성 있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일본의 온난화대책을 촉진하고, 시민섹터 주도로 지

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함으로서 환경보호와 기후변동,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2002년도에 창립되었다. 사무국 직원 4명과 160단체, 회원 491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2002년도 예산으로 29,194,000엔이 책정되었다. 창립 이후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관련 국제회의 참석, 기후행동 네트워크(CAN)과의 연대,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조사·연구·정책 제언과 관련 정보제공을 해오고 있다.

◆지구환경과 대기오염을 생각하는 전국시민회의(地球環境と大氣汚染を考える全國市民會議, Citizens' Alliance for Saving the Atmosphere and the Earth, CASA)

‘지구환경과 대기오염을 생각하는 전국시민회의’(대표: 山村 恒年, 야마무라 쓰네토시)는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와 지역 레벨의 대기 환경의 보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해외 NGO와의 교류 연대, 그리고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구 환경 대학(시민 강좌) 운영, 기후변동문제연구회, 폐기물문제연구회, 환경과무역연구회 등 연구회 운영, 세계의 환경 NGO와의 제휴하여 국제회의 등에서 로비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교재의 개발, 출판물과 기타 자료 제공, 대기오염 피해자에게의 지원 활동, 공해 재판 지원,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AANE) 운영에도 주력해왔다.

◆녹색지구네트워크(緑の地球ネットワーク, Green Earth Network)

‘녹색지구네트워크’(대표: 立花 吉茂, 타치바나 요시시게)는 지구 환경을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시민 연대를 추진하고, 수도(水土)유실이나 사막화가 심각한 세계 각지에서 현지인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사무국 직원 3명과 회원 650명이 있으며, 한해 예산으로 56,211,000엔을 지출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국 산서성 대동시의 황토고원에 있어서의 녹화 활동과 현지에 환경

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홍보, 세미나 활동을 한 바 있으며, 그 뿐 아니라, 환경 문제 일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출판,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녹색지구네트워크’는 중국 환경문제에 관해 중국 ‘대동시청년연합회’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등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 지구녹화센터(地球綠化センター, Green Earth Center)

‘지구녹화센터’(대표: 高橋 成雄, 타카하시 나리오)는 지구의 녹화를 목표로 1993년에 녹화 활동을 중국 내몽고 및 네팔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삼림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험 활동을 통한 환경 의식을 길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은 국내 8명, 해외 1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회원은 약 800명 규모이다. 연간 예산은 109,826,000엔(2002년)을 지출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구 녹화를 위한 자원봉사 및 전문가 파견,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지구 녹화에 관련된 교류 사업 추진, 지구 녹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조사 연구 사업의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내몽고 황하유역의 사막 식림(植林) 자원봉사 년3회 실시, 장강유역 식림 자원봉사 년2회 실시, 주말 삼림 자원봉사(국내) 년 20회, 1년간 산촌 자원봉사(국내)를 진행하였다.

◆ 사막식림자원봉사협회(沙漠植林ボランティア協會, Desert Planting Volunteer Association, DPVA)

‘사막식림자원봉사협회’(대표: 菊地 豊, 기쿠치 유타카)는 사막 삼림 농·목장 지원 활동, 사막지에서의 숲 만들기, 식림 녹화 교육, 중국 내에서의 교육 지원, 녹화자금과 기술지원, 보급 및 기술자 파견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사막녹화(목장 2900호, 중 면적 2만ha(누계) 작업, 숲 만들기(내몽고에서 200ha), 일본인 식림 협력대 파견, 식림 녹화의 비용 감소 실시, 보급, 국내 보고

회, 강연회, 사진전, 출판 활동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 원자력자료정보실(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

‘원자력자료정보실’(대표: 高木仁三郎, 다카기 진자부로)은 1975년에 찬핵론자들이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원자력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대중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처음에 이 단체는 한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10명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다카기 진자부로는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로 유명할 뿐 아니라 활동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회의에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회의를 조직했다.

◆ 시민포럼 2001

‘시민포럼 2001’은 유엔환경발전회의(리우회의) 참가자들에 의해 1993년 11월에 설립되었다가 이후에 ‘자연에너지추진 시민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단체는 ‘에너지 원탁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대량 소비에 의해 생기는 지구온난화, 환경부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천을 조직하고 있다.

◆ 청정에너지포럼

‘청정에너지포럼’은 “청정에너지를 21세기의 지구와 인류에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청정에너지포럼’은 도쿄에 본부가 있고 가나가와 현과 오사카에 지부가 있다. 이 단체는 청정에너지의 3가지 결점인 낮은 출력밀도, 공급의 불연속성 및 불안정성, 고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경제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중국의 환경 NGO

중국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환경문제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NGO의 발달 양상도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에 주력하는 NGO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건국 초기에 생산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대약진’ 시기, 그리고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국가의 정치·경제와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악화와 더불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도 진행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⁹⁰ 중국에서 이 기간중에 진행된 경제건설은 총량적 건설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였으며, 생산량만을 추구하여 경제효율을 도외시하였다. 그 결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도시의 맹목적인 발전 추구, 주식문제 해결을 위한 산간지역의 삼림과 초목 훼손, 호수와 바다주변에 밭의 조성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음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파도가 지나가고 1978년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면서 차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중국의 공기와 수질오염 상황은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하며, 이는 비단 중국의 문제 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0년 동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기본 틀을 정비해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느 정

⁹⁰ 『中國環境報』, 1999. <<http://china.enn21.com/chinaery/bainian.htm>>(검색일: 2005. 2. 15).

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손길을 요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처럼 제한된 역할은 민간조직의 역할범위를 확대시켜왔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국가의 후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의 자발성 증가에 따라서 민간조직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전국성 사회단체의 예를 들면 1978년에는 115개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 322개, 1989년 623개, 1992년에 827개로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48%에 달하였다.⁹¹ 중국의 민간 환경단체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중국에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도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차츰 공식적인 관료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 조직의 힘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정부의 통계기구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 민간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중국인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비효율적임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그런 일은 민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민간단체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환경 단체는 아직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적고 활동도 미미한 편이다. 다만 앞으로 환경단체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겠다.⁹² 중국의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1)

⁹¹ Minxin Pei, "Chinese Civil Society: An Empirical Analysis," *Modern China*, Vol. 24, No. 30 (1998), p. 291.

⁹² 정수복·구도완, "동아시아의 환경운동," 『한국사회과학』 제21권 제2호 (1999), pp. 95~96.

‘정부조직형의 민간단체’(governmental-organized NGOs), 2) ‘사조직 형태의 민간단체’(Personally-organized NGOs), 3) ‘자원적 조직’(voluntary-organized NGOs)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³ 각각의 형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NGO들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환경보호재단’(The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Foundation, CEPE), ‘중국환경과학협회’(The China Society of Environmental Science, CSES)
- 2) ‘자연의친구들’(Freinds of Nature, FON), ‘베이징지구촌환경문화재단’(Global-village Environmental Culture Institute of Beijing, GECIB), ‘베이징환경과개발재단’(Beijing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Institute, BEDI), ‘지방토착성과생태다양성연구센터’(Center for Biodiversity and Indigenous Knowledge, CBIK), ‘환경개발재단’(Institut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ED)
- 3) ‘푸른지구를위한모임’(Green Earth Volunteers, GEV), ‘지구촌문화중심’(Global Village Cultural Center)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학술적인 분류보다는 국제연대와 중국인의 자체적인 조직인가에 따라 외국지원 NGO와 중국 NGO로 분류하여 각각의 NGO들을 소개하고, 홍콩의 환경 NGO를 별도로 소개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NGO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⁹⁴

⁹³ Elizabeth Knup,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 Overview,” The Woodrow Wilson Center. China Environmental Series.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ject (1998), pp. 10~13: 안형기 외, “동북아3국 환경 NGO의 실태분석: 국제적 연대방안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2000), pp. 352~353.

⁹⁴ 중국 환경 NGO들에 대한 소개는 清華大學NGO研究所 主編, 中國NGO五百家,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UNCRD) (May

가. 외국지원 NGO

◆ 국제보존협회중국지부(Conservation International China)

‘국제보존협회중국지부’(대표: Dr. Lu Zhi)는 자연 생물의 서식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인간사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중국 남서부 Hengduan 산맥 등지에서 생물의 다양성 보호 활동, 꽃과 꽃 종류에 대한 관찰 활동, 특정 지역의 자연보호 계획에 대한 지원, 자연보호 NGO에 대한 능력 배양을 들 수 있으며, 활동 지역으로는 주로 스촨성, 티벳지구, 윈난성, 칭하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중국배오권교역(中國排污權交易, Environmental Defense Chin)

‘중국배오권교역’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재와 미래 창조에 목적을 두고 물, 대기, 인류건강 및 식품의 보호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 등의 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환경정책 계획 수립, 보급, 2) 중국 자체에 적합한 효과적 환경오염 통제방식을 찾는데 주력, 3) 중국국가 환경보호총국과 협력, 본계, 남통시에서의 연구 전개, 4) 국가환경총국과 “4+3+1” 이산화황에 대한 비교역 모범 사업, 5) 서적 출간(중국산성비통제전략 등)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환경보호협회’와 연대하고 있으며, 활동지역으로는 주로 장수성,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천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 俞可平等, 『中國公民社會的興起與治理的變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王名主編, 中國NGO研究2001, UNCRD Research Report Series, No. 43 (June 2001) 참조.

◆ 지구의 친구들(地球之友, Friends of the Earth Hong Kong in China)

‘지구의 친구들’(대표: Chen Ying, 陳英)은 교육, 연구,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적 환경 보호 및 개선 추구를 위한 목적에서 1992년 설립되었으며, 환경교육, 교사 연수를 통한 본토 중국과의 연계 수립, 학생 환경 모임을 비롯한 각종 중국 NGO 후원, 양쯔강, 황하 보호 캠페인, 재생가능 동력으로서의 풍력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국제그린기금(Global Green Grants Fund)

‘국제그린기금’(대표: Wen Bo)는 환경 유지에 힘쓰는 단체의 지원을 통해 개발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1998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풀뿌리 단체를 위한 기금 조성(500~5,000불), 전 세계 100여명의 자원봉사들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그린피스 중국(Greenpeace China)

‘그린피스 중국’(대표: 盧思騁, Lu Sicheng)은 홍콩에서 1997년에 ‘그린피스 홍콩’(Greenpeace Hong Kong)이 설립된 이래 2002년부터 중국 본토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그린피스는 널리 알려진 대로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녹색평화 미래를 위한 해결책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경교육활동을 하거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산업폐기물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건강한 숲 보존 등에 대한 공공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린피스 중국’은 실무자 28명에 연간 예산이 \$484,260에 달하며, 지역적으로는 베이징, 광둥성, 윈난성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국제두루미재단’(대표: Paul McVey)은 두루미 및 습지 보존, 생태

계 위협 방지를 위한 경험 및 지식 홍보를 위해 1979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물새의 겨울 서식지 마련을 위한 귀주 지역의 조해 자연보호 프로젝트 참가, 장시의 포양호수, 지린성의 상하이와 모모거, 헤이룽성의 자로, 내몽고의 커얼친의 다섯개 지역에 대한 보호활동,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시베리아 두루미 보호, 티벳지역의 생태 프로젝트 추진에 주력해왔다. 사무국은 상근 실무자 3명이며, 연간 예산은 25만 불에 달한다.

◆중국자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 China)

‘중국자연자원보호위원회’(대표: Timothy Hui)는 지구, 사람,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권을 함양하기 위해서 1997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염없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양쯔강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효율적 건축 추진, 클린 에너지 기술 채택 증진 노력을 들 수 있다.

◆야생동물보존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야생동물보존협회’(대표: Endi Zhang)는 동물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80년 설립되었다. 창립 이후 팬더곰 서식지 보호활동을 하는 ‘차탕자연보호단’을 만들었으며, 4개성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교과과정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내 연대 단체로는 ‘차탕자연보호단’, ‘쿤밍동물학연구소’가 있다.

◆세계야생기금중국사무소(World Wide Fund for Nature China Programme Office)

‘세계야생기금중국사무소’(대표: Jim Harkness)는 지구환경의 퇴보를 막아 되돌리며,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목적에서 1980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Giant

Panda 보호활동, 2) 환경교육, 3)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 4) 기후와 에너지 프로그램 : 환경정책 잡지 발간, 재생자원사업 후원, 풍력 에너지 연구, 5) 환경보전정책 연구, 팬더, 양쯔강, 습지보전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사무국은 실무자 21명(중국인 20, 외국인 1)이며, WWF 후원자는 전세계적으로 4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 아시아동물재단중국사무소(Animals Asia Foundation in China)

‘아시아동물재단중국사무소’(대표: Jill Robinson)는 아시아 모든 동물들의 환경 개선, 아시아 지역 동물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1998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곰 사육 중지 캠페인, 2) 반달곰 보호 협정에 중국정부와 함께 서명, 3) 곰 보호를 위한 수의학적 지원, 자연 적응 지원, 4) 응답수요 감소를 위한 각종 활동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등을 주관해왔다. 베트남, 대만, 필리핀, 일본, 인도에 국제 지부가 있으며, 사무국은 실무자 50명(중국인 48명, 외국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이 \$540,000에 달하고 있다.

◆ 세계보존연합(The World Conservation Union)

‘세계보존연합’(대표: 欽立毅, Qin Liyi)은 1996년 자연의 다양성과 원형을 보호하는 전 세계 단체를 독려하고, 영향을 끼치며, 그들과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모토로 어떠한 자연 자원의 사용도 정당하며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활동 사항으로는 1) 스완성, 광시성 산림보호 프로젝트 운영, 2) 베이부만 해안 수질 관리계획, 3) 지역적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워크숍 개최, 4) 분지관리, 습지보호, 해양수질관리에 주력해왔다.

◆ 자연보존회(The Nature Conservancy)

‘자연보존회’(대표: 嚴萍, Yan Ping)는 땅과 물을 보호함으로써 동식

물을 보전하며 지구에서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8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운남대하유역계획 - 지역 환경 및 문화 보호, 2) 자연보호단체 실무자 교육, 3) 5개 구역 보호 계획(老君山, 拉市海, 德欽梅里雪山, 中甸香格里拉峽谷, 貢山)을 들 수 있다.

◆국제습지재단 중국(Wetlands International - China Programme)

‘국제습지재단 중국’(대표: Kelin Chen)은 연구, 정보교환,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습지, 습지자원, 습지 생물 다양성의 유지와 회복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습지 보호와 습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후원하고, 정책 대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중환경기금(US-China Environmental Fund)

‘미중환경기금’(대표: Leon Chen)은 중국 정부의 교육, 자원관리 부서와 국제 환경 전문가와의 연대활동 실행·후원을 통해 중국 자연, 문화 환경 보호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1) 교사,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2) 어린이를 위한 환경관련 교재 발간 및 번역작업, 3) 자연보호 활동 및 환경친화적 공원 조성, 4) 지역 환경감시활동 지원을 해오고 있다.

◆중국환경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hina's Environment)

‘중국환경국제기금’(대표: 孟亮, Meng Liang)은 중국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세계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국 환경을 위한 국제 협력, 심포지엄 개최, 공동 연구 등이 정책 조안과 기술 교환, NGO포럼 개최 등 NGO 개발 및 후원, 어린이 예술 대회, 출판사업, 환경예술사업 등의 교육 및 훈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중국 NGO

◆ 자연의 친구들(Friends of Nature)⁹⁵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민간 환경단체인 ‘자연의 친구들’은 1997년 7월 정부등록을 마쳤으며, 공식등록 명칭은 ‘중국문화원 녹색문화원’이다. 이 단체를 만든 량충지에(梁從械)는 중국 개화기에 활약한 지식인 량치차오(梁啓楚)의 손자이며, 미국에서 유학한 건축가로서 북경시 보존운동을 벌인 량쓰칭(梁思成)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알려진 가문의 배경과 전직 대학교수라는 배경이 이 단체의 결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단체는 한국의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동북아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회원 수는 500~600명 정도이며 주로 학자와 기업가들이 주요 회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활동의 내용은 전문가들 사이의 녹색간담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캠프(夏令營),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의 협력 유도과 일반시민 참여의 확대 등이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승인하에 관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확산시키고 지역 지부도 개설할 계획이다.

◆ 지구촌 문화중심(Global Village Cultural Center)

‘지구촌 문화중심’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기간 중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특히 여성과 환경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회원 수는 약 1,000명이며 정부의 환경 관련 기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인민회의의 ‘환경과 자연자원위원회’의 의장이 고문으로 있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환경을 위한 시간’과 ‘녹색문명

⁹⁵ ‘자연의 친구들’과 후술할 ‘지구촌 문화중심’, ‘녹색지구 자원봉사’, ‘국제인간생태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양종희·임현진·정수복·박길성·구도완·홍성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pp. 391~392. 참조.

과 중국'이라는 제목의 두 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여러 신문에 환경에 관한 칼럼을 쓰기도 한다. 이들은 여성이 중국의 기본적 소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불필요한 물건 구입의 자제, 가능하면 재생가능한 소비생활, 효과적 쓰레기 처리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단순하고 덜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 이 단체는 '전국 녹색 자원봉사자 네트워크'(green volunteers network)를 결성하였고 베이징 서부 주거지역에서 폐기물 재활용 운동을 벌이고 고형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지구 자원봉사(Green Earth Volunteer)

'녹색지구 자원봉사'는 1996년 말에 '자연의 친구'의 간부였던 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집단의 주요활동은 황무지에 나무심기, 빈민지역에서의 어린이 환경교육, 조류 관찰, 도시인을 위한 작은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녹색지구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양쯔강의 돌고래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조건을 알리고 고형 폐기물의 재순환, 나무심기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인간생태학연구소(Institute of Human Ecology International)

'국제 인간생태학연구소'는 당 간부이며 전 국방장관의 딸이 만든 단체로서 국제적인 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1997년 중국 환경포럼'(China Environment Forum 1997)을 조직하고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환경담당 고급 관료들, 국제적인 환경 NGO들, 환경기술 관련 기업의 관련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은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지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오염은 국경을 초월하며 중국 내부의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민간기업의 영역이나 NGO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자원과 기술 그리고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 환경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센터(Center for Legal Assistance to Pollution Victims)⁹⁶

1998년 설립된 환경피해자를 위한 비영리 법률지원센터로 중국의 정치현실에서 볼 때 대단히 진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1996년 오리사육과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수질오염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결성되었다. 소송을 통해 4개의 공장(식용유공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았고, 이에 고무되어 본격적으로 환경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현재 사무실은 중국법정대학 법제연구소 내에 있으며 약 12명의 자원봉사자(대부분 법과대 교수, 변호사, 대학원생 등)가 Hot phone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1달에 1백여 건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소음, 대기, 물, 방사성, 폐기물, 불빛 반사 등이 라고 한다.

다. 홍콩의 환경 NGO

◆ 홍콩해상보존협회(Hong Kong Marine Conservation Society)

‘홍콩해상보존협회’(대표: John Wong)는 지역 식수가 오염되는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홍콩해상보존협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 연례 개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 채택을 홍콩정부에 요

⁹⁶ 이시재, “동아시아의 변동과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한국사회과학』 제22권 1호 (2000), p. 18; 우평균, “동북아시아의 환경운동과 환경 NGO: 평화운동의 가능성 모색,” pp. 152~153.

구, 광시성 두공, 산호초 조사,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1100여 명에 달하며, 중국 내의 ‘남중국해 해양학 연구소’, ‘광둥바다거북해양연구소’와 연대하고 있다.

◆ 환경보호회(The Conservancy Association)⁹⁷

‘환경보호회’는 1968년 홍콩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환경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구를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서식지로 만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건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게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해 환경에 관련된 자료실을 운영하며, 환경교육을 위해 『녹색경고』(Green Alert)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환경보호회’는 다른 환경 NGO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있다.

◆ 녹색의 힘(Green Power)

‘녹색의 힘’은 1988년에 과학자, 대학교수, 예술가, 목사, 정부 관리, 기자, 경제학자 등의 핵심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알렉산더 얀(Alexander Yan)은 “홍콩 정부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로지 공적인 압력이 커질때만 홍콩 정부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압력은 홍콩의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녹색의 힘’은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요구와 일치하는 생활양식(lifestyle)을 널리 알리는 일을 전개하고 있으며 『녹

⁹⁷ ‘환경보호회’와 후술할 ‘녹색의 힘’, ‘녹색 란토회’, ‘홍콩해양보호회’는 양종회·임현진·정수복·박길성·구도완·홍성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pp. 405~406. 참조.

색나라』(Green Country)라는 격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 녹색 란토회(Green Lantau Association)

‘녹색 란토회’는 홍콩의 지역 환경운동단체로 출발하였다. ‘녹색 란토회’는 1989년 란토 자연공원(Lantau Country Parks) 안에 발전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녹색 란토회’는 란토 섬의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가져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녹색 란토회’는 이후 홍콩 전체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리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를 통제하고 폐수처리시설의 강화 등을 위해서 일하며 홍콩 전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른 환경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 홍콩해양보호회(The Hong Kong Marine Conservation Society)

‘홍콩해양보호회’는 1991년 해양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홍콩해양보호회’는 해양 환경의 증진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해양 보호의식을 높이고 다른 단체들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홍콩해양보호회’는 홍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수질의 향상을 위해 폐수처리, 폐기물 투척, 준설사업 등에 관련된 법안과 실행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보완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러시아의 환경 NGO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대형 환경사고, 개방화정책, 민주화에 기초하여 시민운동 영역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으로 발전해왔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의 환경문제 인식과 대처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부터 소련 정

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과 조치를 마련해 왔으며, 브레즈네프(Brezhnev) 정부는 토양(1968), 수자원(1970), 광물(1976), 산림(1977), 대기(1980), 그리고 자연생태계(1980) 등에 대한 연방법, 개별 공화국 차원에서 이루어진 포괄적인 자연보호법안, 5개년 경제계획 지침, 소련공산당의 결의안, 그리고 특정 지역 혹은 산업분야의 환경문제에 대한 각료회의와 최고회의의 결의안 등의 형태로 환경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은 경제정책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⁹⁸

소비에트 체제의 말기에 채택된 고르바초프(M. Gorbachev)의 개혁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1986년 제27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환경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1986년 4월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개방화에 따른 환경문제관련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88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생태상황과 자연보호정책에 관한 보고서』와 1989년 국가통계위원회의 『환경백서』가 출판되었다. 1990년대에는 1991년 9월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5개의 대통령령이 발표되었으며, 1992년 2월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Law)이 채택되었다. 1993년 말에는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산하에 생태안보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96년 8월에 연방기구 개편과정에서 동 위원회는 공식기구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1994년 2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러시아 연방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환경보존지구를 확대하여 1995년 현재 89개의 국가과학자연보호지역과 29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다.⁹⁹

⁹⁸ Igor Alshuler, “Glasnost’, Perestroika, and Eco-Sovietology,” John Massey Steward. eds., *The Soviet Environment: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200.

⁹⁹ 한종만, “동북아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협력 방안 연구: 러시아 환경 실태

정부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민간 수준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페레스트로이카 이래 진행된 민주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⁰⁰ 물론 이 시기에는 환경문제를 사회운동의 중심에 놓고 운동하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에서 그동안 금기시되고 제약받았던 모든 사회적 관심사들이 분출되어 시민사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주창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환경관련 NGO는 1986년에 ‘생태발전부로’(Ecological Development Bureau), ‘레닌그라드역사문화재보존그룹’(the Group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marks of Leningrad), ‘생태문화위원회’(the Council for the Ecology of Culture)가 결성되었고, 1987년에는 ‘녹색세계’(Green World)가 세르게이 잘루긴(Sergei Zalygin)을 회장으로 창립되었다. ‘녹색세계’는 시베리아 강의 흐름을 북부에서 남부로 돌리려는 정부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백지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볼가-초그라이(Volga-Chograi), 볼가-돈 II(Volga-Don II), 다뉴브-드네프르 해협(Danube-Dniepr canals)를 포함하는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시행을 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87년부터는 모스크바 이외의 개별 도시에 근거를 두는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은 지역의 일간지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즉, 환경단체가 결성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집단이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동시에 대중들에게 지역의 혹은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환경 이슈에

와 환경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8호 (1998), pp. 259~288; 김성진, “세계화, 주권, 그리고 연방관계: 러시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4), pp. 374~375.

¹⁰⁰ А.Ю. Сунгуров, Организации-посредники в структур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России, *Полис*, No.6(1999), с. 34~48; М.Б. Горный, Коалици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изаций третьего сектора).-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 в поисках пути. СПб. 197. с. 127~139.

대한 선동(운동)에 나서면서 환경의식의 전면적인 고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⁰¹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클럽 중의 하나가 ‘이브닝 오데사’(Evening Odessa)였다. 지역에서의 환경운동은 점차로 운동 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의회로 직접 진출하거나 지역의 자연보호당국과 함께 일을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당시에 설립된 단체 들로는 ‘청년제안센터’(Youth Initiative Centre, Yoshkar-Ola지역), ‘사회적지원코뮌’(The Social Assistance Commune, Commune-1, Pskov 지역), ‘사회-생태위원회’(The Social-Ecological Committee, Perm지역), ‘바이칼운동’(The Baikal Movement, Irkutsk지역), ‘에콜로지’(Ecology, Volgograd지역), ‘자연보호전연방회의’(All-Union Conference of Nature Protection Corps, Dolgoprudny지역), ‘문화발전과협력을위한발틱-슬라브협회’(The Baltic-Slavic Society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igawl지역), ‘그린월드’(Green World, Kazan지역), ‘6월5일그룹’(Fifth of Jne Group, Ryazan지역), ‘비이칼수호협회’(Society to Defend Baikal, Irkutsk지역), ‘환경제안운동’(Ecological Initiative Movement, Tomsk지역), 그리고 전국조직으로 ‘생태와21세기’(Ecology and the Twenty First Century) 등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있는 환경단체의 분출과 참여 현황을 <표 IV-6>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전역 중에서 자원 개발 및 원자력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한 지역이 시베리아이며, 오오츠크해에 인접해 있는 극동 지역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주변 인접국과의 철새 보호, 산림 보호 등의 환경이슈들이 주로 제기되었다.

¹⁰¹ Oleg Yanitsky, *Russian Environmentalism: Leading Figures, Facts, Opinions* (Moscow: Mezhdunarodnyie Otnoshenija Publisging House, 1993, pp. 230~232.

<표 IV-6> 1990년대 초반 시베리아·러시아 극동지역의 환경단체
결성 현황¹⁰²

지역	단체명	대표(설립일)	회원수 (Active)
알타이	알타이환경연합 (Altaiskii ekologicheskii soiuz)	M. Shishchin(1989.12)	200(25)
알타이	환경사회(Ekologicheskii obshchestvo)	(1988.11)	-
알타이 공화국	비이스크환경섹션 (Biisk ekologicheskii sektsia)	V.Vasil'ev(1986)	60
케메로 보	'Noosfera'	(1988.4)	(15)
	환경클럽(Ekologicheskii klub)	T. Golubeva(1989)	30
	환경(Ekolog)	-	-
노보시 비르스 크	그린스(Zelen)	(1989.10)	20-25
	환경연합(Ekologicheskii souiz)	S.Shchukin(1988)	-
오姆斯크	그린피스(Zelenyi mir)	(1988.6)	30-50
	녹색도시(Zelenyi gorod)	S. Zarianaia(1990.6)	50(15)
톰스크	뚝강보호위원회 (Obshchestvennyi komitet po spaseniju reki Tomi)	(1989)	-
	환경이니셔티브운동 (Dvizhenie ekologicheskaiia initsiativa)	A. Grishin(1988.4)	100-150 (40)
	환경클럽(Ekologicheskii klub)	-	-
튜멘	자연보호위원회 (Obshchestvennyi komitet okhrany prirody)	A. Reentov(1988)	100-120 (20-30)
	새로운사고를위하여(Za novoe myshlenie)	(1988.3)	50(15)
	환경위원회(Ekologicheskii komitet)	-	-
부리아 티야	바이칼 기금(Fond Baikala)	A. Limarenko(1989.2)	500

¹⁰² 김성진, “세계화, 주권, 그리고 연방관계: 러시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p. 371.

지역	단체명	대표(설립일)	회원수 (Active)
크라스 노야르 스크	그린피스(Zelenyi mir)	V. Mikheev외(1989.9)	600(50)
	환경센터(Ekologicheskii tsentr)	A. Bolsunovskii외 (1989)	100
	크라스노야르스크환경운동 (Krasnoiar'koe ekologicheskoe dvizhenie)	A. Bolsunovskii 외 (1990.2)	8000
	크라스노야르 녹색당 (Zelenaja partiia krasnoiar'ia)	(1990.11)	-
이르쿠 츠크	바이칼보호운동 (Dvizhenie v azshchty Baikala)	V. Zubov(1988.6)	60
	바이칼보호협회 (Obshchestvo zashchty Baikala)	P. Malykh(1987.11)	-
	바이칼기금(Fond Baikala)	M.Mkhamarkhanova(19 89)	-
	안가르스크환경운동 (Angarskoe ekologicheskoe dvizhenie)	O. Boroliuk: A Aleksenko(1988.10)	150-200
치타	환경위원회(Ekologicheskii komitet)	K. Despirak(1988)	40
	환경전선(Ekologicheskii front)	(1988.9)	5-10
프리모 르스키	환경센터(Ekologicheskii tsentr)	E. Chichalin(1988.11)	
	프리모르스키 환경운동가회 (Primorskoe obshchestvo ekologicheskikh)	(1988.2)	100-150 (20)
하바로 프스크	뚜르다덴(Trudoden')	V.Blazhevich(1988.6)	30(15)
	환경위원회 (Khabarovskii ekologicheskii komitet)	Kolesnikpv(1989)	50
캄차 트카	환경센터(Ekologicheskii tsentr)	(1989)	-
사할린	환경그룹(Ekologicheskii grupa)	-	-

이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류가 분명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환경운동이 약화되고 침체기에 빠졌다. 특히 1998년 여름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 이후 가중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경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1980년대 후반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연방 말기에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활발한 단체 행동을 통해 급성장한 러시아의 환경운동단체들은 그 지속과 명멸을 계속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초창기(소연방 말기)에 만들어졌던 환경운동들 중에 소수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들은 대체로 독자적이기보다는 전국적인 연합조직의 지부, 혹은 해외 NGO/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연계되어 성장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환경 NGO 조직상의 특징으로 단체의 해체 및 재조직이 빈번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환경 NGO들은 글로벌 펀드나 INGO의 지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랄이나 시베리아, 바이칼 지역 등 전통적으로 환경 문제를 지역 수준에서 강력하게 제기해온 곳에서는 환경 NGO가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과학자 집단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¹⁰³

이와 같은 구조적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러시아 환경 NGO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⁴

▣ 세계야생기금 러시아지부(WWF Russia, Всемирный фонд дикой природы в России: за живую планету)

‘세계야생기금 러시아지부’는 희귀 동·식물 보호, 자연 보호, 법률제정, 환경교육 등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세계야생기금 러시아

¹⁰³ O.H.Яниц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как сетевой процесс,” *Полис*, No. 2(2002), с. 44~57.

¹⁰⁴ 개별적인 NGO 소개는 <www.nco.yandex.ru>의 эколог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참조.

지부'는 희귀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고 러시아의 자연 지역 보존, 자연 보호를 증진하는 법률 제정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희귀종 동·식물의 거래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TRAFFIC』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페트로-가스에 관한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랄 생태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 사하공화국에서의 보호지역체계의 유지, 북부 카자흐스탄에서의 희귀 조류종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설립, 베링해 어족 자원의 위성 감시, 사할린 섬의 바다 생물다양성 보존, 추코트카 자치지역에서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중앙아시아 국가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극동지역 이동 산불 진압 지원 훈련, 산불방지에 대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 러시아 습지보호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린피스 러시아(Greenpeace Russia)

‘그린피스 러시아’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지구 보존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소련시대인 1989년도에 설립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도에 러시아 법무부에 공식 등록을 했다. 2005년 현재 러시아 내에 회원 13,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그린피스 러시아’는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조직, 정당, 혹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린피스 러시아’는 설립 이후 주로 숲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삼림 유지, 바이칼호수 보존, 국제적으로 승인된 러시아의 세계자연유산 보호, 대기환경 개선,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 핵위협 중단, 해상과 강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보존센터(Центр охраны дикой природы)

‘생물다양성보존센터’(대표: 알렉세이 지멘코Alexey Zimenko)는 러시아 북부지역의 자연보호와 복원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주요 활동으로 숲보호 프로그램, 자연보호지역 관리, 야생동물 네트워크, 출판사업 등 4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생물다양성보존센터’는 부설기구로 무르만스크 소재의 Kola Biodiversity Conservation Center, 우크라이나 소재의 Kiev Ecological and Cultural Center, 벨라루시 소재의 Belorussian Biodiversity Conservation Center를 두고 있다.

◆국제환경정보센터(Международное экологическое агенство)

‘국제환경정보센터’(대표: 알렉산더 쉬크레베츠Alexander Shkrebets, 나다니엘 트럼블Nadaniel Trumbul)는 발트 지역과 북서러시아 지역의 환경정보를 NGO 수준에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현재 ①Ecological Northwest line(www.enwl.net.ru), ②The Pleiades Network(www.pleiades.net.ru), ③The Ballerina Initiative(www.baltic-region.net) 등 3개의 네트워크를 가동중이다.

◆녹색세계(Зеленый мир-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녹색세계’(대표: 올레그 보드로프Oleg Bodrov)는 빼제르부르크 지역과 발틱-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핵발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환경 정보 수집·분석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당국·주민들과 접촉하며, 어린이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하고, 발틱해의 바다생물체계 보존, 핀란드 만 남부 해안의 자연 자원 보호하고, 환경 NGO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1988년 8월 2일 설립(1997년 1월 31일 등록)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Sosnovy Bor 지역의 레닌그라드 핵 발전소 감독·관리, Sosnovy Bor 지역의 핵폐기물 연료 저장, 방사능폐기물 관리 등의 업무에 치중해왔다. 기관지로는 Green World Baltic News(러시아어와 영어로 발행)를 펴내고 있으며, 발트해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 발틱의 자식들(Дети Балтик)

‘발틱의 자식들’(대표: 올가 세노바, Olga Senova)은 대중환경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 창안,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영역에서의 청년 참가 지원, 교사와 청년 환경 그룹들간의 협력 모색, 교육자료, 세미나, 회의, 훈련, 환경캠프 등을 통한 환경정보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4년(2000년 8월 28일 등록) 창립되었다. ‘발틱의 자식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지역을 중심으로 핀란드만 연안의 러시아 영토의 환경보호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교사, 학생 등 200명 이상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풀뿌리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의 자연 자원 보호, 강변 감시 네트워크 설립, 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대중환경교육,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재활용에 관한 지원 활동, 환경권과 공공 참여에 대한 지역의 발의와 대중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 러시아조류보존연합(Союз охраны птиц России)

‘러시아조류보존연합’은 러시아의 조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합과 정보교류, 교육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러시아조류보존연합’은 러시아 전역에 5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수는 2600명에 달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류연구와 조류보호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는데, 『Woodcock』(woodcock biology 연구), 『Holzan(맹금(猛禽)연구)』, 『Corncrake』(장기프로젝트), 『European Middle Spotted Woodpecker』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연간 저널, ‘Bird World’를 간행하고 있다.

◆ 생태협력(Children’s Telecommunication Project, “Ecological Cooperation”, Сохраним природу)

‘생태협력’ 프로그램은 환경보호에 관한 어린이 교육과 네트워킹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구 조직은 조사부, 어린이교육, 교사활동, 국제 협력, 온라인회의 등을 주재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의 부설 기구에는 중앙지역과 12개의 지부(Central'no-Chernozemnyi, North-West, North, Volgo-Vyatskij, Povolzhskij, North Caucasus, Urals, West Siberia, East Siberia, Far East)가 포함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연기념물 보존·확인, 농촌과 도시지역에서의 환경 카드 작성, 불법 쓰레기 청소, 희귀 식물종의 재배, 공원 복구, 온천·조류 보호, 소식지 발간, 자연보호 필름 제작 등을 해왔다.

◆ **프스코프숲모델(Pskov Model Forest, PMF, Псковский модельный лес)**

‘프스코프숲모델’(대표: 에카제리나 체르넨코바, Ekaterina Chernenkova)는 프스코프 지역의 ‘스트루고-크라스넨스키 숲관리공단’(Strugo-Krasnenskiy Forest Management Unit)내에 위치한 MFT 46,000 헥타르를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호혜적이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또한 프스코프 지역의 숲 부문에서의 환경 NGO의 유익한 활동을 확산시키는 목적도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숲 지역 내 희귀 동물과 식물종 보호, 지속가능한 자연개발 프로그램 구축,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숲 보존과 지속가능한 숲개발 활동. 러시아에서의 model forests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프스코프숲모델’은 세계야생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러시아 정부가 협력하고 있다.

◆ **러시아환경정책센터(Center for Russian Environmental Policy, Центр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러시아환경정책센터’(대표: 알렉시 야코블레프 Alexey V. Yablokov)는 환경문제 공론화, 환경보호와 공중보건 증진, 환경적 조건과 국민 건강에 관한 정보 확대, 공공의 생태학적인 검사와 환경 부담의 평가,

환경정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 자연 관리 영역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1993년 10월 21일 설립되었다. 2002년 현재 직원으로는 간부진 5명과 연구진 35명, 상근 집행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여 전문가들은 과학 아카데미 회원, 모스크바대학교 교수, 환경 시민단체 운동가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상황으로 연방위원회, 모스크바 시청, 국가두마, 연방자원부 등 국가 기관과 접촉 해왔으며, 2002년 1월 31일에는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합과 회합하였으며, 2002년 6월 4일에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 “Business and Environmental Security” 개최하였으며, 경제학, 법학, 경영학, 환경학, 의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실무팀을 구성하여 “Business-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Security” 프로그램을 실행중이다.

◆ 유라시아, 물(Water Eurasia, Вода Евразии)

‘유라시아, 물’(공동대표: 바제노프(V.V. Bazhenov)외, V.G.Degtjar, G.G.Koronov, E.G.Khailov, D.C.Khusnutdinov, V.P.Shtager)은 환경 보호, 그 중에서도 수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0년 설립되었다. 기구 인원은 재단위원회(7명), 관리위원회(6명), 상근집행부(5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질 개선 기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해왔다.

◆ 자연보호대학생운동(Druzhinas for Nature Preservation Movement, DOP, Движение студенческих дружин по охране природы)

‘자연보호대학생운동’은 구소련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타지스탄, 리트비아, 카자흐스탄)에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생들(Druzhinas)의 비영리 단체이다. ‘자연보호대학생운동’의 주요 활동으로는 “Zakazniki”(Reserves, 자연환경의 보존), “Pervotsvet”(Snowdrop, 크림리아, 남부 코카서스 등지의 Snowdrop 인구 보호), “Yel”(Fir, 대도시 교외의 전나무 불법 채취 예방), “BSB”(밀렵방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 **휘닉스재단(Phoenix Fund, Феникс)**

‘휘닉스재단’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1998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h)에서 창립되었다. 시베리아 지역의 호랑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아무르표범·호랑이보호연합’(Amur Leopard and Tiger Alliances)의 주요 회원 기구이며, ‘극동표범사육위원회’(Far Eastern Leopard Steering Committee)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 ‘휘닉스 재단’은 타이가 호랑이 등에 대한 반 밀렵운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곰 보호, 피해보상, 세관과의 협조업무, “Oscar Project”(연해주 지역에서 환경오염, 불법거래 등을 환경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청원운동) 등을 담당해왔다.

▶ **범환경정보기구(Transbound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Agency, TEIA,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ИБ)**

‘범환경정보기구’(대표: 알렉산더 슈크레베츠A. Shkrebets, 나다니엘 트럼벨Nathaniel Trumbell)는 환경단체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Ecological Northwest Line”, “The Pleides Network”, “The Ballenina Initiative” 등 다수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 **네보 에코빌(The Center for Ecological Initiatives “Nevo Ecoville”, Нево-эковиль)**

‘네보 에코빌’은 러시아의 카렐리아공화국 내 소르타발라(Sortavala) 지역에서 가까운 Reuskuala 마을(삐찌르부르에서 북동쪽으로 300Km) 내의 일정지역(정원용 26헥타르, 경작용 10헥타르, 생산용1.5헥타르)를 환경 친화적 생산, 연구와 교육 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5년

에 설립되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주거지, 생산 시설, 연구 분과, 환경학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네보-에코빌’은 환경친화적 기술에 입각한 주거 단지 건설, 환경기술 개발 연구와 실험 공간 조성, 생태학교 조직, 환경 감시, 환경운동 참여와 같은 사업 뿐만 아니라, “Lagoda Skerries National Park” 조성 사업이나 “Lagoda coastsmi”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시스템 조성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주력해왔다.

◆에리카(Bryansk Regional Public organization ERICA)

‘에리카’(대표: 알렉시 취제르프스키Aleksey Chizhervsky, 알렉산더 아니첸코Alexander Anischenko)는 브란스크 지역에서 대중에게 환경 정보 확산, 생태적이고 시민적인 교육과 계몽, 생물다양성의 보존, 사회 단체 지원·연대의 목적을 띠고 1993년 결성되어 1994년 12월 21일 등록하였다. ‘에리카’는 창설 이후 ISAR-Mosco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학교 개설(1995), 여름방학 캠프 운영, “Address service of ecological education” 프로그램,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NGO” 프로그램, “Wild herbs at home” 프로그램 운영, 독립적인 지역 센터 설립과 같은 활동을 해왔다. INGO인 ‘국제환경연합’(Socail Ecological Union)의 회원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ISAR(The Institute for Soviet-American Relations)

‘ISAR’는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소련 시민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직된 단체이다. 현재 ‘ISAR’는 러시아 내에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톡에 지부를 두고 있고, CIS 지역에서는 키예프, 민스크, 바쿠, 알마티에 조직되어 있다. 노보시비르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 조직된 ‘ISAR-시베리아’, ‘ISAR-극동’은 각각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의 지역간 사회환경 재단(Mezhregiounal’nyi obshchestvennyi ekologicheskii fond)으로 기능한다. ISAR는 공통의 프로젝트를 타환경단체들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ISAR

-시베리아'는 시베리아에 있는 400개 이상의 단체와 접촉하며 10개 단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ISAR-극동'은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 환경자원센터(Pacific Environmental Resources Center),' 포틀랜드의 '야생연어센터' 및 알래스카의 단체들을 포함한 미국 환경 NGO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6. 소결

동북아 주요 국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환경 NGO 발전과정과 현황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운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 주목을 받아온 나라일수록 환경운동의 범위와 활동내용이 광범위하고 환경 NGO도 많으며 그 활동양상도 다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 각국은 정치, 경제적, 군사적, 역사적, 이념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이슈의 국제적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환경운동의 생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환경 NGO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에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환경 NGO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환경 NGO는 한국의 환경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개발연대의 빠른 국가 경제성장만큼이나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시민들의 신장된 환경의식과 더불어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환경문제뿐 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졌다. 한국의 정치사회가 개발과 보존의 양 갈래에서 고민을 하는 사이에 환경 NGO들은 환경보존의 확고한 가치 확립과 더불어 성장을 해온 경험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환경 NGO의 사회적 영향력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 NGO는 일본의 여타 부문의 NGO가 그렇듯이 그 수와 긴 발전사,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에서의 확산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상당히 안정되어있고 공고한 시민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시민단체의 속성처럼 환경 NGO들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속에서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전통적이면서도 작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한국처럼 폭발적이지 못하며, 생협운동에서 보여지듯이, 생활 속에 잔잔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각자 생활인으로서 참여하며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의 일본의 환경운동과 그 속에서의 환경 NGO의 역할을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의 환경 NGO의 그것과 비교할 때 제시할 수 있으며, 이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운동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내 개발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점차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 속에서 대두하였고, 환경 NGO 역시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의 NGO의 발달 양상이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에 주력하는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중국의 민간 환경단체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정부도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차츰 공식적인 관료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조직의 힘에 의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 민간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서 아직 그 숫자가 적고 활동도 미미한 편이지만, 국제환경단체와 재단으로 지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단체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환경운동은 구소련시대에는 환경운동이라고 할만한 조직적인 형태의 움직임보다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었고, 오늘날과 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운동의 조류는 구소련말기부터 조성된 본격적인 자유화와 정보개방의 기치아래 이루어졌다. 러시아에서 활발해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더불어 각종 NGO들도 1980년대 말기부터 분출되었는데, 환경 NGO도 인권 NGO와 더불어 러시아의 약한 국가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방대한 영토와 자연환경, 자원, 그리고 기후조건으로 인해 전국 수준은 물론 지역수준에서도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시베리아의 경우 자원 개발 및 원자력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하였으며, 오오츠크해에 인접해 있는 극동 지역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주변 인접국과의 철새 보호, 산림 보호 등의 환경 이슈들이 주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활성화되었던 러시아에서의 환경 NGO의 활동은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침체에 빠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회복의 추세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환경 NGO는 활동의 지속성과 재정적인 독립성보다는 활동의 단절성과 단체의 명멸이 분명하고,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환경 NGO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결국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의 환경 NGO의 성립과 발전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과정은 환경문제라는 보편적인 이슈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는 점들을 담고 있다. 모든 시민단체가 그렇듯이 동북아의 환경 NGO들은 국가의 개발지향적 드라이브와 그 폐해로부터 환경을 보존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가 하지 못하는 환경영역의 교육과 홍보 등 대중 계몽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사

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직 미약한 독립성과 지속성을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북아의 환경 NGO들은 공히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공신력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V

동북아 인권 NGO

1. 개관

동북아시아는 통합된 인권운동이 발생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지역이며 현대에 들어서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지역 협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각 국의 인권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을 회피하므로 인권운동의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권 NGO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탄압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NGO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그 활동도 비공식적이다. 따라서 인권 분야는 각 국의 NGO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¹⁰⁵ 이것은 지역 내 통합된 인권기구와 인권에 대한 합의된 현상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각 국가 내 인권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인권 개념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는 크게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이 있다. 인권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국내 문제로 간주하고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¹⁰⁵ 실제로 중국은 1989년 UN 인권위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개념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대표는 “인권의 개념과 해석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상이한 견해와 주장이 존재하며 UN의 인권보호에 관하여서도 논쟁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법률체계가 서로 상이하며 사회풍속, 문화전통, 의식형태가 상이한 많은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UN에서 통과한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 이외에도 <미주인권선언>,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리에 관한 헌장> 등 많은 인권헌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헌장들은 여러 지역 국가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제정한 것이며 여러 나라가 인권에 관한 해석과 중점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하였다.

가. 보편적 인권 개념

인권 개념의 기원은 근대 국가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국가의 기초가 된 1789년 프랑스의 ‘인권 및 시민의 권리선언(D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 나타난 천부인권, 저항권, 주권재민, 사상·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등을 모태로 한다. 여기에서 발전한 인권의 개념이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평등권이 발달되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46년 UN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인권위원회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1946년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시민적 자유, 여성의 지위, 보도의 자유, 소수민족의 자유, 성·인종·언어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방지에 관한 제안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현재까지 보편적 인권 개념의 상징이다.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의해 승인되었고 그해 12월 10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인권을 세계적으로 공통 이슈화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천부인권(1조), 평등권(2조), 생명권(3조), 법 앞에서의 평등(7조), 재판권(10조), 사생활 보호권(12조), 거주 이전의 자유(13조), 재산권(17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18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20조), 직업선택권(24조), 행복추구권(2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편적 인권 개념은 인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지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이다.¹⁰⁶ 이처럼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상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또는 자율성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이 인류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측은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다. 인류 보편의 인권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확신과 관행이 형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즉 국제관습법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비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자본주의적이고 서구중심적인 개념으로써 이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인권의 상대성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상대성의 인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듯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개념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른 문화적 배경은 그 문화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전통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상대주의적 관점은 냉전시기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탈냉전과 포스트모던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서방지역에서 각광을 받았다. 개발권, 평화추구권, 환경추구권 등을 포함하는 ‘제3세대 인권’을 주장하는 동아시아와 이슬람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중심적인 인권 개념의 보완을 위하여 동양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냉전 시기에는 주로 동서진영간에 소위 문화적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논쟁이 진행되어왔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차이로 구분되는 남북국가들간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서구기독교국가들과 이슬람국가들간에, 또는 유교국가들과 서구국가들 사이에서 상대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문제는 인권을 정의하는 주체와 그 주체가 구성하는 인권의 내용에 대한 문제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통합된 인권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역 국가들이

106 『2004 인권백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p. 12.

합의된 인권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 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치를 세계 인류의 규범으로 선언한 UN이나 국가 권력 또는 헌법,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가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보편성에 있다.¹⁰⁷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를 다 같이 존중하고 실천하는 인권규범과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은 자유와 평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권리의 두 개의 축을 존중하며, 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나. 인권 NGO의 유형과 범위¹⁰⁸

보편적인 인권 개념에 따르면 인권은 크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인권 NGO를 ‘실천형’과 ‘권익옹호(advocacy)형’으로 구분할 때 실천형 인권 NGO들은 주로 경제 및 사회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권익옹호형 인권 NGO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중점을 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자유를 중심 이념으로 하며,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 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를 포함한다. 첫째, 신체보존권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 법적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보호 및 국적 변경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둘째, 법집행에 대한

¹⁰⁷ 위의 책, p. 13.

¹⁰⁸ 위의 책, pp. 17~19 참조.

권리이다. 이것은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법심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법의 소급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셋째, 시민적 자유권이다. 이것은 삶의 특정 부분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넷째, 정치적 권리이다.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국가업무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적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권리는 평등을 중심 이념으로 하며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존권으로 이것은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둘째, 경제적 권리이다. 노동행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노동조건 및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에 대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권리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및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대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전의 보장 등을 위하여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 사생활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넷째, 문화적 권리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와 문화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인권 NGO의 활동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환경권’, ‘개발권’ 등이 등장하면서 ‘환경권’에 바탕을 둔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의해서 행해지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및 평화운

동과도 연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분화된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여성, 아동, 학생, 환자, 장애인, 토착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이다.

이 논문의 목적이 동북아 지역 내에 평화 네트워크 형성의 일환으로써 각 국의 분야별 NGO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을 고려, 본장에서는 인권 NGO중 소수집단의 권익신장을 위한 NGO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즉, 소수자 인권 중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분을 제외한다. 단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소수민족과 인종에 대한 인권보호 NGO 활동은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 세계 인권 NGO활동의 전개

통합적인 국제인권 운동이 시작된 것은 앞서 살펴본 UN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기구들이 각 국가 및 지역에서 인권보호 운동과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개념에 입각한 인권운동이 국제적 연대 속에서 전개되었다. UN 인권위원회는 세계 각 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근대적 인권규범의 기초중 하나인 유럽인권헌장(European charter of human rights)은 1950년 회원국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개인의 청원권 부분이었다. 각 국가가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1955년에 6개 회원국들이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1959년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출범함으로써 유럽에서 명실상부한 인권 규범이 형성되었다.¹⁰⁹

민간단체로서 인권운동을 전세계적 차원의 민간운동으로 끌어올린

것은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엠네스티)’였다. 1961년 영국 옵저버(Observer)지에 ‘잊혀진 수인들’이란 기사를 실고 ‘Amnesty 61’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엠네스티는 1962년 가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가나와 체코슬로바키아, 포르투갈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해 엠네스티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미국에서 각 국 지부가 형성되어 7개국 70개 그룹이 210명의 양심수와 결연되었다. 1972년부터 전세계적 차원의 고문철폐캠페인 시작하여 1973년 3월 19일 브라질의 Luiz Basilio Rossi 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을 하였다. 40여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고문반대, 사형제 폐지 등의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엠네스티는 현재 회원수 백만명, 70개 이상의 국가에 6천여개 지역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산실이다.

또한 세계 150여개 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각 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Human Rights Watch(HRW)’가 1978년 헬싱키 선언에 따라 탄생하였다. HRW는 세계 70여국의 인권 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의 코소보 사태와 체첸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전범재판을 하는 등 강력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League for Human Rights)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 NGO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각 국 정부와 대중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과 같은 UN 협약 및 조약이 탄생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 NGO들이 전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인권 NGO 활동의 주요 흐름은 인권 개념의 세분화에 따라 점차 소수자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¹⁰⁹ 홍성필,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규약 채택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1996년 대한국제법학회) 참조.

이러한 세분화된 인권 NGO들은 특정 집단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인권운동이 국경을 넘어서서 국가 내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긴급 구호 및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 NGO 활동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이며 인권 NGO의 활동 또한 다양하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흡연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흡연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담배피울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라. 동북아 인권운동의 특성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인권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아시아의 인권운동은 각 국의 정치·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의 인권의 상대성에 대한 시각은 아시아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한 1993년 ‘방콕인권선언’(The Bangkok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서 표명되었다. 타이에 모인 아시아 국가들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앞서 지역 인권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시아 회원국들은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 문화, 역사, 경제발전 수준 등에 제약을 받는 까닭으로, 서구는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다른 비서구사회에 강요할 수 없다. 정치적 권리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역시 인권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¹¹⁰

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회의에서 서구에서 나온 보편적 인권개념에 반대를 명백히 함으로써 서구중심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역시 “발전권은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정의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서구적 인권 개념을 일찍부터 수용하여 보편적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보편적 인권 가치를 부정하고 중국에 대한 서방의 인권 문제 비판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서구 강대국들이 ‘민주주의’, ‘인권’ 등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에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난한다. 중국은 국가주권의 신성불가침적 입장에서 어느 나라라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타국에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원인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 정치체제의 다양성, 갈등의 역사 지속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타이완 독립 문제, 북한 핵문제,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 등에서 각 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롯한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 EU, 미주, 아프리카처럼 합의된 인권운동기구의 출현은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인권운동의 협력은 상호 인권원조활동의 강화를 통한 역내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근 특정 인권문제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인권 분야에 대한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바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가

¹¹⁰ 박은홍,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시민사회,” 조효제·박은홍 편,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한다』, p. 18.

다. 북한 주민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각종 구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NGO 사이의 정보 교류와 협력이 왕성하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이 중국의 해외 공관이나 외국인 학교 등을 통하여 한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 국의 중요 인권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이슈를 통한 인권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맞물려 있어서 인권 분야의 최대 공동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단체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에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및 EU와도 활발한 협력을 벌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각 국 NGO들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촉진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국제 NGO들과의 활발한 연대활동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한국의 인권 NGO

한국 최초의 인권단체는 1953년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본격적인 인권 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NGO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한국인권옹호협회, 각 변호사회 인권상담소, 여성법률상담소, 한국노총 등이 있는데, 이 단체들 역시 주로 법률상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인권 홍보와 구제활동을 한 것으로 본격적인 인권 NGO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최초의 인권 NGO라 할 수 있는 단체는 1972년에 설립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Amnesty Korea)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인권운동의 산실인 엠네스티의 지원으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민주화와 민주화 투쟁 인사들의 복권 및 석방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이외에 ‘구

속자가족협의회’와 ‘민주화실천을 위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인권운동은 초기 ‘반독재’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오랜 통치를 경험한 시민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당시까지는 인권운동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분화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을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고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¹¹¹

1990년 한국이 국제인권 규약에 비준하고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운동은 국제인권기준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인권운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계기로 한국의 인권 NGO들이 국제인권 NGO들과 연대활동을 본격화하였다.¹¹² 인권 NGO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였고, 여성단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들의 인권침해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였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장기수 및 고문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UN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하여 큰 성과를 얻어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 NGO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던 기존의 NGO와는 달리, 국경을 넘어서 새롭게 등장한 두 가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이다.

¹¹¹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한국인권재단 인권도서관<http://www.humanrights.or.kr/library>) 참조.

¹¹² 조용환, 위의 글.

<표 V-1> 한국의 주요 인권 NGO와 그 활동

단체 형태	주요 인권 NGO	주요 목적 및 활동
협의형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인권사상의 양양, 인권제도의 개선, 인권침해의 구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수 석방,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촉구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반대, 미혼모문제, 고아입양, 성교육 등 대안제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및 미군주둔으로 인한 피해 극복, 평등한 한미관계 실현, 피해자 인권보호활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
	한국동성애자협의회	동성애자의 인권개선, 동성애자 공동체 조직의 유지
단독형	노동인권회관	노동자 인권옹호와 노동조합운동 지원, 노동인권상담실 운영, 교육 출판 연구 조사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인권수호, 가족상호간의 연대와 상호부조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
	인권운동사랑방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 인권의식 확립, 인권보호와 증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원, 법률구조 및 지원활동, 출판홍보활동, 인권교육, 연구조사사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민간의 자주적 통일운동에 기여, 종교인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실현 강화
	천주교 인권위원회	보편적 인간의 권리보호, 공동선 추구, 조작간첩 진상규명, 양심수 석방운동, 인권법률 상담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권향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인간의 보편적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 인권상담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출처: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위 논문, 1999)

가. 일반 인권 NGO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 열사’, ‘민주 투사’들의 인권문제를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창설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는 민가협(1985), 전국민족유가족협의회(유가협, 1986), 민가협양심수후원회(1989),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1992) 등이 있다. 주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과,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인권을 탄압받는 이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권교육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1988)와 불교인권위원회(1990)가 대표적이며, 일찍이 설립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4)가 있다.

이후 시민운동 진영이 분화를 겪으면서 보편적 ‘인권’ 가치를 앞세운 NGO들이 나타났고 본격적인 인권 관련 NGO가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1993)이 대표적인 단체로 현재 한국 인권 NGO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제적 인권규범에 토대를 둔 인권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인권 연구를 발표하며, 국제 인권 NGO들과 연대활동을 벌이는 등 인권운동 영역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산인권센터(1993), 인권실천시민연대(1999) 등이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인권 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전반적인 인권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는 NGO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보통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NGO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들 수 있다. 1988년부터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구명 및 복권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변론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여 대정부 감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등 법개정 및 입법 저지 운동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구의 한국에 대한 인권 권고 사항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NGO(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도 적극적인 관련 법안 철폐 운동을 하고 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Amnesty International Korea)¹¹³

1972년 설립되어 국제 인권운동을 한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한국의 70년대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한 독립적인 인권운동을 추진해왔다. 전국적으로 2,5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국제엠네스티 아시아 태평양지역 운영위원인 고은테씨가 지부장이다.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양심수 석방 및 구명운동을 벌이며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지부가 해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인권 개선에 앞장섰다. 1990년대부터는 인권캠프를 비롯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빈곤국 주민의 긴급구호에 힘쓰고 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NCC) 인권위원회

1974년에 설립된 이후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간 존엄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유신시대에 구속되고 탄압받는 투사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통한 인권 선교를 추진하였다.

¹¹³ 각 인권 NGO에 대한 설명은 『한국민간단체총람』(서울: 시민의 신문사, 2003)과 각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및 브로셔를 참조하여 작성함.

1960년대 말 노동자 선교를 하면서 노동운동에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74년 4월 특별위원회 형태로 발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조치 1, 2호가 발효된 상황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독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시작하였다.¹¹⁴ 당시 이해동 목사가 이끌던 목요기도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구속자 가족들이 하나 둘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각기 가족정보를 교환하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후일 이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최근에는 인권 선교 및 인권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소자의 인권 상황 개선 및 가족의 후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인권주간에 연합예배를 갖고 인권상을 시상하는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Mingahyup Human Rights Group)

KNCC 인권위원회의 목요기도회에서 모인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만들었다. 이후 1985년 구속자 가족협의회가 ‘민가협’으로 재탄생하였다. 주로 민주인사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고문 추방 등을 통한 전반적 사회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시작하여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양심수 석방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1,500여 명의 회원을 가졌으며 교도소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¹¹⁴ 이정은, 위의 글 참조.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혁당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소외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양심수들의 구명을 위해 인권 법률 상담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인혁당사건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상이 하나하나 공개되었다. 또한 군의문사 사건과 군폭력사건을 다룸으로써 군대 내 인권 차별적 실태를 밝혔다. 종교적인 실천의 입장에서 종교 및 인권단체와 사안별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천주교 인권단체로 알려져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개혁적 법조계 단체로 손꼽히고 있는 민변은 1988년 설립되었다. 4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에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아 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명 운동에 앞장 서왔다. 변론활동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여론형성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보고서 및 책자를 발간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최근에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각종 사회민주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다.

◆ 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한국의 대표적 인권 NGO로서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실천적 인권운동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인권운동 영역의 확대와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위해 1993년에 설립되었다. 1980년대 인권운동

을 하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상임활동가 총회에 의해 운영되는 전임대표제를 특징으로 한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인권자료실 및 인권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전문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며,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대중적 인권운동을 실천한다. 인권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수감자들을 위한 ‘감옥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인권실천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대중적 인권운동의 실현을 위해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 및 인권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 및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2,100여 명을 확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내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정부의 인권관련 기구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기구의 개혁을 촉구하는 점이 특이하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설립된 단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제인권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인권 개선 사항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로서 그동안 각종 양심수를 양산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한국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1999년 설립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단식농성, 대중집회를 하였다. 또한 관련 토론회, 공청회, 문화제를 개최하고 ‘국보법 철폐를 위한 만인선언’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청원을 통해 국가보

안법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나. 외국인노동자 인권 NGO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의 강도가 높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한국 노동 시장의 기준으로 볼 때 저임금만으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이로 인한 임금착취, 구타, 언어폭력 등이 시민 단체에 알려지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NGO들이 생겨났다. 각 지역별로 상담소를 설치하고 의료지원, 교육, 정보교류,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산발적으로 종교 단체와 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되었던 관련 NGO들이 1995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창설된 이후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 창설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도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부천외노집)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많았던 부천은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다. 부천을 비롯한 한국 내 노동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 투쟁을 위해 1995년 설립되었다. 석왕사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부천시민연합의 고태훈 소장이 현재 대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임금체불, 사고, 폭행, 사기 등 노동현장의 불이익을 상담해주고, 의료공제회 운영을 통해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한국 적응을 위해 환자, 단기실직자, 출산모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돕는다.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산발적인 외국인노동자 NGO의 네트워크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다. 전체 35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협의형 NGO이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활동 및 인권보호의 전국적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인권보호투쟁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빈도가 가장 많은 산업재해, 임금 체불,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및 각종 법률자문을 한다. 한편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쟁을 하며 각 상담소간 정보교류와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를 부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 국제민주연대(KHIS)

국제민주연대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근무하는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부당하고 등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방출 등 환경오염 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한다. 2005년 7월말 현재 215명의 회원이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감시활동과 아시아 인권 및 평화를 위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여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켜 인권 침해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내 국제적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 북한 인권 및 인도지원 관련 NGO

한국 NGO 활동의 특징 중 하나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통일운동이라는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조류

가 1987년을 전후로 통일운동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 관련 NGO도 분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기구 및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난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최악의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식량 문제로 인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 통일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NGO로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199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199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1997), 국제옥수수재단(1998) 등이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 사회의 생활상이 공개되어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NGO들이 다른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주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여 인도적 지원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북한 인권 관련 NGO는 주로 정치·사회적 권리의 개선을 중시하는 논리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좋은벗들(1996),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북한민주화네트워크, 1999)’과 ‘북한인권시민연합(1996)’이 이에 속한다.

◆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1999년에 설립되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국내외에 공개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00년 제네바 제 56차 UN인권위원회 NGO토론회에 참가를 시작으로 하여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식인, 일반시민,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과거 1980년대에 한국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 독특하다. 2002년 북한인권·난민문제 해결을 바라

는 한·일 청년 대학생 자전거 순례기행,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촉구를 위한 탈북자와 대학생 기아체험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Keys' 월간잡지를 통해 탈북자를 통한 북한 인권 소식을 알리고 있다.

◆ 북한인권시민연합(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이 약 300여 명에 달한다. 인권운동가와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남한적응지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탈북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학생 및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 좋은 벗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 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및 이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협력활동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각계 불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해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 식량난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였다. 1999년 '북한식량난 실태 및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2000년 중국 거주 북한난민과 남한주민 비교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UNHCR과 함께 국내 망명신청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자에 대한 산업연수생 1천여명의 입국 청원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월남귀순자후원회’를 모태로 한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 재설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파악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를 상담창구의 역할을 한다.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1996년에 남북한 어린이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평화통일시대에 양식있는 시민(informed citizens)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과 함께 남한 어린이들의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탈북 어린이들의 평화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남북 결식 어린이 돕기 행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청년캠프, 어머니 평화교육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남북 어린이 성장 발달 연구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 상태를 알리고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호전을 위해 분유 지원을 하였다. 2001년 평양 동대원구 소재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내에 두유공장을 설치하여 두유를 공급하고,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을 개원하여 북한 어린이의 의료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기용품을 지급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지원을 통한 북한 모자보건의 증진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북한 상황에 시급히 필요한 의료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7년 어린이용 의약품 지원을 시작으로 비타민, 식용유, 한방용품, 치과용품 등을 지원하고 2000년 이후에는 정제 제조설비, 환제설비, 전기설비, 내시경, 초음파진단기와 왕진가방, 구급차, 원료의약품으로 확대되었다.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세분화된 북한지원 활동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6년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1996년에 설립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 및 공존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시작으로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남한 사회의 지원 동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과 농기계, 비닐,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며 북한 내 시범농장을 운영한다. 또한 축산분야의 종축개량과 시설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시범목장 운영을 추진중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2002년 평양시 낙랑구역의 정성제약공장에 정제생산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북한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효율적인 북한 인도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책대안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평화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범위한 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옥수수재단

1998년 북한 식량난 개선을 위해 ‘슈퍼 옥수수’를 보급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슈퍼옥수수는 기존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높으며 병해충과 공생하는 유기농 친환경적인 옥수수를 말한다. 국내 옥수수 연구가인 김순권 박사가 개발한 슈퍼 옥수수를 북한 협동농장 내에 시범 생산

하였으며, 비료 및 옥수수 종자를 지원하였다. 북한의 주식중 하나인 옥수수 생산을 정착시키고자 꾸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상당한 식량증산의 효과를 경험하였다.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이 아닌 농업 생산 개선을 통한 개발 지원의 대표적인 성과를 낸 것이 특징이다.

라. 여성 관련 인권 NGO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 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 분야의 NGO는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중 하나이다. 초기의 여성 분야는 여성의 인권 옹호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전체 인권 분야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여성의 성폭력 예방 관련 NGO와 일본 위안부 관련 NGO가 대표적이다.

일본 위안부 관련 NGO들은 한국 인권 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 단체들은 보편적 인권 개념을 도입하고 인권의 가치를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태평양 전쟁 중 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림으로써 반전을 여성의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 관련 NGO로는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있으며 이 단체들은 일본 NGO와의 협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피해 여성들과의 협력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NGO를 기점으로 아시아지역의 반전·평화운동과 여성운동의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민우회, Korean Women Link)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1987년 9월 12일에 창립된 단체다. 현재 회원 수는 7천명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여성권익 신장사업,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사업, 소비자생활협동사업, 여성복지사

업, 여성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사업, 소비자 권익사업 등이 있다. 1987년 9월부터 격월간으로 ‘함께하는 여성’이라는 정기간행물도 발행하고 있다. 현 대표는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와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부설기구로는 가족과성상담소, 여성노동센터, 미디어운동본부, 여성환경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Sexual Violence Prevention & Care Center)

1991년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씨 후원회 활동을 계기로 1994년 발족하여 다음 해 6월에 정식 설립하였다.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 여성을 보호하며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며, 성폭력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여성의 인간화와 남녀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 상담 활동,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가해자 위탁교육,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성평등문화 정착, 여성인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연간 정기간행물 ‘열린세상’을 1995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디딤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 회원은 100명이며, 백남운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이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Daegu Citizen Forum for Halmuni)

대구경북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 지역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 방향은 진상 규명,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 법적 배상,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임을 명시하며,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심리치료사업, 재가방문 자원봉사 사업, 동아시아 평화만들기 캠페인, 일본어교과서바로잡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격월간 정기간행물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발간하고 있다. 대표는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광동협 경북대 병원 임상외과 교수가 맡고 있으며, 현 회원은 500명이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The Korea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진상규명, 범죄인정,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1988년 7월에 정신대연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90년 11월 16일에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연구사업, 일본정부에 대한 7가지 요구를 시행시키기 위한 사업, 대국민교육 및 홍보, 생존자 복지사업, 국제 연대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윤옥 공동대표와 이경숙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자격으로 22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한국정신대연구소 (정신대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by Japan)

1990년 7월 10일에 ‘정신대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여, 1997년에 위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설립 목적은 정신대 문제의 진상을 밝혀내 기록하고 현재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피해 당시의 증언을 채록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 발굴에 주력하여 왔다. 이 외에도 각종 심포지엄 개최, 학술교류, 기타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위한시민연대모임과도 연대하였다.

대표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검사였던 강정숙 소장이 맡고 있다. 현재 회원은 100명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n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99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소로서, 2002년까지 약 3만 5천여회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단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 그리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통해 여성의 인간화와 남녀 평등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상담활동,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교육활동, 홍보출판 활동, 인권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1996년 12월에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부설기구로 성폭력문제연구소와 성평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였다. 현재 회원은 458명이며, 연 예산은 3억 5천만원이다. 현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미경 소장이다.

3. 일본의 인권 NGO

일본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도 일본에서 인권 NGO의 수와 그 활동은 제한적이다. 정부의 공식 인권기구가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연구자중 하나인 Adamantia Pollis는 “일본에 있어서 개인적 인권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압제 때문이 아니라, 일본적 가치의 심리적 당연성의 결과이다¹¹⁵”라고 일본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반면 Marfording은 에도막부의 강권정치와, 프러시아 헌법을 본 따 만든 천황중심적 군사관료국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명치유신정부, 이후 2차대전까지의 기간 내내 강화되어 온 군국주의정부체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엘리트에 의한 수

¹¹⁵ 홍성필,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참조.

직적,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요되어 온 결과라고 해석한다.

일본 NGO 현황을 수록하고 있는 <NPO 히로바>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약 22,400개의 NPO법인 중에서 반전·평화 NGO에 해당되는 ‘인권옹호 및 평화의 옹호를 도모하는 활동단체’는 15.3%(중복선택)에 해당되는 총 3400개 정도이다. 이 수는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51.7%), ‘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47.1%), ‘마을 창조를 도모하는 활동’(39.8%)와 비교할 때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¹¹⁶

초기 인권 NGO로는 1947년에 설립된 ‘자유인권협회(自由人權協會)’가 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권 관련 상담 및 재판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일본 시민사회의 부흥기라고 볼 수 있는 1960년대부터 인권과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NGO들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일본 인권 NGO의 태동이었다. 당시 인권운동은 베트남전쟁의 반대와 연계되어 평화운동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NGO 활동이 등장하였다.

1970년에 들어서서 주요 인권 NGO들이 등장하였는데 ‘암네스티 재팬(Amnesty Japan)’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인권 NGO 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1979년 인도차이나 난민의 구원을 목적으로 ‘난민을 돕는 모임(Association for Aid Relief Japan)’이 설립되어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NGO들이 등장하였고 국제 NGO들이 대거 일본에 상륙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이 증가하였다. ‘일본국제기아대책기구(1981),’ ‘케어 재팬(Care Japan, 1987),’ ‘월드비전 재팬(World Vision Japan, 1987)’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1983년에 창설된 ‘피스보트(Peace Boat)’는 일본의 대표적 난민구호 NGO로 손꼽힌다.

¹¹⁶ 일본 내각부 NPO국 홈페이지(<http://www.npo-homepage.go.jp/>).

1990년대 들어서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및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는 NGO들이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NGO들이 등장하였다.

국제 NGO가 아닌 일본의 자생적 인권 NGO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소규모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일본 인권운동은 주로 국제 NGO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 자생적인 NGO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재난, 전쟁,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도적 구원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권 NGO의 활동 범위가 국내지역보다는 국외지역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난민이나 개도국에 대한 긴급구호 관련 NGO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러한 일본 인권 NGO의 특징은 일본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중앙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일본은 전후 정치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적이 없으며, 특히 한국처럼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대립 현상을 통한 정치 변화의 유례가 없다. 따라서 일본 인권 NGO들은 정부와의 친화도가 높은 유형에 대부분 속하며 정부와 갈등적인 인권 NGO가 많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 일반 인권 NGO

◆ 자유인권협회(自由人權協會, Japan Civil Liberties Union)¹¹⁷

기본적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자유인권협회는 일본 최초 인권 NGO이다. 현재 대표이사는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이며 인권에 대한 상담 및 재판 지원과 인권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¹¹⁷ 일본 인권 NGO해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 및 각 NGO의 인터넷 사이트 참조.

있다. 최근에는 전후처리 문제, 정보공개 입법 요구 운동,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 신고 자유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재일 외국인의 인권옹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자유인권협회(ACLU)가 모델로서 이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내에 인권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고 정보공개 입법운동을 통한 정보권 보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Buraku Liberation League)

1922년 ‘전국수평사’로부터 출발하여 1955년 ‘부락해방동맹’으로 재결성되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락(部落)’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하는 전국에 30여 개 이상의 지부를 가진 단체이다. 부락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자주 공생의 민주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인권에 관한 법제도의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을 하며 전국 각 지역에서의 인권 보호와 반차별 운동이다. 현재 쿠미사카 시 계유키(組坂 繁之)중앙 집행위원장과 마츠오카 토오루(松岡 徹) 참의원이 대표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부락해방동맹은 대표적인 자생적 일본 인권 NGO로서 일본 인권운동을 주도한 NGO이다.

◆암네스티 일본(Amnesty International Japan)

국제사면위원회의 일본지역 지부로서 1970년에 설립된 암네스티 일본은 인권의식의 환기와 인권 침해 피해자 구원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운동을 전개하며 일본 내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현재 쓰쿠다 미온이 대표자를 맡고 있으며 데라나카 마코토가 사무국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각 국

의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형, 난민, 피구금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체첸분쟁에서의 인권 침해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러시아에서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카나가와 인권센터 (神奈川人權, Kanagawa human rights center)**

카나가와 현에 위치한 카나가와 인권센터는 29여 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대표적인 지역 인권 NGO이다. 1990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적 인권 기준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인권 학교’를 운영하여 인권 교육 활동을 하고, 매년 ‘카나가와 국제 인권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 및 EU 등 국내외 인권 제도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교류를 통해 세계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인권 상담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인권자료 센터’의 설립을 준비하여 인권 정보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인권정보센터(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1994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 운동의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무사코우지 킨히데(武者小路 公秀) 오사카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설립 목적은 국제적인 인권 신장과정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시각을 반영시키고 지역 내에 일본의 국제 협조 및 공헌에 인권존중의 관점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국제 인권 정보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하며 ‘한일인권교육연구회’를 통하여 세미나 개최 및 스터디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인권 리뷰>를 발간하여 인권 홍보에 힘쓰고 있다.

나. 난민 구호 NGO

◆ 샤프라닐(SHAPLA: Citizens' Committee in Japan for Overseas Support)

남아시아의 주민 구호를 위해 1972년에 설립된 난민 구호 NGO이다. 일본과 현지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문제에 상정되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중에서 남아시아의 빈곤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해외 사무국을 두고 생활 향상 지원 활동을 하며, 개발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단민을 돕는 모임(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1979년 인도차이나 난민의 구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지뢰 대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잠비아, 앙골라 등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타지키스탄의 난민 지원 및 모금 활동을 벌인다. UN에 등록된 NGO단체이다.

◆ 일본국제기아대책기구(Japan International Food for the Hungry)

개도국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NGO로서 일본에는 1981년에 설립되었다. 기독교 정신으로 바탕으로 한 종교 NGO이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 농촌 개발, 교육사업을 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타이완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세계 7개국에서 양자 지원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이라크에 대한 재건활동을 하고 있다.

◆ 피스 보트(Peace Boat)

1983년 설립된 단체로 이름 그대로 크루즈를 통한 국제 교류 및 개도국에 대한 물자 지원을 시작하였다. 공동대표는 요시오카 타쯔야(吉岡 達也)이며 2004년 기준으로 사무국 스태프가 120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은 3억엔에 이르는 대표적 NGO이다.

개도국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세계 곳곳에 난민 및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북한 방문 등 세계 100여 개 이상의 항구를 방문하여 난민지원 활동과 반전 및 군축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세미나 및 정책 제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지역의 역사 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Peace Now Korea-Japan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UN NGO중 하나이다.

◆ 켄(JEN: Japan Emergency NGO)

1994년에 설립된 일본 자생 NGO로서 분쟁이나 재해로 인한 난민을 위한 지원 및 자립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등 10여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로 분쟁지역이나 재해지역 주민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단민지원협회(難民支援協會,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

1997년 난민 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한 난민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대표이사는 나카무라 요시유키(中村 義幸)이며 회원이 330명에 이른다. 난민 지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민 정책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재일조선인 및 외국인 차별 철폐 NGO

❑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Korean Rights Group Japan)

재일한국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되었다. 재일 교포 커뮤니티의 발전과 민족 교육을 추진하며, 일본사회와의 공존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 스터디 투어를 실시하고, 민족 교육 제도 보장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하며,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한다. 한일 NGO간의 네트워크 및 북한 지원 활동도 함께 한다.

❑ 다문화 공생센터(Center for Multicultural Information & Assistance)

재일 외국인과 일본인이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재일 외국인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다언어 상담을 실시하며 의료보조 및 유아지원 사업을 한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본인들에 다문화 공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국적, 문화, 언어 등의 차이를 넘어 재일 외국인과 일본인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

❑ NGO 코베 외국인 구원 넷(NGO Network for Foreigner's Assistance KOBE)

1996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NGO들이 모인 네트워크이다. 지진 재해 이후 긴급지원 활동과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의 사회보장 및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을 한다. 또한 재일 외국인의 인권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인에 대한 행정교섭 및 재판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이주 노동자 및 이주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다. 6명의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72개의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NGO 들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강화를 주요 활동으로 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제언 활동을 한다. 한국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국제 NGO와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라. 북한 인도지원 인권 NGO

◆ **구하라! 북한 민중/긴급 행동 네트워크(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 RENK)**

1993년 북한의 식량난이 소개되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민주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카사이 대학의 이영화(李英和) 교수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며, 북한 주민에게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여러 조사 및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 **북한인도지원네트워크(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Japan Network)**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NGO들의 연합체로서 1999년 회원 단체 간에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NGO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인도지원NGO회의, 북한인도지원 한일 NGO 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및 모금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한다.

4. 중국의 인권 NGO

중국의 NGO 실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전체 지향적 사회 구조가 지배적이고 정치적 자유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성이 강한 NGO가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중국 연구자들 상호간의 의견 일치도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9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자생적인 시민운동이 조직화되었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본격적인 NGO가 발생한 것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 이후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 칭화대학 NGO 연구소 왕명(王名) 소장은 “이때부터 각종 시민단체들에 해당하는 각종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¹¹⁸고 주장한다. 당시 설립된 단체들로는 환경 NGO인 ‘북경 지구촌(北京 地球村)’과 ‘녹가원’ 등이 있다.

중국의 ‘민간조직(民間組織)’은 원칙적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민정부(民政部)’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단체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NGO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NGO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 공식자료를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내 NGO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NGO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과 2003년 1인당 GDP 1천불 시대 진입의 영향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정부에 공식 등록 단체가 1989년에는 4,446개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26만 6,600개에 이르러 공식 단체의 증가율은 연평균 34%에 달한다. 전문기술협회 및 상호부조조직 등을 모두 합하면 총 3백만

¹¹⁸ 『한겨레』, 2005년 8월 22일.

단체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중국 내 NGO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NGO 단체들이 권력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NGO 단체들의 법적 지위와 활동 내용을 분류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등의 사회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NGO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임할 경우 사회 분열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정치 성향의 NGO에 대한 통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 본토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권옹호형(advocacy) NGO는 거의 없다. 단지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권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하거나 관련 활동을 벌이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국제 NGO 및 해외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들을 도와 활동하는 인사 및 단체가 중국 내부에 존재한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중국 내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활동지역이나 사무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웹상에서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인권 NGO로서 분류될 수 있는 NGO로서는 반체제 인사 지원 활동을 하는 NGO가 있다. 1989년 ‘티엔안먼 시위’ 진압 이후 당시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이 모인 ‘천안문 어머니들(Tiananmen Mothers)’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당시 유가족들이 모인 민가협과 유사하다. 이들은 1999년 6월 중국의 대법원에 티엔안먼 사태 당시 희생된 24명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티벳과 신장자치지구의 독립 및 차별금지를 위한 활동

을 하는 NGO들이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족(漢族)’으로 그 외의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불린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자치를 인정하여 자치지구를 형성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독립 운동을 억제하고 관련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티벳지역과 신장지역은 지역 내 자원을 중국 정부에 이용당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고, 교육 및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장지역은 중국 내에 유일하게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자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관련 인사들의 구원 및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가. 본토의 인권운동가와 인권 NGO¹¹⁹

◆ 리하이(Li Hai)

1989년 티엔안먼 사건에 연루되어 베이징에서 9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996년 12월 18일 국가 최고기밀을 ‘염탐하고 모임을 주관한’ 죄를 언도받았다. 그는 전 베이징대 철학과 학생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인권지원 자금을 모금하였고 티엔안먼 사태의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였다. 1993년 11월 ‘평화현장’의 9명의 발기인중 하나였으며, 중국에서 비폭력 정치개혁을 주창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행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아직도 베이징 량샹 감옥에 수감중이다.

¹¹⁹ 중국의 인권 운동가와 인권 NGO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ACSF) 참가결과보고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양젠리(Yang Jianli)와 ‘21세기 중국 기금’

미국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으로 2002년 4월 26일 수감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수학 및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1c 중국 기금’을 이끌고 법률적 민주주의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1989년 중국으로 돌아가서 티엔안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2002년 4월 18일 여권을 빌려 동북지역 노동 운동을 지원한 후 체포되었다. 3개월 후 구속되었고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은 중국의 공안에게 구속되었다는 것뿐 다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 안준(An Jun)과 ‘중국 부패행동 감시자(China Corrupt Behavioral Observer)’

이 단체는 1998년 “공적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공식 NGO로서 대표자는 안준이다. 이 단체의 규모는 12개성에서 300여명의 회원에 이를 정도였다. 그들은 “부패에 대해 싸우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이다”라고 반부패 운동의 정당성을 밝혔다. 대표자 안준이 2000년 구속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다. 당시 그의 가족들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고 최근 허난성 카이펑(開封)시에서 복역중이다.

◆ 리왕양(Li Wangyang)과 샤오양 자치 노동조합

샤오양 지역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리왕양은 ‘국가 전복 선동’이라는 명목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단식투쟁 후 수감중에 노동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9년 6월 4일 티엔안먼 발포 당시 그는 샤오양시 인민광장에 깃발을 걸고 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을 호소했고 베이징의 대규모 희생에 대한 공식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 장산광(Zhang Shanguang)

중국의 가장 널리 알려진 노동인권가중 하나인 그는 중국 접경 외부의 조직에 기밀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수감중이다. 그는 해외 조직과의 인터뷰를 하였고 레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를 통해 그의 거주지역의 노동자문제를 알렸다. ‘What Happened to Our Legal Right’s: A Prisoner’s Petition’이라는 글을 썼고, 쉬푸 지역에 여성 노동조합(Laid-Off Workers in Xupu County)을 만들기도 하였다.

◆ 리비펑(Li Bifeng)와 중국 양심과 보호 행동(Chinese Conscience and Care Action)

노동운동가인 리비펑이 만든 비공식 조직이다. 이 곳에서 ‘laid-off workers’ protests and living conditions’이라는 책자를 출판하였다. 대표자는 1997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모든 정치범에게 자유를... 일당독재의 종식”을 촉구하는 글을 쓰고 1989년 민주화 운동에 연루되었다.

◆ 천멍(Chen Meng)

중국 접경지역 외부의 조직에 대한 일급비밀을 팩스로 전송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문서는 중국 입국이 불허되었거나 접경지역에서 체포되었을 중국인 또는 전 중국인들의 49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1996년 일시가 알려지지 않은 어느 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을 받고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형이 언도되었다. 몇 달 이후에 그는 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무시되었다.

◆ 뤄징성(Liu Jingsheng)과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뤄징성은 단지 중국의 정치 현장에 대한 노동조합에 200여장의 복사를 들고 이를 배포한 이후,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Free

Labor Union of China'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중국 자유노동 조합 연합회 정보 조직(Informational Material on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Free Labor Union of China)'의 문서 작성을 돕고 베이징 시내 공장과 광산에 이를 배포하였다. 반혁명 그룹을 조직하고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반혁명 선동'의 명목으로 15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노동자이면서 '민주의 벽¹²⁰' 운동에 참여했으며, '중국 진보동맹(China Progressive Alliance)'의 구성원이었다. 또한 자유민주당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자유민주당은 중국공산당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후스건(Hu Shigen)

앞서 언급한 뤼징성, Kang 위춘과 함께 '반혁명 그룹 조직'과 '반혁명 선동'의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1999년 1월 '중국 자유민주당(China Freedom and Democracy)'을 세우고 중국진보동맹에도 참여하였으며, 리우징성과 함께 '자유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Kang 위춘(Kang Yuchun)

베이징 정신병원의 전직 의사였던 그는 위의 뤼징성, 후스건과 같은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다. 1991년 '중국진보동맹'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자유포럼'이라는 간행물을 출판하였다. 중국자유민주당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994년에 17년형을 언도받았다.

¹²⁰ 1956년 '백화제방(百花齊放)' 운동으로 말미암아 1957년 베이징 대학 중심부에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가득 채워졌었는데, 이러한 대자보가 모여있던 곳을 '민주의 벽'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여 민주의벽 운동은 중국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이다.

◆ 장치성(Jiang Qisheng)과 ‘신청년사회(New Youth Society)’

‘티엔안먼 사태’의 희생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한 운동가로 1999년 체포되었다. 1999년 티엔안먼 사태 10주기를 맞아 중국 인민들에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추도복을 입고 가두 행진을 하자’는 편지를 보내었다. 또한 ‘동방(東方)’ 잡지의 편집장이던 장자허를 위하여 1인시위를 벌였다.

이외에 2001년에는 튀웨이, 양쯔리, 진하이커, 장홍하이 등 네 명의 대학 졸업생이 ‘국가전복죄’를 언도받았다. 이 네 명의 청년들은 중국 농촌지역에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한 중국 사회의 긍정적 변화 증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하여 ‘신청년사회’를 조직하였다.

◆ 왕여우차이(Wang Youcai)와 중국민주당(China Democracy Party: CDP)

왕여우차이를 비롯한 뤼시안빈, 친용민, 쉬원리 등이 주축이 되어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당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직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해외에 단체의 소식을 알리고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여성노동자 네트워크(Chinese Working Women's Network)

‘중국 여성노동자 네트워크’는 1996년 선전지역에서 이주 여성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진 NGO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선전지역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대학 교수, 선생님들, NGO 활동가들, 노동운동가, 여성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체의 목적은 중국 여성 노동자들이 자조 및 자립에 대하여 자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1997년에는 전중국노동조합(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의 지부로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교육, 사회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난산노동자센터(Nanshan Women Workers Centre)를 세웠다. 1999년에는 공장지대를 돌며 의료봉사를 하는 이동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광저우에 의료교육 센터를 개설하였다. 주로 옥스팜 홍콩 등과 같은 다른 NGO들의 기부 및 개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나. 티벳 및 신장지역 인권상황

중국의 인권 상황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티벳과 신장지역이다. 중국이 인권 탄압국가라고 지목받는 원인이 이 지역의 인권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 두 지역의 인권 상황은 중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지역민들은 민족적으로 중국인과 구분되어 있어 중국 당국이 ‘분리주의(separatism)’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비판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 및 입법 등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동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폭력적인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과 종교 행위까지 탄압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불가능하다. 티벳지역 인권 조직들은 중국 당국이 티벳인들의 독립주장을 모두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이 지역 승려인 Ngawang Phulchung은 국제인권선언을 티벳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에 19년형을 언도받기도 하였다.

티벳지역처럼 위구르족의 신장지역도 중국 한족 이주자의 유입 이후 문화적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는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처럼 ‘분리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를 구실로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비폭력적인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독립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신장지역의 불안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에 의한 것이고 국제 테러리스트와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임의적인 체포가 자행되고 종교의식 장소도 폐쇄되었다. 전통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관공서, 학교, 기업에서 개인적인 종교 행위도 모두 금지되었다. 신장지역은 중국에서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자행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0여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 사실을 유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가 티벳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운동가들이 이 지역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독립운동 인사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종교 탄압에 대항하여 종교 NGO 단체들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의 차원에서 개발 지원 NGO들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몇몇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독립투쟁과 함께 인권 개선 활동이 전개되고 국제 인권기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도 공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탄압 때문에 대부분이 비공개적 지하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나 해외 인사들의 도움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

<표 V-2> 티벳관련 주요 NGO¹²¹

NGO 명칭	지역	대표자
Freinds of Hong Kong	홍콩	Linda Rose
Japan Committee for Tibet	도쿄	Shuei Kobayashi
The Milarepa Fund Japan	도쿄	Tomoko Tahara
Stream of Free Tibet	서울	Aum Tashi
International Tibet Support Network	런던	
Students for a Free Tibet	뉴욕	

다. 홍콩의 인권 현황과 NGO

홍콩에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은 1997년 중국 본토 반환 이후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公安)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평화적 시위를 진압하는 데에 더 공격적이다.

1997년 이전 시위자들은 48시간 전에 경찰에 단지 ‘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정부가 홍콩 조례에 따라 심사하고 모든 시위가 2주 전에 공안에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안의 반대를 무시하고 시위를 감행하면 공안은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 중국정부는 시위를 저지하고 시위 관련 활동가와 학생들을 체포하는 등의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002년 5월 9일 최초로 공안이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홍콩 학생연합 대표(Fung Kakuang)’와 같은 그룹의 ‘Leung Kwok Hung’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각각 ‘불법 공적 집회 조직’과 ‘불법 공적 집회 조직 방조’라는 죄명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입법(법령 23조)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적 자유를 막고 홍콩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인권 옹호가들의 활동을 저지할 것이다. 이 법률의 목

¹²¹ <http://www.tibet.org/>과 <http://www.freetibet.org/> 참조.

적은 반역, 분리, 선동의 행위 또는 국가 기밀 유출의 방지이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모든 분야의 불안 조장에서부터 연합의 금지, 정치적 반대파, 무역협회, 인권 그룹 및 언론인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홍콩의 인권 운동가인 펑츠히(Fung Chi Wood)는 홍콩의 인권 활동에 대한 탄압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증언한다.¹²² 인권 관련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기도 하는데 당국이 평화적인 시위조차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권운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반인권성에 대한 시위 등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위 등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국제 인권 NGO를 비롯한 홍콩 인권 NGO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 크리스찬 회의(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아시아 태평양의 17개 국가 및 지역의 교회로부터 구성된 단체이며 홍콩에 본부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까지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네트워크 조직이며, 195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간 및 NGO간의 연대 활동이나 교육 활동, 인권옹호 활동 등 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관한 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홍콩에서는 1980년대의 기독교 학생 운동(인권 평화 운동)을 발족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 YMCA 아시아 태평양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27개 국가와 지역의 YMCA의 연합체로서 1949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이나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의 YMCA도 포함되어 있다. YMCA 유럽 연합이나 YMCA아프리카 연합

¹²² Fung Chi Wood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2005년 10월.

과 대등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본부이며, 평화나 인권, 개발, 난민 구조나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아시아의 각국 지역의 YMCA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총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YMCA간의 정보교환도 활발하다.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아태지역 본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역 본부. 한국, 일본, 홍콩, 인도, 호주 등의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14개 지부를 총괄하는 기능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이나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홍콩에 설치한 것은 1997년이다.

◆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

‘중국의 인권’은 미국의 뉴욕과 홍콩의 기반을 둔 국제 모니터링 및 권익옹호 NGO이다. 1989년 중국 과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중국 인권 상황 조사와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 주요 활동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조직적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

1996년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지역의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UN기구와의 연대 활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하고 있다. 빈곤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활동과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5. 러시아의 인권 NGO

러시아 인권 NGO는 일찍이 종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 말에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인권 NGO가 생겨났으나 당국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인권 NGO들이 꾸준한 활동을 벌이면서 러시아 내에서 인권 NGO의 활동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1976년에 결성된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Moscow Helsinki Group)’은 이후 인권운동을 주도해왔다. 이 단체는 구소련이 헬싱키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준수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¹²³ 또한 ‘병사들의 어머니 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유린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이 무렵 인권 NGO들이 증가하였고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공개가 이어졌다. 1989년에 설립된 ‘메모리알’이 대표적인 NGO로서 과거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정치범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러시아 인권의 아버지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정신을 계승한 ‘안드레이 사하로프 재단’ 역시 대표적 인권옹호 NGO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달라진 정치 상황에 따라 인권 NGO의 활동도 변화를 겪었다. 주로 낙후지역에서 원주민의 인권 옹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 기반의 NGO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시베리아 지역의 인권 신장의 목적을 둔 ‘공공의 권리(1993)’과 ‘라우라베트란(1996)’, ‘타타르스탄 인권보호 위원회(1996)’가 대표적이다.

한편으로는 인권 NGO의 활동이 법률 자문 및 입법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수감자 인권 개선과 재판시스템 개혁을 주장하는 ‘세르게이 쉬모

¹²³ 강혜련, “해외의 시민사회-러시아,” 『시민사회』, 제11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2003), p. 81.

보로스(1990)', 실질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외치는 '알트쉬레프 리보 비취(1993)'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연방의 정부산하 기구인 '러시아연방 인권연구소'가 1991년 설립되어 러시아 인권 문제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 인권 총괄 기구라면 1997년에 설립된 '인간의 권리를 위하여'는 민간 인권 NGO들의 인권운동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57개 지역의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명실상부한 인권 NGO의 연합체로서 인권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일반 인권 NGO

◆ Неlegalы Москвы(Moscow Plegals/ Human Rights in Moscow)¹²⁴

2000년에 설립되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이다. 거주허가증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모스크바에는 300만명 정도의 허가증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있으나, 이들을 위한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허가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불공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하고 모스크바의 야만적인 권력집단과 경찰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활동한다. 이 단체는 러시아 당국에서 탄압을 받아 미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스크바의 불법체류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 Института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인권연구소)

러시아연방인권연구소는 정부산하기구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NGO

¹²⁴ 러시아의 인권 NGO에 대한 설명은 각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브로셔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NGO 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80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옴부즈맨제도를 러시아연방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것으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 국가권력과 국민간의 관계, 시민법과 정당성 등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을 국가입법기관에 상정한다.

시민적 자유 보호를 위해 소송과 법적 사례를 조사하고 러시아연방 헌법의 인권조항을 분석하여 국제법상의 기준에서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인권 관련 법률 발전을 위한 국제간 협력을 하며, 법률 자문에 관한 교육과 인권포럼을 실시한다.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2004년 29개의 인권법을 상정하였고 미성년자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가두마에 러시아에서의 시민적 자유와 준법 분야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 러시아 인권의 법률적 보장에 힘쓰고 있다.

◆ 안드레이 사하로프 재단

1989년 러시아 인권의 아버지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서거 이후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1990년에 설립되었다. 사하로프 박사는 1991년 국제학술회의에서 체르노빌원전 사고를 기리며 러시아 핵의 안전성과 러시아법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였다. 사하로프재단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잉구세티아공화국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정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또한 구소련에서 탈출한 난민 지원 사업을 통하여 키르키즈스탄에서 망명한 아즈카 아카예프를 비롯한 정치적 신념이 다른 과학자들을 보호해왔다.

◆ Московская Хельсинская Группа(Moscow Helsinki Group)

1976년 인권 및 사회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권신장과 시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대표자는 Ludmilla Alexeeva

이며, 200여개의 하부조직이 있는 러시아 NGO 중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졌다. 인권 프로그램의 계몽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중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외에 브로셔를 발송하고,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러시아 연방의 인권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러시아 인권 상화의 파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헬싱키 그룹(International Helsinki Group)과 연계하여 국제적 연대 활동도 활발하다.

◆ Мемориал-Ряза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메모리알)

1989년 자유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과거의 정치적 및 시민적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현재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주의 시기에 취해진 공산당의 정치사회적 인권 박해 상황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하다. KGB의 전신인 NKVD에 의해 매장된 폴란드인, 독일인, 이태리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들의 희생을 공개하고 이들의 묘지를 복원시켰다. 과거 정치범들에 대한 원조와 구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Index of the Repressed>와 <Gulag Map>이라는 인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지역 인권 NGO

최근 러시아의 인권운동의 새 흐름 중 하나는 지역중심의 인권 NGO들이 많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이주민에게 생활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 Комитет п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республике Татарстан
(The Committee for protection oh Human Right in Tatarstan)

타타르스탄 인권보호연합회는 1996년 열악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회적 인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성법, 아동법, 언론법 등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타타르스탄 최초의 인권 NGO이다.

◆ Правое общество(공공의권리-인권수호)

시베리아 지역의 시민적 권리 확보와 민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시베리아 지역은 산림 및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지만 개발이익을 지역 내로 환원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인권까지 억압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정보를 수집하여 알리고 시민의 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 교육과 법률 자문, 시민권보호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자는 쿠브쉬노프 겐나지에비치(К. Геннадьевич)이다.

◆ Уралская Правозащита(우랄지역 권리보호)

1973년 우랄지역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스베르 들롭스크 지역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러시아와의 국경에 관한 법률 현실화와 시민권 향상 등 러연방 입법기관에 관련 사항을 제기하였다. 또한 예카테린부르크 내 반폭력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우랄 강제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 도움을 요청하였다. 스베들로프스크 지역과 러시아연방 간의 이주법 현실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 Глаураветлан(라우라베트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단체이다. 원주민들간의 교육과 정보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주로 한다. 산업화 이후 원주민들 소유의 대지에서 석유, 천연가스, 금 등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외부에 빼앗기고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토착민정보센터를 러시아 북부지역과 시베리아와 아르틱원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 지원 기구를 모스크바에 창설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 수감자 보호 및 민주화 NGO

◆ Нижегород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аво Человека (Nizhny Novgorod Society for Human Rights, NNSHR)

수감자들의 인권옹호와 교도소 및 재판시스템의 개혁을 목적으로 1990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니즈니노브고라드 지역에서 체첸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으로도 유명하다.

니즈니노브고라드 지역 내 교도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제소자들과 가족의 서신 교환을 도와준다. 1993년에는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지역감시기구의 역할을 위임받기도 하였으며, <Nizhny Novgorod infosheet>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수감자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다. 1995년부터 교도소의 인권 상황을 UN인권위원회와 EU인권법을 통해 알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법개정을 호소하고 분석한다. 모스크바헬싱키그룹과 연계하여 니즈니노브고라드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연례보고서를 1998년부터 제작하였다. 체첸전쟁 시기에 체첸에 회원들을 파견해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여 언론을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

◆Группа Движение без Границ(국경없는 운동 그룹)

1993년 러시아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내 및 해외출입을 위한 법개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류상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익명으로 표기된 관청의 허가란을 소멸시켜 시민들이 국경 밖으로 나갈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입국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상당부분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자치지역에서 러연방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기소권을 갖을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러시아보수당)

민주당(Democracy Party)이라는 민주연합이 2001년 재결성된 것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불평등한 법에 맞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모스크바 첼랴빈스크 지역의 군부대 총격사건에 따른 불공정 판결에 항소를 하여 피의자 어머니의 재심 청구로 널리 알려졌다. 블라지미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30건 이상의 위조 또는 날조된 형사법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과거 반공산당 이슈로 투옥된 민주투사들을 돕는 데에 앞장섰다.

6. 소결

동북아지역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속속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에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단일한 인권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 주요 국가인 중국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우고 외부 사회에 인권 권고 사항을 내정간섭으로 간

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권 상황 향상을 위한 각 국의 NGO 활동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운동을 지역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서 1970년대부터 인권 NGO들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왔다. 초기에는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정신대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부각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대 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쟁 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 속에서 성장하여왔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일본 인권운동은 주로 국제 NGO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 자생적인 인권 NGO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 NGO가 아닌 일본의 자생적 인권 NGO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소규모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본 인권 NGO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적 차원의 연대 활동에 중요하다. 개도국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및 지원활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 인권 NGO들은 공식적으로는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해외에 지부를 두거나 지하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티엔안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이 조직화하였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는 NGO들이 생겨났다. 티벳 및 신장지역에서도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거나 실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위한 조직들이 국제 NGO들과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화

되면서 국제 인권 NGO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사회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인권 NGO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인권 NGO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당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에 대한 보상 및 복권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낙후지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국의 인권 상황 속에서 인권 NGO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성급한 논의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의 고양은 문화적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네트워크 활동은 중요하다. 또한 인권의 문제가 점점 국경을 넘어서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역 내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을 가진 국가인 북한 인권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구호 활동이 각 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 NGO와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 전체의 인권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간의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NGO 활동이 각 국 NGO간의 협력을 긴밀하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NGO간의 지속적인 교류는 동북아 NGO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VI

동북아 역사 NGO

1. 개관

가. 동북아의 역사문제

국가간 혹은 민족간의 역사문제가 동북아에서 중요한 외교현안의 하나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나,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보상 문제, 그리고 한국의 고구려사 문제 등, 역사인식에 깊이 관련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외교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일, 중·일, 러·일, 그리고 중·러간의 영토 혹은 경계확정 문제도 각국이 어떻게 그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상호 승인하는가 하는 역사인식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동북아 공동체’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역사문제는 단순한 두 국가간의 외교문제라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다국가간 문제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에 대한 공동인식을 토대로 한 지역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보다 증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⁵

역사문제 중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것이 19세기 후반 이후의 전쟁에 관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 이른바 ‘재팬 프로블럼(Japan Problem)’이다.¹²⁶ 이것은 동북아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일본은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은 어떻게 대응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쟁 종결 이후, 재팬 프로블럼은 때로는 개선의 경향도 보였다. 역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각국 정

¹²⁵ 역사문제를 동북아 공동체라는 관점으로부터 논의하는 연구로서 이계황, 『지역의 전쟁: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04);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學: 同化政策, 戰爭責任, 集團的記憶』(東京: 明石書店, 2000);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東京: 平凡社, 2003) 등을 들 수 있다.

¹²⁶ 和田春樹, 위의 책, p. 139. 和田는 재팬 프로블럼으로서 과거청산문제,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문제, 영토문제, 자위대문제 등을 들고 있다.

부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며, 1978년의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이나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그 상징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문제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최근의 한중일 3국 여론조사에서는 ‘장래, 한국과 일본(중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이 한국(67%), 중국(46%), 일본(40%)로 한국에서는 다수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약 반수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사죄’가 한국과 중국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국민간의 폭넓은 교류’가 1위를 차지했다.¹²⁷ 즉, 60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재팬 프로블럼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식으로 정부간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다국간 문제로서 환경문제나 군축문제, 인권문제 등을 들 수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NGO에 의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즉 NGO가 보여주는 문제제기나, 정보제공, 규범의 보급, 정부에 대한 설득이나 상호보완적 활동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¹²⁸ 물론, 역사문제가 환경문제 등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다국간 문제로서 대안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다. 따라서 ‘NGO의 시대’ 라고 불리는 현재, 하나의 시도로서 NGO가 역사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 혹은 NGO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¹²⁷ 동아일보와 일본의 아사히신문,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2005년 3월에 3국 동시에 실시한 여론 조사. 『동아일보』, 2005년 4월 27일.

¹²⁸ 아시아에 제 국가에 있어서의 NGO의 동향을 조사한 연구로서, Tadashi Yamamoto ed.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Nongovernmental Underpinnings of the Emerging Asia Pacific Regional Community*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1995), 重富眞一 編著, 『アジアの國家とNGO: 15カ國の比較研究』(東京: 明石書店, 2001) 등이 있다.

있다.¹²⁹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선례로서 유럽에서의 역사인식의 공유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고있는 ‘게오르구 역카트 국제교과서연구소(Georg 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나, 유태 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활발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여, UN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The Simon Wiesenthal Center)’ 등은 대표적인 역사관련 NGO로서 들 수 있다. 또 1966년에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민간법정이라는 형태로 심판한 ‘러셀(Russel) 법정’도 정부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식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NGO가 도전한 예이다.

나. 역사문제의 범위와 NGO의 기능 및 활동형태

동북아에서의 NGO의 활동실태를 논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역사 문제가 어떠한 분야이며, 그에 대한 NGO 활동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이나 사회복지 등과는 달리 역사라는 것은 NGO의 활동분야로서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¹³⁰

우선, 역사교과서 문제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고구려사 문제 등이 대표적인 역사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활동하는 NGO는 자주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후보상 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활동하거나 그러한 단체와 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도 역사문제와 깊이 관

¹²⁹ 역사문제와 NGO의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는 박찬승, “동북아3국의 역사인식의 공유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435~463.

¹³⁰ 시민의신문의 한국NGO의 분류에서는 역사문제에 관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대부분은 ‘시민사회 일반’ 또는 ‘평화 통일 민족’의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NPO법에 규정된 17가지 활동분야의 경우에는 ‘국제 교류’나 ‘평화/인권’등이 역사분야에 가까울 것이다.

련하든가 혹은 역사문제의 일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어떠한 분야인가, 혹은 이것들에 공통되는 특징은 무엇인가이다.

상기의 여러 문제에 공통되는 성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사실(史實)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교육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인식이 국내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반영된 결과 발생하는 문제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역사인식에 근거 한 외교정책이 직접 외교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어떤 역사인식에 근거 한 국내정치가 타국 또는 타민족에게 불이익을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어떤 역사인식의 형성 자체가 타국 또는 타민족에게 불이익을 일으키는 경우의 3가지 성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표 VI-1> 참조)

<표 VI-1> 역사문제의 범위와 구체적 문제군

	역사문제의 범위	구체적 문제군
1	역사인식과 외교정책에 관한 문제	전후보상문제, 위안부문제 영토문제, 외교일반
2	역사인식과 국내정치에 관한 문제	신사참배문제, 고구려사문제
3	역사인식과 교육 및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NGO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를 역사관련 NGO로 하는지가 문제다. 역사문제에 대한 행위자로서는 정부는 물론 정당, 준정부적인 법인이나 재단, 연구소, 역사기념관, 그리고 일시적인 대중운동이나, 일시적인 조직, 개인 등도 들 수 있다. 또 환경단체나 인권단체가 역사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나, 역사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체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참가자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 역사문제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역사관련 NGO의 역할을 자세히 분석 하기위해서 NGO의 일반적인 성격으로서의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공익

성, 조직성, 그리고 NGO의 기본적인 기능인 어드버커시(advocacy) 기능과 서비스 기능의 2가지를 고려하면서, 역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¹³¹

<표 VI-2> 역사관련 NGO의 성격, 기능, 및 활동형태의 예

성격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공익성, 조직성	
기능 및 활동형태	어드버커시	대내외적 시위활동, 정책제안, 여론환기
	서비스	역사교육의 제공, 전시활동, 기념관운영, 기념행사 개최, 분쟁중재, 피해자 지원
	기타	정보수집, 정보발신, 학술연구,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교류나 국제이해의 촉진, 소송활동, 소송지원

역사관련 NGO의 성격 중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비정부성 및 자발성에 관해서 정부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인사면에서도 정부와 아주 가까운 단체도 NGO인가 한 문제 등이 있다. 역사분야에는 이러한 단체가 많다.

그러나 특히 복잡한 문제는 공익성에 관한 것이다. 공익추구가 NGO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사익 혹은 한정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압력단체나 이익단체, 혹은 NGO 답지 않은 단체가 된다. 문제는 역사문제에 깊이 관계되는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의 공익성이나 그 실현방법 등이다. 우선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를 전면으로 내걸어 활동하는 단체는 한중일에 공통되어 존재하지만, 그러한 활동에 공익성은 인정되는가? 이것은 동북아 지역 레벨, 각국 레벨, 혹은 젠더 레벨이나 시민 레벨 등, 역사문제에 관한 공익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과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관련 NGO의 상당수는 시위활동을 하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중재활동이나 대화의 촉진이라는 중립적 활동을 전개하는 NGO도 있다. 양자를 비교

¹³¹ NGO의 성격이나 개념에 관해서는 박상필,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서울: 아르케, 2005) 참조.

했을 경우, 많은 NGO가 하는 시위형식의 활동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가? 셋째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항상 공익성이 있을지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영토문제와 같이 역사적 경위나 국제법적 해석에 관해서 승부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보다도, 안정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우선시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또한 환경문제나 인권문제 같은 구체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분야와 달리, 인식적 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역사분야가 가지는 복잡한 문제다.

다. 동북아의 역사문제의 전개와 NGO

(1) 1950년대-1970년대: 역사문제의 형성기

근대에 들어 역사문제가 외교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한·일, 중·일, 일·소, 중·소 등의 국교 정상화의 시기일 것이다. 즉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체결 이후, 동북아의 국제관계의 재구축이 시작된 시기이며, 교섭과정에서는 전쟁책임이나 전후보상, 영토문제의 처리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교섭은 ‘일소공동선언(1956),’ ‘한일국교정상화(1965),’ ‘중일국교정상화(1972),’ ‘중일평화우호조약(1978)’라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역사문제는 주로 정부간교섭과 대중적 시위가 중심이고, NGO가 적극적으로 대안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많은 2국가간 우호 단체가 설립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단체로서 국교 교섭의 중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는 ‘한일협력위원회(1969),’ ‘한중우호협회(1982)’ 일본에서는 ‘일중우호협회(1950),’ ‘일북협회(1955),’ ‘일소협회(1965),’ ‘일중협회(1975)’ 중국에서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1954)’ 러시아에서는 ‘소일협회(1958)’ 등이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한일회담 전후의 혼란에 대한 중개 및 화해 활동을 전개했던 미국의 ‘MCC(1954-1967)’라는 종교계의 NGO도 있었다.

또 국교 정상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각국에서는 전쟁피해에 관한 피해자단체가 형성되어 1970년대에는 일본정부에 대한 소송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이외에도 유족회나 민족단체, 평화단체 등이 각국에서 형성되어,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의 ‘YMCA(1903)’, ‘홍사단(1913)’, ‘순국선열유족회(1959)’,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67)’,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1973)’, 일본의 ‘일본평화위원회(1949)’, ‘일본유족회(1953)’, ‘원수폭금지일본회의(1955)’, ‘일본민주법률가협회(1961)’, ‘피스보트(1972)’, ‘아시아 태평양 자료센터(1978)’, 중국의 ‘사회과학원 근현대사 연구소(1977)’ 등이다.

(2) 1980년대: 역사문제의 국제화

1980년대에는 역사문제에 관한 중요한 2개의 사건이 발생하여, 역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화 되었다.

우선, 1982년 여름,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침략에 관한 기술이 일본 문부성의 검정과정에서 문제화되자, 그것을 둘러싸고 중국, 한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항의활동이 발생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화 된 사건이며, 제2차 교과서 파동이라고도 불린다.¹³² 이것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언론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여, 한국이나 홍콩에서는 시민에 의한 규탄집회가 각지에서 일어났다. 결국 일본은 1982년 8월에 정부견해를 발표하여, ‘근린 아시아 제 국가의 현대사의 역사적 사상(事象)의 관해서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로부터 필요한 배려를 한다’라는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검정

¹³² 1955년에 일본 민주당이 당시 좌익적인 교과서에 대해서 ‘우려되는 교과서 문제’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여 교과서 공격을 했던 것이 ‘제1차 교과서파동’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1982년까지의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을 ‘제2차 교과서파동’이라고 부른다. 박찬승, “동북아3국의 역사 인식의 공유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pp. 435~442; 浦野起央, 『日中韓の歴史認識』 (東京: 南窓社, 2002), pp. 18~19.

기준에 추가하였고, 또한 정부의 책임하에서 교과서 기술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태는 수습되었다.¹³³

다음으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본격적으로 국제문제가 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기에 일본의 신도 국교화의 중심적 시설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일본인 전사자 외에 한국 및 대만 출신자, 그리고 일본의 A, B, C급의 전범도 함께 모셔지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대해 1975년에 일본 총리인 미키가 개인으로서 참배를 시작하여, 그 후 1980년에는 스즈키 총리가 각료 17명과 함께 공식참배를 했다. 이러한 참배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은 1985년의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였다. 나카소네는 일본의 패전 40주년에 해당되는 1985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참배를 했고, 이것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일제히 항의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 각국의 압력을 받아, 나카소네는 결국 1986년 이후 참배를 중지했다.¹³⁴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1980년대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민운동이 모색되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관한 기념관이 건설되거나, 역사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이나 NGO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의 ‘독립기념관(1982)’, ‘역사문제연구소(1986)’, ‘대일역사왜곡시정 촉구 범국민회의(1987)’ 등이며,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1985)’,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1987)’,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1988)’ 등이다. 그들의 활동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어드버커시(advocacy)의 방법과 같은 면에서 NGO에 의한 역사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맹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¹³³ 浦野起央, 위의 책, pp. 19~23.

¹³⁴ 浦野起央, 위의 책, pp. 75~80.

(3) 1990년대: 역사문제의 다각화, NGO의 활성화

1990년대는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보다 긴밀화함에 따라 한·중, 중·러, 그리고 중국·대만 간에서도 문제제기되어 역사문제가 다각화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의 북방정책의 결과 1990년에 몽골과 소련, 1992년에 중국과 국교수립을 하였다. 소련 및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는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이 문제화되었다. 이는 큰 외교적 마찰로는 발전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동부국경의 확정 문제가 있으며, 1969년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간교섭의 끝에 1991년 및 1997년에는 약 4,300km에 달하는 동부국경의 확정을 실현했다.¹³⁵

대만에서는 1988년에 대만출신의 이등휘(李登輝)가 총통으로 취임하여, 1997년에는 ‘인식대만’이라는 역사교과서가 간행되었다. 그 특징의 하나로서 ‘일제시대’가 ‘일치시대’로 변경되는 등, 친일적 성격이 강해져, 중국과 역사관의 마찰을 일으켰다.¹³⁶

그리고 홍콩과 대만, 중국에서는 1970년에 있어 1996년에도 일본에 대한 대규모 ‘보조운동 (보위조어대운동, 保衛釣魚臺運動)’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조어대(釣魚臺)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운동이며, 대만의 ‘건국조어대 방위동맹’이나 홍콩의 ‘홍콩보조행동위원회(1996)’ 중국의 ‘중국민간보조연합회(1996)’ 등의 NGO가 중심이 되어, 많은 학생이나 시민이 참가했다. 또 이 운동은 홍콩, 대만, 마카오, 중국의 NGO 그리고 북미의 화교단체에 의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서도 주목받았다.

이와 같이 1990년대를 통해서 역사문제는 다각화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일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서 기술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대만에서 피해자 단체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기에 ‘정신대문제대책

¹³⁵ 金子利喜男, 『世界の領土/境界紛争と國際裁判: 外交交渉と司法的解決の併用を目指して』(東京: 明石書店, 2001), p. 105.

¹³⁶ 浦野起央, 『日中韓の歴史認識』, pp. 141~143.

협의회(1990)'나 '나눔의집(1992)' 등이 한국에서 잇따라 설립되어,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67)'나 일본의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1993)', '일본변호사회' 등과 협력하면서 소송활동이나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 추구활동을 시작하여 위안부 문제는 본격적으로 국제화 되었다. 게다가 이 문제가 1992년 이후에는 NGO의 통보에 의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도 국제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NGO 활동의 결과 한국이나 북한에서는 정부의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성명을 송부했다. 일본정부도 그 것을 어느 정도 받아 들여, 1995년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을 설립하여, 그것을 통해서 개인 배상을 실시한다고 하는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¹³⁷

1990년대 후반에는 각국에서 여성 NGO의 활성화 및 연대가 진행되어, 2000년 12월에는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네트워크(1996)', 그리고 필리핀의 '여성의 인권 아시아 센터'가 중심이 되어,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이라는 민간법정을 개최했다. 이것은 각국의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2000년 이후도 위안부 문제는 계속 되었다.

(4) 2000년대: NGO의 네트워크화

2001년 4월에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6, 이하 새역모)'이 집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이며, 한국이나 중국이 우려하고 있던 문제였다. 2001년 3월 무렵에는 언론을 통해서 검정합격의 전망이 보도되자,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내의 NGO에 의한 항의활동이 잇따

¹³⁷ 그러나 1996년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스와미 (Coomaraswamy) 보고를 통해서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어, 그러한 민간기금에 의한 해결은 국제법상 인정받지 않는다는 비난을 당했다.

라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항의활동은 이전과는 달리, 각국의 NGO는 면밀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호응을 맞췄다. 특히 검정합격 이후의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일본의 각 교과서 채택지구(약 550개)의 채택과정에서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 이른바 ‘불채택운동’의 전개가 중요한 네트워크의 예이다. 이 운동에서 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NGO는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연대 (2001, 일본역사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로서 설립)’ 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 21(1998)’이다. 그들은 한일의 지방자치체간의 자매 교류망을 활용하여, 풀뿌리 레벨의 NGO들과 협력하면서 양국의 지방자치체나 지방의회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채택율을 0.0039%로 낮추는 것에 성공했다.¹³⁸ 새역모의 교과서는 같은 식으로 2005년의 검정에서도 합격했지만, 이 시기에는 한일의 NGO에 중국의 NGO도 더해져 불채택 운동의 NGO간 네트워크는 보다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NGO간의 국제적 연대가 교과서문제나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전후보상 문제 등 역사문제 전반에 관해서 실현되었는데, 그 중요한 배경으로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NGO간의 국제회의를 들 수 있다. (<표 VI-3> 참조) 각국의 NGO들은 몇 차례에 걸치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했던 것이다. 국제적인 불채택운동이나 여성국제민간법정 이외에도, 역사에 관한 공동인식의 모색이나,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 서로가 타협하면서 합의를 실현하는 ‘교과서 협력’의 시작, 그 결과로서의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의 출판,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시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교과서문제 이외에도 2004년에는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고구려사

¹³⁸ 2001년도의 교과서 문제의 배경 및 전개에 관해서는 정재정, 『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서울: 현음사, 1998), pp. 19~37; 박찬승,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의 공유를 향하여,” pp. 448~456; 일본 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 94~109, 123~128.

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 공정(東北 工程)’이 그 배경이다. 1996년에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점 연구과제로 결정하여, 2002년부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4년 4 월에는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로부터 한국의 역사에 관해서 고구려가 삭제되었던 것이다. 또 고구려의 유적이 2004년에 UNESCO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또한 중요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많은 항의활동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발생하였으며, 향후에 동북아 각국이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문제는 어디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간도나 일본의 대마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이다.¹³⁹

<표 VI-3> 역사문제에 관한 NGO의 주요 국제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집회
(아시아 태평양 전후보상 국제포럼)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사할린,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팔라우
개최지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 개최.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개최
개최실적	1986년부터 매년 8월에 개최. 2005년에는 제19회를 개최.
개요	아시아 태평양의 역사관련 NGO나 전쟁 피해자가 모여, 전쟁 피해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집회.

¹³⁹ 임재청 외,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한·중·러·일 영토문제 현장』(서울: 동아일보사, 2005).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Asian Solidarity Conference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참가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개최지	마닐라, 서울, 사이타마, 도쿄, 평양, 북경 등.
개최실적	1992년에 서울에서 제1회 회의가 열리고, 2005년에는 제7회 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연차 회의 이외에도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1993, 평양)'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1997, 도쿄) 등도 주요 참가 단체에 의해 개최되었다.
개요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회의. 2000년에 개최된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구체적인 제안 및 준비도 이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2001년 이후부터는 아시아 일제의 수요일 시위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참가국	한국, 북한, 일본
개최지	도쿄, 서울, 평양
개최실적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합계 4회 개최되었다.
개요	1987년에 한국의 이정옥과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가 중심이 되어, 실행 위원회가 형성되었다. 남북한 및 일본의 여성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모색하는 회의.

*동아시아 여성 포럼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개최지	빈, 도쿄, 서울, 울란바토르, 타이베이, 홍콩
개최실적	1993년에 준비회담이 개최되어 1994년의 제1회 이후, 2년에 한번의 개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2003년에 제5회 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개요	위안부 문제도 포함하고,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여성문제를 논의.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포럼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개최지	난징, 도쿄, 서울, 북경
개최실적	2002년의 제1회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개요	역사인식에 관한 여러 문제의 토론, 교과서 문제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3개국 공동부교재의 작성 등.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필리핀, 대만 (각국에 위원회를 설치)
개최지	평양, 상하이, 서울
개최실적	2002년에 평양에서 준비회담을 개최, 2003년에 제1회 회의(상하이) 2004년 제2회(서울), 2005년 제3회(평양).
개요	일본의 과거청산에 관해서 보다 포괄적 및 실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취지로 시작되었다.

자료: 관계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필자작성.

2. 한국의 역사 NGO

가. 개관

한국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걸쳐 다양한 역사관련 NGO가 형성되어 왔다. 역사문제 전반을 취급하는 종합적인 단체, 소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피해자 단체, 조사연구 활동이 중심인 학술단체, 교과서문제나 영토문제 등 특정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체, 그리고 특정의 문제 발생시에 형성되는 일시적인 운동조직 등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역사관련 NGO의 설립시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과 이후이다.(<표 VI-4> 참조) 1990년대 이전에는 YMCA나 홍사단으로 대표되는 장기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유족계 단체가 중심이다. 한편으로 1990년

이후에 형성된 단체에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구하는 단체나 위안부 관련 단체, 교과서왜곡문제나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단체 등 특정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단체가 많아, NGO의 활동분야로서의 역사분야는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 된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⁰

역사관련 NGO들이 왜 1990년대 이후 활성화 되었는가라는 것은 흥미로운 의문일 것이다. 역사문제 자체는 1980년대부터 벌써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었으며, 전쟁피해자는 20세기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의문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하지 않지만, 역시 1990년대 한국의 전 영역에 걸쳐온 시민사회의 급성장이나 정치의 큰 변화라는 국내적 흐름이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동아시아 전역에서 NGO의 국제적인 회의나 연대활동, 전쟁피해에 관한 조사활동이나 피해자 자신의 증언활동이 활성화 되었다는 국제적 흐름 등이 중요한 배경으로서 추측된다.¹⁴¹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일본이나 대만,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제 국가에서도 전쟁피해에 관한 조사활동이나 지원활동이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가 되어 처음으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980년대 중반부터 위안부문제에 관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1990년의 ‘정신대대책협의회’의 설립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¹⁴⁰ 사회복지나 여성관련 단체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도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역사관련 NGO의 동향은 환경 NGO나 정치·행정에 관한 NGO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의 NGO 설립 동향에 관해서는 시민의신문, 『한국시민사회 연감 2003』, pp. 750~751.

¹⁴¹ 상징적인 흐름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8개국에 의해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전후보상 국제포럼’이 1991년에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참가했다.

<표 VI-4> 한국 주요 역사관련 NGO

문제	NGO (설립년)	활동 내용
전후보상문제 (피해보상, 위안부, 원폭피해, 강제동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0) 나눔의집(1992)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1997)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1973)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67) 강제동기진상구명시민연대(2004) 평화시민연대(2000)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회 한국위원회(2003)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미국소재)	시위활동 수요일시위 소송활동 소송지원활동 유엔에서의 활동 조사연구활동 청소년교류사업 전쟁피해자에대 한 지원활동
교과서문제	아시아평화의역사교육연대(2001) 홍사단(1903) 반크(1999) 한국청년연합회(1999) 통일연대(2001) 한국학중앙연구원(1978)	불채택운동 불매운동 공동교재개발 의견광고 청소년역사체험학 습실시
영토문제	독도수호대(2000) 독도박물관(1997) 독도학회(1996) 독도유인화 운동본부(1987)	서명활동 시위활동 모금활동 정보발신 조사연구활동 영토방문
기타 (고구려문제 등)	역사문제연구소(1986) 민족문제연구소(1991) 고구려연구재단(2004)	조사연구활동

물론 이미 197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같은 유족 관련 단체가 소송활동이나 서명운동을 하거나 일시적인 운동조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90년대에는 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보다 조직화 및 전문화된 NGO가 형성되어 역사분야 전체가 급속히 활성화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다양한 시기에 설립된 NGO가 혼재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의 동향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관련 NGO의 조직형태는 다양하다. 소규모의 단독조직으로부터 다수의 NGO에 의한 연합조직(아시아의역사와평화연대는

약 90개의 관련단체로 구성,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약 30개의 여성 단체로 구성), 전국규모의 지부를 가지는 조직(홍사단, 한국청년연합 등), 국제 NGO의 지부(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연합조직이다. 특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심적인 연합 조직에 관련 NGO가 집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비슷한 이름의 NGO가 산재하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 NGO의 특징이라 하겠다.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위활동이나 성명발표,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NGO 활동이 많고, 이것은 수십 년간 특히 변함없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국정부 혹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역사문제에 관한 정책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역사관련 NGO의 주요한 활동 목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전쟁 피해자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서비스제공이 증대되어, 2000년대에는 폴뿌리 레벨로의 국제교류의 추진이나, 공동역사교재의 개발, 기념관 건설사업, 사이버상에서 커뮤니티의 제공 등, NGO에 의한 서비스활동은 보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 어드버커시(advocacy) 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방법이나 서비스활동의 범위나 질을 개선해 왔다고 하는 것이다.

나. NGO간의 국제연대(교과서불채택운동)

최근의 한국 역사관련 NGO의 활동 동향에 있어서 특히 주목받는 것으로서 일본의 특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불채택운동을 들 수 있다.

불채택운동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는 2001년의 교과서 왜곡문제이다. 2001년 4월에 일본의 새역모가 작성하여 후소샤(扶桑社)가 출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여, 그 내용에 대해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내로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5월에 역사교과서의 재수

정 요구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새역모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25항목의 수정을 요구했다. 중국정부도 이와 같이 8항목에 관한 수정요구를 제출했다. 게다가 한국은 주일대사의 일시귀국, 한국국회의원에 의한 일본의 국회 앞에서의 항의활동 등도 잇따라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 및 교과서에 관한 행정과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정부 차원의 교섭은 결국 막혀버렸다.¹⁴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것이 한국 및 일본의 NGO에 의한 불채택운동이었다. 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4년에 한 번, 각 출판사로부터 신청된 교과서를 문부과학성이 검정하여, 합격한 교과서중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채택한다. 이 채택 작업은 전국 약 550의 시나 마을 레벨의 지방자치체 (채택지구) 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¹⁴³ 이 제도에서는 검정에서 합격해도 각 지역의 채택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교과서로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에 양국 NGO는 활동의 여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2001년의 경우, 4월의 검정합격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에 일본 전국의 채택지구에서 교과서 채택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에 맞추어 새역모의 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어 이것이 불채택운동으로 불렸다. 2005년에도 같은 식으로 운동이 전개 되었다.

채택지구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약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다수결이다. 이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운동의 주된 성격이 된다. 운동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에 대한 성명서의 송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이나 서명운동, 신문에의 의견광고의 게재, 그리고 지방자치체간의 자매협정을 이용한 압력활동 등이다. 또 채택지구에 관계없이 새역모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압력활동이나 그 제품불매운동 등도 동시에 전

¹⁴² 이원순·정재정, 『일본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동방미디어, 2002).

¹⁴³ 일본의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는 정재정, 『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서울: 현음사, 1998).

개되었다. 초기 이러한 활동은 한국 및 일본의 NGO들이 독자적으로 국내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지만, 점차 국제적인 제휴로 성장했다. 그리고 활동의 대상이 시나 마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 소규모의 풀뿌리 NGO들이 급속히 형성되거나 한일의 지역 NGO간의 교류가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불채택운동은 정부가 좌초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민간에 의한 해결 방법의 투입, 국제적인 NGO 연대의 실현, 풀뿌리 레벨에서의 NGO 활동의 활성화나 교과서문제에 관한 의식계몽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2001년에 시작된 불채택운동은 2002년부터 2004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의 각국의 NGO가 합류하여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나 준비활동, 공동역사교재의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05년의 교과서문제에서는 보다 강화된 국제연대가 형성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NGO는 한국에서는 100개 이상, 일본에서는 150개 이상에 달했다고 보여진다.¹⁴⁴

불채택운동의 중심적인 단체는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이다. 한국에서는 한일 NGO과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을 제휴시키는 ‘민-관-정 네트워크’ 형성사업을 전개하여, 특히 일본의 보수세력이 강한 채택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불채택운동은 2001년에 새역모 교과서의 낮은 채택율(0.0039%)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폭넓게 인식되어 있다.

¹⁴⁴ 불채택운동의 중심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구성단체수는 2005년에 약 90개단체. 이 이외에도 몇 개 단체가 운동에 합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채택을 호소하는 신문광고에 약 150단체가 이름을 게재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1년 7월 26일, 2005년 8월 8일; 『讀賣新聞』, 2005년 7월 20일; 『愛媛新聞』, 2002년 3월 17일, 2002년 6월 27일 등.

<표 VI-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민-관-정 네트워크 계획(일부)

일본 채택지구	한국 자매도시	일본 시민단체	한국 시민단체
도쿄 스기나미구	서울서초구	스기나미시민모임 '새역모' 교과서채택에 반대하는부 모모임	강남서초교육시민모임
도쿄 도시마구	서울시 동대문구	도시마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도쿄	서울시	일본동경도연합회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일본노동자복지협의회	
		PEACE NOW KOREA JAPAN	서울흥사단 서울경실련 민주노총 서울
		MAGO - SEN	
		새역모교과서를저지하는동경네트 워크	
		평화포럼	
		교육기본법개악을반대하는전국연 락회	
		강제연행기업책임추구재판전국네 트워크	태평양보추협
		재한군인군속재판지원회	
		일본제철징용자재판지원회	
전쟁피해조사사회법을실현하는시민 회의			
KEY 도쿄		KYC 서울,수원	
홋카이도	진주/삼척/ 수원	홋카이도 일교조	흥사단 수원.진주지부 경실련수원지부
		유골문제네트워크	
히로시마시	대구광역시	히로시마교과서네트 히로시마현모임	흥사단 대구지부 KYC대구지부 경실련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
		교과서문제를생각하는시민네트워 크	
		히로시마연대유니온	
		히로시마평화교육연구소	
		일교조 히로시마	대구전교조 대평양보추협

일본 채택지구	한국 자매도시	일본 시민단체	한국 시민단체
히로시마 미요시	경남사천		참학부모회사천/민주노 총경남
마쯔야마시	경기도 평택시	에히메 교과서소송단	평택미군기지반대/원폭 피해평택지부/홍사단평 택지부/민주노총경기
		에히메교과서가 위험하다	
후쿠오카현	경남김해시	새역모를반대하는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경남
후쿠오카시	부산시	후쿠오카교과서모임 관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부산전교조/민주노총부 산/태평양보추협,
가가와현	경남합천시	전쟁반대!카가와모임	민주노총경남
사이타마현	경남통영 경기도안양	아이들의인권사이타마네트 교육과사회사이타메네트	KYC 안양 전교조경기 민주노총경남,경기
가나가와현	경기도	사단법인카나가와인권센터 재외외국인생활교육상담센터 가나가와역사교육모임 카나가와고교직원노동조합 일본렌코카나가와현	전교조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 부천시민모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자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일관계 현안 토론회’ (2005. 5. 16, 배재학술
지원센터) 발표자료.

다. 주요 NGO 소개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1년 4월, 86개의 시민단체나 학계가 모여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
동본부’를 결성했다. 2001년에는 새역모의 교과서에 대한 불채택운동,
2002년 일본 고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에 대한 수정요구,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중일 공동역사부교재 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일본역사왜곡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역사교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 명칭을 ‘아시아평화와역
사교육연대’로 변경하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

일의 역사인식과 교과서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사업 및 대중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일본교과서 검정 및 채택에서도 한중일연대 및 민-관-정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대응을 실현하고,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여 일본 시민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불채택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0년 11월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37개 여성단체와 개인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 1991년 8월에 한국 최초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의 실태를 증언한 것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지원을 시작했다.

1991년에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 활동을, 1992년부터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수요시위는 2005년 8월 17일에 670회에 이르고 있다.

국제활동도 활발하고, 1992년부터는 아시아 각국의 NGO의 연대인 ‘아시아연대회의’의 멤버가 되어, 2000년에는 위안부에 관한 ‘여성민간법정’에의 국제실행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에 있어서의 위안부문제의 중심적인 단체이다.

▶ 나눔의집/위안부역사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1992년 10월에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5년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했고, 현재 나눔의집에는 10명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

나눔의 집의 활동으로서는, 매주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수업, 국내외에서의 그림전시회,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등이 있다. 또 부설시설인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통해서 정신대에 대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 독도수호대

독도와 독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도문제를 인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이다. 2000년 3월 1일 출범, 전국회원 2500여명, 해외지부로서 미국동부지역본부, 미국서부지역본부, 독일서부지역본부, 독일동부지역본부(준비중)를 가진다.

전세계로 독도를 알리기위한 사업, 독도의 날(10월25일) 제정, Tokdo 표기의 표준화, 각종 기념사업 추진, 출판, 사진 및 자료전시회, 독도탐방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사이버외교사절단(VANK)

반크(VANK)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영어약자로서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과 한인동포, 입양아들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온라인상의 NGO이다. 1999년에 설립되었다.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전세계 모든이들과 꿈과 우정, 비즈니스를 나누는 나라, 대한민국 Korea’를 비전으로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흥사단

1913년에 설립하여 3대 운동본부 (민족통일운동본부, 투명사회운동본부, 교육운동본부), 26개 지부, 미주 6개 지부(로스엔젤레스, 워싱턴, 아틀란타, 타코마,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15개의 부설기관을 가지고 있다.

일본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동과제에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100만명 서명운동(45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운동),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및 일본 역사왜곡 선전전 전개, 세계 한민족 청소년 평화캠프 개최 및 세계 지도자에게 일본 역사왜곡 항의 편지 발송, 주한일본대사

추방촉구집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독도사랑순례단 등이 있다.

3. 일본의 역사 NGO

가. 개관

일본의 역사 NGO의 큰 특징은 우파와 좌파의 대립 구도일 것이다. 전후보상 문제,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은 모두 1950년대 이후부터 계속된 중요한 국내의 정치과제이며, 정부나 정당이 어떻게 그러한 과제를 처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민간단체 혹은 지지단체가 형성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01년의 교과서 문제에는 좌우 양세력의 대항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1993년 3월, 약 40년간 계속된 자유민주당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취임한 호소카와 총리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제 자신은 그것이 침략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유족회’나 야스쿠니 신사 관련 단체가 항의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우파세력은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새역모’을 계속해 발족시켜 침략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난했다.¹⁴⁵ 게다가 재계나 구 일본군 관계의 보수세력의 모임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그리고 보수적인 종교계 단체가 모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도 자학사관에 근거 하는 중군위안부를 역사교과서로부터 삭제하기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97년에는 양 단체가 ‘일본회의’로서 통합되어 일본 최대의 우파단체를 형성할 정도로 우파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이러한 우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단체들의 형성 및 통합도 동시에 전개되었다. 자유주의 사관을 전쟁시대의 국가주의로의 회귀이라고 비난 하는 지식

¹⁴⁵ 일본의 우파 세력의 동향에 관해서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서울: 역사비평사, 2001).

인을 중심으로 1995년에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학회’가 형성되어 그 후 ‘여성과전쟁일본네트워크,’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등의 역사 관련 NGO가 잇따라 형성되었다. 1998년에는 많은 좌파 단체가 모여 ‘포럼 평화·인권·환경’이라는 전국규모의 연합단체를 형성했다.

2001년에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검정합격하자 이러한 좌우의 대항 관계는 한층 가속화 되었다. 한편에서 좌파세력이 전국에 수백 개의 풀뿌리 단체와 더불어 교과서불채택 운동을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표 VI-6> 일본의 주요 역사관련 NGO

문제	태도	NGO	활동 내용
야스쿠니 신사참배	찬성	일본회의(1997) 일본을지키는모임(1974) 일본을지키는국민회의(1981)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모임 영령에 응하는 모임(1976) 일본유족회(1953)	참배운동 행사개최 신문광고 국회의원 지원
	반대	평화유족회(1986) 일본기독교협의회 자유법조단(1921) 포럼 평화·인권·환경(1998) 일본평화위원회(1949) 일중우호협회(1950) 일중협회(1970)	시위활동 항의성명 송부 신문광고 대안제시 소송운동 야스쿠니 신사 견학회, 설명회
교과서 문제	자유주의사관	자유주의 사관연구회(1995)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6)	교과서작성 출판활동 채택운동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1998)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2001) 역사교육자협의회(1947)	불채택운동 신문광고 교과서재판 제소 청소년 역사캠프
전후보상 문제		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1993)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일본네트워크(1996) 중국전쟁피해자의요구를지지하는 모임(1995) 전쟁피해조사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1997)	소송운동 입법활동 정 개최 유엔과의 협력 정보제공 민간법

문제	태도	NGO	활동 내용
영토문제	영유권 주장	북방영토복귀기성동맹(1963) 치시마 하보마이제도 거주자연맹 (1958) 북방영토의 반환을요구하는 도민회의 (1983)	서명활동 계몽운동 민간교류활동 영토방문
	중재, 기타	피스보트(1978)	영토방문 대화촉진 분쟁예방 활동
기타		재일코리아청년연합(1991) 코리아NGO센터(2004) 9조의 모임	국제 교류활동 청소년교류활동 개헌조지운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도 전국 규모로 채택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채택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는 점에서는 양자의 교과서운동은 거의 같기 때문에, 채택 위원회의 상당수는 양 세력으로부터 아울러 수백 번 정도의 전화나 팩스를 받아, 그 양에 의해 어느 쪽의 세력이 더 많은가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역사 NGO는 교과서 문제나, 전쟁책임, 야스쿠니 신사 문제, 자위대, 교육제도, 그리고 헌법문제 등의 정치적 쟁점을 축으로 한 좌우의 대항이라는 환경속에서 형성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의 NPO법에서는 정치적인 단체는 NPO법인으로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역사관련 NGO의 상당수는 미등록 인 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역사관련 NGO의 더 하나의 특징으로서 정부나 정당뿐만이 아니라 역사관련 NGO 자신이 역사관을 형성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상기한 침략전쟁을 미화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사관이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의 가해자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도 1970년대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NGO의 반전운동 속에서 등장했다고 말해진다.¹⁴⁶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일본사회에는 월폭피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이 강하고, 반전 반원폭을 주제로 하는 단체가 많았지만, 1970년

대의 베트남 반전운동은 일본도 똑같이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 하는 계기가 되어, NGO는 반전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역사관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을 배경으로써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구하는 NGO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형성되어, 정부에 대한 압력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NGO 자신이 역사에 대한 평가 혹은 역사관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NGO 자신이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부나 정치를 움직여 왔다고 하는 점은 역사문제에 관해서 NGO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 된다. 즉, 일본에 있는 NGO는 역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인 것과 동시에 역사문제의 발생 혹은 재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에 관한 정부와 NGO의 관계 혹은 정당과 NGO의 관계는 오랜 세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NGO간의 국제연대(2000년 여성국제민간법정)

일본의 NGO가 발기인이 되어 동아시아 레벨의 NGO의 국제연대를 실현한 예로 2000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전쟁범죄에 대한 민간법정이다. 법정은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6개국의 여성 및 NGO에 의한 국제실행위원회에 의해 조직 되어, 구유고 국제전범법정 전소장 등 4명이 판사단을 구성했다. 일본의 쇼와 천황을 비롯해 10명의 당시의 국가 지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 티모르, 네델란드, 일본의 10개국 지역으로부터 검사단이 구성되었다. 변호단은 구성되지 않았다. 법정의 준비나 구성을 추진한 것은 1998년에 설립된 ‘전쟁과 여

¹⁴⁶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學: 同化政策, 戦争責任, 集团的記憶』(東京: 明石書店, 2000).

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라는 여성 단체였다. (<표 VI-7> 참조).

정부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위안부문제에 대한 NGO의 국제연대와 민간법정이라는 새로운 해결의 시도는 넓게 주목받아 법정에는 약 150사에 달하는 언론이 참가했다. 또 법정의 일부는 텔레비전으로도 중계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연대 그리고 고도의 자료나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민간법정이 실현된 배경에는 1990년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의 움직임을 통해서 국제적인 NGO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던 것을 들 수 있다.

<표 VI-7> 2000년 여성국제민간법정 구성 NGO

*국제실행위원회

출신국가	NGO
일본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북한	『중군위안부』·태평양전쟁보상대책위원회
중국	상하이 위안부연구센터
대만	타이페이시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필리핀	여성의인권아시아센터
인도네시아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여성연합

*국제자문위원회

출신국가	NGO
필리핀	엄네스티·인터내셔널
캐나다	인권 민주 개발 국때 센터
미국	여성 글로벌 리더십 센터
우간다	아소시에이트·포·체인지
아르헨티나/영국	인터내셔널 경계체제

출신국가	NGO
코스타리카	ILANUD
알제리아/프랑스	이슬람법하의 여성
유고 연방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 자립 센터
인도	젠더를 요구하는 여성 코카스

자료: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1.jca.apc.org/vaww-net-japan/>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조사연구 활동이 시작되어, 1989년에는 일본내에서 서명활동이나 시위활동이 개시되어,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다. 1991년에는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소송이 시작되어, 같은 무렵에 한국, 필리핀, 대만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구명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나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제네바에 본부를 두는 국제 NGO인 ‘국제법률위원회’ 등이 개입하게 되어, 1992년에는 유엔 인권 위원회에 문제가 보고되었다. 그 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한 보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죄를 했지만, 정부에 의한 공식적 보상은 하지 않고, 관민공동으로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각국의 여성단체는 연대활동을 강화시켜 1992년 이후에는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1998년의 서울 회의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나 소송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이것들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국제민간법정의 개최가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를 통해 국내 레벨과 아시아의 지역 레벨, 그리고 유엔 레벨이라는 중층적인 NGO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결과, 대규모이며 다수의 전문가를 동원한 국제민간법정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의 최종판결은 2001년 12월 4일 헤이그에서 내렸다. 성 노예제(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쇼와천황 이하 9명에게 대한 인도에 대한 죄로서의 유죄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공적 사죄나 개인 보상, 자료공개 등이, 구 연합국에 대해서는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재판하지 않았던 것의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권고도 추가되었다. 관련 NGO들은 이 판결과 권고를 실현하려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¹⁴⁷

다. 주요 NGO 소개

◆ 역사교육자협의회(歷史教育者協議會)

역사교육자협의회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원이나 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194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역사관련 단체 중에서는 가장 초기에 설립된 단체의 하나이다. 4000명에 가까운 회원과, 약 10,000명의 월간지 ‘역사지리교육’의 독자를 갖고, 전국 47지역에 약 400개의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부에서 역사나 현대의 여러 사회문제에 관한 학습회, 사회과의 수업, 교육을 둘러싼 실천 보고회 그리고 매년 8월에는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역사문제와의 관련에서는 역사왜곡 반대운동이나 야스쿠니 반대운동,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세미나나 견학회를 기획 운영하여,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를 참가자에게 체험시키는 활동도 하고 있다.

¹⁴⁷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참고.

◆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子供と教科書全國ネット21)

32년간에 걸친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¹⁴⁸에 대한 지원회를 이어받아, 280여명의 학자나 문화인, 시민 등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어린이, 교육, 학교, 교과서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테마별, 직역이나 계층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그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단체이다.

조직의 특징으로서는 운영위원회가 회원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각각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권형의 조직인 것이다. 그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지역넷’이며, ‘지역넷’은 ‘전국넷’과 제휴하면서도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여 자주적 및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넷’은 오사카, 효고 등에서 우선 설립되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제도 문제, 전후보상 문제 등을 활동 내용으로 하여, 교과서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역사관련 NGO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歴史教育アジアネットワーク)

2001년 4월 새역모의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했던 것에 대해, 국내 및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강한 비판과 항의가 이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NGO간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평화를 실현하는 기독교 넷’이 중심이 되어 2001년 6월에 ‘역사왜곡 교과서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시아 연대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북한

¹⁴⁸ 1966년에 도쿄대학 교수로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이에나가 사부로우가 교과서 검정제도나 검정의견에 대해 일으킨 재판. 난징대학살이나 위안부, 오키나와전, 731부대 등의 기술을 둘러싼 재판이며, 1998년에 최종판결이 나왔다.

(문서제출에 의한 참가)으로부터의 40개 단체, 일본에서는 아이누 민족, 오키나와, 재일 외국인 등을 포함한 250명이 참가했다. 이 긴급연대 회의에서, 각국 NGO간에서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합의되어 그 일본 조직으로서 전기 3단체와 피스보트의 주도에 의해 2001년 9월에 약 50개 단체와 개인에 의해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 JAPAN’이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한중일의 NGO의 국제연대에 관한 일본 측의 대표적인 NGO가 되었다.

활동을 진행시키는데 특히 유의하고 있는 것은, ①한일 등 동아시아에 치우치지 않고, 일본침략의 피해를 받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시야에 넣어 활동하는 것, ②젠더의 시점을 중시하는 것, ③다양한 입장의 역사학자나 연구자가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시민, 교사, 학부모, 역사학자, 교육학자, 연구자, 청년, 학생, 활동가, 재일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완만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것 등이다.

▶ 재일코리안청년연합(在日コリアン青年連合)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은 1991년에 설립된 풀뿌리 단체의 연합체이며, 도쿄에 1곳, 오사카에 3곳, 효고에 2곳의 지역 거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오사카에 있고 2명의 스태프가 일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약 400명의 재일 코리안이다 (KEY에서는 재일 코리안을 코리아에 루트를 가지는 사람으로, 한국적, 북한적, 일본적은 관계없고, 또 루트를 2개 가지고 있는 하프나 쿼터도 포함하고 있다). KEY에는 상부단체도 하부단체도 없고, 회원이 직접 및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된 활동에는 한일시민교류사업, 한국청년단체와의 제휴사업, 남북 해외청년교류사업, 동북아 및 세계평화 실현을 향한 사업, 북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 북한인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역사인식의 공유 및 전후보상의 실현을

요구하는 사업, 재일 코리안 사회의 화해의 진전과 재일 코리안의 권리 확충을 향한 사업,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향한 사업이라는 3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후보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일 위안부의 재판투쟁, 주한 피폭자의 피폭자 원호법 국외적용을 요구하는 재판투쟁, 일본제철 전 징용공의 재판투쟁 등을 지원해 왔다.

후소샤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불채택운동에 대해서도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과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코리아NGO센터(코리아NGOセンター)』

코리아NGO센터는 2004년 3월에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민권협)’, ‘민족교육문화센터’, ‘원 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의 3단체가 통합했던 단체이다. 3단체는 실질적으로는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NGO들이다.

‘동아시아의 시민 및 NGO의 폭넓은 중층적인 교류나 협력 관계의 발전이 동아시아의 딱딱한 국가분위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즉,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기초가 된다’라는 설립취지 아래, 시민 레벨로의 동아시아의 코리안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NGO이다.

1998년부터는 매년 일반 시민이나 학생, NGO 등이 참여하는 한국 스터디투어를 개최하고, 역사에 관한 체험학습이나 한국 NGO과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일본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실태를 해명하여,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역사, 법률, 국제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운동활동가로부터 구성되었다.

국제법률가 위원회(ICI)로부터의 조사단 지원이나, 유엔인권위원회

에의 보고 및 조사단의 지원을 통해 역사문제를 국제화 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연구 성과는 주로 기관지 ‘계간전쟁책임연구’를 통해 발표되지만, 1993년 이후, 일본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많은 조사보고를 제출했던 것이 활동의 특징이다. 이러한 보고가 일본의 정부회견이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각종 회의참고자료가 되어, 위안부 문제, 731부대, 연합군포로문제, 유기독가스문제 등 역사문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왔다.

또, 1993년 이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역사문제에 관한 NGO 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한 선구적인 단체이다.

◆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기존의 역사교과서는 필요이상으로 일본을 비난 하는 ‘자학사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여, 그것에 대신하는 자유주의사관을 제창하여, 일본인으로서의 자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의 작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1995년에 설립된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함께 2001년 이후의 역사왜곡에 주도했던 중심적인 단체이다.

새역모가 집필하여 후소샤가 간행한 중학교용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문부과학성에 의해서 137곳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었지만, 일단 수정한 후에 교과서로서 합격했다. 그러나 좌파 단체나, 교육관계자, 일본 교원노동조합 등의 교직원조합, 역사학자, 시민단체 등이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적다. 한편으로 새역모의 지부나, 일본회의나, 재계 관계 단체 등과 연대하여 채택운동을 벌이고 있다.

◆ 일본회의(日本會議)

1997년 국회의원 약 100명을 비롯한 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전국 47지역의 지부대표 약 1000명이 모여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때까지 20년 이상 활동해 온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

는 모임'이 조직 통합한 것이다. 회장에는 미요시 토루(전 최고재판소 장관)가 취임하여, 전국 9블록 47지역에 지부를 가지는 일본 최대의 보수계 조직으로 되었다. 협력조직에 '일본회의-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져, 국회와 지방 의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①헌법, 천황, 야스쿠니 신사문제, ②방위, 영토, 외교문제, ③역사, 교육, 가정문제 등, 역사문제의 전반에 대해 어드버커시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며, '영령에 응하는 모임'과 '일본유족회,'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민의 모임' 등과 연대하여 매년 참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도 '새역모'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일본유족회(日本遺族會)

일본인 전사군인의 위령, 유골수집, 군인은급의 부활, 유족지원대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일본 전역에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유족에 대한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고, 1956년부터는 '야스쿠니 신사 국가수호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치색을 강하게 하여, 1959년에는 사무국장 토쿠나가 마사토시 (이후 참의원 의장)를 자민당 공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조직력을 살려 자민당후보를 지원하는 유력한 압력집단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야스쿠니 신사 국가수호운동'으로서 입법활동을 추진하거나 총리나 각료에 대한 공식참배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 1985년에는 나카소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참배는 합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전 각료가 공식참배를 하게 되었다.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문제를 경시한 일본유족회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기독교단체나 불교단체의 일부는 1980년대 이후 '평화유족회'를 따로 결성했다. 1986년의 '진종(眞宗) 유족회'나 기독교유족의 모임 등 7단체가 참가하는 '평화유족회 전국연락회'의 결성 등이다.

4. 중국의 역사 NGO

가. 개관

중국에서도 일본이나 한국에서와 같이, 역사문제는 일반적인 NGO의 활동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동태의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애드버커시단체나, 피해자단체, 기념관, 학회, 사이버상의 조직 등 역사문제에 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개관 하면 그 수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중국의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으로부터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시점에서 중국 민생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약 15만3천단체, 민영비기업단위(民營非企業單位)도 약 13만5천단체가 등록 되어 있다.¹⁴⁹ 중국에서는 이 2종류의 단체가 주로 NGO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민생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 지방정부에 등록되는 단체, 그리고 대만 및 홍콩의 NGO를 포함하면 중국에는 한국이나 일본을 크게 능가할 정도의 많은 NGO가 존재할 계산이 된다.(<표 VI-8> 참조)

<표 VI-8> 중국의 주요 역사관련 NGO

문제	NGO	활동 내용
역사문제 전반 (전후보상, 교과서 등)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1954) 중화전국청년연합회(1949)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1988) 제2차대전사실교육협회(1995) 타이페이시부녀구원기금회(1987) 대만부녀정보센터(1995) 홍콩보상협회 홍콩제2차대전사실유지연석회의(2001) 세계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1994)	시위활동 조사연구활동 전시회 기념관건설 추진활동 소송활동 '군표'에 대한 소송 활동 국제교류활동

¹⁴⁹ 중국민정부 <http://www.mca.gov.cn/news/content/recent/2005510114517.html>

문제	NGO	활동 내용
피해자 단체	일본군세균전중국수해소송원고단	소송활동, 시위활동
기념관	난징대 학살기념관(1985)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1987) 심양 918 역사박물관 (1999) 동북항일련전쟁사	전시활동 교육활동 조사연구활동 국제회의 참가
조어대 문제	중국민간보조연합회(2003) 홍콩보조행동위원회(1996) 대만보조행동그룹 중국보조자연봉사센터(2000)	보조운동 전반 시위활동, 해상시위, 출판활동 영토상륙운동
고구려 관련 단체, 연구기관	사회과학원근현대사연구소(1977) 중국변경사지연구소 고구려연구소고구려연구소(1994) 통화사범대학교고구려연구소(1995) 지린성사회과학원고구려연구소(1997) 동북사범대학동북민족강역센터(1997)	조사연구활동
기타 (사이버 단체 등)	중국918애국망(2000) 광둥애국자연봉사망 일본침략교육망 중화항일동맹회 애국자동맹	정보제공, 계몽활동 온라인회원봉사활동, 오프 라인으로의 시위 및 불매운 동 유도,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

중국의 역사관련 NGO의 특징으로서 우선,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활발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주로 19세기 중반 이후 전쟁의 역사를 다루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중국에 약 100개 정도 존재한다고 한다.¹⁵⁰ 이것들은 전시나 역사교육, 연구활동을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의 NGO에 의한 국제회의에도 참가하여 발표나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NGO처럼 중국의 역사기념관은 제기능을 톡톡히 하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써 화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북미나 남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화교단체가 홍콩 및 대륙의 단체와 제휴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¹⁵⁰ 리중위엔,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중일 3국의 8.15기억』(서울: 역사비평사, 2005), pp. 153~156.

대표적인 것으로 전후보상 문제 전반에 관해서 활동하는 ‘세계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나 영토문제에 관한 NGO의 모임인 ‘중국민간보조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조직이 많은 것도 특징중의 하나일 것이다. 중국에는 8,00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념관이나 정부, NGO도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상의 계몽활동이나 주장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및 2005년에 발생한 반일시위의 일부도 이러한 사이버상의 정보발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둥주에서의 시위활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이버 조직으로서 ‘광둥애국지원자망’ 등이 그런 사이버 단체이다. 또 ‘중국918애국네트’ 처럼 역사문제 관련하는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국 본토에 산재하는 역사관련 NGO의 링크를 만드는 등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적지 않다.

나. NGO간의 네트워크

보조운동(보위조어대운동)이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섬인 센카쿠(尖閣)/조어대(釣魚台)에 대한 홍콩, 대만, 대륙의 NGO 등에 의한 영유권 주장운동이다. 70년대 이후, 홍콩에서 영유권 운동이 시작 되어, 이와 같이 불리게 되었다. 운동은 북미의 화교 단체나, 홍콩, 대만의 NGO가 주도하여,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의 시위활동이 중심이다. 1996년에는 대륙의 NGO도 일시적이었지만 합류하게 되어, 한 영토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NGO의 연대가 형성되었다.¹⁵¹ 이러한 운동단체는 영유권의 주장과 동시에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반대, 역사교과서 왜곡반대, 일본의 상임이사회 가입반대 등도 자주 세트로 주장하기 때문에,

¹⁵¹ 중국과 홍콩 대만의 NGO가 협력한 것은 1996년에 운동에 관한 것이고, 당시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 후에는 단체사이의 활동 방침의 차이로 인해 소소히 협력관계는 약해졌다. 홍콩보조행동위원회 부주석 Albert Ho와에 인터뷰, 2005년 10월 5일.

NGO간의 네트워크이기도 한 보조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일간의 역사문제에 관해서 또 동북아의 영토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도 주목될 동향일 것이다.

중일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1945년 이후 연합국(미국)의 시정하에 있었지만, 1972년의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것을 계기로, 센카쿠/조어대의 영유권은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1969년에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해양조사의 결과 부근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적된 것이다. 이것들을 배경으로 우선 1971년부터 1972년에 걸쳐 수 천명의 화교나 유학생 단체가 미국에서 일본 대사관에 대해서 시위행동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홍콩,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도 영유권의 주장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제1차 보조운동으로 불려 1978년의 중일우호조약체결과 동시에 운동은 진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1996년의 유엔 해양법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영토분쟁이 다시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우익계의 단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상륙하여, 이것에 대항하여 홍콩 및 대만의 단체도 상륙을 시도했다. 제2차보조운동의 개시인 것이다. 이 시기에는 홍콩 및 대만에서 운동의 조직화가 진행되어 ‘홍콩보조행동위원회’ 등의 NGO가 설립되었다. 또 그들은 운동의 성격으로서 ‘전지구 레벨’을 강조하여 세계 각지의 화교 단체의 연대를 추진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서 2004년에는 중국에서 ‘전세계화인보조포럼’이 개최되어 거기서 세계 21개 단체로 구성되는 ‘중국민간보조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시위활동이나 상륙 활동 등을 하는 동시에, 2004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 관광, 자원조사 활동 등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기업을 홍콩에서 설립하거나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의 항의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다.¹⁵²

¹⁵² 보조운동에 관해서는 홍콩보조행동위원회,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 등 관계단체의 홈페이지를 참고.

이렇게 해서 각지에서의 시위가 중심이었던 제1차 보조운동에 비해, 제2차 보조운동에서는 조직화가 진전하고 활동방법이나 활동내용도 다양화 되어, 역사문제에 대해서 NGO가 보다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 주요 NGO 소개

▶ 단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虐殺記念館)

1982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교훈으로 1985년에 건설되었다. 정식 명칭은 ‘침략일군난징대학살조수동포기념관’이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과 ‘심양918역사박물관’과 같은 대규모 역사기념관이다. 부설 기관에 ‘일본 역사교과서문제 연구소’가 있다. 또 2002년에는 온라인상의 기념관을 정식으로 개설하여, 네티즌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의 NGO에 의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포럼’에도 중국 측의 단체로서 참가하여, 3국 공동의 역사부교재의 집필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교과서문제에 관한 한중일 NGO 연대에서 ‘사회과학원현대사 연구소’와 함께 중국 측의 주요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中國人民抗日戰爭記念館)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된, ‘노구교사변’ 50주년을 기념해 1987년에 건설되었다. 1931년의 ‘918사변(만주사변)’에서 1945년까지의 약 14년간의 항일활동이 전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시활동 이외에도 조사연구 활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국제교류활동에도 힘을 쓰고 있다. 북경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역사에 관해서 주로 방문하는 역할을 이루어 있다. 조사연구 활동에는 중국의 항일투쟁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 등

중일관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 **세계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世界抗日戰爭史實維護聯合會)**

1994년에 무당파의 민간단체의 연합조직으로서 설립되었다. 목표는 지구 규모로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진상구명, 일본의 전쟁 책임의 추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의 저지,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한중일의 역사관련의 국제회의에도 참가하여, 동북아 역사관련 NGO의 연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회원단체는 주로 중국, 홍콩, 그리고 북미의 화교단체이다.

<표 VI-9> 세계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회원단체(일부)

출신지	NGO
홍콩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
뉴욕	중화대일보상동포회
	기념난징대도살수난동포연합회
캘리포니아	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피츠버그	2차세계대전사실교육유지협회
브리티쉬 컬럼비아	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캘거리	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토론토	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紀念抗日受難同胞聯合會)**

일본의 침략 및 저항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안도록 하는 것,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3가지 목표를 내걸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홍콩을 거점으로 하여, 전후보상이나 교과서문제, 일본의 상임이사

국 가입문제 그리고 영토문제까지 역사문제의 전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단체이다.

주된 활동내용은 홍콩의 일본 영사관에 대한 시위활동, 사진전시 활동, 역사기념관 설립 추진 활동, 연구활동, 국제교류활동 그리고 출판 활동 등이다. 시위활동은 주로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의’와 ‘보조행동위원회’ ‘홍콩유호2차세계대전사실연석회’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피스보트’와도 청소년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거나, 화교에 의한 국제연대인 ‘세계항일전쟁사실유호연합회’의 회원단체이기도 하다.

◆중국민간보조연합회(中國民間保釣聯合會)

2003년 12월에 ‘중국애국자동맹’과 ‘중국918애국망’ 등의 단체가 발기인이 되어, 보조운동에 관한 중국 및 화교단체에 의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보조선언’이 채택되어 각 단체가 연대하는 중심적 조직으로서 ‘중국민간보조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이 포럼에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북미 그리고 남미의 약 30개 단체가 참가했다.

2004년에는 주된 멤버의 7명이 센카쿠/조어대 상륙에 성공하여,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체포되어 북경에 강제송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그들은 영웅으로서 환영 받았다. 같은 2004년에는 주변의 개발, 관광,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을 설립하는 등, 시위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관한 중심적인 민간단체이지만, 활동분야는 영토문제 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참배 반대, 교과서문제,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문제 등, 일본에 관한 역사문제는 거의 모두를 시야에 넣고 활동하고 있다.

◆홍콩보조행동위원회(香港保釣行動委員會)

1996년의 제2차 보조운동 속에서 태어난 민간단체이다. 홍콩에서의

영유권 관계의 운동에 관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운동을 민족주의나 반일운동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제 및 평화에 관한 운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활동분야는 영유권의 주장만이 아니라, 731부대, 위안부문제, 역사왜곡문제, 전후보상 문제 등 다양하고, 국제적인 NGO의 연대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홍콩에서는 시위활동이나 세미나 개최, 홍콩 정부에 대한 의견서의 송부 등을 전개하고 있다.

◆ 타이페이시 부녀구원기금회(台北市婦女救援基金會)

위안부 관련 단체로서 일찍 1987년에 설립되어 1988년에는 재단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원래는 여성단체로서 대만의 여성정책에 관한 입법 활동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대만에 있어서의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보고서를 완성시켜, 1992년부터는 한국이나 북한, 필리핀, 일본의 NGO와 연대행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를 통해 많은 국제 회의에 참여하거나 일본정부에 대한 소송활동을 전개했다. 또 2000년의 '여성국제민간법정'의 대만측의 대표 NGO, 2002년부터의 한중일의 공동역사교재 개발사업이나 2003년부터 개최된 일본의 전쟁책임 국제 연대회의 등에도 대만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대만의 원위안부의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이나 정신적 지원, 소송에 관한 대리활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중국918애국망(中國918愛國網)

2000년에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이다. 활동목적은 많은 역사관련 NGO와 같지만, 활동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제공이나 정보교류이다. 상해에 사는 회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오면서, 중국에서는 역사관련 문제의 주요 사이트로서 많은 NGO가 링크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반일활동의 중심적인 사이트로서 알려져 있다. 개인이 만든 한 사이트에 지나지 않지만 역사문제에 관해서 그만큼 주

목받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반일시위를 선전하여,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의 보급이나 기술의 향상을 고려하면, 역사관련 NGO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는 단체이다.

중국에는 이러한 사이버상의 역사관련 사이트가 많다. 오프라인상의 시위활동을 주도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로서는 ‘광둥애국지원자망’, ‘애국자동맹망’ 등이 있다.

5. 러시아의 역사 NGO

동북아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동향이 주목받는 예는 드물다. 더불어 역사문제에 관해서 러시아의 NGO가 주목받는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역사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러·일간이나 중·러간의 영토 문제나, 한·러간의 6.25전쟁에 관한 역사인식 문제, 연해주에 민족문제 등 잠재적인 문제는 존재한다. 러시아 국내에서도 NGO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러시아의 역사관련 NGO가 동북아에서 활동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문제는 오히려 러시아와 동북아 각국과의 사이에서 역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러시아가 동북아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오랫동안 관여했고, 일본과는 전쟁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중국 동북지방의 국경 문제에서는 근년이 되어도 무력충돌이 발생할 정도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또 러시아의 연해주에는 100여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계 주민이나 고구려인들의 동향이나 그들의 역사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의 우파 단체가 전쟁을 미화하거나 북방4도의 영유권을 주장해도, 또, 아무리 중국의 애국주의 단체가 동북지방의 영토문제를 제기해도, 그것들에 대한 러시아의 본격적인 항의 같은 것은 없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NGO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1990년의 한국과 러시아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도 6.25전쟁에 관한 역사인식이 문제시 되었지만, 결국 그만큼 중시되지 않은 채 국교는 성립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와 동구 제국이나 발트 3국과의 사이에서는 역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60주년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구소련의 승리를 파시즘에 대한 승리이며 동구 제국의 민족 해방이라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 폴란드나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그러한 역사인식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바뀐 것일 뿐 스탈린주의에 의한 억압의 시작이었다는 인식이다.¹⁵³

동북아의 역사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그만큼 문제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동북아의 지역 질서에 대한 러시아 비중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러시아에서도 특히 극동지역이나 연해주는 경제적으로는 한중일과 중요한 관계에 있지만, 정치나 외교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한중일 사이의 긴밀함과 그 각국과 러시아와의 사이의 긴밀함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확하다. 이것은 또한 역사문제의 성격에 관해서 역사적 사실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간 또는 민족간의 관계나 서로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의해서 러시아와 한중일 사이에 역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때 한중일의 NGO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받을 것이다. 천연자원이나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러시아가 앞으로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

¹⁵³ 『毎日新聞』, 2005년 5월 10일.

에, 현재 많은 NGO가 한중일의 갈등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장래 러시아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금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이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역사문제의 전개와 각국의 NGO 활동의 상황을 개관 해왔다. 역사문제의 있어서의 각국의 NGO 활동은 1950, 1960년대에 각국 내에서의 대중적인 시위중심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와서 질적 및 수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발전으로서는 서비스 내용의 개발 또는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들 수 있다. 각국의 NGO들은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국제회의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활동을 배우거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방법이나 서비스 내용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역사관련 NGO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 연계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활동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은 다시 각국 내에서의 NGO활동의 활성화로 환원되며, 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역사문제에 입각해 하나에 공익 또는 도의적 규범의 원천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즉, 국제연대는 역사문제에 관한 NGO활동에 대해 이중 삼중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관련 NGO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역사문제에 대한 NGO의 역할, 한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우선, 역사문제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로서는 ①문제제기나 의식 계몽, 대안제시 등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할, ②풀뿌리 활동이나 국제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속에 상호이해나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③동아시아에서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첫 번의 정책형성과정에서 NGO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넓게 인식되고 있듯이,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NGO는 문제제기나 약자를 위한 대변활동, 대안제시나 압력의 행사, 여론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개입 하고 있다. NGO의 이러한 제 기능은 대중적 시위가 중심이었던 1950년, 196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면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상당히 세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형성되어 온 국제적인 연대활동은 공동 교과서의 개발이나 국제민간법정의 개최, 국제적인 청소년 역사캠프의 개최 등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아, NGO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역사관련 NGO의 활동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NGO와 NGO 사이에 혹은 시민과 시민의 사이에 상호이해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그 자체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치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왔다. 공동 역사교과서를 작성한 NGO는 그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공동 교과서를 작성했던 것보다 한중일이라는 틀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⁴ 또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서 0.0039%라는 채택율을 실현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10%나 5%가 아닌 매우 낮은 채택율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 하고 있다. 즉, 이것들은 역사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나 외교관계의 개선의 차원만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내에 있어서의 시민 사이의 신뢰관계의 구축이 하나의 독자적인 해결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NGO는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는 NGO활동이 국제적으로 및 지역적으로 활성화되면 될수록, 역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증대하여, NGO의 활동범위나 서비스활동의 대상, 그리고 그 사회적 중요성 등 모두가 상승적으로 증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¹⁵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5.6.9, 일산 킨텍스) 발표자료.

셋째, 역사관련의 NGO 활동에는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 경제나 안전보장 등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문화적 혹은 인도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 공공인식 실현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사업 등은 결국 동북아란 무엇인가, 이웃 나라나 이웃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낳게한다. 이것은 역사문제를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나 국제회의에 있어서 공통된 흐름이다. 경제나 안보와는 다른 동기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흐름은 역사관련 NGO에는 단지 과거청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큰 역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기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NGO의 연대활동이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중일 연대 혹은 한일 연대가 특히 강화되어 온 것은 이와 관련되는 역사관련 NGO의 하나의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에 대한 한계나 장애도 있다. 우선, NGO 활동효과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영토문제가 그 좋은 예이다. 역사인식이나 국제법의 해석을 보급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NGO의 주도에 의해 영토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이상적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영토문제를 외교 문제화시키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대항적인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는 것도 또한 NGO이다. 역사문제에서는 국가 대 NGO보다 NGO 대 NGO의 대립관계가 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NGO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마찰이 증대하고,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역사문제의 해결은 환경문제나 인권문제와는 달리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정일 것이다. 한편으로 많은 역사관련 NGO는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설립된 새로운 NGO이며,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벌써 해산된 NGO도 많다. 특히 풀뿌리 단체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흘러가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역사문제에 대한 NGO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려면 향후 5년 내지 10년의 활동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1990년대의 NGO 활동에는 전쟁 피해자가 직접 참가하고 그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던 것이나, 위안부 문제에서는 소수의 여성운동가의 리더십이 운동의 전개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점도 NGO 활동의 지속성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의 세대교체 속에서 NGO가 어떻게 활동 동기를 유지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활동을 지속시킬지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나 문제점의 극복에 관해서 역사관련 NGO에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는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역사관련 NGO는 장애에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창조하여 대응해 왔다. 예를 들면 영토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피스보트나, 한국의 평화를 생각하는 여성회, 중국의 아시아 평화연합이 중심이 되고, 분쟁지대의 비무장화나 대화 촉진, 분쟁예방을 위한 지역센터의 설치 등 새로운 대안제시를 시작하고 있다.¹⁵⁵ 또, 1990년대 초기에 국제NGO나 유엔의 개입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급속히 진행된 것처럼, 제3자의 개입도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줄 것이다. 교과서 문제나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NGO의 본격적인 개입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연대의 동향일 것이다. 역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동북아 지역의 연대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역사관련 NGO가 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를 얻고, 정치에 개입해 나갈 만한 영향력을 늘리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속에서 시민과 시민의 신뢰를 펼쳐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NGO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향일 것이며, NGO활동에 대해 보다 밝고 다양한 가능성을 줄 것이다.

¹⁵⁵ 피스보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Action Agenda’에서의 활동.

VII

결론: 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서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서의 NGO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동북아 지역은 무엇보다도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고 잠재적 발전의 가능성까지 합하면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도 활력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연평균 발전 성장률이 10%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이 동북아는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성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빈곤 문제와 더불어 인구, 환경, 인권, 민족갈등, 역사적 쟁점, 여성과 원주민 문제 등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본 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NGO 활동의 주요 분야로는 반전·평화, 환경, 인권, 역사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향후 동북아의 다른 주요 국가들인 타이완, 몽골, 북한 등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서에서 살펴 본 동북아 국가들 중 러시아 이외에도 한국과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對중국 및 러시아권과의 접근을 위한 교두보 확대 차원에서도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NGO에 대한 조사연구가 향후에 추가된다면 국제개발협력 NGO의 진출과 협력 증대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NGO 활동의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본 서에서는 빈곤이나 독재정치, 군국주의, 사회갈등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주제들을 포괄하지 못했으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후의 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서에서 총괄하여 살펴 본 동북아 국가들에서 반전·평화, 환경, 인권, 역사 등 분야별로 나타나는 NGO 활동의 현황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의 반전·평화 NGO 활동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반전·평화 NGO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화, 통일(한국의 경우), 반핵·비핵, 군축,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군대(기지) 이전 및 철수, 파병 반대, 전쟁피해자, 대인지뢰철폐, 평화헌법개정반대(일본의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는 상당히 활발하여 증가 및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통일’ 분야 NGO 활동이 여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경우는 원폭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반핵·비핵’ 분야에서 특히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헌법개정반대운동’은 일본만의 독특한 NGO 유형이다.

한국과 일본의 반전·평화 NGO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주요 핵심세력’의 성향인데, 한국은 진보 진영이 핵심인 반면 일본에서는 보수·우익 진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반전·평화 NGO는 주로 참전군인관련 단체 등 국방 관련 NGO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자 또는 사병들의 부모단체 활동 유형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의 유사점은 양심적병역거부, 참전군인, 퇴역군인단체 활동 분야에 NGO 단체들이 활발하다는 데 있다.

중국의 반전·평화 NGO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여 ‘평화’보다는 ‘무력불사’의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 특성상 반전·평화운동이 미미하여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 각국 NGO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NGO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전문 환경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기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소비자 단체 및 각종 직능단체 등이 가세하여 자신들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환경운동을 수용하여 이에 매진해왔다. 환경 NGO가 중심이 된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은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환경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운동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고, 환경 NGO의 활약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본의 환경 NGO는 고도 성장기 주민운동의 핵심이었던 반공해운동·자연보호운동이 1980년대 들어 포괄적인 환경운동으로 변모하면서 환경운동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일본에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 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많은 반면, 일본 내의 전국적인 환경운동조직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약하고, 환경 NGO 후발 주자이자 이웃 나라인 한국에 비해서도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수반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동북아 각국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의 환경 NGO의 발달 양상 역시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에 주력하는 NGO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점차 확대되면서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관료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 조직의 힘에 의한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 NGO는 아직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적고 활동도 미미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환경단체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대형 환경사고, 개방화정책, 민주화 등에 기초하여 시민운동 영역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행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시류가 분명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환경운동이 약화되고 침체기에 빠졌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환경 NGO들은 러시아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환경 NGO 조직상의 특징으로 단체의 해체 및

재조직이 빈번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환경NGO들은 글로벌 펀드나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ons)의 지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동북아인권분야의 NGO 현황과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지역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 인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속속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에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단일한 인권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 주요 국가인 중국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외부 사회의 인권 권고 사항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각국의 NGO 활동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운동을 지역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서 1970년대부터 인권 NGO들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심점이 되어왔다. 초기에는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정신대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부각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대 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쟁 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 속에서 성장하여왔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일본 인권운동은 주로 국제 NGO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의 국내 자생적인 NGO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 NGO가 아닌 일본의 자생적 인권 NGO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소규모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 인권 NGO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를 활동 범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연대 활동에도 중요하다. 개도국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및 지원활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권 정책으로 인권 NGO들은 공식적으로는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해외에 지부를 두거나 지하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티엔안먼 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이 조직화되었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는 NGO들이 생겨났다. 티벳 및 신장지역에서도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거나 실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위한 조직들이 국제 NGO들과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체제하의 반체제인권운동의 명맥을 이어,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인권 NGO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당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낙후지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국의 인권 상황 속에서 인권 NGO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성급한 논의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의 고양은 문화적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네트워크 활동은 중요하다. 또한 인권의 문제가 점점 국경을 넘어서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내 가장 열악한 인권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관심 증대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구호 활동이 각 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 NGO와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 전체의 인권 운동의 차원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주고 있다. 따라서 협력사업을 통한 인

권 운동의 발전이 이뤄진다면 지역 인권 NGO의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넷째, 역사분야의 NGO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수적인 면에서는 아직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공통적으로 그 활동의 질이나 내용의 측면에 있어 착실히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각국 내에서의 정부를 상대로 한 대중적인 시위활동을 시작으로 역사문제의 제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역사문제의 국제화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쟁 피해자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활동이 증대되어왔으며, 2000년대에는 풀뿌리 레벨의 국제교류 추진, 공동역사인식의 모색, 분쟁예방, 기념관 건설 사업, 사이버상의 커뮤니티 제공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동북아 NGO 중에서 역사분야를 다루는 활동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각국 내에서의 NGO 활동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이나 활동목표가 부여되고, 궁극적으로 역사분야의 NGO 활동 전체를 한 단계 올리는 중요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적 활동은 각국의 NGO 및 시민 사이의 신뢰 형성을 촉진하여 동북아의 지역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에는 거의 모든 역사 관련 NGO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 연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자유로운 NGO 활동이 오히려 NGO 간의 대립관계를 촉진하는 점이나, 많은 역사관련 NGO들간의 조직적인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 등은 현재까지 나타난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내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에 대한 가능성 또한 향후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나, 민간차원에서의 신뢰 관계 구축 동향에서 특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에서의 NGO 활동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 다

양하고 다루는 영역에 있어 광범위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적 수준에서 사회적 경각심 제기와 더불어 대안제시 기능도 점차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동북아의 NGO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짧은 NGO 발전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불과 지난 십수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NGO의 눈부신 성장은 외국의 NGO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는 존재로 부각되어 왔다. 다만 아시아 지역 NGO 활동의 일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각국의 NGO 발전사는 독재와 저발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체제가 전환되고 동시에 경제적 질서가 자유화되면서 NGO 발전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공통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NGO 활동이 시작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며, 그 결과 NGO 간의 국제적 연대의 결속력도 유럽이나 서구의 NGO들과 비교해 볼 때 약한 편이다.¹⁵⁶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야별로 볼 때 역사분야의 국제적인 NGO 활동이 다른 어떤 분야의 NGO 활동보다도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은 과거사의 공통요소가 각국에 작용하는 속성상 자연스러운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NGO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 사업들도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국제연대 활동이 향후에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동북아 국가들이 먼저 이룬 민주화와 발전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다루는 NGO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¹⁵⁶ 동북아 지역과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 NGO들간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NGO 관계자의 표현을 빌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대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2)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부터 시작한다. 3) 연대의 범위보다는 결속력이 중요하다. 4) 조직화와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5) 국제연대를 위한 재정확보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6) 국제연대에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김혜경, “한국 NGO들과 동아시아 국제연대,” 『평화논총』 제5권 2호(2001 가을), pp. 70~77.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만길 외.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 서울: 선인, 2004.
- 강성학 외. 『시베리아와 연해주의 정치경제학』. 서울: 리북, 2004.
-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4 인권백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국가인권위원회 편.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ACSF) 참가결과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권혁태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서울: 아르케, 2003.
-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 서울: 국무총리실, 2004.
- Doyle, Timothy, and Doug McFacherm. 이유진 역. 『환경정치학』. 서울: 한울, 1998.
- 박상필.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 서울: 아르케, 2005.
- 시민의 신문사 편.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시민의 신문사, 2003.
- 오명석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계황. 『기억의 전쟁: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이면우 외. 『일본의 NGO활동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1998.
- 이원순·정재정 공저.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비판과 제언』. 서울: 동방미디어, 2002.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글로벌화와 인권/교과서: 동경평화포럼』.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임채청 외.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한중러일 영토문제 현장』. 서울: 동아일보사, 2005.
- 임현영 외.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서울평화포럼』. 서울: 역사비평사,

2005.

- 정갑영 외.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서울: 오름, 2004.
- 정재정. 『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 서울: 현음사, 1998.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주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서울: 나남출판, 2001.
- 주성수 외. 『한국NGO 리포트 2004』.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엮음.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서울: 아르케, 2004.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2004.
- 헬무트 안하이어 외.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 서울: 아르케, 2002.
- 환경부. 『환경백서』: 2004.
- 國際協力NGOセンター. 『NGOディレクトリ 2004』. 東京: 國際協力NGOセンター, 2004.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4.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Dobson, Andrew.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 Eckersley, R.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Toward an Ecocentric approach*. London: UCI Press. 1992.
- Florini, Ann M. ed. 2000a. *The Third Force: The Rise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Hampel, Lamont C. *Environmental Governance: the Global Challenge*.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6.
- Joseph S. Nye and John D. Donahue. eds.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Kaldor, Mary, Helmut Anheier, Marlies Glasius. eds. *Global Civi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Keck, Margaret E. and Ka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Kim, Dalchoong and Moon, Chung-in ed. *History, cognition, and peace in East Asi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 Lorey, David E. and Beezley William H. *Genocide, Collective Violence, and Popular Memory the Politics of Remembrance in the Twentieth century*,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2002.
- O'Brien, Robert et. al. *Contesting Global Governanc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d Global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Warkentin, Craig. *Reshaping World Politics: NGOs, the Internet, and Global Socie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 Yamamoto Tadashi ed.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 PacificCommunity: Nongovernmental Underpinnings of theEmerging Asia Pacific Regional Community*, Tokyo: Japan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1995.
- Yamamoto, Tadashi.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Japan: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1995.
- Yamamoto, Yoshinobu. *Globalism, Regionalism and Nationalism:Asia in Search of Its Role in the Twenty-firstCentury*, Melden, Mass.: Blackwell pub. 1999.
- Yanitsky, Oleg. *Russian Environmentalism: Leading Figures, Facts, Opinions*. Moscow: Mezhdunarodnyie Otnoshenjia Publising House, 1993.
- アジア太平洋地域戦後補償を考える国際フォーラム. 『戦後補償を考える』. 東京: 東方出版, 1992.
- 高橋哲哉 編. 『歴史認識』論争』. 東京: 作品社, 2002.
- 菅原憲二, 安田浩. 『國境を貫く歴史認識:教科書,日本そして未来』. 東京: 青木書店, 2002.
- 金子利喜男. 『世界の領土/境界紛争と国際裁判:外交交渉と司法的解決の併用を目指して』. 東京: 明石書店, 2001.
- 吉川勇一. 『反戦平和の思想と運動』. 東京:社会評論社, 1995.
- 渡辺治. 『現代日本社会論』. 東京: 労働旬報社, 1996.
- 明石康 外. 『日本の領土問題』. 東京: 自由国民社, 2002.
- 法政大学大原社会问题研究所. 『社会劳动运动大年表』. 東京: 労働旬報社, 1995.
- 三好亚矢子 外. 『平和・人権・NGO: すべての人が安心して生きるために』. 東京: 新評論, 2004.
- 石渡延男, 越田稜. 『世界の歴史教科書: 11カ国の比較研究』. 東京: 明石

- 書店, 2002.
- 石田雄. 『記憶と忘却の政治學』. 東京: 明石書店, 2000.
- 市民の平和白書刊行委員會. 『市民の平和白書44』. 東京: 日本評論社, 1984.
- 王名 外. 『中國のNPO: いま、社會改革の扉が開く』. 東京: 第一書林, 2002.
- 日本平和委員會平和運動30年記念委員會. 『戰爭と平和の日本近代史』. 東京: 大月書店, 1979.
- 重富眞一. 『アジ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5.
- 池明觀 外. 『日韓の相互理解と戦後補償』. 東京: 日本評論社, 2002.
- 國際協力NGOセンター. 『NGOディレクトリー2004』. 東京: 國際協力NGOセンター, 2004.
- 浦野起央. 『日中韓の歴史認識』. 東京: 南窓社, 2002.
- 和田春樹. 『東北アジア共同の家』. 東京: 平凡社, 2003.
- 王名 編. 『中國NGO研究-以个案爲中心』. 北京: 清華大學NGO研究中心, 2000.
- _____. 『中國NGO研究-以个案爲中心』. 北京: 清華大學NGO研究中心, 2001.
- 俞可平等. 『中國公民社會的興起與治理的變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清華大學NGO研究 編. 『中國NGO五百家』. 北京: 清華大學NGO研究中心, 2002.
- 趙黎青. 『非政府組織与可持續發展』.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8.
- 陣光輝 外. 『中國民間組織』.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8.

2. 논문

- 간다 후미히토. “국민의식의 변화와 대중운동.” 후지와라 아키라 외 저·우철민 역. 『일본현대사』. 서울: 동녘, 1986
- 강윤희. “러시아 환경 NGO의 발전 현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 2005.
- 강혜련. “해외의 시민사회-러시아.” 『시민사회』. 제11호. 서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2003.
- 권혁태. “일본의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공회대학논총』. 제19호, 2000.
- 김성국. “아시아 NGO 네트워크와 지역발전.” 『부산발전포럼 자료집』. 부산: 부산발전포럼, 2000. 10.
- 김성진. “세계화, 주권, 그리고 연방관계: 러시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3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4.
- 김영래·이화수·이기호. “비정부조직(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미국.”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2001.
- 김영필. “일본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시민사회와 NGO』. 제1권 제1호, 2003.
- 김의영. “인터넷과 거버넌스.”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2.
- 김혜경·차미경. “국제 분야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성과.” 『한국시민사회연감 2003』. 서울: 시민의 신문, 2003.
- 문순홍. “생명운동의 논의구조와 전략.” 『환경과 생명』. 제8호. 1995.
- 박성준. “평화, 평화학 그리고 평화운동.” 조효제 엮음.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서울: 아르케, 2003.
- 박윤철. “대만의 시민사회와 기금회.” 『시민사회』. 2003년 가을호 11호.
- 박찬승. “동북아3국의 역사인식의 공유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 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신주백. “한일양국의 과거사 전산규명운동의 전개와 논리.”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한일관계의 역사와 미래 심포지엄 논문집, 2005.
- 안형기 외. “동북아3국 환경 NGO의 실태분석: 국제적 연대방안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2000.
- 양중희·임현진·정수복·박길성·구도완·홍성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왕명. “중국 시민사회의 현상과 특징.” 제3회 한일 시민사회포럼 발표문, 2005. 8. 20.
- 우평균. “러시아에서의 NGO발달과 시민사회: 1990년대의 낙관론과 비판적 현실.” 한국슬라브학회 제3차 학술회의 자료집, 2005. 9. 24.
- _____. “동북아시아의 환경운동과 환경 NGO: 평화운동의 가능성 모색.” 『평화학연구』. 제2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4.
- 유현석. “아시아 경제위기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변화 연구: APEC의 변화와 지역정체성의 정치경제.” 『국가전략』. 제7권 3호, 2001.
- 이남주. “중국 NGO 활동가들의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성공회 대학논총』. 제19호, 2000.
- 이성훈. “세계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쟁점.” 『시민과 세계』. 제4호, 2003.
- 이시재. “동아시아의 변동과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한국사회과학』. 제22권 1호, 2000.
-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1999.
- 임현진·공석기. “지구시민사회의 도전: 국가간 국제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역학관계.” 제2회 한국NGO학회·NPO학회 공동학술대회, 2004. 5. 20.
- 임현진·공석기. “NGO/NPO 연구의 최근 동향: 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NGO 연구』. 제1권 제1호, 2003.

정미애.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정수복·구도완. “동아시아의 환경운동.” 『한국사회과학』. 제21권 제2호, 1999.

주성수. “글로벌 시민사회, UN 및 NGO.” 조희연 외. 『NGO 가이드』.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최영중.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2000.

한종만. “동북아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협력 방안 연구: 러시아 환경 실태와 환경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8호, 1998.

Alshuler, Igor. “Glasnost, Perestroika, and Eco-Sovietology,” John Massey Steward. ed., *The Soviet Environment: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Brook, Christopher. “Regionalism and Globalism.”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r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Clark, John and Nuno Themudo. “The Age of Protest: Internet-Based ‘Dot Causes’ and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in John Clark ed.. *Globalizing Civic Engagement: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Action*.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2003.

Curley, Melissa G. “NGOs in China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South Cooperation.” *Asian Perspective*. vol.26, no.4. 2002.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 He, Baogang. "Transnational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Identity Question in East Asia." *Global Governance*. 10, 2004.
- Higgott, Richard. "Regionalism in the Asia-Pacific: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Richard Stubbs and Geoffrey R.D. Underhill. *Political Economy and the Changing Glob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Jung, Ku-Hyun. "Nongovernmental Initiatives in Korea for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Kim, Ho Ki.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n Regional Society."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Kanagawa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 Kim, Hyekyung. "East Asian Networking and the Role of Korean NGO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Nobel Peace Prize for President Kim Dae-jung. Seoul, 2001.
- Knup, Elizabeth.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 Overview." The Woodrow Wilson Center. China Environmental Series.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ject, 1998.
- Mathews, Jessica T. "Power Shift." *Foreign Affairs*. Vol. 76. No. 1, 1997.
- Moon, Chung-in and Dae-Won Ko. "Korea's Perspective o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

“We the peoples: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governance” Report of the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ited Nations–Civil Society Relations, 2004.

Payne, Anthony. “Globalization and Modes of Regionalist Governance.”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ei, Minxin. “Chinese Civil Society: An Empirical Analysis.” *Modern China*. vol. 24, no. 30. 1998.

Pianta, Mario and Federico Silva. “Parallel Summits of Global Civil Society: An Update.” in Mary Kaldor, Helmut Anheier, Marlies Glasius. eds. *Global Civi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Ravenhill, John. “The Growth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r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Setsuo Yokokura. “Japan’s NGO Activities and Solidarity within Northeast Asian Civil Society.”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Kanagawa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Shirasu, Takashi and Lau Sim–Yee. “Nongovernmental Initiatives in Japan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Tang, James.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NGO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 East Asia, and World Peace in the Age of Global Governance. Nov. 21-24. Bangkok, 2001.

Valencia, Mark J.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chievements and Future Prospects." in Tsuneo Akaha, *Politics and Economics in Northeast Asia: Nationalism and Regionalism in Cont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Woods, Lawrence. "Regional co-operation: the transnational dimension,"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r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Горный, М.Б. "Коалици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изаций третьего сектора)."-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о - в поисках пути. СПб. 1997.

Сунгуров, А.Ю. "Организации-посредники в структур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России." Полис, №.6. 1999.

Яницкий, О.Н.,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как сетевой процесс." Полис, №. 2. 2002.

廖曉義. "中國环境非政府組織和北京地球村." 陣光輝 編. 『中國民間組織』.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8.

上村 英明. "日本における人権 NGOと政府との連携—その歴史と課題 (人間の安全保障と行動する市民社会—新たな連携を求めて)."

『NIRA 政策研究』T4(166). 2001.

長谷川 公一. “環境問題と 社會運動.” 飯島伸子 編. 『環境社會學』. 有斐閣:ブックス, 1993.

3. 기타자료

2003년 제2회 한일시민사회 포럼 자료.

2005년 제3회 시민사회 포럼 자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주최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

『중앙일보』.

『시민의 신문』.

『통일뉴스』.

『中國環境報』.

www.enviroasia.info/Japan

www.nco.yandex.ru

www.npo-hiroba.or.jp

베평련 <http://www.jca.apc.org/beheiren/>

원수금 홈페이지 <http://www10.plala.or.jp/antiatom/>

일본 내각부 NPO국 홈페이지. <http://www.npo-homepage.go.jp/>

일본 NPO센터 홈페이지 <http://www.jnpoc.ne.jp/>

피스보트 <http://www.peaceboat.org>

피스액트 홈페이지 <http://peaceact.jca.apc.org>

APA 홈페이지 <http://www.yonip.com/main/apa.html>

GPPA 홈페이지 <http://www.gppac.net/>

<http://www.peacewomen.or.kr/news>

부 록

동북아시아 NGO 리스트

1. 반전평화

나와 우리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69-1 4층		
전화	02)747-3194	e-mail	nawauri@kornet.net
대표자	김현아, 노은희	홈페이지	www.nawauri.co.kr

독도수호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439 2층		
전화	02) 2253-5734	e-mail	tokdo@tokdo.com
대표자	김중대	홈페이지	www.tokdo.co.kr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 위원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947		
전화	031) 351-3388	e-mail	mehyangri@hanmail.net
대표자	권영길, 단병호, 문정현 외	홈페이지	mehyang.kfem.or.kr

민족화합운동연합 (민화련, Pan Korea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93-5		
전화	02) 2279-0148	e-mail	hanjokuk@kornet.net
대표자	주중환	홈페이지	www.hwahap.org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4층		
전화	02) 761-1213	e-mail	kcrc@kcrc.or.kr
대표자	이돈명	홈페이지	www.kcrc.or.kr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 3층		
전화	02) 845-0615	e-mail	nadrk@nownuri.net
대표자	오종렬	홈페이지	www.nadrk.org

범민련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 금성빌딩 202호		
전화	02) 712-8603	e-mail	bum615@jinbo.net
대표자		홈페이지	www.tongil-i.net

베트남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전화		e-mail	
대표자	이해동, 강정구	홈페이지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전화		e-mail	sofa@sofa.jinbo.net
대표자	문정현, 김현, 단병호, 이우정 등	홈페이지	sofa.jinbo.net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회의,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번지 총신빌딩 5층		
전화	02) 745-5872	e-mail	kncr@korea.com
대표자	배다지	홈페이지	onekorea.or.kr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232호		
전화	02)3277-5334	e-mail	kwaw@freechal.com
대표자	주해연	홈페이지	www.kwaw.org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One Korea Buddhist Movement)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83		
전화	02) 735-5558	e-mail	bubta@orgio.net
대표자	신법타	홈페이지	www.bubtanet.org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미본, Nat'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by US Troops in Korea)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53-8 경김회관 502호		
전화	02) 362-4067~8	e-mail	us@usacrime.or.kr
대표자	문대골	홈페이지	usacrime.or.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85-7		
전화	02-764-0615	e-mail	onecorea@onecorea.org
대표자	리인수, 임창경	홈페이지	www.onecorea.org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90-1 영월빌딩 502호		
전화	02)795-3315	e-mail	victims@victims.co.kr
대표자	김중대	홈페이지	www.victims.com

통일맞이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 5층		
전화	02) 679-8201	e-mail	
대표자	이재정	홈페이지	www.moon.or.kr

평화네트워크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종로구 필운동 184-3 2층		
전화	02) 733-3509	e-mail	
대표자	정육식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북조빌딩 502호		
전화	02)711-7292	e-mail	spark946@chollian.net
대표자	문규현	홈페이지	spark946.org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중구 수하동 16 환성빌딩 406호		
전화	02) 408-7997	e-mail	peace@peace21.net
대표자	이장희	홈페이지	www.peace21.net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 5층		
전화	02) 761-7042	e-mail	kcbl@netian.com
대표자	이승영	홈페이지	landmine.peacenet.or.kr

군인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군가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1층		
전화	02) 777-6602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armyngo.org

평화인권연대 (평화연대,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s)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21-97 3층 옥탑		
전화	02) 719-9085	e-mail	peace@jinbo.net
대표자	없음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홈페이지	peace.jinbo.net

대만촉진화평문교기금회(台灣促進和平文教基金會, Peacetime)			
소재 국가	대만	분야	반전·평화
주소	台灣 台北市中正區100鎮江街七號七樓之一		
전화	886-2-3393-3757	e-mail	peacetime@peace.org.tw
대표자	陳樹熙	홈페이지	www.peace.org.tw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소재 국가	대만	분야	반전·평화
주소	台北市民生東路3段156號17樓		
전화	02-2718-7373	e-mail	service@sef.org.tw
대표자		홈페이지	www.sef.org.tw

원경기금회(遠景基金會, Prospect Foundation)			
소재 국가	대만	분야	반전·평화
주소	100 台北市中正區汀州路三段60巷1號		
전화	886-2-2365-4366	e-mail	info@pf.org.tw
대표자	楊璟璇	홈페이지	www.pf.org.tw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의 中國二戰勞工團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北京市丰台區盧溝橋宛平城內街 101号		
전화	010-83892355-231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warslave.net

918전쟁연구회(918戰爭研究會)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沈陽市和平區五里河 27-7-2-1-2		
전화	02481616905	e-mail	syzhangyb@sohu.com
대표자	張一波	홈페이지	918war.tongtu.net

중국혈침(中國血鑒, China Blood History)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沈偉程 浙ICP備05000670号		
전화		e-mail	
대표자	王選	홈페이지	www.blood918.com

731세균전재판(731細菌戰裁判)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역사
주소	上海市市場中路7号203室 (虹口創業園區內)		
전화	021-65501241	e-mail	joyance_fang@yahoo.com.cn
대표자	方崢	홈페이지	http://www.731cn.org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北京市台基厂大街一号 (友誼館)		
전화	86-10-65270179	e-mail	csc_cn118@china.com
대표자	陳昊蘇	홈페이지	www.cpaffc.org.cn

中國人民爭取和平裁軍協會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北京市海澱區万壽路15号		
전화	86-10-6827-1736	e-mail	cpapd@cpad.org.cn
대표자	何魯麗	홈페이지	

中國國際民間組織合作促進會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			
소재 국가	중국	분야	반전·평화
주소	北京市北三环中路18号		
전화	86-10-82013960	e-mail	info@cango.org
대표자	王粵	홈페이지	www.cango.org

Asia Pacific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ARENA)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교류)			
소재 국가	홍콩	분야	반전·평화
주소	Flat 6, 13/F, Blk A, Fuk Keung Industrial Bldg, 66-68 Tong Mi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852-2805-6193	e-mail	arena@asianexchange.org
대표자	Agnes Khoo, Aida Jean Manipon	홈페이지	www.arenaonline.org

Asia Peace Alliance (APA) (아시아 평화연합)			
소재 국가	홍콩	분야	반전·평화
주소	Flat 6, 13/F, Blk A, Fuk Keung Industrial Bldg, 66-68 Tong Mi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852-2805-6193	e-mail	apa@yonip.com
대표자		홈페이지	www.yonip.com/main/apa.html

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 (아시아민중진보센터)			
소재 국가	홍콩	분야	반전·평화
주소	52 Princess Margaret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852-2714-5123	e-mail	hotline@acpp.org
대표자	Eppie Lam	홈페이지	www.acpp.org

地雷廢絶日本キャンペーン (지뢰폐절 일본캠페인) Japan Campaign to Ban Landmines (JCBL)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10-0015 東京都台東區東上野1-20-6		
전화	(81)3834-2388	e-mail	banmines@jca.apc.org
대표자	北川 康弘 (키타가와 야스히로)	홈페이지	www.jca.apc.org/banmines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原水協) The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13-8464 東京都文京區湯島2-4-4		
전화	(81)3-5842-6031	e-mail	antiatom@topaz.plala.or.jp
대표자	赤松 宏一 (아카마츠 코우이치)	홈페이지	www10.plala.or.jp/antiatom

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原水禁) Japan Congress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01-0062 東京都千代田區神田駿河台3-2-11		
전화	(81)3-5289-8224	e-mail	gensuikin@jca.ax.apc.org
대표자	岩松 繁俊 (이와마쓰 시게토시)	홈페이지	www.gensuikin.org

ピース・デポ (피스 데포, Peace Depot)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223-0051 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箕輪町3-3-1		
전화	(81)45-563-5101	e-mail	office@peacedepot.org
대표자	梅林 宏道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홈페이지	www.peacedepot.org

日本平和會議 (일본평화회의)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05-0014 東京都港區芝1-4-9		
전화	(81)3-3451-6377	e-mail	info@j-peace.org
대표자	岩崎 允胤	홈페이지	j-peace.org

リムピース (Rim Peac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97-0013 東京都福生市武藏野台1-3-7		
전화	(81)42-551-8906	e-mail	office@rimpeace.or.jp
대표자	遠藤 洋一 (엔도 요이치)	홈페이지	www.rimpeace.or.jp

平和市民連絡會 평화시민연락회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902-61 沖縄縣那覇市古島119-1, 407		
전화	(81)98-885-8230	e-mail	heiwa-sr@jca.apc.org
대표자	新崎 盛暉	홈페이지	www.jca.apc.org/heiwa-sr/jp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포럼 평화 인권 환경, Peace Forum)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인권, 환경
주소	東京都千代田區神田駿河台3-2-11		
전화	(81)3-5289-8222	e-mail	peace-forum@jca.apc.org
대표자	江橋 崇 (에바시 타카시) 岩松 繁俊 (이와마쓰 시게 토시)	홈페이지	www.peace-forum.com

ピープルズプラン研究所 (피플즈 플랜 연구소, People's Plan Study Group)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69-0072 東京都新宿區大久保2-4-15, 3F		
전화		e-mail	ppsg@jca.apc.org
대표자	青山 薫 (아오야마 카오루) 小倉 利丸(오구라 토시마루)	홈페이지	www.jca.apc.org/ppsg/

ピース・ボート (피스 보트, Peace Boat)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인권, 역사
주소	169-0075 東京都新宿區高田馬場 3-14-3		
전화	(81)3-3363-8047	e-mail	aid@peaceboat.gr.jp
대표자	吉岡 達也(오시오카 타쓰야)	홈페이지	www.peaceboat.org

世界宗教者平和會議日本委員會(세계종교자평화회의 일본위원회,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66-0012 東京都杉並區和田2-6-1		
전화	(81)3-3384-2337	e-mail	info@wcrp.or.jp
대표자	白柳 誠一 (시라야나기 세이치)	홈페이지	www.wcrp.or.jp

日本紛争予防センター (일본분쟁예방센터) Jap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06-0032 東京都港區六本木5-10-20, 4 F		
전화	(81)3-5772-0078	e-mail	tokyo@jccp.gr.jp
대표자	明石 康 (아카시 야스시)	홈페이지	www.jccp.gr.jp

國連支援交流協會 (유엔지원교류협회)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United Nations			
소재 국가	일본	분야	반전·평화
주소	101-0052 東京都千代田區神田小川町2-2, 3F		
전화	(81)3-3518-8300	e-mail	office@fsun.org
대표자	渡辺 利夫 (와타나베 토시오)	홈페이지	www.fsun.org

Антимилитаристская Радика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급진반군대협회)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Antimilitarist Radical Association 103047 Москва, Печатников пер.6		
전화	+7 095 208 18 05	e-mail	ara@ara.ru
대표자	Andrei Rodionov	홈페이지	www.ara.ru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 (아프가니스탄전쟁 참전용사 연합)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г. Москва, ул. 8-я Радиальная, д. 2.		
전화	+7 095 327-50-55	e-mail	info@rsva.net
대표자	Aleksander Kotenev	홈페이지	

Афганвет (아프간벤테)			
소재 국가		분야	반전·평화
주소			
전화		e-mail	mail@afganvet.ru
대표자		홈페이지	www.afganvet.ru

Правозащита (Legal assistance)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От ст. м. Третьяковская Москва, Пыжевский пер., 7, кабинет 1 Здание Поч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전화	+7 095 798-56-78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prizyvnik.ru

NAT_Russia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Training Centre in Yaroslav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Main Building, office 105, 7, Nezhinskaya str., Moscow		
전화	+7 095 441 63 75	e-mail	centre@russia-nato.info
대표자	Leonid Mayorov	홈페이지	www.centre.russia-nato.info

Союз комитетов солдатских матерей России (Union of the Committees of Solders' Mothers of Russi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Luchnikov per., 4, entr.3, room 5 101000 Moscow		
전화	+7 095 928-25-06	e-mail	ucsmr1989@yahoo.com
대표자		홈페이지	www.ucsmr.ru

Обелиск (Obelisk)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630117 г.Новосибирск-117 а/я 450		
전화	32-77-81	e-mail	
대표자	Косых Мария Федоровна (마리아 페도로브나)	홈페이지	cip.nsk.su/win/obr.html

Ветерная последних войн-вместе (전쟁용사회- 쌍뜨 빼제르부르크 참전용사공공정보기금)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191119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ул.Черняховского, 33, “Дукс”		
전화	164-4877	e-mail	vova@dux.ru
대표자	Владимир Аркадьевич (블라지미르 아르카지예비치)	홈페이지	www.veteran.spb.ru

КРОО “Союз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카렐리아공화국내) 체첸전쟁 참전용사 연합회)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전화	76-72-83	e-mail	sojuz@onego.ru
대표자	Daniel Nikolaevich Gvozdev	홈페이지	onego.ru/win/pages/sojuz/about.htm

Ассоциация “Отечество” (Fatherland)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173003, Новгород, ул. Брессова(Зееринская), 16, корп. 1		
전화	(81622) 77406	e-mail	nbar@novgorod.net
대표자	Баран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 вич (알렉산드로비치)	홈페이지	www.novgorod.net/~nbar

Фонд, “Право Матери”(Foundation of Mother’s Right)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반전·평화
주소			
전화		e-mail	mright@rosmail.ru
대표자	Veronica Marchenco	홈페이지	whra.org/mright/index.htm

2. 인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인천 남동구 간석4동 896-6 4층		
전화	032)423-9708	e-mail	ispp@saramdl.net
대표자	신현수	홈페이지	http://www.ispp.or.kr

한국인권재단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402호		
전화	02) 6261-1210	e-mail	khrf@humanrights.or.kr
대표자	신용석	홈페이지	www.humanrights.or.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6호		
전화	02) 744-3717	e-mail	kncc@kncc.or.kr
대표자	김정명 위원장	홈페이지	http://www.kncc.or.kr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중구 명동2가 1-19		
전화	02)777-0643	e-mail	chrc@chollian.net
대표자	김형태	홈페이지	www.cathrights.or.kr

지문날인반대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전화		e-mail	finger@jinbo.net
대표자		홈페이지	finger.jinbo.net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등부화재 4층		
전화	063) 278-9331	e-mail	onespark@chol.com
대표자		홈페이지	onespark.or.kr/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651-30		
전화	02)764-1684	e-mail	ugh@chollian.net
대표자	조찬배	홈페이지	

광주인권운동센터 (Liberty Equity Solidarity for Gwangju Humanrights Activities Center)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광주 북구 신안동 477-7 3층		
전화	062)529-7576	e-mail	hrw7576@hotmail.com
대표자	정근식	홈페이지	www.ingwon.org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대표자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인권실천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4-22		
전화	02)749-9004	e-mail	hrights@chollian.net
대표자	곽노현 외	홈페이지	www.hrights.or.kr

울산인권운동연대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울산 중구 북정동 80-37 3층		
전화		e-mail	ulsanhr@ulsanhr.jinbo.net
대표자	최민식	홈페이지	ulsanhr.jinbo.net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 회관 708호		
전화	02)765-4126	e-mail	jys03090@hanmail.net
대표자	전영순	홈페이지	www.samchung77.or.kr

불교인권위원회 (불인위,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		
전화	02) 734- 6401	e-mail	budhr@komet.net
대표자	박용모, 최국태, 한상범	홈페이지	

부산인권센터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660-16 3층		
전화	051-803-2880	e-mail	humanslee@hanmail.net
대표자	원형은	홈페이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Mingahyup Human Rights Group)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02)763-2606	e-mail	minka21@hanmail.net
대표자	조순덕	홈페이지	www.minkahyup.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e-mail	m321@chollian.net
대표자	최병모	홈페이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추모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평동 75-6 2층		
전화	02)392-7504	e-mail	yolsa@nownuri.net
대표자	남상헌	홈페이지	

다산인권센터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전화	031)213-2105	e-mail	humadasan@hanmail.net
대표자	송원찬	홈페이지	www.rights.or.kr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IK)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대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36호		
전화	053)423-2533	e-mail	amnesty@amnesty.or.kr
대표자	고은태	홈페이지	www.amnesty.or.kr

국제민주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전화	02) 3675-5808	e-mail	khis21@empal.com
대표자	이해동, 변연식, 이정옥 외	홈페이지	www.khis.or.kr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5층		
전화	02-2069-1853	e-mail	antins17@empal.com
대표자		홈페이지	freedom.jinbo.net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난함께, Fellowship for the Suffers)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우체국 사서함 52호		
전화	02)393-4662	e-mail	gonan@jinbo.net
대표자	정진권	홈페이지	gonan.jinbo.net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이노)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70-3 2층		
전화	032) 428-8100	e-mail	migrant114@migrant114.org
대표자	이왕준	홈페이지	www.migrant114.org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권
주소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전화	02)747-6831	e-mail	jcmk@cmk.org
대표자	최의팔, 이정호, 석원정 외	홈페이지	www.jcmk.org

중국인권연구회(中國人權研究會)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인권
주소	北京市海澱區蓮花池東路北小馬厂6号26層		
전화	010-58891319	e-mail	
대표자	周覺	홈페이지	www.humanrights.cn

중국인권발전기금회(中國人權發展基金會)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인권
주소			
전화		e-mail	
대표자	黃華	홈페이지	

アジア・太平洋人権情報センター (아시아 태평양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52-0007 大阪市港區弁天1-2-1-1500, 1-15F		
전화	(81)6-6577-3578	e-mail	webmail@hurights.or.jp
대표자	武者小路 公秀 (무샤코우지 킨히데)	홈페이지	www.hurights.or.jp

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日本 (일본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1-0048 東京都千代田區神田司町2-7, 7F		
전화	(81)3-3518-6777	e-mail	info@amnesty.or.jp
대표자	佃 未音 (쓰쿠다 미온)	홈페이지	www.amnesty.or.jp

救え！北朝鮮の民衆・緊急行動ネットワーク (RENK) 구해라! 북한 민중/긴급 행동 네트워크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大阪府高槻市美ヶ丘1-15-8		
전화	(81)72-681-9338	e-mail	renk@ro.bekkoame.ne.jp
대표자	李英和	홈페이지	www.bekkoame.ne.jp/ro/renk

在日大韓民國國民団 (民団)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 민단)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6-8585 東京都港區南麻布1-7-32		
전화	(81)3-3454-4901	e-mail	nfo@mindan.org
대표자	김재숙	홈페이지	mindan.org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民權協)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Korean Rights Group Japan (KRG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37-0025 大阪府大阪市東成區中道3-14-17, 2F		
전화	(81)6-6978-7676	e-mail	kr-g-o@mxr.mesh.ne.jp
대표자	宋 悟 (송어)	홈페이지	www2u.biglobe.ne.jp/~kr-g

多文化共生センター (다문화 공생 센터) Center for Multicultural Information & Assistanc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30-0003 大阪市北區堂島 2-1-25-705		
전화	(81)6-6344-1143	e-mail	office@tabunka.jp
대표자	阿部 一朗 (아베 이치로)	홈페이지	www.tabunka.jp

移住労働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12-0002 東京都文京區小石川 2-17-41, 2-203		
전화	(81)3-5802-6033	e-mail	fmwj@jca.apc.org
대표자	大津 恵子 (오츠 케이코) 외	홈페이지	www.jca.apc.org/migrant-net

NGO 神戸外国人救援ネット (NGO 코베 외국인 구원 넷) NGO Network for Foreigner's Assistance KOB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650-0004 兵庫縣神戸市中央區下山手通7-17-1		
전화	(81)78-341-5710	e-mail	gqnet@poppy.ocn.ne.jp
대표자	飛田 雄一 (토비타 유이치)	홈페이지	www12.ocn.ne.jp/~gqnet

反差別国際運動日本委員会 (반차별 국제운동 일본위원회, IMADR-JC)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6-0032 東京都港區六本木3-5-11		
전화	(81)3-3568-7709	e-mail	imadrjc@imadr.org
대표자	武者小路 公秀 (무사코우지 킨히데)	홈페이지	www.imadr.org/japan

部落解放同盟 (부락해방동맹, Buraku Liberation Leagu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東京都港区六本木3-5-11		
전화	(81)3-3586-7007	e-mail	honbu@blj.gr.jp
대표자	組坂 繁之 (쿠미사카 시게유키)	홈페이지	www.blj.gr.jp

自由人權協會 (자유인권협회) Japan Civil Liberties Unio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5-0002 東京都港区愛宕 1-6-7-306		
전화	(81)3-3437-5466	e-mail	jclu@jclu.org
대표자	弘中 惇一郎 (히로나카 준이치로)	홈페이지	jclu.org

日本NPOセンター (일본NPO센터, Japan NPO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0-0005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6-1-616		
전화	(81)3-5220-3911	e-mail	jncenter@jnpoc.ne.jp
대표자	播磨 靖夫 (하리마 야스오)	홈페이지	www.jnpoc.ne.jp

YWCA ジャパン (YWCA 재팬)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2-0074 東京都千代田区九段南 4-8-8		
전화	(81)3-3264-0661	e-mail	office-japan@ywca.or.jp
대표자	青木 恵子 (아오키 케이코)	홈페이지	www.ywca.or.jp

フィフティー・ネット (Fifty-net)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34-0025 大阪府大阪市都島區片町 1-4-2-317		
전화	(81)6-6355-7140	e-mail	fifty@triton.ocn.ne.jp
대표자	森屋 裕子 (모리야 유코)	홈페이지	www4.ocn.ne.jp/~fiftynet

NPO 2050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區南麻布3-5-12-101		
전화	(81)3-5420-1425	e-mail	mail@npo2050.org
대표자	北谷 勝秀 (키타다니 카츠히데)	홈페이지	www.npo2050.org

神奈川 女のスペース [みずら] (카나가와 여성을 위한 스페이스[미즈라]) Kanagawa Women's Space "MsLA"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221-0057 神奈川縣横浜市神奈川區青木町 2-1-613		
전화	(81)45-451-3776	e-mail	
대표자	福原 啓子 (후쿠하라 케이코)	홈페이지	

C's=市民活動を支える制度をつくる會 (시민 활동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모임)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62-0821 東京都新宿區津久戸町 4-7		
전화	(81)3-5227-2008	e-mail	npoweb@abelia.ocn.ne.jp
대표자	武者小路 公秀 (무샤코우지 킨히데)	홈페이지	www.npoweb.jp

新潟國際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니가타 국제자원봉사센터) Niigata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951-8126 新潟縣新潟市學校町通2-5293-3, 4F		
전화	(81)25-222-7899	e-mail	info@nvcjapan.org
대표자	三浦 眞	홈페이지	nvcjapan.org

NPOサポートセンター (NPO 지원센터, NPO Support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8-12-11		
전화	(81)3-3547-3206	e-mail	center@npo-sc.org
대표자	山岸 秀雄 (야마가시 히데오)	홈페이지	www.npo-sc.org

市民立法機構 (시민입법기구, Citizens Initiatives)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2-0083 東京都千代田區麹町2-7-3, 2F		
전화	(81)3-3234-3844	e-mail	joffice@citizens-i.org
대표자	須田春海 (스다 하루미)	홈페이지	www.citizens-i.org

オックスファム ジャパン (옥스팜 재팬, Oxfam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10-0015 東京都台東區東上野1-20-6, 2F		
전화	(81)3-3834-1556	e-mail	info@oxfam.jp
대표자	重田 康博	홈페이지	重田 康博

國際協力NGOセンター (국제협력 NGO센터) 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NIC)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01-0063 東京都千代田區神田錦町2-9-1, 5F		
전화	(81)3-3294-5370	e-mail	global-citizen@janic.org
대표자	船戸 良隆 (후나도 요시타카)	홈페이지	www.janic.org

日本國連HCR協會 (일본UNHCR협회, Japan for UNHC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50-0001 東京都澁谷區神宮前5-53-70-6F		
전화	(81)3-3499-2450	e-mail	info@japanforunhcr.org
대표자	赤野間 征盛 (아카노마 유키모리)	홈페이지	www.japanforunhcr.org

難民を助ける會 (난민을 돕는 모임) Assoco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AAR,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41-0021 東京都品川區上大崎2-12-2, 5F		
전화	(81)3-5423-4511	e-mail	aar@aarjapan.gr.jp
대표자	相馬 雪香 (소우마 유키카)	홈페이지	www.aarjapan.gr.jp

難民支援協會 (난민지원협회,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 (JA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62-0825 東京都新宿區神樂坂2-19-406		
전화	(81)3-5225-2135	e-mail	info@refugee.or.jp
대표자	中村 義幸 (나카무라 요시유키)	홈페이지	www.refugee.or.jp

日本國際飢餓對策機構 (일본국제기아대책기구) Japan International Food for the Hungry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81-0802 大阪府八尾市北本町2-4-10		
전화	(81)729-95-0123	e-mail	jifh@mx.mesh.ne.jp
대표자	堀内 顯 (호리우치 아키라)	홈페이지	www.fhi.net./jifh

ジェン (젠 JEN Japan Emergency NGO)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69-0073 東京都新宿區百人町2-26-5, 4F		
전화	(81)3-5332-9825	e-mail	info@jen-npo.org
대표자	小山内 美江子 (오사나이 미에코)	홈페이지	

シャンティ國際ボランティア會 (산티 국제 자원봉사회) Shanti Volunteer Association(SVA)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60-0015 東京都新宿區大京町31, 2F-3F		
전화	(81)3-5360-1233	e-mail	info@sva.or.jp
대표자	松永 然道	홈페이지	www.sva.or.jp

シャプラニール=市民による海外協力の會 (샤프라닐= 시민 해외협력회) SHAPLA NEER=Citizens' Committee in Japan for Overseas support)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169-8611 東京都新宿區西早稻田2-3-1		
전화	(81)3-3202-7863	e-mail	info@shaplaneer.org
대표자	大橋 正明 (오오하시 마사아키)	홈페이지	www.shaplaneer.org

神奈川県人権センター (카나가와 인권 센터 Kanagawa human rights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235-0036 神奈川県横浜市磯子区中原1-1-28		
전화	(81)45-773-2250	e-mail	jinken@ro.bekkoame.ne.jp
대표자	(江原 由美子) 에하라 유미코	홈페이지	www.bekkoame.ne.jp/ro/jinken

코리아NGO센터 (코리아 NGO 센터, Korea NGO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인권
주소	537-0025 大阪市東成區中道 3-14-17		
전화	(81)6-6978-7676	e-mail	center@korea-ngo.org
대표자	박정혜, 송오, 정갑수	홈페이지	korea-ngo.org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комитет помощи беженцам (Civic Assistance-the Russian Committee for refugees)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27006 Moscow Doggorukovskaya Str., 33 building 6		
전화	+7 095 973 54 74	e-mail	refugeeru@yandex.ru
대표자	Svetlana Gannushkina	홈페이지	www.refugee.ru

Правое общество (공공의권리-인권수호)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7 383-2 46 40 80	e-mail	pravol@mail.ru
대표자	쿠브쉬노프 겐나지예비치 (К. Геннадьевич)	홈페이지	provo.org.ru

Мемориал-Ряза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메모리알)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e-mail	info@hro.org
대표자	Сергей Смирнов (세르게이 스미르노프)	홈페이지	www.hro.org

Московская Хельсинская Группа(Moscow Helsinki Group)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07045 Москва, Большой Толочин пер., д.22, стр.1		
전화	+7 095 207-60-69	e-mail	mhg-main@online.ptt.ru
대표자	Ludmilla Alexeeva	홈페이지	www.mhg.ru

Незаконные Москвы (Moscow Illegals/ Human Rights in Moscow)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e-mail	info@nelegal.ru
대표자	Alexandr Milobanov	홈페이지	www.nelegal.ru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시민사회발전연구소)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07076 г. Москва, Стромьинский пер., д. 18, корп. 4		
전화	+7 095-287-6066	e-mail	priemnaya@sovetspamfilova.ru
대표자	Памфилова Элл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알렉산드로브나)	홈페이지	www.h-rights.ru

Комитет п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республике Татарстан (The Committee for protection oh Human Right in Tatarstan)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Office 56, House 35a, Ershova str., Kazan, Tatarstan Republic, Russia, 420045 Post box: 1		
전화	7 (8432) 73 57 3	e-mail	nalimov@mi.ru
대표자	Dmity V. Vokhmianin	홈페이지	humrights.mi.ru

Института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인권연구소)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07084, Москва, Мясницкая ул., Д.47		
전화	095-207-1922	e-mail	press-sl@ropnet.ru
대표자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Лук ин (블라지미르 루킨)	홈페이지	ombudsman.gov.ru

Нижегород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аво Человека (Nizhny Novgorod Society for Human Rights, NNSHR)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603022. г.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Окский съезд2, Комн.122		
전화	(8 312) 30-07-14	e-mail	hrnnov@glasnet.ru
대표자	Серген Шимоволос (세르게이 쉬모보로스)	홈페이지	www.uic.nnov.ru

Группа Движение без Границ (국경없는 운동 그룹)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21019 Москва, ул Новый Арбат, д.11.19 этаж комн 1918. 1920		
전화	095-291-5872	e-mail	leo@ints.ru
대표자	Алтшрев борис Ливобич (알트쉬레프 리보비취)	홈페이지	www.openweb.ru

Лаураветлан (라우라베트란)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659322, Росий я, Алтай ский край , д13, офис624		
전화	3854-30-33-43	e-mail	indigenous@mail.biysk.ru
대표자	Гульвайи ра Шерматова (굴리바이 라 웨르마토바)	홈페이지	www.indigenous.ru

안드레이 사하로프 재단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07120,Москва, Земляной вал57, стр6		
전화	095-916-24-80	e-mail	webmaster@sakharov-center.ru
대표자	Elena Bonner	홈페이지	www.sakharov-center.ru

Общероссий ская сеть Публичных Центров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ПЦПИ) (전러시아공익법률정보센터)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812-740-70-88	e-mail	pcpi@kodeks.ru
대표자		홈페이지	www.pcpi.ru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Партия Росий (러시아보수당)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e-mail	info@kpr.ru
대표자	Лев Удожко(레 프우도쉬코)	홈페이지	eng.kpr.ru

Уральская Правозащита (우랄(지역) 권리보호)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620095, г.экатеринбург, а/я49		
전화	3432-77-17-25	e-mail	vip@infoteck.ru
대표자	Леонид К. Вальтервич (레오니드 발리체르비취)	홈페이지	www.humanrightsural.ru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ген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Moscow Center for Gender Studies)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Studies of the Population, RAS Nakhimovsky Pr. 32, Moscow, 117218, Russia		
전화	+7 095 125 6419	e-mail	mcgs@inst-econ.org.ru
대표자		홈페이지	www.gender.ru

Фемина (Femin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Naberezhnye Chelny, 23/10 "G," Floor.2.		
전화	(8552)56-04-28	e-mail	info@femin.ru
대표자	Elena Mashkova	홈페이지	www.femin.ru

База дальних организаций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Women's Information Network)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7 095 291 2274	e-mail	womnet@glasnet.ru
대표자	Tatiana Troinova	홈페이지	womnet.ru/db/

Движение женщин России (Women's Movement of Russi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03009 Moscow, Balshaya Dmitrovka, 7/5, Room 309		
전화	7 095 292 54 13	e-mail	oopdgr@moscw.portal.ru
대표자	E. F. Lakhova	홈페이지	www.owl.ru/win/women/wmr/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женского форума (Information Center of the Independent Women's Forum)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p/b 230. 119019 Moscow		
전화	7 095 366 92 74	e-mail	iciwf@okb-telecom.net
대표자		홈페이지	www.owl.ru/win/women/org001

Анна (Ann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전화	7 095 473 63 61	e-mail	annamosc@rol.ru
대표자	Писклакова Марина	홈페이지	www.owl.ru/anna

Вера, Надежда, Любовь (Belief, Hope, Love)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69 Moskovskaya St., Novocherkassk, Rostov Region, 346428 Russia		
전화	+7-86352-41017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home.novoch.ru/~vnl

Восток-Запад (Women's Innovation Fund 'East-West')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인권
주소	117607, Москва, а/я N 24		
전화	+7 095 931 3123	e-mail	femrus@online.ru
대표자		홈페이지	www.owl.ru/win/zhif/

3. 환경

그린헤밀리운동연합 (Green Family)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6-6 광성빌딩 2층		
전화	02) 732-0890	e-mail	green@greenfamily.or.kr
대표자	박정희	홈페이지	www.greenfamily.or.kr

검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마포구 창전동 2-28 2층		
전화	02)332-6044	e-mail	dosi@dosi.or.kr
대표자	강병기	홈페이지	www.dosi.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120-1 2층		
전화	02)365-8900	e-mail	kcei@chollian.net
대표자		홈페이지	kcems.peacenet.or.kr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10호		
전화	02)708-7855	e-mail	kngt@chollian.net
대표자	장만기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녹색대학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92 감나무집		
전화	02)364-3605	e-mail	ngu@ngu.or.kr
대표자	장희익	홈페이지	www.ngu.or.kr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녹색미래, Green Future)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5-2 한전빌딩 2층		
전화	02) 3672-4900	e-mail	greenfuture@korea.com
대표자	유재현, 강만길, 일면	홈페이지	www.greenfuture.or.kr

녹색소비자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06호		
전화	02) 763-4972	e-mail	kgcn@gcn.or.kr
대표자	양지원, 박명희	홈페이지	www.gdn.or.kr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전화	02) 747-8500	e-mail	greenkorea@greenkorea.org
대표자	박영신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보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광주 북구 누문동 7-1 밀알회관 3층		
전화	062)528-1187	e-mail	mt1187@hanmail.net
대표자	일철	홈페이지	www.mudeung.org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명의 숲)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1-51 수산빌딩 4층		
전화	02)735-3232	e-mail	forestfl@chollian.net
대표자	김후란, 우보명	홈페이지	www.forest.or.kr

생태보전시민모임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		
전화	02) 353-9400	e-mail	ecoclub@chollian.net
대표자	이경재	홈페이지	www.ecoclub.or.kr

시민생활환경회의 (Civic Life Environment Committee)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광주 북구 용전동 1223-22		
전화	062) 572-3980	e-mail	clec@hanafos.com
대표자	최준식	홈페이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쓰시협, Korea Waste Movement Network)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삼환빌딩 별관 501호		
전화	02) 744-5305	e-mail	zerowaste@hanmail.net
대표자	김재욱	홈페이지	www.waste21.or.kr

여성환경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화동 97 2층		
전화	02) 723-7215	e-mail	kwen21@chollian.net
대표자	박영숙	홈페이지	www.ecofem.net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화동 138-6 1층		
전화	02) 733-1884	e-mail	indramang@indramang.org
대표자	도법	홈페이지	www.indramang.org

제주참여환경연대 (Jeju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 Env. Preservation)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제주시 이도 2동 1077 2층		
전화	064)753-0844	e-mail	js@jejungo.net
대표자	조성윤, 이지훈	홈페이지	www.jejungo.net

지리산생명연대 (Jirisan Network)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508		
전화	063)636-1945	e-mail	savejiri@kornet.net
대표자	도법	홈페이지	www.savejirisan.org

한살림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 1동 145-5 5층		
전화	02)3486-9696	e-mail	hansalim@chollian.net
대표자	박재일	홈페이지	www.hansalim.or.kr

한국불교환경교육원 (Buddhist Academy for Ecological Awakening)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 587-8997	e-mail	ecobuddha@jungto.org
대표자	유수	홈페이지	www.jungto.org/baea

지속가능사회를위한시민네트워크 (지속가능네트워크)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부암동 322-2		
전화	02) 394-7394	e-mail	sdn@ksdn.or.kr
대표자	김성수	홈페이지	www.ksdn.or.kr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공연, Environment & Pollution Research Group)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501호		
전화	02) 745-4033	e-mail	enthink@chol.net
대표자	장영기	홈페이지	www.ecochollian.or.kr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02) 735-7000	e-mail	web@kfem.or.kr
대표자	김진현, 이세중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정의시민연대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성동 5가 100-4		
전화	02) 743-4747	e-mail	eco@eco.or.kr
대표자	이정전, 박은경	홈페이지	www.eco.or.kr

Conservation International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Conservation Biology Building, College of Life Sciences, Peking University, Beijing 100871		
전화	86-10-62761034	e-mail	sunshan@conservation.org.cn
대표자	Dr. Lu Zhi	홈페이지	www.conservation.org

중국배오권교역(中國排污權交易, Environmental Defense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中國項目辦公室 北京100873中關村南大街1号友誼賓館雅園64732房間		
전화	+86 (0)10 6849 8372	e-mail	contact@cet.net.cn
대표자		홈페이지	www.cet.net.cn

지구의 친구들 (地球之友, Friends of the Earth HongKong in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通州區武夷花園牡丹雅園 29樓 241單元4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1100		
전화	+86 (0)10 89525998	e-mail	cww@public3.bta.net.cn
대표자	Chen Ying (陳英)	홈페이지	www.foe.org.hk

Global Green Grants Fund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Beijing Postbox 100102-20		
전화	+86 (0)10 6475 0241	e-mail	wenbo2@yahoo.com
대표자	Wen Bo	홈페이지	www.greengrants.org

Greenpeace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北京100027東城區藍籌名座D座1單元601室		
전화	86 (0)10 6554 6931	e-mail	info@cn.greenpeace.org
대표자	盧思騁(Lu Sicheng)	홈페이지	www.greenpeace-china.org.hk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中國林業研究院 PO Box 17, China Academy of Forestry		
전화	+86 (0)10 6288 8849	e-mail	pmcvey@savingcranes.org
대표자	Paul McVey	홈페이지	www.savingcranes.org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South-North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ijing		
전화	+86 10 8652-1198	e-mail	timothy@hui.com.cn
대표자	Timothy Hui	홈페이지	www.nrdc.org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c/o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3663 Zhongshan North Road Shanghai 200062		
전화	+86 (0)21 6223 2361	e-mail	ezhang@wcs.org
대표자	Endi Zhang	홈페이지	www.wcs.org

World Wide Fund for Nature China Programme Office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Room 701 Kai Cheng Bldg, 10 Yab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0		
전화	+86 (0)10 6595 9891	e-mail	wwfchina@mailhost.cinet.com.cn
대표자	Jim Harkness	홈페이지	www.panda.org

Animals Asia Foundation in Chin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四川省成都市新都区龍橋鎮青橋村亞洲黑熊救護中心		
전화	+86 (0)28 8307 9033	e-mail	jrobinson@animalsasia.org
대표자	Jill Robinson	홈페이지	www.animalsasia.org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2-2-131 Tayuan Diplomatic Compound, 1 Xin Dong Lu, Beijing Chaoyang 100600		
전화	+86 (10) 8532 2699	e-mail	qinliyi@iucn.org
대표자	Qin Liyi (欽立毅)	홈페이지	www.iucn.org

The Nature Conservancy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External Relations Manager, Beijing Liaison Office Dongxiao Building,Zhongshan Park,Beijing 100031		
전화	+86 (0)10 6603 4445	e-mail	yanping@public.km.yn.cn
대표자	Yan Ping (嚴萍)	홈페이지	www.nature.org

Wetlands International - China Programme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Room 501 Grand Forest Hotel 3A Bei Sanhuan Zhonglu Beijing 100029		
전화	+86 (0)10 6237 7031	e-mail	klchen@public.bta.net.cn
대표자	Kelin Chen	홈페이지	ngo.asiapac.net/wetlands

US-China Environmental Fund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Room 1503 Building 7 Jinhui Jiayuan 58, Xizhimenbei Dajie Beijing 100088		
전화	+86 10 8229 3888	e-mail	chenleon@uscef.org
대표자	Mr. Leon Chen	홈페이지	www.uscef.org

Hong Kong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소재 국가	홍콩	분야	환경
주소	香港九龍尖沙咀金巴利道74-76號奇盛中心10樓B室		
전화	+852 2730 2628	e-mail	jmkwong@lycos.com
대표자	John Wong	홈페이지	members.shaw.ca/oceanlife/marine life

HOPE Worldwide Ltd			
소재 국가	홍콩	분야	환경
주소	香港北角英皇道250号 北角城中心1910室 1 Kornhill Road, Quarry Bay		
전화	+852 2588 1291	e-mail	jonathon@hopewww.org.hk
대표자	Jonathan Liu (劉立恒)	홈페이지	www.hopeworldwide.org.hk

International Fund for China's Environment			
소재 국가	중국	분야	환경
주소	Room 403, Zhong Yi Building 103 Jixiangli, Chaoyangmenwai		
전화	+86 (0)10 655 39741	e-mail	cmuc@china.com
대표자	Meng Liang (孟亮)	홈페이지	www.ifce.org

國際青年環境(국제 청년 환경) NGO : A SEED JAPAN (ASJ)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60-7484 東京都新宿區新宿5-4-23		
전화	(81)3-5366-7484	e-mail	asj@jca.apc.org
대표자	宮腰 義仁 (미야코시 요시히토)	홈페이지	www.aseed.org

日本環境會議 (일본 환경 회의, Japan Environmental Council)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86-8601 東京都國立市中2-1, 一橋大學大學院經濟學研究科 寺西俊一研究室		
전화	(81)42-580-8260	e-mail	stera@econ.hit-u.ac.jp
대표자	淡路 剛久 (아와지 타게히사)	홈페이지	www.einap.org/jec

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 (그린 피스 재팬, Green Peace,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60-0023 東京都新宿區西新宿 8-13-11, 2F		
전화	(81)3-5338-9800	e-mail	info@greenpeace.or.jp
대표자	Steve Shallhorn	홈페이지	www.greenpeace.or.jp

世界自然保護基金ジャパン (세계자연보호기금 재팬, WWF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05-0014 東京都港区芝3-1-14-6F		
전화	(81)3-3769-1711	e-mail	communi@wwf.or.jp
대표자	大内 照之 (오오우치 테루유키)	홈페이지	www.wwf.or.jp

地球環境行動會議 (지구환경행동회의, Global Environmental Actio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05-0003 東京都港区西新橋 1-1-3-304		
전화	(81)3-3503-7484	e-mail	gea@gea.or.jp
대표자	齋藤 十朗 (사이토 주로)	홈페이지	www.gea.or.jp

FoE ジャパン (FoE 재팬, Friends of the Earth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71-0031 東京都豊島区目白3-17-24, 2F		
전화	(81)3-3951-1081	e-mail	info@foejapan.org
대표자	岡崎 時春 (오카자키 토시하루)	홈페이지	www.foejapan.org

ネットワーク「地球村」(네트워크「지구촌」, Network Earth Villag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530-0027 大阪府北區堂山町1-5-301		
전화	(81)6-6311-0309	e-mail	office@chikyumura.org
대표자	高木 善之 (다카기 요시유키)	홈페이지	www.chikyumura.org

原子力資料情報室 (원자력 자료 정보실,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64-0003 東京都中野區東中野一丁目58-15, 3F		
전화	(81)3-5330-9520	e-mail	cnic-jp@po.ijinet.or.jp
대표자	山口 幸夫(야마구치 유키오) 柴 邦生(시바 구니오)	홈페이지	www.cnic.or.jp

環境持続社會研究センター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06-0047 東京都港區南麻布5-2-32, 2F		
전화	(81)3-3447-9585	e-mail	jacsces@jacsces.org
대표자	古澤 廣祐 (후루사와 코우유)	홈페이지	www.jacsces.org

グローバル・ビレッジ (글로벌 빌리지, Global Village (GV))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52-0035 東京都目黒區自由が丘2-16-29, 2F		
전화	(81)3-5731-6671	e-mail	gv@glovalvillage.or.jp
대표자	Safia Minney	홈페이지	www.glovalvillage.or.jp

オイスカ (오이스카 OISCA International)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68-0063 東京都杉並區和泉3-6-12		
전화	(81)3-3322-5161	e-mail	oisca@oisca.org
대표자	中野 良子 (나카노 요시코)	홈페이지	www.oisca.org

全國青年環境連盟 (エコリーグ) (전국청년환경연맹 Eco-Leagu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62-0825 東京都新宿區神樂坂2-19-507		
전화	(81)3-5225-7206	e-mail	eleague@mx.mesh.ne.jp
대표자	木戸 大介 ロベルト (기도 다이스케 로베르트)	홈페이지	el.eco-2000.net

アースウォッチ・ジャパン (아스 워치 재팬, Earth Watch, Japa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02-0075 東京都千代田區三番町24-25-5F		
전화	(81)3-3511-3360	e-mail	info@earthwatch.jp
대표자	難波 菊次郎 (난바 기쿠지로)	홈페이지	www.earthwatch.jp

地球環境と大氣汚染を考える全國民會議 (Citizens' Alliance for Saving the Atmosphere and the Earth)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540-0026 大阪市中央區內本町2-1-19, 10-470		
전화	(81)6-6910-6301	e-mail	office@casa.bnet.jp
대표자	山村 恒年 (야마무라 쓰네토시)	홈페이지	www.bnet.ne.jp/casa/index1.htm

緑の地球ネットワーク (녹색 지구 네트워크, Green Earth Network)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552-0012 大阪府大阪市港區市岡 1-4-24-50		
전화	(81)6-6576-6181	e-mail	gentree@dion4.kcom.ne.jp
대표자	立花 吉茂 (타치바나 요시시게)	홈페이지	homepage3.nifty.com/gentree

地球緑化センター (지구 녹화 센터, Green Earth Center)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104-0028 東京都中央区八重洲 2-7-4, 3F		
전화	(81)3-3241-6450	e-mail	
대표자	高橋 成雄 (타카하시 나리오)	홈페이지	www.kk.ij4u.or.jp/~gec

氣候ネットワーク (기후 네트워크, Kiko Network)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604-8124 京都府京都市中京區高倉通四條上ル305号		
전화	(81)75-254-1011	e-mail	kikonet@jca.apc.org
대표자	淺岡 美惠 (아사오카 미에)	홈페이지	www.jca.apc.org/kikonet

沙漠植林ボランティア協會 (사막식립자원봉사협회, Desert Planting Volunteer Association (DPVA))			
소재 국가	일본	분야	환경
주소	029-4302 岩手縣胆澤郡衣川村大坂51		
전화	(81)19-752-3629	e-mail	info@sashoku.org
대표자	菊地 豊 (기쿠치 유타카)	홈페이지	sashoku.org

Всемирный фонд дикой природы в России: за живую планету (WWF Russia, 세계야생기금 러시아지부: 살아있는 지구를 위해)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109240 Moscow, Nikoloyamskaya st.19 building 3		
전화	+7 095 727 09 39	e-mail	russia@wwf.ru
대표자		홈페이지	www.wwf.ru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оциально-экологический союз(국제사회환경연합)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전화		e-mail	
대표자	С. Забелин(자벨린)	홈페이지	

Greenpeace Russia(그린피스 러시아)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Moscow, Novaya Bashilovka 6		
전화	+7 095 257 41 16	e-mail	grussia@diala.greenpeace.ru
대표자		홈페이지	www.greenpeace.ru

Центр охраны дикой природы (생물다양성보존센터)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41, Vavilova Street, Office 2 117312 Moscow		
전화	+7 095 124 50 22, 124 50 11	e-mail	biodivers@biodiversity.ru
대표자	Alexey Zimenko	홈페이지	www.biodiversity.ru

Международное экологическое агенство (국제환경정보센터)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TEIA Box 105 190000 St. Petersburg, Russia		
전화	+7 (812) 323-4089	e-mail	vlad@teia.org
대표자	Alexander Shkrebets Nadaniel Trumbul	홈페이지	www.teia.ru

"Зеленый мир"-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녹색세계)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P.O. Box 68/7, Sosnovy Bor, Leningradskaya Oblast, 188537, Russia		
전화	(81369) 72991	e-mail	bodrov@sbor.net
대표자	Oleg Bodrov	홈페이지	www.greenworld.org.ru

Дети Балтики(발틱의 자식들)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P.O.box 21, Chebyshevskaya 14/1, Petrodvorets-St.Petersberg, 198504, Russia		
전화	+7 812 428 06 58	e-mail	olga.senova@spb.org.ru
대표자	Olga Senova	홈페이지	www.baltchild.org.ru

Союз охраны птиц России (러시아조류보존연합)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D. 60, Korp. 1, Shosse Entuziastov, Moscow 111123, Russia		
전화	+7 095 176 10 63	e-mail	mail@rbcu.ru
대표자		홈페이지	www.bcu.ru

Сохраним природу (Children's Telecommunication Project "Ecological Cooperation")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전화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ecocoop.ru/index_e.html

Псковский модельный лес (Pskov Model Forest, PMF)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181110 Pskov Region Strugi Krasnie, 18 Kholokhinskaya St.		
전화	7 (81132) 51187	e-mail	pskov@wwf.ru
대표자	Ekaterina Chernenkova	홈페이지	www.wwf.ru/pskov

Центр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러시아환경정책센터)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33, Leninsky Prospekt, Suite 326, Moscow 119071, Russia		
전화	7 095 952 2423	e-mail	ecopolicy@ecopolicy.ru
대표자	Alexey V. Yablokov	홈페이지	www.ecopolicy.ru

Вода Евразии (Ecological Foundation, "Water Eurasi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104, Pervomajskaya str., Ekaterinburg, 620219 Russia		
전화	7 343 374 01 81	e-mail	ecofond@mail.ur.ru
대표자	V.V. Bazhenov, V.G.Degtjar, G.G.Komonov, E.G.Khailov	홈페이지	www.ecofund.ru

Движение студенческих дружин по охране природы (Druzhinas for Nature Preservation Movement, DOP)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전화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http://dop.environment.ru

Феникс (Phoenix Fund)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Russia, Vladivostok, 690091, Petra Velikogo Str., 2, room 409		
전화	7 (4232) 205048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http://phoenix.01.ru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Пб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Agency, TEI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TEIA Box 105, 190000 st. Petersburg, Russia		
전화	+7 812 323 4089	e-mail	sasha@teia.org
대표자	Alexander Shkrebets, Nathaniel Trumbell	홈페이지	http://ecobase/teia.org

Нево-эковиль (The Center for Ecological Initiatives "Nevo Ecoville")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186750 Russia, Karelia, Sortavala, Suvorova st., 2		
전화	(+7-81430)2-36-43	e-mail	nevo@onego.ru
대표자		홈페이지	www.ongo.ru/win/pages/nevo

Эрика (Bryansk Regional Public organization ERICA)			
소재 국가	러시아	분야	환경
주소	с. Bryanks, Repin St. 16/61, K. 93		
전화	7 (0832) 44-60-59	e-mail	root@erica.bryansk.ru
대표자	Aleksey Chizhevsky, Alexander Anisichenko	홈페이지	www.broo-erica.org

4. 역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2가 35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층		
전화	02) 365-4016	e-mail	jdh@peacenet.or.kr
대표자	김윤옥, 이경숙	홈페이지	www.k-comfortwomen.com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 2층		
전화	053) 257-1431	e-mail	tghalmae@hanmail.net
대표자	곽동협	홈페이지	www.1945815.or.kr

나눔의 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65		
전화	031)768-0064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nanum.org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90-1 영월빌딩 502호		
전화	02)795-3315	e-mail	victims@victims.co.kr
대표자	김중대	홈페이지	www.victims.com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보추협)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505호		
전화	02) 747-8863	e-mail	victims2000@yahoo.co.kr
대표자	장완익	홈페이지	www.victim.peacenet.or.kr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21		
전화	02) 926-4917	e-mail	
대표자	곽귀훈	홈페이지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전화		e-mail	ttongi72@hotmail.com
대표자		홈페이지	www.truelaw.net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한국위원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종로구 계동 140-44 1층		
전화	02) 3672-4192	e-mail	japantext@hanmail.net
대표자	이수호	홈페이지	www.japantext.net

아시아의 역사와 평화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종로구 계동 133-6 2층		
전화	02) 3672-4192	e-mail	webmaster@japantext.net
대표자	서중석, 이용득, 이수호 외	홈페이지	www.japantext.net

홍사단 (Young Korean Academy)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전화	02) 743-2511	e-mail	yka@yka.or.kr
대표자	김소선	홈페이지	www.yka.or.kr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2동 425-17 C&G 빌딩 201호		
전화	02) 2237 - 7407	e-mail	webmaster@prkorea.org
대표자	박기태	홈페이지	www.prkorea.com

한국청년연합회 (Korea Youth Corp, KYC)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6 글샘빌딩 304호		
전화	02) 393-1355	e-mail	kyc@kyc.or.kr
대표자	박홍근, 주선국	홈페이지	www.kyc.or.kr

독도찾기운동본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701호		
전화	02) 738-8150	e-mail	dokdo8150@hanmir.com
대표자	이남순, 단병호, 장응철 외	홈페이지	www.mydokdo.com

독도박물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81-1		
전화	054) 790-6432	e-mail	
대표자	이승진	홈페이지	www.dokdomuseum.go.kr

역사문제연구소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44		
전화	02) 3672-4191	e-mail	kistory@kistory.or.kr
대표자	김영태	홈페이지	www.kistory.or.kr

민족문제연구소 (민문연)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02)969-0226	e-mail	banmin@banmin.or.kr
대표자	조문기	홈페이지	www.minjok.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전화	031-709-8111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aks.ac.kr

고구려연구재단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5층		
전화	02) 6260-2600	e-mail	
대표자	김정배	홈페이지	www.koguryo.re.kr

독립기념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		
전화	041) 560-0114	e-mail	webmaster@i815.or.kr
대표자	김상웅	홈페이지	www.independence.or.kr

통일연대			
소재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역사
주소	서울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4층		
전화	02) 755-6822	e-mail	615tongil@jinbo.net
대표자	한상렬	홈페이지	www.615tongil.org

南京大屠殺紀念館 (난징대학살기념관)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역사
주소	南京市水西門大街418号		
전화	86-25-86612230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nj1937.org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역사
주소	北京西南丰台區		
전화	86-10-83893163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1937china.org.cn

世界抗日戰爭史實維護聯合會 (세계 항일전쟁사실유지연합회) The 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WW II in Asia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역사
주소			
전화		e-mail	GAinfo@global-alliance.net
대표자		홈페이지	www.global-alliance.net

紀念抗日受難同胞聯合會 (기념항일수난동포연합회) Chinese Alliance for Commemoration of the Sino-Japanese War Victim			
소재 국가	홍콩	분야	역사
주소	Foon King House 1109, King Shing Court, Fanling, NT, Hong Kong		
전화	852-2677-777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wv2.org.hk/home-b5.html

中國民間保釣聯合會 (중국민간보조연합회)			
소재 국가	중국	분야	역사
주소			
전화	86-10-68588125	e-mail	zwb781023@163.com
대표자		홈페이지	www.cfdd.org.cn

홍콩보조행동위원회 (香港保釣行動委員會)			
소재 국가	홍콩	분야	역사
주소	香港中環德輔道中20號德成大廈902室		
전화	852-2522 7721	e-mail	
대표자		홈페이지	www.diaoyuislands.org

타이페이시 부녀구원기금회 (台北市婦女救援基金會)			
소재 국가	대만	분야	역사
주소	台北市金山南路一段66號2樓		
전화	886-2-2356-9595	e-mail	twr95@ms4.hinet.net
대표자		홈페이지	www.twrf.org.tw

歴史教育者協議會 (歴教協) (역사교육자협의회, 역교협)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70-0005 東京都豊島區南大塚 2-13-8		
전화	(81)3-3947-5701	e-mail	rekkyo@jca.apc.org
대표자	石山 久男 (이시카와 히사오)	홈페이지	www.jca.apc.org/rekkyo

歴史教育アジアネットワーク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 Asia Network for History Education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02-0072 東京都千代田區飯田橋 2-6-1-201		
전화	(81)3-3265-7606	e-mail	asia-net@jca.apc.org
대표자	小河 義伸 (오가와 요시노부) 외	홈페이지	www.jca.apc.org/asia-net

子供と教科書全國ネット21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넷 21) Children and Textbook Japan 21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02-0072 東京都千代田區飯田橋 2-6-1-201		
전화	(81)3-3265-7606	e-mail	kyokashonet@a.email.ne.jp
대표자	俵 義文 (타와라 요시후미)	홈페이지	www.ne.jp/asahi/kyokasho/net21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 센터)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64-0011 東京都中野區中央2-11-4-105		
전화	(81)3-3204-7477	e-mail	jwrc@mua.biglobe.ne.jp
대표자	上杉 聡 (우에스기 사토시)	홈페이지	www.jca.apc.org/JWRC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13-0033 東京都文京區本町 2-36-9, 1F		
전화	(81)3-5800-8552	e-mail	
대표자	八木 秀次 (야기 히데츠그)	홈페이지	www.tsukurukai.com

日本會議 (일본회의, Japan Conference)			
소재 국가	일본	분야	역사
주소	153-0042 東京都目黒區青葉台 3-10-1-601		
전화	(81)3-3476-5611	e-mail	ibuki@nipponkaigi.org
대표자	三好達 (미요시 토루)	홈페이지	www.nipponkaigi.org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페라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 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근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근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희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홍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의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중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 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